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17분과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특별분과] 해역과 다중위기(polycrisis)  
: 회복과 공존의 역사문화적 모색

|                                                               |            |         |
|---------------------------------------------------------------|------------|---------|
| 수온상승과 수산 생물의 이동<br>- 울릉도 오징어를 중심으로 -                          | 서경순        | 국립부경대학교 |
| 기후변화에 따른 근현대 수산업의 위기<br>: 강원도 명태잡이 사례연구                       | 문혜진        | 부산대학교   |
| 국내 수산업 분야 다문화 리터러시 제고 방안 연구<br>: 한국어 교재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최민경        | 국립부경대학교 |
| 포용사회를 위한 어촌의 소통 리터러시<br>: 언어와 공동체의 힘                          | 양민호        | 국립부경대학교 |
| 해역의 위기와 회복<br>: 오사카 항만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의 공존 전략                     | 공미희        | 국립부경대학교 |
| 구랑위(鼓浪嶼) 도시재생과 공동체 붕괴의<br>해역적 함의                              | 이민경        | 국립부경대학교 |
|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전환<br>: 대만의 해양정책과 해양교육의 문화적 성찰                   | 김창경<br>공봉진 | 국립부경대학교 |
| 표류하는 시간과 초기 세계화<br>: 근세 표류기(漂流記)와 근세 초기 동아시아 사회의 시간<br>주권(主權) | 신상원        | 인제대학교   |
| 중국 해양신앙의 정치적 재구성<br>- 마조신앙을 중심으로                              | 김경아        | 부산대학교   |

# 수온상승과 수산 생물의 이동

## - 울릉도 오징어를 중심으로 -

서 경 순 | 국립부경대학교

### 1. 들어가며

기후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를 일으켜 인간들의 삶을 공격한다. 현재 예상치 못했던 지진, 폭염, 홍수, 태풍,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1월은 역사상 기온이 가장 높은 1월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기후 과학자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수온상승으로 수산자원의 개체 수 감소, 신종 질병 유발, 해양생태계 교란, 해양오염 등을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한류성 수산생물의 개체수 감소 심지어는 멸종에 이르렀다. 반면에 난류성·아열대성 수산생물이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전체 어획량은 감소하였다.

그런데 오징어의 경우는 난류성인데도 불구하고 오징어 어획량은 확연하게 감소하여 현재 금징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우리나라는 오징어하면 ‘울릉도 오징어’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울릉도 주요 특산물 중 으뜸이다.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 감소가 수온 상승과 관계가 있을까?

### 2. 1890년대 한국 어업

근대는 경제 중심이 농업에서 수산업으로 이동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하였고 수산업을 천대하는 풍조가 이어졌다. 다만 세수(稅收)와 관련하여 전국 연안 지역의 수산업조사가 이루어졌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도 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기록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의 경우에는 유럽의 만국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수산 유용성에 대한 정보 지식을 입수하면서 수산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산진흥사업을 추진하였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자 메이지정부는 한국해출어시책을 세우고 자국어부의 한국<sup>1)</sup>해출어를 지원 장려하였으며, 한편으로 수산전문가급 파견하여 한국 수산상황을 조사하고 한구수산정보를 담은 많은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최초의 결과물이 『조선통어사정』(1893)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는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한국 조사를 실시하여 『통감부통계년보(統監府統計年報)』를 간행하였다. 수산분야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1908년~1911년에 걸쳐서 『한국수산지』 편찬 사업을 실시하고 4권의 방대한 서적을 편찬 간행하였다.

근대 한국수산서적은 『朝鮮通漁事情』(1893), 『韓國水産誌』 1~4권(1908~1911), 『朝鮮魚類誌』(1939), 『朝鮮水産開發史』(1954) 등이 대표적이지만 이 서적은 근대학문을 익혔던 일본 수산 지식인들에 의해 저술된 공통점이 있다. 『韓國水産誌』는 한국 최초의 근대수산백과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전 연안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서적을 통하여 당시 한류성 어종 중 청어와 명태 그리고 난류성 어종, 중 정어리와 오징어의 이동 상황을 살펴보자.

|             |    |                                                                                                                                                                                                                                                                                                                                                                                               |
|-------------|----|-----------------------------------------------------------------------------------------------------------------------------------------------------------------------------------------------------------------------------------------------------------------------------------------------------------------------------------------------------------------------------------------------|
| 한<br>류<br>성 | 청어 | 『조선통어사정』(1893)에는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망(漁帳)을 이용하며, 청어를 어획하고 성어기는 대구와 같이 추운 겨울 1~3월이라고 하였다.<br>『한국수산지』 1권(1908)에는 함경도·강원도·경상도 각 연안에 청어가 무리지어 회유하는데 홋카이도에 비교하면 무리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각 연안 도처에 많이 회유했던 한류성 청어가 1900년 이후 수온 상승으로 인한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sup>2)</sup>                                                                                                                                  |
|             | 명태 |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 후 일본 어부들은 자국정부의 장려로 한국 연안 곳곳에 몰려와 조업을 하였다. 함경도 함흥·원산 일대에 출어한 일본 어부들은 한국의 명태어장을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명태를 선호하지 않아서 거의 어획하지 않았는데 한국 어부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서 생어로 그리고 북어로 가공하여 사시사철 유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일본어부가 명태어업으로 전환한 사람도 있고 함경도와 기후가 비슷한 홋카이도에 명태덕장을 설치하고 한국 기술자를 초빙하여 북어 제조업을 시작한 자도 있었다.<br>더욱이 193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명태가 자취를 감추면서 홋카이도산 명태가 한국에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sup>3)</sup> |

1) 19세기 말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과 한국을 혼용사용하였다. 편의상 한국으로 통일한다.

2) 『조선수산개발사』(1954년)의 저자 요시다 케이이치는 청어가 19세기 후반에 서해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1914년에는 부산과 울산에서 경남 이북지역 연해로 이동하였고 다시영일만과 강원도 연해로 이동한 후 영흥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혀두었다(221쪽).

3) 농상공부 수산국 저, 이근우·서경순 역, 『한국수산지』 I-1, 240~245쪽.

|     |     |                                                                                                                                                                                                                                                                                                                                          |
|-----|-----|------------------------------------------------------------------------------------------------------------------------------------------------------------------------------------------------------------------------------------------------------------------------------------------------------------------------------------------|
| 난류성 | 정어리 | 정어리는 한류성 명태가 사라지는 시점인 1930년대 이후에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1937년에는 138만 톤(1932년에 비해 거의 4배 상승)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여 동해안의 중요어업으로 부상하였다. 당시 정어리 어가는 선박용 연료 및 화약 연료 등의 군수용으로 유용되자 일제는 정어리 주산지인 청진에 어비공장 산업화를 추진하여 청진 정어리 어비공장을 세계 제일의 수준급으로 견인하였으며 정어리 어비 운반을 위하여 청진항까지 철도를 가설하였다. 그러나 정어리의 품어는 오래가지 못하고 정어리 어업이 쇠퇴하면서 1940년대에 청진 정어리 어비공장 또한 쇠퇴하였다. <sup>4)</sup> |
|     | 오징어 | 『朝鮮通漁事情』(1893): 경상·전라 2도의 남쪽 거문도 혹은 옥지도, 기타 남쪽의 섬 주변에 4~5월 경 오징어가 떴 지어 몰려있다.<br>『한국수산지』(1908): 한반도에는 살오징어는 동남해에, 무늬오징어는 남해에, 갑오징어와 화살오징어는 서남해에 서식한다는 기록이 각각 있다.<br>울릉도에는 시마네현 오키섬 어부들이 정주하면서 오징어 어업을 주요 어업으로 하여 울릉도산 오징어를 대부분 시마네현으로 반출하였다.                                                                                              |

앞의 표에서 확인하였듯이 수온의 변화에 따른 물고기의 이동은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구분별한 남획 또한 감소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3. 동해 월별수온조사 통계표

『한국수산지』 1권(1908)에는 1882~1901년에 걸쳐서 한반도의 동해, 남해, 서해의 월별 수온을 조사한 표가 있다. 다음 표는 동해의 월별 평균수온을 조사한 통계표이다.<sup>5)</sup>

| 동경 ↙<br>북위 ↗ | 128~130도 ↘ |          |          |          |          |
|--------------|------------|----------|----------|----------|----------|
|              | 44~42도 ↗   | 42~40도 ↗ | 40~38도 ↗ | 38~36도 ↗ | 36~34도 ↗ |
| 1월 ↘         | - ↘        | 8.9 ↘    | 7.4 ↘    | 7.7 ↘    | 3.2 ↘    |
| 2월 ↘         | - ↘        | - ↘      | 3.5 ↘    | 8.9 ↘    | 11.2 ↘   |
| 3월 ↘         | - ↘        | 8.1 ↘    | 10.0 ↘   | 13.3 ↘   | 11.4 ↘   |
| 4월 ↘         | - ↘        | 6.9 ↘    | 10.2 ↘   | 11.8 ↘   | 14.4 ↘   |
| 5월 ↘         | - ↘        | 8.9 ↘    | 11.3 ↘   | 16.7 ↘   | 18.9 ↘   |
| 6월 ↘         | - ↘        | 16.1 ↘   | 18.2 ↘   | 19.3 ↘   | 19.3 ↘   |
| 7월 ↘         | - ↘        | - ↘      | 19.6 ↘   | 21.2 ↘   | 21.8 ↘   |
| 8월 ↘         | - ↘        | 21.2 ↘   | 22.8 ↘   | 25.0 ↘   | 25.1 ↘   |
| 9월 ↘         | - ↘        | 19.7 ↘   | 20.9 ↘   | 22.8 ↘   | 23.4 ↘   |
| 10월 ↘        | 14.7 ↘     | 17.4 ↘   | 16.9 ↘   | 19.6 ↘   | 20.4 ↘   |
| 11월 ↘        | 5.4 ↘      | - ↘      | 15.9 ↘   | 15.9 ↘   | 18.1 ↘   |
| 12월 ↘        | - ↘        | 12.8 ↘   | 14.7 ↘   | 14.7 ↘   | 13.6 ↘   |
| 1년~평균 ↘      | - ↘        | - ↘      | 14.28 ↘  | 16.41 ↘  | 17.48 ↘  |

동해 월별수온통계(출처:한국수산지) 1권

4) 서경순,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과 일제의 수산시험기관에 대한 고찰」, 『지역과 역사』 55. 부경역사연구소, 2024, 75~82쪽 (미군정기 주한미군사에는 일본 어부들이 정어리가 알을 놓을 틈도 없이 남획한 것이 원인인 점을 지적하였다).

5) 농상공부 수산국 저, 이근우·서경순 역, 『한국수산지』 I-1., 1908, 185~202쪽

이 수온조사통계는 120여 년 이전에 조사한 것으로 당시에 수온이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동해 월별수온통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위도가 높을수록 평균 수온은 낮다.

## 4. 오징어 어획

### 1) 1940년대

|     |         | 數 量(斤)      | 價 額(円)      |
|-----|---------|-------------|-------------|
| 漁 獲 | 總 數     | 845,782,476 | 162,066,840 |
|     | 魚 類     | 709,662,126 | 131,730,617 |
|     | 貝 類     | 35,954,689  | 4,304,917   |
|     | 海 藻 類   | 52,024,414  | 8,104,041   |
|     | 水 産 動 物 | 53,141,247  | 17,927,265  |

출처: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17年』 수산업 편

조선총독부통계년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4)를 통하여 1940년대 오징어 어획량을 살펴보았다. 1942년 한국의 총 어획은 845,782,476kg, 162,066,840엔이며 이중 오징어의 어획량은 7,051,559kg, 1,471,853엔이다,<sup>6)</sup> 각 지역별 오징어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sup>7)</sup>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황해도    | 평남     | 평북     | 강원도     | 함남      | 함북      |
|--------|--------|--------|--------|--------|--------|--------|--------|---------|---------|---------|
| 21,551 | 36,090 | 98,001 | 24,733 | 28,865 | 49,939 | 21,710 | 41,860 | 125,469 | 253,835 | 769,800 |

1942년 동해안에서 어획된 오징어는 모두 1,149,104엔이며, 총금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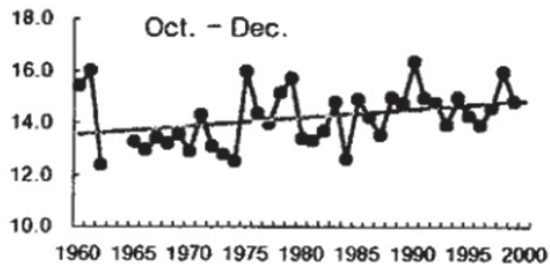
### 2) 1960년~1999년대

오징어는 동해의 주요 어업자원이며 채낚기 어업이 85%를 차지하였다. 1950년대~1990년대의 오징어 연간 어획량은 2만톤~25만톤으로 범위가 매우 불규칙하였는데 여러 원인 중에 해양 환경 즉 수온 변화에 따른 이동을 지적하고 있다.

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17年』, 1944, 85쪽, 88-89쪽, 92-93쪽.

7)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17年』, 1944, 92-93쪽.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한국의 연안에 대하여 서해안은 소흑산도 연안, 남해안은 여수와 마라도 연안, 동해안은 주문진 연안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에 꾸준히 관측 조사한 결과 동해안의 평균 수온이 1960년대 6.5도, 1970년 7.1도, 1980년대 7.0도, 1990년대 8.0도로 수온 상승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봄·가을·겨울에 수온 변화가 있으며 여름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문진 수온 변화(1960~1999)

오징어 어획량은 1975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1980년에 이르면 거의 어획이 없었지만 1990년에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3년~1996년에 25~35%라는 어획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유하는 오징어는 봄에 동해안으로 북상하여 회유하며, 기온이 내려가는 늦가을이면 다시 남쪽으로 이동한다.<sup>8)</sup>

그리고 동해안의 수온은 겨울에 상승 현상이 현저하여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북상하여 생산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2000년대

울릉도의 오징어 어업은 일반적으로 1902년에 시작되었다고 보며 울릉도의 근현대사에 빠질 수 없는 주요 수산물로 울릉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등락을 거듭하며 맥을 유지하였는데 2000년도부터 감소하여 2018년에는 751톤으로 최 하락세를 보였다. 하락 원인은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에서의 남획을 듣고 있다, 그러나 해양 환경 즉 해상 기상 변동으로 인한 수온 상승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는 1942년과 비교한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다.

8) 박종화, 『東海 오징어 漁況 變動에 關한 研究』, 국립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1쪽; 박종화·황강석·강영실, 「한국 근해 겨울철 온난화와 주요 어종의 어획 변화」, 『한국수산자원학회지』 3, 2000, 77-78쪽.

| 연도        | 어획 물량(톤) | 어획 금액(천엔) | 오징어 물량(톤) | 오징어(천엔) |
|-----------|----------|-----------|-----------|---------|
| 1942년     | 845,782  | 162,067   | 16,530    | 4,453   |
| 1975~1984 |          |           | 평균 5,623  |         |
| 1985~1994 |          |           | 평균 7,642  |         |
| 1995~2004 |          |           | 평균 8,303  |         |
| 2005~2014 |          |           | 평균 3,995  |         |
| 2009~2018 |          |           | 평균 2,180  |         |
| 2016~2018 |          |           | 평균 889    |         |

표에서 보여주듯이 2018년 현재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1942년과 비교하면 2%도 못 미치는 최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9)</sup>

전술하였듯이 오징어 급감 요인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덧붙여서 울릉도 어민의 노령화, 어선 노화 등 어업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예상치 않은 태풍, 해류 등의 이상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수온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수온상승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 5. 나가며

1900년대 이후 시작된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바다에는 국민생선이었던 명태 등이 자취를 감추고 지금까지 보지도 알지도 못한 열대성 물고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를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시대라고 한다. 지진, 화산폭발, 폭염, 가뭄, 홍수, 태풍, 산불 화재,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평균 기온이 1.08도씩 상승하는 추세로 세계의 평균기온보다 높다고 한다.

어획 규제 실시, 어획보호구역 지정, 친환경인증제도 등 어업 정책 그리고 어민을 대상으로 바다 생태계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어업 지속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과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후손에게 이어질 수산자원의 미래에 대하여 지구인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9) 1942년김윤배,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 변동 특징 및 울릉도 오징어 산업 발전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102,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9

貽 貝(い が ひ)  
 玉 筋 魚(いかなご)  
 連 子 鯛(れんこたひ)  
 目 張 魚(めばる)  
 蛤 (はまぐり)  
 火 魚(かながしら)  
 鳥 貝(とりがひ)  
 海 鰻(あなご)  
 鱒 (ひ ら)  
 銀 杏 草(ぎんなんさう)  
 蘇 魚(そきよう)  
 黒 鯛(くろたひ)  
 白 魚(しらうな)  
 北 寄 貝(ほつきがひ)  
 鰺 鯛(あさり)  
 鰻 (あげまき)  
 牛 舌 魚(したびらめ)  
 鮭 (さ け)  
 鯉 (こ ひ)  
 惣 太 鰻(うらだがつな)  
 貼 (あ ゆ)  
 櫻 草(さくらさう)  
 拶 雙 魚(さつぽ)  
 鰻 (さ ょ り)  
 鰺 (はたはだ)  
 汐 吹 貝(しほふきひ)

鰻 (た な こ)  
 鰻 鰻(さざふ)  
 河 豚(ふ ぐ)  
 江 遠 魚(かんだり)  
 鰻 (ふ つ)  
 鰻 (ま す)  
 竹 鰻(ま て)  
 鰻 (すつばん)  
 鰻 (ふ な)  
 沖 鰻(おきさはら)  
 鰻 鮎(しやこ)  
 櫻 貝(さくらがひ)  
 伊 多 貝(いたらがひ)  
 鰻 (まながつな)  
 昆 布(こんぶ)  
 沙 魚(は ぜ)  
 カ シ キ リ  
 旗 魚(かぢき)  
 海 鰻(う に)  
 秋 刀 魚(さんま)  
 帆 立 貝(ほたてがひ)  
 赤 鰻(あかえ)  
 青 海 苔(あなのり)  
 野 (かます)

鰻 (さ ば)  
 鰻 (い わ し)  
 明 太 魚(めんたい)  
 石 首 魚(ぐ ち)  
 鰻 (に し ん)  
 鰻 (さ は ら)  
 鰻 (た ら)  
 鰻 (た ひ)  
 鰻 (か れ い)  
 大 刀 魚(たちうな)  
 鰻 (ふ び)  
 鰻 (く ち ら)  
 和 布(わかめ)  
 海 苔(の り)  
 鰻 (ほ ら)  
 鰻 (あ ぢ)  
 鰻 (ふ っ)  
 海 鰻(ふ の り)  
 鰻 (に べ)  
 海 鼠(なまこ)  
 鰻 (ふ ひ)  
 鰻 (は も)  
 鰻 (ひ ら め)  
 鰻 (あ わ び)  
 鰻 (このしろ)  
 鰻 (た こ)  
 鰻 (ほ つ け)  
 石 花 菜(てんぐさ)  
 鰻 (お り)  
 鰻 (か に)  
 鰻 (す ず き)  
 壯 鰻(か き)  
 鳥 鰻(い っ)  
 鰻 (う な ぎ)

# 기후변화에 따른 근현대 수산업의 위기

## : 강원도 명태잡이 사례연구

문 혜 진 | 부산대학교

### 1. 들어가며

명태는 한반도 동해의 함경도 일대와 강원도 일부에서 어획되던 대표 수산물이다. 일제강점기까지 명태는 함경도산이 전체 유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해방 후 함경도 어장의 소실로 남한에서는 새로운 명태 어장을 발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북한 피난민과 함께 일구어낸 명태 산지는 강원도 속초항이다. 특히 함남 피난민들이 강원도 일대에 황대덕장을 운영하여 명태 수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래 명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 명태잡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근현대에 걸쳐 강원도 명태잡이의 변화와 명태잡이 부진의 원인, 그리고 명태 산업의 부흥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제강점기 강원도 명태잡이

강원도의 수원단(水源端) 연안 등이 옛날부터 유명한 명태의 산란장이었다. 1903년 『한해통어지침』에서 강원도를 포함한 구한말 명태 어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태 어업은 한국의 큰 어업으로 어기는 음력 10월에서 12월까지가 가장 성업기이다. 점차 북방으로 이동해 단천군 연해에서는 매우 늦어 1월부터 3월에 이르는 계절에 명태를 어획한다. 이 계절에 명태는 산란을 위해 군집해 오는 것으로, 생식에만 전적으로 열중해 주위를 살피는 데 극히 지둔해 포획하기 매우 용이하다. 산지는 함경도 홍원군의 전진 이북, 북청군과 이원군에서 단천군 이호에 이르는 연해 대략 30리 사이이며, 그 중 북청, 이원 양군의 연안이 신포, 신창, 차포 세 부락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다. 어장은 산지의 해안에서 약 2, 3리 내지 4, 5리 떨어진 해안[沖合]이며, 수심은 30~40 내

지 70~80심(尋)이 되는 장소이다. 그리고 그 어장은 구역을 제한하는 것 같지 않고, 임의의 입회장이 된다. 어업자는 오히려 산지인이 적고, 대개가 북쪽은 단천, 길주, 경성 지방의 사람이며, 남쪽은 함흥, 홍원, 영흥, 안변의 각 군 및 강원도 강릉, 삼척 등의 지방에서 폭주하는 이들이다. 어선은 전 폭 8척 내지 1장 내외의 것을 사용하며, 7~8인 내지 10인 정도가 탑승한다.<sup>1)</sup>

위 『한해통어지침』에 따르면 1900년대 당시 명태의 최대 산지는 함남지방이지만, 함남 어민은 적고 대개가 함북이나 강원도 어민들이 입회한다고 하였다. 이후 『수산편람(水産便覽)』(1919)에 따르면, 당시 최고의 명태 생산지는 함경북도로 바뀌게 된다. 즉, 1919년 당시 명태 어획량은 함경북도가 11,987,379관(貫)으로 가장 많았고, 함경남도가 10,667,587관, 강원도가 1,341,690관 순으로 많았다. 함경도에서 어획된 명태는 경성, 평양, 원산, 부산으로 이동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어획된 명태는 부산, 원산으로 판매되거나 도내에서 소비되었다.<sup>2)</sup> 1930년에는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하나의 어업지구로 하는 조선 제2구 기선저예망 어업수산조합이 설립되었다. 이 조합은 조선어업령에 따른 최초의 수산조합으로 당시 40척을 지닌 조선 최대의 명태 기선저예망 어업수산조합이었다. 이 조합이 활동하는 함남과 강원도가 일제강점기 명태 어획량의 약 2/3를 차지하였다.<sup>3)</sup> 이에 1940년에는 강릉 주문진항에 명태간유업조합(明太肝油業組合)이 결성되기도 할 정도로<sup>4)</sup> 강원도에 명태 조업이 성행하였다.

### 3. 해방 후 강원도 명태잡이

해방 후에도 명태는 함경도를 중심으로 어획되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이후 38선이 그어지면서 휴전협정이 성립되어 강원도의 속초·거진·대진·간성 등 중요 어항이 수복되었고, 그 중 속초가 남한의 유일무이한 명태 어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처에서 밥상에 오르는 명태의 대부분은 속초 앞바다에서 잡히거나 혹은 속초항을 통해서 공급되었다.<sup>5)</sup>

속초는 전체 인구 대비 피난민의 비중이 매우 큰 도시였다. 1975년 당시 전체 인구의 약 74%가 실향민이었다고 한다. 출신지를 보면 함경남도가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북청, 영

1) 葛生修吉, 앞의 책, 1903, 359~360쪽.

2) 朝鮮總督府 編, 『水産便覽』, 朝鮮總督府, 1919, 11~12쪽.

3) 요시다 케이이치, 앞의 책, 2019, 491~495쪽.

4) 『동아일보』1940.03.01. 「明太肝油業組合 주문진에서 조직」

5) 『조선일보』1962.11.13. 「特産物을 찾아서 束草의 明太」

흥, 단천, 홍원, 이원군 등 주로 해안가 마을이 많았다.<sup>6)</sup> 어민들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왔는데, 이들이 타고 온 배를 창이배라고 부른다. 북한 피난민들은 창이배를 타고 명태를 잡았다. 창이배는 크기에 따라 5~10명의 선원이 탔는데, 남쪽으로 피난을 올 때는 수십 명이 함께 탔다고 한다. 이들 피난민의 어업 종사자 비율은 높았으며, 함경도에서의 명태잡이를 경험으로 1955년에서 1962년까지 주로 명태를 잡았다.<sup>7)</sup> 즉, 속초에 피난 온 아바이들이 창이배를 타고 남한 명태잡이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1958년 동력선이 도입되면서 명태의 어획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963년을 기점으로 오징어의 어획고가 명태를 넘어설 정도로 호황을 누리면서 오징어잡이도 많이 하였다. 1960년대 이래 강원도 명태 어획고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강원도 연도별 명태 어획고<sup>8)</sup>

|         |        |         |        |      |      |      |
|---------|--------|---------|--------|------|------|------|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01 | 2002 |
| 13,508t | 9,297t | 22,415t | 7,671t | 977t | 72t  | 212t |
| 2003    | 2004   | 2005    | 2007   | 2008 | 2009 | 2010 |
| 238t    | 62t    | 21t     | 1t     | 1t   | 1t   | 1t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1t      | 1t     | 1t      | 2t     | 3t   | 6t   | 1t   |

위 <표 1>에 따르면, 강원도의 명태 어획고는 1990년대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강원도 수산물 어획량의 급감 원인으로는 과도한 어획, 폐그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수온 등과 같은 기후 변화 등이 꼽히고 있다. 그 중 기선저인망의 남획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수온의 변화는 1960년대 중반에 이미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신문기사를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해안어업 중 가장 높은 생산고를 올리는 명태의 경우, 해마다 어선수의 증가, 어구 개량 등으로 기술이 발전하는데 비해 어획고는 최근 수년간 감소되고 있다. 동해안명태잡이 근거지인 속초항의 집계에 의하면 해마다 어획고가 감소되고 있다. 강원도 어정계장 최남수씨는 중소저인망들이 불법어로작업으로 치어까지 모조리잡아 다음해에 잡을 고기 숫자를 줄이는데도 큰 이유가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sup>9)</sup>

6) 박용길, 「피난민과 난민법: 제도적 고찰을 중심으로」,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증보판)』, 속초문화원, 2002, 58쪽.

7) 허영란 엮음, 앞의 책, 2021, 157~161쪽.

8) 강원도시산편찬위원회, 『강원도사』 제22권 민속[마을·생업], 2018, 389쪽.

9) 『경향신문』 1966.08.17. 「이것이 우일 漁業(上) 東海」

## 4. 강원도 명태잡이의 위기와 새로운 모색

위 <표 1>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명태 어획고는 1990년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2년부터 북한과 러시아에서 명태를 수입하기 시작했으며,<sup>10)</sup> 명태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한려 민간어업협력을 확대 실시하여 북위 47~50도로 돼있는 한국어선의 러시아 경제수역 내 조업 구역을 북쪽으로 0.5도 북상기로 합의하는 등 명태 어획고를 늘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명태어획고가 182t으로<sup>11)</sup> 1990년 7,671t에 비해 97%가 감소하였으며, 1997년 947t, 1998년 1,427t로<sup>12)</sup> 어획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명태 어획고의 급감 원인에는 남획과 환경오염 문제도 거론되지만, 수산진흥원에서는 그 원인을 ‘한반도의 아열대화’로 보며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근해의 겨울철 수온은 평균 1.4도 높아지고 여름은 오히려 0.67도 낮아졌다. 계절간 수온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덕분에 같은 기간 고등어, 멸치, 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고는 30~300%까지 크게 늘어난 반면 한류성 어종인 대구는 10년 전에 비해 85%가 줄고, 명태는 10년 전의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sup>13)</sup>

다시 <표 1>을 보면 2000년대부터 명태 어획고는 급감하였는데, 2007년 이래는 명태 어획고가 1t에 불과하여 한국 동해에서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이에 명태 남획을 막고 소멸해가는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2019년 명태 몸길이 27cm 이하로 규정된 포획금지 기준을 없애고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개체수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전면 금지한 것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포획금지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sup>14)</sup> 또한 정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비 총 248억원 규모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sup>15)</sup>

10) 『매일경제』1992.04.11. 「수산물 공급난 심화 값 뒤흔들」

11) 『한겨레』1995.12.01. 「동해 명태잡이 부진 어획량 작년 절반수준」

12) 『경향신문』1998.03.16. 「동해안 어획량 대폭 감소」

13) 『한겨레』1998.12.07. 「한반도 이미 아열대 기후 징후」

14) 『주간경향』2025.07.07. 「10년간 1.72도 상승...명태는 동해를 떠났다」

15) 프로젝트의 골자는 명태 완전양식 기술을 개발해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동시에 육상에서 키운 치어를 대량 방류하는 것이다(『경향신문』2023.06.18. 「10년 지나도 ‘집 나간’ 명태...‘명태 살리기’ 밀빠진 독에 물 붓기 되나」).

강원도에서는 예로부터 명태 수산가공품으로 북어가 유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북한 주민들이 강원도로 피난·정착하면서 명태 가공품에 변화가 일어났다. 명태를 재료로 생산되는 건어물은 크게 황태와 북어로 나눌 수 있다. 북어는 바닷가 어촌의 노천에서 말리거나 혹은 인공 건조장에서 영하 20도로 냉각한 후에 서서히 온도를 높혀 하루만에 급속으로 건조한 것이다. 노천에서 건조한 것은 색깔이 거므스레하므로 ‘떡태’ 또는 ‘흑태’라고 부르고, 인공으로 건조한 것은 색깔이 하얗게 되므로 백태라고 한다. 반면 황태는 진부령이나 대관령처럼 한겨울 영하의 추위가 유지되는 산간의 고지대 덕장에서 약 4개월 동안 60여 차례 열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며 건조하는데, 건조하면서 살이 부드러워지고 누런빛을 띠기에 ‘노랑태’라고 불리기도 한다.<sup>16)</sup>

황태는 기후조건과 지리적 입지의 제약으로 북한지역인 함흥·원산·명천 일대에서 제한적으로 생산되었다. 남한에서 황태를 생산하게 된 것은 불과 70여 년 전으로, 황태 건조기술을 알고 있는 실향민들이 함경도 지역과 기후·지리적 입지가 유사한 강원도 일대에 황태덕장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sup>17)</sup> 그 하나가 1956~58년경에 먼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에 설치된 황태덕장이며, 다른 하나는 또 다른 실향민에 의해 1964년 진부령 서쪽 경사면에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로 이전된 황태덕장이다. 현재 황태덕장은 기상 여건과 입지조건의 제약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인 인제군 용대리와 평창군 황계리 일대에 국한되어 있다.<sup>18)</sup>

2000년대 이후 황태 유통과 판매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국내산 명태의 어획량 감소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90% 이상은 러시아에서 잡히는 원양산 명태이다.<sup>19)</sup> 어획량의 감소, 물류비와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명태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 한국에서 황태를 생산하던 화주들은 러시아와 인접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훈춘 지역 등지에 황태덕장을 만들어 황태를 생산하였다. 러시아와 인접하여 어획한 명태의 이동에 따른 물류비가 적게 들고, 인건비 또한 국내에서 건조할 때의 비용보다 60% 이상 저렴하게 황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6년 국내에 유통되는 황태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건조된 황태이다. 국내의 황태 시장 규모는 약 4,500억 원 정도이다. 하지만 이 중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황태는 약 2천억 원 정도에

16) 김의숙, 「황태 덕장 연구」, 『강원문화연구』 제17집, 1998, 42쪽.

17) 이종구 외 6명, 『덕장과 건조기술』, 국립무형유산원, 2023, 43쪽.

18) 1998년의 경우,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평창군 황계리, 태백시 동점동, 삼척시 하장면 뗏재 인근의 변천리와 상산리에서 각각 황태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10년 태백시와 삼척시의 황태덕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명태수급의 어려움, 경쟁력 상실 등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는다(김의숙, 1998, 앞의 논문, 42쪽).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형곤 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대게 수입의 100%가 러시아산이었고, 명태는 96.1%, 대구는 93.6%로 나타났다.

불과하다.<sup>20)</sup> 국내 생산되는 황태 판매 부진의 이유는 국내에서 수산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만 표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황태도 러시아산이 되고, 국내에서 생산된 황태도 러시아산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내 생산 황태의 브랜드 인식의 향상을 위해 고성군 거진항에서는 ‘명태 축제’, 인제군 용대리에서는 ‘황태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황태국 블럭·황태 가루·황태 환·황태 고추장 등 황태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 5. 나오며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함경도 일대에서 어획되었던 명태가 전국으로 유통되며 소비되었지만, 해방 후 함경도의 어장을 소실하면서 강원도의 속초항을 중심으로 명태를 어획하였다. 또한 한국 전쟁으로 함경도 어민들이 속초항에 자리를 잡으면서 ‘아바이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이 남한에 없던 황태덕장 기술을 가져와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와 평창군 횡계리 일대 등지에 황태덕장을 운용하면서 명태 수산업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명태(특히 노가리)의 남획,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명태 어획량이 2000년대 이후로 급감하였으며, 한국 명태 대신 러시아산 명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명태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황태덕장의 해외 이전, 국내 생산 황태의 홍보(축제), 다양한 황태 상품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명태조업의 쇠퇴와 중국산 황태의 시장 점령에 따른 덕장의 운영위기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주석 참조할 것.

20) 『예천신문』, 2016.01.20. 「42년간 수산업 외길인생 신대 섬씨, 소백산 용두 황태 개발」

# 국내 수산업분야 다문화 리터러시 제고 방안 연구

## : 한국어 교재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최민경 | 국립부경대학교

### 1. 들어가며

수산업은 오늘날 국내 이주민 유입을 견인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수산업은 2차 산업에 해당하는 수산물 가공업을 포함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어로, 양식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리고 대표적인 1차 산업인 농업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의 도시 집중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수산업의 경우 이른바 3D(Dirty, Dangerous, Difficult)에 'Distant(원격지의)'가 더해진 4D 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우려할 만큼 일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 수산업으로의 이주민 유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도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수산업의 일손 부족을 메웠고, 최근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추가로 도입되어 노동력 수요의 계절성을 반영한 수용이 진행 중이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수산업 분야로 유입하는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의 '소통'의 문제가 긴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다문화 리터러시(multicultural literacy)이다. 다문화 리터러시는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 적응하며 실천적인 소통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다름'에 대한 존중과 공존, 나아가 그러한 '다름'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다문화 리터러시 개념을 사용해서 현재의 수산업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

1) 김준환 외,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다문화 리터러시 국내연구 동향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82, 2025, p.84~85; 진시원, 「다문화 리터러시,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책, 이데올로기」, 강영훈 외, 『우리의 삶, 모두의 리터러시』, 한국문화사, 2025, p.213.

주노동자라는 ‘다름’을 지닌 존재의 증가가 어촌 등의 다문화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 적응 그리고 이주노동자와의 소통력 제고가 필요한 현실인 것이다.

다문화 리터러시는 언어적 이해를 넘어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와 접점을 지니며 다문화 시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권력관계를 고민하는 소통력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이다.<sup>2)</sup> 다만 그러한 소통력의 가장 근저에는 읽고 쓰고 말하며 듣는 언어 능력이 자리함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어 능력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근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직종별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산업별 전문화된 접근이 필요하다.<sup>3)</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로, 양식 작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특화하여 제작된 한국어 교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수산업 현장의 다문화 리터러시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 2. 분석 내용

### 2.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한국어 교재는 2023년 세종학당재단에서 발행한 『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이다.<sup>4)</sup> 이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이기는 하나 어업, 나아가 수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한국어 교재로서 향후 추가 교재 개발, 교수법 개발 등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발간사에 따르면 본 교재는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맞춤형 교육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되었으며, 근로 현장과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표현에 초점을 맞춰 “어촌 및 계절 근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계절 근로자는 2016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을 통해 수산업 분야에서 수용하는 이주노동자이다. 이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어로, 양식 작업의 계절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해서 운영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 장은영, 「비판적 리터러시와 다문화 리터러시의 접점에 대한 고찰: H. Janks의 리터러시 모형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1), 2020, p.3.

3) 김경남·양민호, 「직업 목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직종별 교재 개발 방향성 연구」, 『한국어문교육』 51, 2025, pp.245-248.

4) 세종학당재단, 『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세종학당재단, 2023.

『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는 총 10개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 즉, 생활편과 업무편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원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단원 | 제목                | 주제                  |
|-----|----|-------------------|---------------------|
| 생활편 | 1  | 저는 두안이에요          | 인사, 소개              |
|     | 2  |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 사물, 위치              |
|     | 3  | 오늘은 마윌회관에 가요.     | 장소, 이동              |
|     | 4  |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요.     | 시간, 날짜, 약속          |
| 업무편 | 5  | 날씨가 좋지만 파도가 높아요   | 어업 일반 작업, 어촌 생활의 환경 |
|     | 6  | 오늘은 작업장에서 일할 거예요  | 어업 도구, 수산물의 부위      |
|     | 7  | 상자에 담아서 옮기세요      | 양식업 1               |
|     | 8  | 미역을 낚으로 잘라 주세요    | 양식업 2               |
|     | 9  | 김을 세척한 다음에 말려야 해요 | 가공업 1               |
|     | 10 | 공치의 꼬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 가공업 2               |

한편 각 단원은 주제 상황을 도입으로 활용하며, 그에 맞는 어휘, 문법, 문화 내용을 수록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제7단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제7단원〉 상자에 담아서 옮기세요 |                                   |
|---------------------|-----------------------------------|
| 주제                  | 양식업 1                             |
| 어휘                  | 굴 선별, 굴 세척, 굴 까기 등 어패류 관련 어휘      |
| 문법과 표현              | -(으)ㄴ 것, -이/어서(순차), ~지 마세요, ~지 말고 |
| 문화                  | 한국인이 좋아하는 수산물                     |

## 2.2. 평가와 제언

『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의 구성과 내용을 고찰한 결과, 우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산업 분야 다문화 리터러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총 10개의 단원 중 6개의 단원을 업무편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재와 비교했을 때 직종에 특화한 실무 중심의 어휘, 표현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아가미, 지느러미, 비늘, 가시 등 수산물의 부위 명칭을 비롯하여 종자, 채묘틀, 염장과 같이 특수하지만 수산업 현장에서는 사용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어휘를 익히도록 하였다. 이는 생산성은 물론 현장 안전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문법의 정확성과 쓰기의 완성도는 제외하고 듣기와 읽기 영역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구어 중심 언어 환경에서의 소통력 향상을 꾀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한국어 능력보다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문화에 대한 설명을 병행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갈등 예방과도 연

결한다. 셋째,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의 6개 언어로 예문과 해설을 제공하여 언어 장벽을 낮추고 학습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단기 체류하는 계절근로자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닌다. 첫째, 생활편과 업무편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구조적으로 괴리된 모습을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일상은 생활과 노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경제적 조건 위에 놓인 경우가 많아, 하루의 삶 속에서 생활과 노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생활편의 내용은 『농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와 동일한데,<sup>5)</sup> 어휘와 예문의 구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3단원 〈오늘은 마을회관에 가요〉에서 다루지는 내용은 수산업 분야에서 수용한 이주노동자들이 실제 체류하며 생활하는 어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교재가 발간된 목적과도 어긋난다.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생활편과 업무편의 통합적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이 지시, 응답, 보고 등 하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호성이 떨어진다. 수산업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이 최우선시되어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협의, 질문, 조정의 언어는 부재하다. 교재 소개에서 이러한 특성을 언급하고 있고, 단기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향후, 수산업에서 수용하는 보다 다양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종별 한국어 교육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 일을 할 때는 장갑을 끼고 싶어요”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신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언어 능력을 넘어 상호 존중 기반의 다문화 리터러시 제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노동 현장의 권력 비대칭 구조가 지니는 문제점 제기도 가능하다.

셋째, 현장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작업 대상에 국한된 어휘, 표현 학습으로 구성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양식업과 수산물 가공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또한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수산업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 속, 계절근로자 도입 분야는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해당 교재에서 양식업과 관련해서는 굴과 미역만 다루고 있는데, 2025년 8월 현재 가리비 등 해상 작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산물 양식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제도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이

5) 세종학당재단, 『농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세종학당재단, 2023.

주노동자가 어로, 양식을 담당하는 수산물의 종류는 매우 방대하므로 이를 전부 반영한 교재 제작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실용적인 언어 표현을 선별적으로 제시하고 기초 표현과 현장 응용 중심의 전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3.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산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제작된 특화 한국어 교재인 『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를 중심으로 다문화 리터러시 제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직종에 특화된 어휘와 실용 중심의 구성은 일정 부분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지만, 생활과 노동의 괴리,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 어업 현장의 다양성 미반영 등의 한계도 동시에 드러났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지시형 표현 중심의 언어 구조는 현장 내 권력 비대칭을 강화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다문화 리터러시의 핵심인 상호 존중과 소통 능력 증진이라는 목표와도 어긋난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청된다. 첫째, 생활과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통합적 언어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노동자가 단순히 수용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구조와 교수전략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산업의 다양한 작업군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듈형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굴, 미역에 국한되지 않고 가리비, 다시마, 김, 전복 등 주요 양식 품종별 언어 자료의 축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 리터러시는 단순한 언어 숙달을 넘어 권력관계와 문화적 경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을 지향하는 실천적 역량이다. 이 점에서 수산업 분야 한국어 교육은 단기적인 기술 습득을 넘어,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과 다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 향후에는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을 노동정책, 지역사회 통합 정책, 인권 및 안전정책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다층적 차원의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포용사회를 위한 어촌의 소통 리터러시

## : 언어와 공동체의 힘

양 민 호 | 국립부경대학교

### 1. 들어가며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이탈로 침묵해가던 어촌에 최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 어업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어촌은 단일한 언어·문화 공동체에서 다언어적 경계지대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 내부의 언어적 갈등과 소통의 단절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어촌의 공동체 문화는 협동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상호 이해와 정서적 유대는 생업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지속 가능성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하지만 현재의 언어교육 및 정책은 현장 언어의 맥락과 감정적 소통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능 중심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발표는 외국인 어업노동자 증가라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어촌 공동체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다문화 리터러시(multicultural literacy)' 개념을 바탕으로 소통의 재구성과 공동체의 재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촌은 지금 단순한 노동력 충원의 공간이 아닌 포용사회의 전환점이자 실천적 실험장이 되고 있다.

### 2. 포용사회와 다문화 리터러시의 개념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는 다양성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사회 모델로 특히 고령화·저출산·지역소멸 위기 속의 농어촌에서 실질적 생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정체성의 인정이 아니라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참여 보장과 소속감 형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소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개념이 '다문화 리터러시'(multicultural literacy)이다. 이는 단지 언어 능력이나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이해, 그리고 공동체적 실천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 차이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으로 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비판적 리터러시와도 맞닿아 있다. 어촌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지역 주민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일상화된 공간으로, 다문화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특히 어업 현장에서는 단순한 지시 전달을 넘어서 어로 도구 사용, 현장 상황 위험 인지, 동료와의 협업 순서 등에서 의미 조율이 필수적이며, 이는 언어적 정확성보다 문화적 해석과 감정적 공감에 중시되는 부분이다. 또 다문화 리터러시는 구조적 위계 안에서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주체적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적 장벽을 낮추는 윤리적 실천이기도 하다. 이는 단지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라, 지역 주민, 행정 관계자, 교육자 등 모두에게 요구되는 공존 역량이며,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전사회적 책임이다. 결국 어촌은 단순한 노동 현장이 아니라 다문화 리터러시의 실천을 통해 포용사회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경계의 장소’이며, 언어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키가 된다.

### 3. 위기의 언어, 생존의 말

경향신문에 따르면 2025년 7월, 경남 통영의 고등어잡이 어선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선원 세 명과 이를 구조하던 내국인 기관장 한 명이 어창 내부에서 질식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창은 청소 작업 당시 환기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유독 가스가 쌓인 상태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경고나 사전 안내 없이 외국인 선원들이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미리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고용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외국인 선원의 한국어 실력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고는 어촌 노동 현장에서의 언어 실천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동체 장치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어창 청소처럼 높은 위험이 동반되는 작업에서 “들어가도 된다”, “환기가 끝났다”, “지금은 위험하다”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현장의 맥락과 결합된 ‘위험 감지 언어’로 기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이 언어들이 문자 그대로만 해석되거나 아예 이해되지 않은 채 무시되기 쉽다. ‘조심해’라는 말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경고 수위를 전달하는지 ‘좀 이따’라는 표현이 실제로 언제를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언어는 전달되지 않는 명령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 교육 자료와 언어 안내 시스템에도 뿌리 깊게 존재한다. 대부분의 어업 현장에서는 한국어 중심의 지시문이나 경고 문구가 전부이며, 그조차도 일상화되어 무심히 지나치기 쉽다. 실제로 통영 사고가 발생한 어선에도 ‘위험, 가스 농도 높음’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겠지만, 외국인 노동자 누구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어촌 현장에서의 언어 리터러시가 단지 말의 전달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생존 문법’임을 의미한다. 소통 리

터러시의 결핍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위기로 발현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언어 능력은 단지 단어의 뜻이나 문장의 문법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맥락과 암묵지를 함께 읽어내는 이해 능력(소통 리터러시)이다. “그물 건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물때와 기상, 동료의 위치까지 고려해야 작업이 가능하고, “오늘 안 나간다”는 말 속에는 하루 수익 포기과 안전 유지라는 집단적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언어 실천이 외국인에게는 종종 설명되지 않고, 내국인 역시 그들의 언어적 이해를 가정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 결과, 어촌의 언어 생태계는 더욱 단절되고 고립된다. 한편 고용주는 반복되는 오해에 지쳐 “말이 안 통한다”며 일방적 명령만을 내리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시만을 외우거나 모국어 사용자끼리만 어울리며 현장을 통과해 간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외국인은 공동체의 일부가 아닌, ‘작업력’만을 제공하는 일시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부 어촌에서는 소통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어촌의 언어 지형은 이미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언어적 언어경관과 언어 실천의 다양화는 불가역적 흐름이다. 언어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언어를 통해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일은 단지 외국인에게만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 내국인, 고용주, 행정담당자, 교육자 모두가 ‘소통 리터러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어촌의 말은 곧 생존이며 동시에 공존의 언어이다. 이 언어를 함께 구성해가는 실천이야말로 포용사회를 위한 가장 구체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4. 언어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촌 마을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말이 통해야 사람 노릇도 한다”는 표현이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는 언어가 공동체 구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관계와 신뢰,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개이며, 통하지 않는 언어는 누군가를 공동체 바깥으로 밀어내는 배제의 신호가 된다. 어촌은 오랫동안 사투리와 구술 문화 기반의 밀착된 언어 공동체였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이후 이러한 감각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언어 단절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거리감과 정체성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같이 일하지만 같이 사는 건 아니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때 언어는 권력과 결합하여 누가 먼저 말하고, 누가 설명을 요구받으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 등 이 모든 것이 언어 권력의 구조다. 외국인이 유창하게 한국어를 말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이중 구조가 작동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 앞서서부터 줄곧 언급한 ‘다문화 리터러시’이다. 이는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닌 타자와의 언어적 조우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위치성, 권력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다. 제주나 보령 등 일부 어촌에서는 다언어 일상 실천을 통해 외국

인을 ‘고용된 타자’에서 ‘함께 사는 주민’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언어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경계를 그리는 가장 강력한 지표다. 어촌이 진정한 포용 공동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중심 언어질서를 재구성하고, 언어적 공감과 실천을 기반으로 한 진짜 소통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말이 바뀌면 공동체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 나오며

어촌은 한국 사회의 경계지대이며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 실험의 현장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활력적 어촌을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언어적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는 공존이 아니라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 리터러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어촌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다. 다문화 리터러시는 단순한 언어교육이 아니며, 최소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다. 어촌에서 소통 리터러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이 요구된다. 첫째, 도구적 한국어 교육에서 관계적 언어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시 중심 언어에서 벗어나, 일상 속 말 걸기와 정서 공유의 언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기반 소통 매개자 양성이 필수적이다. 언어는 제도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전달되며, 마을 내 청소년·이주민·리터를 연결하는 언어 연결자가 공존의 열쇠가 된다.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공동체형 언어 교육 모델의 정착이 필요하다. 셋째, 어촌 맞춤형 언어 정책과 제도적 권리 보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언어 안전 매뉴얼, 사투리-표준어 혼용 대응, 이주노동자 언어권 보장 등은 포용사회의 핵심적 인프라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계획과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결국 소통 리터러시는 ‘말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괜찮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바다는 언제나 타자와 마주하는 공간이었다. 그 타자가 이제 ‘함께 사는 사람’으로 전환될 때 진정한 포용사회는 육지보다 어촌에서 먼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시작점은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함께 말하려는 실천과 용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정훈. (2025, 7월 8일). 통영 고등어 잡이 선박 어창에서 선원 4명 질식했다... 의식 회복 '중환자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81034011>
- 김경남, & 양민호. (2025). 직업 목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직종별 교재 개발 방향성 연구. 한국어문교육, (51), 229-255.
- 양민호, & 김경남. (2025). 한국 사회의 다문화 리터러시와 산업별 한국어교육의 문제점. 인문학연구, 64(2), 163-194.
- 한국산재예방학회. (2022).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국가정책정보협의회
- Kim, S., & Kim, H. R. (2012).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South Korea. In J. A. Banks (Ed.), The immigration and education nexus: A focus on South Korea (pp. 49-64).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해역의 위기와 회복

## : 오사카 항만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의 공존 전략

공 미 희 | 국립부경대학교

### 1. 들어가며

인류 문명의 역사는 바다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고대 문명 발상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역은 인류에게 무한한 자원과 기회의 보고였으며, 항만은 이러한 해역과 도시를 잇는 핵심적인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 발전의 중추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도시화는 해양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과도한 오염물질 배출은 해양 생태계의 교란을 넘어 파괴를 야기했고, 난개발은 연안 습지를 잠식하며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켰다. 더욱이,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빈번해지는 연안 침식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닌, 당장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해역 위기는 특히 항만 도시에 더욱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항만은 물류와 경제적 기능에만 집중되어 도시의 핵심 동맥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거나, 기능 저하로 인해 도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변모하기도 한다. 따라서 항만은 경제적 거점을 넘어 환경과의 조화로운 공존, 그리고 도시와의 유기적인 상생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당위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거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능 저하로 인해 존폐의 위기까지 겪었던 일본 오사카 항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오사카 항만은 혁신적인 재생사업을 통해 해역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도시와 성공적으로 공존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했다. 본 발표는 오사카 항만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핵심 전략, 그리고 성공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과 지속가능한 항만 도시의 미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항만 재생 관련 연구들은 주로 물리적 인프라 개선이나 경제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해역의 위기와 회복’이라는 환경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와 항만의 공존 전략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오사카의 경험은 비단 항만 도시뿐 아니라, 해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모든 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2. 오사카 항만이 직면했던 위기의 다층적 분석

오사카 항만은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한때 일본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며 산업화된 국제도시로서 일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 19세기 말 개항 이래 꾸준히 발전하며 일본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도시 개발이 초래한 부작용은 오사카 항만에도 예외 없이 드리워졌다. 오사카 항이 직면했던 위기는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다층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첫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오사카 항만의 가장 큰 위협이었다. 항만 주변에 밀집된 중화학공업 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처리 폐수와 도시의 급증하는 생활하수는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항만으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해수 수질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높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수치는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다량의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등)과 유기물질, 그리고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질소와 인 성분의 유입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거 풍부했던 어족 자원은 급격히 고갈되었고,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물 다양성이 현저히 감소했다. 해저 퇴적물에는 오염 물질이 두껍게 쌓여 악취를 유발했고, 이는 항만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해양 생태계의 기능적 붕괴와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까지 확대되는 심각성을 띠고 있었다.

둘째, 경제적 기능 저하와 경쟁력 상실은 오사카 항만 위기의 또 다른 축이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급변하고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가 가속화되면서, 오사카 항만의 기존 시설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비효율성을 드러냈다. 깊이가 얕은 수심과 협소한 항만 부지, 그리고 낙후된 하역 장비는 대형 선박의 접안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물동량 감소로 직결되었다. 또한, 일본 내 다른 항만들과의 경쟁 심화, 특히 부산항, 상하이항 등 아시아 주요 허브 항만들의 급부상은 오사카 항만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켰다. 한때 활기 넘치던 항만은 점차 유향 공간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의 쇠퇴는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졌다. 이는 항만의 문제가 아닌, 오사카 도시 전체의 경제 침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시와 항만의 단절은 오사카 시민들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오염된 해안과 낙후된 항만 시설은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고, 항만은 더 이상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 아닌, 위험하고 불쾌한 기피 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과거 바다와 교감하며

형성되었던 해양 문화는 점차 쇠퇴하고, 항만은 도시 경관을 해치는 회색빛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단절은 도시민들이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수 활동을 즐길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오사카 시 정부와 시민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고, 항만 재생을 통한 도시 전체의 활력 회복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 3. 오사카 항만 재생사업의 혁신적인 전략과 성공 요인

오사카 항만은 직면한 다층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비롯하여 환경 복원, 도시 기능 재편,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전략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며 오사카 항만의 극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

첫째, 환경 친화적 항만 구축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복원이다. 오사카 항만 재생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심각하게 오염된 해양 환경을 정화하고,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과 생태 복원 기법이 동원되었다. 수질 개선 시스템 도입으로는 항만으로 유입되는 도시 하수 및 산업 폐수에 대한 고도 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오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오사카 시 하수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와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강화하여 방류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오염된 해저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준설 및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오염된 퇴적물은 특수 처리 시설로 운반되어 안정화 처리되거나,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되기도 했다. 아울러 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갯벌 조성, 인공 어초, 해초밭 복원 등이 추진되어 해양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했다. 이는 생물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항만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되어 해수 수질 개선 및 해양 생태계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둘째, 오사카 항만은 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공간적 활력을 창출하였으며, 도시의 일부로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재탄생되었다. 즉 오염되고 접근이 어려웠던 해안선을 정비하여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했고 노후화된 항만 시설 부지에 국제 회의장, 대형 쇼핑몰, 특급 호텔, 문화 예술 공연장 등 다양한 복합 시설을 유치했다. 대표적으로 오사카 덴포잔 하버 빌리지(天保山ハーバービレッジ, Tempozan Harbor Village)는 가이유칸(海遊館) 수족관, 덴포잔 대관람차, 쇼핑몰 등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인접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niversal Studios Japan)의 성공적인 유치는 항

만 지역에 막대한 유동 인구를 끌어들여 오사가 항만 전체의 재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항만 지역 내에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충하고 도심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이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항만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사카항 주변지도



덴포잔 하버 빌리지



캡틴라인(キャプテンライン) 셔틀船

셋째, 시민 참여와 견고한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오사가 항만 재생사업은 정부나 특정 기관 주도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이고 견고한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오사카시 정부, 항만 공사, 지역 기업,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참여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체계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서의 아이디어와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였다. 특히 시민들은 단순한 수혜자나 방관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서, 해안 정화 활동, 환경 감시 프로그램, 항만 활성화 캠페인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예를 들어, 매년 봄과 가을(주로 5월 또는 10월)에 개최되는 ‘오사가 항만 클린업 데이(大阪港 クリーンアップデー, Osaka Port Clean-up Day)’는 시민, 학생, 기업 자원봉사자, 항만 공무원, NGO 및 지역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환경 정화 행사이다. 이들은 오사카만 연안과 남항·북항·축항 주변, 해변, 하구, 인공섬(유메시마(夢洲), 마이시마(舞洲)) 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폐어망, 유리병 등 해양 쓰레기 수거, 분리배출, 미세플라스틱 정화 활동 등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해양 오염을 줄이고 지역의 환경 의식을 제고하며, 항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시민 주도형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 참여는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인의식 고취로 이어졌으며, 항만 재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혁신적인 시민 참여 전략

과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는 오사카 항만이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4. 결론: 오사카 모델이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항만 도시의 미래

오사카 항만 재생사업은 해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도시와 해역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며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이다. 그 성과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에서 오사카 항은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회복했다. 수질 지표는 현저히 개선되었고, 갯벌 조성, 인공 어초, 해초밭 복원 등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이는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관리 노력의 결과이며, 해양 환경 보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입증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사카 항만은 재도약에 성공했다. 복합 관광 시설과 컨벤션 센터 유치를 통해 관광객 유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항만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사카는 항만 재생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는 항만 기능의 다변화가 도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 두드러졌다. 오염되고 단절되었던 항만 지역이 시민들에게 개방된 아름다운 친수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시민들은 바다를 가까이에서 즐기고 해양 문화와 레저 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요롭게 하고,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오사카 항만은 이제 단순한 물류 거점이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상징적인 장소이자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었다.

오사카의 성공적인 경험은 현재 해역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항만 도시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산, 인천, 울산, 광양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 도시들 역시 오사카가 겪었던 환경오염, 시설 노후화, 그리고 도시와의 단절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사카 항만 재생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첫째, 환경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항만 발전의 가장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항만과 도시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항만을 더 이상 도시와 분리된 산업 시설로만 인식하지 않고, 도시의 역사, 문화, 경제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재편해야 한다. 친수 공간 확보, 문화 예술 시설 도입, 그리고 주거 및 상업 기능과

의 조화를 통해 시민들이 즐겨 찾고 활용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견고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 지자체, 항만 공사, 기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체계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오사카 항만의 사례는 해역의 위기가 오히려 도시와 해역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단지 성공적인 도시개발이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해양 환경 회복,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 전환이라는 복합적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 우리 한국의 항만 도시들도 오사카의 성공 경험을 거울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항만 재생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친환경적이고 활기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항만은 물류 기능만을 수행하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환경, 경제, 사회, 문화가 융합된 복합적인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 구랑위(鼓浪嶼) 도시재생과 공동체 붕괴의 해역적 함의<sup>1)</sup>

이 민 경<sup>2)</sup> | 국립부경대학교

## 1. 들어가며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 위치한 작은 섬 구랑위는 아름다운 자연 생태 환경과 근대사의 기억을 담은 건축물, 이국적이면서도 閩南 특유의 문화와 인문 예술적 정취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라는 명성으로 인해 중국 내외의 주목을 받는 대표적인 관광 지이자 샤먼 도시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공공조계지로 개발되었고, 해외에서 귀환한 화교들의 주요 정착지로 기능하였다. 그 결과 ‘만국건축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건축양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해상낙원’으로 불리는 인문경관과 中-西 문화의 융합적 분위기를 지닌 다문화적 국제공동체로서 독자적인 지역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구랑위의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은 억제되었고, 이후 개혁개방을 계기로 관광 중심의 도시재생 대상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1990년대 이래 구랑위는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특화되었으며, 정부는 20세기 초 구랑위가 지녔던 국제공동체적 도시문화를 ‘재현’함으로써 지역을 ‘재생’하고자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속에서 2017년 구랑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연

1) 본고는 줄고 「샤먼 구랑위의 도시재생 연구—지역정체성을 검토하여」(『中國學』 제88집, 2024, pp.581-604.)를 발표문 형식에 맞추어 요약·수정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강사(chinamin@hanmail.net)

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 경제는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구랑위 재생사업이 지역의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는지언정,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본고는 지역정체성과 공동체 해체라는 관점을 통해 구랑위 도시재생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해역적 함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구랑위 지역정체성의 변천 과정을 고찰한 후, 현대 중국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의 전개와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구랑위 지역정체성의 역사적 변천

### 1) 海防기지에서 반농반어 촌락으로

명대 전 시기와 청대 초기까지 구랑위는 주로 동남 연안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요충지로 기능하였다. 이 시기에도 일부 촌락이 형성되었으나, 취락지는 제한된 공간에 국한되었으며, 섬 전체로 보자면 군사시설이 주도적 공간을 차지하였다. 특히 정치적·군사적 상황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강제 이주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수년간 생산 공백이 발생하는 등, 구랑위 주민들은 불안정한 주거환경 속에서 경제 활동의 지속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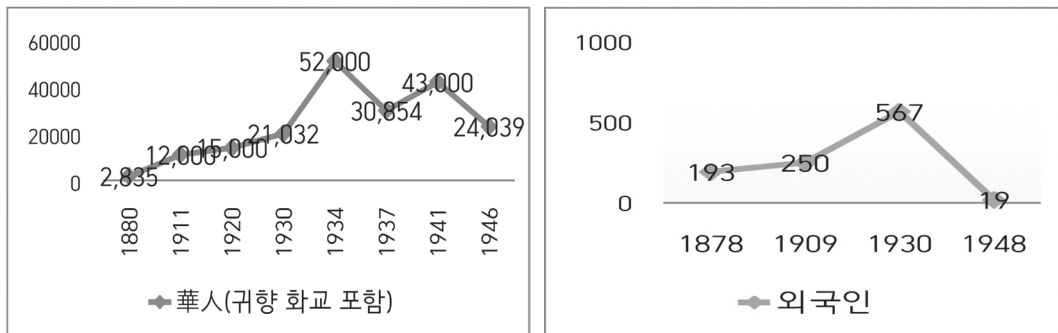
그러나 청대 중기, 특히 타이완의 평정 이후에는 군사적 기능이 점차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군사 공간의 구조도 변화하였다. 주둔 병력이 감축되고 군사시설이 철수되면서 섬 내 주거 및 생산 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주거 안정성과 생활 기반이 차츰 확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촌락의 형성과 대규모 농지 개간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구랑위는 청말에 이르러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반농반어의 향촌 정체성을 지닌 지역으로 전환되었다.

### 2) 공공조계이자 귀향 화교의 정착지

아편전쟁 이후 샤먼이 개항되면서, 구랑위는 제국주의 열강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은 구랑위에 자국의 전용 혹은 공동 조계지를 설치할 것을 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1900년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긴장되었다. 일본의 군사적 개입은 서구 열강과 청 정부 모두를 자극하였으며, 청나라는 제국주의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을 활용하여 샤먼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 아래, 1902

년 청 정부는 구랑위를 공공조계로 설정하는 데 동의하였다.<sup>3)</sup>

공공조계로 전환된 이후 구랑위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랑위는 상대적으로 치안과 위생 수준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의 이주가 활발해졌다. 특히 동남아와 타이완 등지에서 귀국한 화교들이 대거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자본은 개인 주택 건설은 물론 도로, 수도, 전기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해안 매립, 부두 건설 등에도 광범위하게 투입되었다. 더불어 화교들은 구랑위 내에 기업을 설립하고, 부동산업·금융업·경공업·상업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며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그림1〉 구랑위 인구수 추이 그래프 (단위: 명)<sup>4)</sup>

제국주의 세력의 유입, 공공조계의 설치, 귀향 화교 및 내지 출신 이주민의 정착 등 일련의 변화는 구랑위의 인구 구성과 경관, 경제 구조, 공간 배치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로써 지역정체성 또한 급변하게 되었다. 19세기 초반 하더라도 반농반어의 향촌이었던 구랑위는 공공조계 시기를 거치며 근대화된 국제도시로 전환되었다. 서양인, 귀향 화교, 대륙 출신 이주민, 그리고 토착 원주민이 혼거하면서 이질적 문화가 집적되었고, 이들은 각자의 문화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충돌과 융합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여타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하고 독특한 건축 양식이 형성되었고, 이는 오늘날 구랑위 문화경관의 핵심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1902년 청나라와 10개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은 「廈門鼓浪嶼公共地界章程」(Land Regulations for the Settlement of Kulangsu, Amoy)을 공동 체결하였다. 이로써 구랑위는 공식적으로 공공조계지가 되었고, 이듬해 설립된 鼓浪嶼公共租界工部局(Kulangsu Municipal Council)이 지역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다. 서구의 정치·행정·사법 제도, 교육, 문화 등이 이식되었고, 구랑위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하였다.

4) 근대시기 구랑위 인구에 관한 자료는 何其穎(2003), 張燦燦(2015), 邱鯉鯉(2017), 水海剛(2018), 袁絢(2020) 등의 연구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산업 구조 역시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경제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경공업 및 상공업 중심의 도시경제로 전환되었으며, 구랑위는 본격적인 도시화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외국인 거류지이자 귀향 화교의 정착지로 기능한 구랑위는 다원문화가 공존하며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국제적 근대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 3) 일제의 강점지

1938년 일본이 샤먼을 함락한 이후 9개월 만에 구랑위에 상륙하여, 조계 행정을 담당하던 공부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어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이 조계의 행정권과 관할권을 차례로 반납하고 철수함에 따라, 1945년까지 구랑위는 사실상 일본의 독점적 조계지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구랑위는 더 이상 국제적 교류와 공존의 장이 아닌, 일본의 배타적 통제 하에 놓인 폐쇄적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 시기 서구인과 화교 다수가 섬을 이탈하였고, 그에 따라 구랑위 도시 발전의 동력 역시 급격히 약화되었다. 공공조계 시기에 축적되었던 문화적·경제적 역동성은 단절되었으며, 지역 정체성 또한 일시적으로 침묵하게 되었다. 요컨대, 일제 강점기는 구랑위가 근대적 국제공동체로서 형성해 온 정체성을 붕괴시키고, 지역 발전을 장기적인 정체 상태로 진입하게 만든 전환점이었다.

## 3.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과 단계별 특징

20세기 초 구랑위는 포용적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근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아래 구랑위의 정체성은 억압되었다. 공공조계의 역사와 서구 문화는 체제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은폐되거나 배척되었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은 제도적으로 약화되었다. 해외 자본을 축적하고 귀향한 화교들 역시 ‘부르주아’, ‘자본주의자’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았으며, 다수가 지역을 떠나면서 화교 문화의 기반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로써 구랑위의 개방성과 다원성은 체제 전환과 함께 크게 위축되었다.

획일적인 경제 정책과 지역 특수성에 대한 고려 부족은 도시의 성장 동력을 저하시켰다. 투자가 중단된 가운데 주민의 생활 환경은 악화되었고, 근대 건축물은 방치되거나 훼손되었다. 또한 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가 발생하며, 인문경관과 자연경관 모두 쇠퇴하였다. 이 시기의 구랑위는 전반적인 정체와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샤먼이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구랑위 역시 도시재생의 대상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도시재생 사업은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



## 1) 제1단계: 경관 정비와 인구 감축

1988년 구랑위는 국가급 風景名勝區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노후건물 철거<sup>3)</sup>와 인구감축 정책이 병행되었고, 공장과 공공시설의 섬 외부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관광환경 개선에는 기여하였으나, 공동체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2) 제2단계: 역사문화유산 정비와 예술도시 이미지 구축

2000년 『鼓浪嶼歷史風貌建築保護條例』가 시행되며 근대 건축유산 보호가 제도화되었다. 동시에 ‘피아노의 섬’이라는 예술적 브랜드 구축이 이루어졌으며, 피아노박물관, 음악제 등이 개최되었다. 이는 구랑위의 문화적 자산을 관광자원으로 재해석한 사례이다.

## 3) 제3단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2008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본격 추진되었고, 2017년 유네스코는 구랑위를 ‘역사적 국제 공동체’로 등재하였다. 이를 위해 샤먼시는 역사건축 보수, 인프라 개선, 관광객 수용조절 등 전방위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랑위는 ‘관광도시’에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 정체성을 재편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대략 30년에 걸쳐 진행된 구랑위 개조 프로젝트는 구랑위의 도시정체성을 ‘관광도시’로 정립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광도시 구랑위의 세부 내용과 강조점이 풍경 명승지에서 역사·예술의 도시로, 다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로 조금씩 변동되거나 추가되었다.

5) 철거는 주로 역사 경관과 주요 관광 코스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철거 부지는 도로 또는 공원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거주 안전보다 관광 개발에 중점을 두었음을 시사한다.

## 4. 도시재생의 이중성: 외형적 성과와 내면적 균열

구랑위의 도시재생 사업은 관광산업의 급성장과 경제지표 개선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관광객 증가와 상업화는 주민들이 누려오던 평온한 생활을 침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섬을 떠나게 되었다. 산업시설,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이 외부로 이전되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고령화 또한 심화되었다.

2023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구랑위 戶口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12,516명에 불과하며, 이 중 60세 이상 인구가 4,586명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랑위의 출생률은 사망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입자는 전출자의 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랑위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구랑위를 떠나려는 주민들의 행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림2〉 2023년 鼓浪嶼街道 인구통계<sup>6)</sup>

| 총인구    | 연령별 인구 |        |        |        | 인구변동 현황 |     |     |     |
|--------|--------|--------|--------|--------|---------|-----|-----|-----|
|        | 0-17세  | 18-34세 | 35-59세 | 60세 이상 | 출생      | 사망  | 전입  | 전출  |
| 12,516 | 1,216  | 1,911  | 4,803  | 4,586  | 54      | 113 | 243 | 260 |

문화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고 계승되는 것으로, 주민의 이탈은 곧 지역문화의 해체로 직결된다. 구랑위는 관광명소이자 도시공간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 지역이지만, 그간의 개발 정책은 관광지로서의 기능에만 집중하여 공공서비스 축소와 공동체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강제이주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산업시설, 행정·교육·의료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섬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관광업이 지역 발전의 전부가 되면서, 도시로서의 품질과 주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었고, 공동체 존속에도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구랑위가 고품격 관광지로 성장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며 이룩한 도시문화의 힘 덕분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원주민 공동체의 소멸과 함께 구랑위 고유의 문화도 소멸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경제적 수익에 편중되어 공동체를 주변화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문화적 전통은 지역 공동체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며,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에는 지속가능한 문화도 존재할 수 없다. 향후 전개될 제4단계 도시재생은 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구랑위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6) 廈門市思明區統計局, 『2023思明區經濟社會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23, pp.82-83.

## 5. 해역도시재생의 방향성과 함의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재활성화시키는 것을 이른다. 재개발(Redvelopment)이 철거와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다면, 재생(Regeneration)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원형 보존에 궁극적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같은 인문적 원형을 보존하면서 진행되어야 하고, 주민공동체의 존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개혁개방 이후 구랑위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구랑위는 대규모 재건축 없이 공공조계 시기의 건축과 예술 자산을 활용하여 관광도시 및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재정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원과 도로 등의 물리적 환경도 개선되었다. 겉보기에 이는 도시재생의 성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생활 인프라의 축소와 공동체의 해체가 유도되었고, 이로 인해 원주민의 거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공동체가 해체된 도시에서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구랑위의 사례는 중국 내 ‘歷史風貌城市’라 불리는 여타 도시들의 재생사업과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 이들 도시 역시 외관의 역사성과 경관 보존에는 집중했으나, 주민의 삶과 공동체 유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도시문화는 단지 물리적 공간의 보존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삶의 지속이 결여된 도시는 결국 테마파크화된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진정한 도시재생은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주민공동체의 존립과 문화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인본주의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구랑위의 다음 단계 도시재생은 공동체의 회복과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해역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일 것이다.



#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전환

## : 대만의 해양정책과 해양교육의 문화적 성찰

김창경 · 공봉진 | 국립부경대학교

### 1. 서론

4면이 바다인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해양정책과 해양교육은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유엔과 유네스코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해양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의 해양정책과 해양교육은 대만 행정원과 교육부 및 해양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법률과 백서 및 강령, 그리고 주요 교육 계획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해양위원회가 발표한 『국가해양정책백서』(2020)에서는 대만이 지향하는 해양국가의 모습과 여러 부처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알 수 있게 한다.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해양교육 실시에 협력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7년에 『해양교육정책백서』(수정판)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의 기본 해양 소양 함양의 기반을 다지고, 고품질 해양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 지속적인 해양교육 추진을 위해 「제3기 2017-2021년 해양교육집행계획」을 제정하였다.<sup>1)</sup>

2018년 해양위원회를 정식으로 설립한 대만은 해양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협력하며 추진하는 것을 총괄하였다. 해양위원회는 2020년에 『국가해양정책백서』를 발표하여, ‘생태, 안전, 번영을 지속하는 해양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세웠고, 해양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2020년에 「바다에 경의를 표하다 : 해역개방과 발전계획(2020-2021)」을 제정하여, 대만 국민이 “바다를 알고, 바다를 가까이 하고, 용감하게 바다에 들어가다”를 하도록 하였다.<sup>2)</sup> 본 연

1) 『111-115년 海洋教育執行計劃』, 教育部 中華民國 110年12月, 2021. p.1.

2) 『111-115년 海洋教育執行計劃』, 教育部 中華民國 110年12月, 2021. p.1.

구의 목적은 대만의 해양정책에 따른 해양교육을 살펴보고 대만의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로서, 대만의 행정원과 교육부 및 해양위원회, 대만해양교육중심이 발표한 해양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다.

## 2. 대만의 주요 해양정책

대만의 해양정책은 2001년에 발표한 『해양백서』 이후 구체화되었다. 이때 대만은 ‘해양 국가’임을 선포하였고, 이후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원은 2006년에 『해양정책백서』를 재발간하면서 대만을 생태적이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해양 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sup>3)</sup> 해양위원회는 2020년에 『국가해양정책백서』(초안)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을 핵심으로 한 “생태, 안전, 번영의 지속가능한 해양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대만은 유엔에서 ‘세계 해양일’ 협정 정신에 부응하여, 2019년에 「해양기본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6월 8일’을 ‘국가해양일’로 지정하였다.<sup>4)</sup>

2020년 6월 5일 행정원은 「바다에 경의를 표하다 : 대만 해역 생태환경 수호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이때 ‘깨끗한 바닷물’, ‘서식지 보호 강화’, ‘지속 가능한 자원’이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생태 복원’, ‘서식지 보호 강화’ 및 ‘국민참여 심화’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sup>5)</sup> 대만은 「바다에 경의를 표하다 : 해역개방과 발전계획」(2020)에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바다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2019년도에 실시된 「12년제 국민 기본 교육 과정강요」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능력·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품질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제4기 계획(2022-2026년 해양교육집행계획)에서는 ‘지속가능성’, ‘심화’, ‘정진’이라는 3가지 개념을 기초로 삼았다.<sup>6)</sup>

3) 『海洋教育政策白皮書』, 教育部 106年10月, 2017. pp.8-9.

4) 「攜手全民向海致敬·生態安全繁榮並進」第一屆國家海洋日登場 <https://lrl.kr/chNhI>(검색일 : 2025.4.20.)

5) 『111年度行政院管制「向海致敬-臺灣海域生態環境守護計劃」查證報告』, 國家發展委員會 111年9月15日, p.7.

6) 『111-115年 海洋教育執行計劃』, 教育部 中華民國 110年12月, 2021. p.2.

### 3. 대만 해양교육 정책과 주요 내용

#### 1) 해양교육 정책 변화

2001년 행정원이 『해양백서』를 발표한 후, 교육부는 해양 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대만 교육부는 해양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에는 해양교육을 ‘4개년(2005-2008) 교육 실시 주요 축’의 행동방안에 포함시켰다. 해양교육을 ‘해양대만 추진체계 확립’ 행동 방안을 포함시켜 ‘해양대만 특색을 갖춘 초·중등 교육 과정 및 교재 내용 강화’, ‘해양대만 특색 교사 자질 강화, 현직 교사 연수 및 해양 교육 종자교사 양성’, ‘초·중등 학교의 관련 사회 교육 기관 협력을 통한 대만 해양문화 활동 및 공연 조직’, ‘해양운동 진흥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수영 능력 향상’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sup>7)</sup>

2007년 대만 교육부는 『해양교육정책백서』를 공식적으로 제정하였고, 기존의 해양교육을 기초로 한 해양교육 미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해양소양 함양을 강화하고, 산업계에 필요한 다양한 고품질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외에도, 해양 사고에 대한 전민 교육을 추진하였다. 교육부가 『해양교육정책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4개년 해양교육선도형 중기 개요 계획(2008-2011)」을 시작하였고, 대학교수, 사회 교육기관 전문 연구원 등이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해양 교재를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도록 ‘큰 손이 작은 손잡기’ 방안을 통해 독려했다.<sup>8)</sup> 교육부는 2008년에 『초·중등해양교육 의제 과정 강요』를 발표하여, 해양교육을 전국 초·중등학교 과정의 주요 의제로 정하였고, 대만에서의 해양교육 중요성을 명확하게 선언하였다.<sup>9)</sup>

2020년 교육부는 대만 전 국민의 해양소양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대만의 해양 교육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만해양대학 대만해양교육중심에 위탁하여 각 현, 시에 ‘해양교육 혁신 교과과정 및 교육연구개발 기지’를 설립하였다. 국립해양대학은 해양교육 발전과 국가해양일 활동을 촉진한다는 『해양교육정책백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해양교육중심은 2020년부터 대만 전역에 ‘해양교육 혁신 교과과정 및 교육연구개발 기지’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때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가입했다. 해양의 기초적인 지식 교육을 바탕으로 해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sup>10)</sup>

7) 『海洋教育政策白皮書』, 教育部 106年10月, 2017. pp.4-9.

8) 『海洋教育政策白皮書』, 教育部 106年10月, 2017. pp.4-9.

9) 施宜煌, “海洋教育: 重要性、發展與建議,” 『教育人力與專業發展』, 第29卷 第5期 101.10.

10) 向海致敬-全臺17所海洋教育基地在海大授證 <https://lrl.kr/ejFEF>(검색일: 2025.4.20.)

## 2) 학교 교육

교육부는 2003년에 『초·중등 9개년 교육과정 개요』를 발표하여 주요 학습 영역 7개를 제시했다. 해양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각 학습 영역에 분산되어 통합되었다. 교과서의 주요 내용은 ‘자연계의 구성과 특징’, ‘자연계의 작용’, ‘생활과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2008년에는 『초·중학교 9년 교육과정 개요』를 개정하였는데, ‘해양교육’이라는 주제를 추가해 해양교육을 다양한 학습 영역에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sup>11)</sup>

교육부는 2011년에 ‘고등학교 지구환경과학중심’을 ‘고등학교 해양교육자료중심’으로 전환하여,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과목에 해양교육을 결합 관련 교재와 교안을 개발하였다. 대학의 해양 교양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2008-2011 해양 교육 선도형 중기 개요 계획』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해양 입문 교양 과목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해양과 관련 없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해양 환경, 과학기술, 산업, 법학 및 인문학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강화하였다. 또 각 대학의 교육과정 자율성에 따라, 각 대학은 필요에 따라 해양 교육 관련 전문과정이나 교양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sup>12)</sup>

## 3) 해양교육집행계획

대만은 「12년제 국민 기본교육 과정 강요」(2019)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 능력 및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항 산업의 발전에 부응하여 다양한 핵심 분야에서 고품질의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대만은 3차례의 해양교육집행계획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제4기 해양교육집행계획(2022-2026)’을 실시하고 있다. ‘제4기 해양교육집행계획’은 육지와 바다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적 사고 방식 확립, 지식과 실천의 통일을 이루는 교육 실천 확립, 산학협력의 교육 비전 실현, 자원 공유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국제 통합의 교육 이상 구현 등을 추진한다. ‘제4기 해양교육집행계획’에서는 ‘지속 가능성’, ‘심화’, ‘정진’의 3가지 이념을 계획의 기초로 삼는다. ‘제4기 해양교육집행계획’의 목표는 개정된 『해양교육정책 백서』의 3가지 목표를 따른다. 3가지 목표는 “첫째, 지역 특성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여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둘째, 기초 해양소양 교육 강화와 해양국가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셋째, 학교교육과 해양산업 발전의 연계 및 해양교육 인재양성 체계를 혁신한다.”이다.<sup>13)</sup>

11) 『海洋教育政策白皮書』, 教育部 106年10月, 2017. p.9.

12) 『海洋教育政策白皮書』, 教育部 106年10月, 2017. pp.10-11.

13) 『111-115年 海洋教育執行計劃』, 教育部 中華民國 110年12月, 2021. pp.2-3.

## 4. 대만 해양정책의 변화와 해양교육의 심화

### 1) 대만의 해양 정책의 전환

2015년 이전의 대만 해양정책은 2001년 『해양백서』에서 밝혔던 “대만의 해양국가” 선포와 관련이 있다. 대만의 해양정책은 ‘대만의 고품질 해양국가 건설’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 발표되었던 『해양정책백서』에서는 “생태적이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해양 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해양 문화와 해양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2017년 이후 대만 해양교육은 ‘제4기 해양교육집행계획’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계획’에서 제3기 5개년 계획의 해양교육을 알 수 있는데, 당시 대만의 해양교육은 “해양교육 심화를 위한 메커니즘 강화”와 “모든 시민의 해양소양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이때 대만은 2019년에 ‘해양교육 교과과정 및 교학 발전기획소조’를 설립하여 해양교육의 교과과정과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2019년부터 ‘해양교육 진흥상’을 수여하였고, 매년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교육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대만은 시민의 해양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양교육을 12년제 국가교육과정의 모든 학습 영역 교과서에 통합시켰고, 해양교육 교사를 위한 참고 안내서를 편찬했다. 이때 단계에 맞게 해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2021년에는 ‘해양교육 교사용 안내서 편찬소조’를 구성하였다. 또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해양교육 관련 과정과 교육을 강화하였다. 대만에서는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 진로 관련 제도를 구축하였고, 해양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해양 관련 선도 활동을 강화하였다. 게다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하여 해양교육을 진행하였다.

### 2) 2025년 다양한 형태의 해양교육

대만은 해양정책을 기반으로 한 해양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해양교육 전국순회전시’이다. 국립대만해양대학 대만해양교육중심이 주최하는 “해양교육 전국순회 전시”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해양교육 주간을 활용한 해양생태와 환경 변화와 보호의 제를 소개한다. 교육부는 매년 6월 8일 ‘세계해양일’의 이념에 부응하여, 2015년부터 세계해양일 주간을 ‘해양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대만해양교육중심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sup>14)</sup> 셋째, 해양교육자 양성 교육이다. 국립대만해양대학 대만해양교육중심이 해양교육자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sup>15)</sup>

해양위원회와 국립대만교육대학 대만해양교육중심은 전국 고등학교(직업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의 해양소양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과 시의 야외교육 및 해양교육중심과 협력하여 전국성 해양소양교육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5년 5월 국립대만해양대학에서 진행되었던 ‘해양소양 종자교사 교육’은 전국에서 200-250명의 교사를 모집하여, 미국 ‘해양과학 시퀀스(OSS) 교재를 활용하고, 현지화 된 해양과학 실습 교육 자료와 교수 보조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학교 교육에 접목하여 학생들의 해양과학 지식과 해양 소양을 강화하고자 하였다.<sup>16)</sup>

## 5. 결론

2001년에 ‘해양 국가’임을 선포한 대만 정부는 『해양백서』에서 포괄적인 3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자국의 해양 권익 보장, 해양연구 등이었다. 대만의 행정원, 교육부, 해양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해양 관련 정책은 대만의 해양 안보에서부터 해양 소양교육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대만의 해양정책과 해양교육은 크게 2개의 전환점을 계기로 변화였다. 먼저 대만 해양정책과 해양교육의 첫 번째 전환점은 2004년으로 볼 수 있다. 대만 교육부는 해양교육을 ‘4개년(2005-2008) 교육 실시 주요 축’의 행동방안에 포함시켰다. 해양교육을 ‘해양대만 육성체계 확립’ 행동방안을 포함시키면서, 해양대만의 특색 있는 초·중등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양대만 특색의 교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2007년에 『해양교육정책백서』를 공식적으로 제정하면서 해양교육 미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면서 학생들의 해양소양 함양 강화와全民교육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 발표한 『초·중등해양교육 의제 과정 강요』에서 대만은 전국 초·중등학교 과정 개요의 제7대 의제로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양교육을 실시하기

14) 海洋教育全國巡迴展啟動 科普繪本徵選活動同步登場 <https://mprp.ntou.edu.tw/p/406-1017-112119,r1031.php?Lang=zh-tw>(검색일 : 2025.4.20.)

15) 轉知國立臺灣海洋大學臺灣海洋教育中心為提升教師海洋教育知能,開設3門磨課師課程,即日起開放線上報名,2025年3月17日 <https://lrl.kr/VSm0>(검색일 : 2025.4.20.)

16) 建立海洋素養教育推動藍圖 海委會攜手海大臺灣海洋教育中心,22個縣市戶外教育及海洋教育中心 <https://lrl.kr/chNhG>(검색일 : 2025.4.20.); 海委會今年起擴大「海洋素養種子教師培訓」全國200名 海大臺灣海洋教育中心積極扮演推動角色 <https://lrl.kr/chNhF>(검색일 : 2025.5.27.)

시작하였다. 대만은 해양교육을 학교교육 뿐만이 아니라, 학교 외 교육(야외교육)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대만의 해양정책과 해양교육의 두 번째 전환점은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2015년 유엔이 발표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2017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2021-2030)’은 대만의 해양정책과 해양교육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대만의 해양정책과 해양교육 내용은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제시하였던 목표를 기반으로 좀더 구체적이면서도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행정원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해양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였고, 교육과정을 통해 고품질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제4기 계획(2022-2026)을 실시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해양국가를 천명한 뒤 해양발전을 위해 학교 교육과 야외 교육을 통해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해양국가 건설과 시민들의 해양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본격화하면서 해양대만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참고문헌

- 「攜手全民向海致敬·生態安全繁榮並進」第一屆國家海洋日登場 <https://lrl.kr/chNhl>(검색일 : 2025.4.20.)
- 建立海洋素養教育推動藍圖 海委會攜手海大臺灣海洋教育中心、22個縣市戶外教育及海洋教育中心  
<https://lrl.kr/chNhG>(검색일 : 2025.4.20.)
- 施宜煌, “海洋教育: 重要性、發展與建議,” 『教育人力與專業發展』, 第29卷 第5期 101.10.
- 轉知國立臺灣海洋大學臺灣海洋教育中心為提升教師海洋教育知能, 開設3門磨課師課程, 即日起開放線上報名, 2025年 3月 17日 <https://lrl.kr/VSm0>(검색일 : 2025.4.20.)
- 海洋教育全國巡迴展啟動 科普繪本徵選活動同步登場 <https://lrl.kr/bBPPs>(검색일 : 2025.4.20.)
- 海委會今年起擴大「海洋素養種子教師培訓」全國200名 海大臺灣海洋教育中心積極扮演推動角色  
<https://lrl.kr/chNhF>(검색일 : 2025.5.27.)
- 向海致敬-全臺17所海洋教育基地在海大授證 <https://lrl.kr/ejFEF>(검색일 : 2025.4.20.)
- 『111-115年 海洋教育執行計劃』, 教育部 中華民國 110年12月, 2021.
- 『111年度行政院管制「向海致敬-臺灣海域生態環境守護計劃」查證報告』, 國家發展委員會 111年9月15日
- 『海洋教育政策白皮書』, 教育部 106年10月, 2017.

# 표류하는 시간과 초기 세계화

## : 근세 표류기(漂流記)와 근세 초기 동아시아 사회의 시간 주권(主權)

신 상 원 | 인제대학교

### 1. 서론

이 논문은 근대 초기 동아시아 해상 표류자들이 경험한 시간적 혼란을 탐구하며, 표류기(漂流記)를 해상 경계를 넘어 정치적 주권이 협상되고, 분쟁의 대상이 되며, 균열되는 담론의 장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서사들은 근세 세계화(early modern globalisation)아래의 국가들이 공간적 지배뿐만 아니라 시간의 규제와 표준화에도 의존하였음을 드러낸다. 최근 제국을 근세 세계화의 구성적 동력으로 강조하는 연구들에 기반하여,<sup>1)</sup> 본 연구는 표류 기록을 통해 조선, 명·청 제국, 도쿠가와 일본, 응우옌 베트남 등 근세 동아시아 국가의 ‘시간적 주권(temporal sovereignty)’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적 주권’은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가 시간의 질서와 리듬을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공간적 주권(spatial sovereignty)’-즉 영토의 경계를 설정하고 통치하는 권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어떤 지배 세력이 강요하는 시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 감각에 따라 생활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다. 시간적 주권 개념은 기존의 권력과 경쟁의 현장으로서 장을 시간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공간적 주권(토지 및 영토)의 권력 메카니즘에서 시간을 중립적인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시간 자체가 정치화되어 권력 메카니즘에 포

1) A.G. Hopkins, ed., *Globalization in World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2002, p.3; Stearns, Peter N., *Globalisation in World History (Themes in World Hist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pp.45-72, 81; Zinkina, Julia, et al., ‘Introduction Globalisation Context’ in *A Big History of Globalization*, Gewerbestrasse: Springer, 2019.

함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sup>2)</sup>

17세기 이후 동아시아는 폭풍, 선박 침몰, 항법 오류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상 국경을 넘어 강제적으로 이동하게 된 개인들-상인, 어부, 학자 등-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세계화의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이는 동아시아 사회가 이전 세기보다 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결성은 의도된 지역 간 이동뿐만 아니라, 표류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이동의 가능성 또한 현저히 증가시켰다. 이러한 표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는 표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다른 나라에 표착(漂着)한 표류자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간 경험을 겪게 된다. 표류자들의 처지는 단순한 공간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심층적인 시간의 문제였다. 첫째, 그들은 자신이 익숙하던 달력 체계, 관료적 리듬, 사회적 일상으로부터 단절되며, ‘표류 시간’이라 부를 수 있는 경계적 시간의 영역에 진입하게 된다. 이는 고향 정치체의 시간 구조-의례 달력, 조공 주기, 계절 의식 등-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로 이 경계성으로 인해, 그들은 표착지 국가의 관료들에게 더욱 가시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표류자들은 표착지 정권이 운영하는 주권적 시간 질서와 조우하면서 ‘도전받는 시간’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 관료와 조사관에게 이들의 표착은 자국의 시간적·영토적 주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반대로 표류자들은 그 정권이 부과하는 시간 규범에 순응해야 하는 요구, 즉 ‘도전받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 두 시간 체계-표류자의 경계적 시간과 정권의 주권적 시간-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지점에서, ‘세계 시간(global time)’이라 불릴 수 있는 중첩된 시간적 영역이 형성된다. 이러한 교환 속에서 표류자, 관료, 그리고 현지 주민들은 서로 상이한 시간 체계뿐 아니라, 초기 세계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상호 얽힘의 시간적 논리를 인식하게 되는 복합적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근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표류자와 표착지 정권 사이에서 끊임없이 협상되는 시간 질서의 중첩된 영역을 ‘세계 시간’이라 명명한다.

이 연구는 한국, 일본, 베트남, 중국의 표류 기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근세 동아시아의 정권들이 단지 공간적 경계뿐 아니라 시간의 규율을 통해서도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근대 국가뿐만 아니라 전근대의 지배 권력 또한 공간적 정복에 그치지 않고, 시간의 표준화를 통해 작동하였으며,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고유한 리듬과 시간 논리를 생산함으로써 구성원들을 그 기준 틀에 종속시켰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가 지역적 시간

2) Rifkin, Mark. Beyond settler time: Temporal sovereignty and indigenous self-determin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7)

체계를 부과한 것을 밝히고, 명·청 제국이 구축한 보다 광범위한 제국적·초지역적 시간 질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2. 표류 시간과 도전받는 시간

‘표류 시간’과 ‘도전받는 시간’의 경험은 표류자들이 직면한 관료적 마찰의 서사에 생생히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는 난파선 생존자들이 행정 및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쳐 체류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 기간 동안 표류자들의 신분, 이동 경로, 소속 관계는 상세히 기록되었으며,<sup>3)</sup> 이는 주권의 질서와 인정의 필요성에 의해 작동하는 관료적 시간의 표상이었다. 이러한 시간은 표류자들이 고향 사회에서 내면화한 시간적 긴급성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후자의 긴급성은 효행의 실천, 통치자에 대한 충성, 조상 제사의 수행 등으로 표출되었으며,<sup>4)</sup> 이는 표류자들로 하여금 단지 육체적 고립만이 아니라 시간의 소외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것은 단지 사회 규범의 순환 주기에서 벗어난 소외일 뿐만 아니라, 전근대 지배 권력이 확립한 시간 표준과 통치의 고유한 리듬 및 시간 논리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시간적 소외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간적 주권은 근대 세계화에 비해 외부 사회와의 시간 질서 교류가 제한되었기에, 오히려 국가 내부에서는 더욱 강하게 통용되었고, 그 내재성 또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전근대 국가들-특히 중국 문화권과 조공체제에 포함된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 제국의 역법과 연호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자국 내에서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간 주권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일본과 베트남 등에서는 이를 통해 자국 중심의 시간 질서를 제도화하였다.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자국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베트남에 표착한 조선인 김대황(金大璜, ?-?)은 베트남이 당시 중국의 연호와 다른 베트남의 연호인 정화(正和)를, 조선에 표착한 야스다 요시카타(安田義方, ?-?)는 일본이 중국과는 다른 연호인 문화(文化)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5)</sup> 조선은 대체로 중국의 연호를 썼지만, 청나라가 나타난 이후에 조선의 양반들은 청나

3) 김대황(金大璜). “표해일록.” 서광덕 역, 아시아의 표해록, (서울: 소명출판, 2019), 102-103; 이지항(李志恒). “표주록.” 서광덕 역, 아시아의 표해록, (서울: 소명출판, 2019), 50-55, 63-67; 채정란(蔡廷蘭). “해남잡저.” 안재연 역, 아시아의 표해록, (서울: 소명출판, 2019), 135-137, 183-184

4) 이지항. “표주록.” 29; 채정란. “해남잡저.” 128

5) 김대황. “표해일록.” 95; 야스다 요시카타(安田義方), 이근우·김윤미 역, 조선표류일기 (서울: 소명출판, 2020), 62; 충청병영계록(忠淸兵營啓錄) 순조(純祖) 19년(1819) 7월 초8일; 하세봉, “南越國에서 해양교역의 역할: 南越王博物院의 전시소장품을 중심으로,” 역사와경제 127 (2023), 304

라의 연호가 아닌 명나라의 연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sup>6)</sup> 당대 천명을 받은 청나라의 연호가 아닌, 이미 없어진 명나라의 연호를 계속 쓴 것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시간적 주권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근대 세계화에서 나타난 제국의 식민자들이 원주민들의 시간적 주권을 없애는 것과는 대비된다.<sup>7)</sup> 이는 당시 근세 세계화를 주도하던 중국의 시간적 주권 보다 각 사회 고유의 시간적 주권을 지킨것이다. 만약 이것이 중국에게 가시화되고 계속 문제시 되었다면 각 사회의 시간적 주권은 성립될 수 없었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중앙집권화를 중심으로 시간적 주권을 그 구성원들에게 강요했다. 근세 일본의 경우 각 지역의 영주(大名)들은 에도(江戸)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바쳤다. 송전부는 매 3년 마다 세금으로 황금 50냥을 바쳤다.<sup>8)</sup> 또 모든 지방 영주들은 에도에 있는 동안 다이묘는 한 달에 두 번 쇼군의 법정에 출석하고 도시 곳곳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세습 전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은 히메지(姫路城)나 나고야(名古屋城)와 같은 영지의 성읍에 모이거나 상주 다이묘의 시종으로 에도에 파견되었다.<sup>9)</sup> 조선의 경우는 더욱 집적적인 시간 표준의 강요가 있었다. 일본처럼 봉건적제도로 각지의 영주들이 각 영지에서 나름의 시간의 표준을 유지 할 수 있었던것과 달리 중앙에서 관료가 파견되어 각 지역을 조선 정부가 직접 통치했기 때문이다. 직접 통치는 조선 정부의 시간 표준과 리듬을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강요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야스다 같은 경우 도쿠가와 막부의 시간적 주권을 표출하기 보다 본인이 살던 사츠마 지방 영주의 시간 표준을 보여준다.<sup>10)</sup> 반면의 이지항(李志恒, 1647-?)과 채정란(蔡廷蘭, 1801-1859)의 경우도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시간 표준을 표류기에서 보여준다.<sup>11)</sup>

이러한 각 지배체제의 고유한 시간과 리듬의 표준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시간 질서를 내면화하도록 만들었다. 표류 기간 동안 표류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시간 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이를 표류기의 서술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표류기는 개인이 내재한 시간 감각

6) 『弘齋全書』卷8, 序引1 宮園儀引, 宋時烈, 『宋子大全』丑167, 碑, 全羅監司俞公神道碑銘(弁序); 정해은, “정조대 어제전운시의 유입과 병자호란 기억의 재구성 -나덕현 이확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22 (2021), 253; 이경구, “총론 새롭게 보는 정조와 19세기”, 『역사비평』 (2016), 111-112

7) Rifkin. Beyond settler time.

8) 이지항, “표주록.” 44

9) Darwin, John. “Ch 3 The Early Modern Equilibrium.” After Tamerlane: the global history of empire since 1405. (London: Penguin Books, 2008)

10) 요시카타, 조선표류일기

11) 이지항, “표주록.”; 채정란, “해남잡저.”

에 따라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표류자들이 여전히 본국의 시간 질서에 따라 경험을 해석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술된 사건들의 진행은 표착지 정치체의 관료제적 시간 절차에 따라 전개되며, 표류자들은 이러한 외적 시간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부유하고 방황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도전받는 시간은 표류인이 내재한 그들의 시간적 주권과 다른 형태의 시간과 속도에 의해 나타났다. 이러한 충돌은 각 표착지 국가에서 행해진 표류인들을 관리하고 송환하고자 하는 행정적 처리에서 드러난다. 청나라에서는 표류인을 심문하여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중앙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송환절차를 논의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청나라의 행정 절차적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일본과 조선도 마찬가지였다.<sup>12)</sup> 조선을 예를 들자면, 표류인이 표착하게 되면 조선 또한 자신들의 행정적 시간으로 표류인을 관리하고 송환하고자 했다. 그것은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의 표도인(漂到人) 조항에 잘 드러난다.

“〈표도인〉 이국인(異國人)이 표착(漂着)한 보고서가 들어오면 뱃길이나 육로를 불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송환시키는 방침으로 아뢰어 하되, [...] 홍제원에 들어온 뒤에 낭청을 파견하여 다시 사정을 사문(査問)하고, 피복과 잡종 물품을 따로 내어 주도록 한다. [...] 회송되는 공문을 기다릴 것 없이 바로 떠나 보내고 [...]”<sup>13)</sup> 이러한 조선의 시간적 주권 행사는 표류인에 내재된 시간적 주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본과 베트남, 청나라에 표착한 조선의 표류인의 표류기에서 잘 보여진다. 이지향과 김한남(金漢男, ?-?)을 포함한 8인은 일본 홋카이도에 표착한 후, 당시 홋카이도를 통치하던 마쓰마에번(松前藩)의 관원들로부터 송환 절차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일본의 내부 행정 절차에 따라 에도와 오사카(大阪)를 거쳐 약 1년 만에 조선으로 송환되었다.<sup>14)</sup> 또, 김대환 또한 베트남에서 청나라로 송환되었다가 10월 28일 부터 무진년 3월 초 10일까지 고향에 돌아갈 기약도 없이 회안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sup>15)</sup> 야스다 요시카타가 겪은 조선표류일기에는 도전받는 시간의 경험이 더 자세하게 드러난다. 조선 정부의 관료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 및 관료체제의 시간적 리듬에 맞춰 요시카타를 방문하여 심문하고 이는 요시카타의 시간 리듬이 도전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례로, 조선 관료는 “풍월을 읊고 싶지만 공적 일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했다”라며, 자신이 국가적 시간 질서에 의해 제약받는 것

12) 이지향, “표주록,” 52-54; 모리야마 테이지로(森山貞次郎), 박화진·서광덕 역, 청국표류도(淸國漂流圖), (서울: 소명출판, 2022), 131-132; 김대환, “표해일록,” 91-97; 채정란, “해남잡저,” 128, 134-144

13) 만기요람(萬機要覽) 2, 군정편(軍政篇) 1, 표도인(漂到人).

14) 이지향, “표주록,” 54-55

15) 김대환, “표해일록,” 96-97

을 보여준다.<sup>16)</sup> 이러한 조선의 시간적 주권은 요시카타의 시간 리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시간 리듬에 종속되도록 강제한다.

요시카타 일행의 시간 리듬을 무시하고, 해가 이미 기울었는데, 경역관이 방문해서 심문을 시도하거나,<sup>17)</sup> 요시카타가는 긴급한 자신의 시간 리듬에 맞춰 밤사이에 저들에게 세 차례가 편지를 보내서 조선의 시간적 주권에 지속적으로 도전한다.<sup>18)</sup> 또한 그는 “문선왕(文宣王, 공자)이 말씀하시기를, 지사와 인인은 삶을 구하느라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신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일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공들이 우리들에게 어찌하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또한 도의가 있어야 하고, 법을 지키는 것도 또한 도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도의를 등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죽도록 한다면, 군주의 상과 벌이 어떠하겠습니까? 도의에 말미암아 사람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군주의 상벌이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조선국의 일을 나는 알지 못하니, 또한 어찌하겠습니까?”<sup>19)</sup> 라며 공통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시간적 주권을 협상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조선 관리는 요시카타의 시간 리듬에 답하지 않으며, 이는 표착된 이후 그들의 시간 또한 조선 관료가 설정한 시간 틀 속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시카타는 ‘죽음’과 ‘인의(仁義)’의 시간적 긴박성을 내세워 조선을 압박하지만, 조선은 응답을 유예하며 그의 긴박성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한다. 이는 곧 ‘누가 시간의 속도와 타이밍을 결정하는가’라는 주권의 문제이며, 이는 곧 물리적 공간보다 더 본질적인 주권의 장이 ‘시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 세계 시간

‘표류 시간’과 ‘도전받는 시간’이라는 이중적 시간 경험은 결국, 근세 초기 세계화 속에서 형성된 제3의 시간 질서인 ‘세계 시간’으로 접합된다. 이 세계 시간은 비록 느슨하게 통합된 형태였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다. 조공 주기, 역법의 기준, 의례 주기 등은 중국 제국이 주도한 시간 질서에 따라 규제되었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전역의 정치체들은 상호 간 시간적 표준을 공유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계 시간이 표류자들에게 단지 혼란이나 낯설

16) 요시카타, 조선표류일기. 301-302

17) 요시카타, 조선표류일기. 197

18) 요시카타, 조선표류일기. 207, 213

19) 요시카타, 조선표류일기. 213

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향 정치체에서 내면화된 개념들과 놀라운 연속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요시카타가 송환되기 전날, 마지막 환송 장면에서 조선의 관료와 요시카타 일행이 ‘축하와 이별’을 위한 의례는, 이러한 공통 감각을 회복한 시간 질서의 일치로 볼 수 있다.<sup>20)</sup>

‘보편 왕권(the notion of cosmic kingship)’, ‘보편 종교(universal religion)’, ‘신체와 토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짓는 체액론적 사유(humoral theories of the body and the land)’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구조는 낯선 맥락 속에서도 익숙한 의미의 좌표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이중 경험-이 질적 공간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소외와 동시에 인식의 연속성-은 우연적 현상이 아니며, 근대 초기 동아시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다. 동아시아는 이미 확산되었으나 불균등한 세계적 교류의 네트워크 속에 위치한 지역이었으며, 이 연결성은 점차 이데올로기적 구성의 장으로 작동하며 새로운 시간 질서를 형성해 나갔다.

이 공유된 이데올로기적 문법은 근세 세계화가 민족주의, 자본주의, 대표 민주주의와 같은 현대적 이념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sup>21)</sup> 오히려, 이 시기의 세계화는 더 오래되고 포괄적인 질서의 비전, 곧 천명(天命)과 우주적 주권에 기반한 통치 이념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중국 황제가 천자(天子)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교리이며, 이는 지역 간 통치를 가능케 한 가장 명확한 규범적 장치였다. 특히 만주족 정복 정권인 청 제국은 이 이념을 티베트,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로 확장하며, 천명에 기반한 우주적 정통성과 통치의 도덕적 책무를 동시에 강조하였다.<sup>22)</sup> 청 제국은 동아시아 질서 내 헤게모니 권력으로서, 근세 세계화의 윤곽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제국적 권위는 조공 체제 국가들 사이에서 의식의 동기화를 촉진하며, 역법의 기준, 조공 주기, 의례 주기 등으로 구성된 시간적 규범들을 수립하였다. 이들 시간 체계는 모두 중국 중심의 제국 달력에 따라 엄격히 규율되었다.

20) 요시카타, 앞의 책, pp.301-302;

21) Baily, C. A., "Archaic and Modern Globalization in the Eurasian and African arena, c. 1750-1850," in Globalization in World History Edited by Hopkins A., (London: Pimlico, 2002), 49

22) Perdue, Peter C. "Comparing empires: Manchu colonialism."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0.2 (1998), 255-256

## 4. 결론

이 연구는 근세 동아시아 표류기를 분석함으로써, 근세 세계화의 문맥 속에서 시간적 주권의 침식과 재구성 과정을 조명하고자 했다. 표류자는 단지 공간을 넘나든 존재가 아니라, 각기 다른 시간 체계-즉 ‘표류 시간’, ‘도전받는 시간’, 그리고 ‘세계 시간’-을 횡단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조선, 명·청 제국, 도쿠가와 일본, 응우옌 베트남 등 동아시아 사회의 표류 기록을 비교 고찰하며, 이들 문헌이 각국의 관료제와 제국 질서가 시간이라는 추상적 범주를 통해 어떻게 주권을 구성하고 유지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로 작동했음을 보인다.

특히 난파나 해상 풍랑으로 외국 해역에 표착한 후 겪은 체류, 조사, 송환 절차는 주권의 시간 질서가 개인의 생존 시간에 미치는 제약과 갈등을 생생히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효(孝), 조상 제사, 정기적 조공 등 전통 사회의 시간 윤리를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동시에 표류자가 새로운 정치체의 시간 질서에 ‘순응’해야 했던 구조적 상황을 통해 드러난다. 나아가, 이러한 시간적 경험들이 중국 제국을 중심으로 한 초지역적 질서, 즉 역법의 기준, 조공의 주기, 의례 주기의 통일 등을 통해 제도화된 ‘세계화 시간’의 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이전의 ‘근세 세계화’ 과정에서 시간 주권이 공간 주권과 동일하게 경쟁의 장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근대 제국뿐만 아니라 전근대 제국들 또한 공간적 정복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표준화를 통해 시간 주권을 강제하고 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제국이 주도한 근세 동아시아의 세계화된 시간 질서 속에서도 조선, 일본, 베트남 등은 단지 중국의 시간 주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각기 자국의 고유한 시간 체계를 유지하며 오히려 자국 내에서 시간 주권을 행사하였다. 이들은 내부 정치체와 백성들에게 자국 중심의 시간 표준을 강요함으로써, 독자적인 시간 질서를 제도화하고 내면화시켰다. 이는 이들의 시간적 주권이 근대 세계화 사회에서처럼 외부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래 시간 규범과의 충돌보다는 자국 내부에서의 재구성과 제도화를 통해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단순한 사회 규범을 넘어 고유한 시간의 리듬과 논리를 생산함으로써, 구성원들을 자국의 시간 체계에 종속시키는 주권적 권위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 중국 해양신앙의 정치적 재구성

## - 마조신앙을 중심으로

김 경 아 | 부산대학교

### 1. 서론

오늘날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를 단순히 과거로부터 전승된 유형·무형의 유산으로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 사회주의 체제와 긴밀하게 결합된 이념적·정치적 자원으로 재정립하려는 국가적 기획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문화 정책은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그중에서도 민간신앙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물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민간신앙은 본래 이념적으로 모순된 요소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통문화'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포섭되며, 정책적 보호와 활용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컨대 도교와 불교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보생대제(保生大帝)신앙과 마조(媽祖)신앙은 푸젠과 타이완[閩台]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의 묘봉산묘회(妙峰山廟會) 역시 수도권을 대표하는 민간신앙 행사로 정착하였다.

그중에서도 마조신앙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중국의 전통문화 대표 사례로 부상하였다. 표면적으로 민간신앙이 국가의 인정과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종교적 성격이 희석되고 '문화'라는 이름 아래 전통문화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발표는 중국 정부의 문화정책과 사회주의 체제의 연관 속에서 마조신앙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문화자원화되어 국가전략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마조신앙의 역사와 신앙의 확산

마조신앙은 푸젠성에서 기원한 대표적인 민간 해양신앙이다. 전승에 따르면 마조는 송 건륭 원년(960년) 푸젠성 푸톈(莆田)시의 메이저우섬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임묵(林默)으로, 태어났을 때 울지 않아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그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송대 소흥 20년(1150) 요붕비(廖鵬飛)가 지은 「성돈조묘중건순제묘기(聖墩祖廟重建順濟廟記)」에 등장한다. 생전에는 무녀로 활동하며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예언했으며, 사후에는 여러 차례 이적을 보였기에 지역 지역 사회에서 신격화되어 사묘에 모셔졌다.

이후 마조는 송·원·명·청대를 거치며 황실로부터 ‘천후성모’ 등 여러 봉호를 부여받으며 해상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 공인 해양신으로 자리 잡았다. 남중국 연안 지역-푸젠, 광둥, 홍콩, 마카오-을 중심으로 마조신앙은 확산되었으며, 대외무역과 이민을 통해 동남아시아, 대만, 미주 지역에까지 퍼져나갔다. 신앙권에 속한 이민자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도 마조묘를 세우고 제례를 지내며 공동체 정체성과 결속을 유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조는 단지 항해의 수호신을 넘어서, 출산·질병·재물 등 일상 기복의 영역까지 관장하는 신으로 신적 권능을 확대하였다. “화교가 있는 곳에 마조가 있다”는 말처럼, 마조신앙은 민간에서 자생성과 확산성을 가진 해양신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3. 마조신앙의 정치적 재구성: 문화자원화의 국가전략

### 1) ‘마조문화’ 담론의 형성과 국가전략으로서의 전환

마조신앙의 문화자원화는 그 명칭의 전환에서 출발하였다. 1987년 마조 탄생 천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상하이사범대학 린원진(林文金) 교수는 마조신앙이 봉건미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학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조문화’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하였다.<sup>1)</sup> 이 제안은 이후 정부의 문화정책과 접목되어, 민간신앙을 ‘전통문화’라는 프레임 안에 포섭하는 핵심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마조신앙은 ‘문화’라는 외피를 통해 국가가 통제 가능한 자산으로 재정의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신앙의 초월성과 자율성은 희석되고, 문화산업·지

1) 梁曦 (2020), 「莆田妈祖信俗动态研究-以2018年的最新普查为对象」, 『東洋文化交渉研究』, (13), Kansai University, p.689; 莆田文化网 (2012), 「林文豪先生的“妈祖缘”」, <http://www.ptwhw.com/?post=4911>, 2022.11.8.검색.

역경제·외교전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적 자원으로 전환되었다. 리상평(李向平)은 이러한 현상을 “문화로 신앙을 구성하는 것(文化建构信仰)”이라 명명하며, 국가의 문화기획이 종교적 실천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계와 마조신앙의 제도화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가입을 계기로, 자국 전통문화 보호를 국가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부각시키며 관리제도 정비에 착수하였다. 2011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법(非物質文化遺產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목적을 ‘중화민족의 문화정체성 강화’,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유지’, ‘사회화합 촉진’으로 규정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단순한 문화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이념적 과제와 결합되어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마조신앙은 전략적 보호 대상이 되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업에서 마조제전은 총 8개의 항목이 심의·등재되었으며, 이는 지역별 제례방식의 차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제도 안에 통합된 결과였다. 이 제도화는 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신앙 실천이 국가 관리체계 속에서 법적·행정적으로 통제되는 구조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마조제전은 이제 지역축제, 문화관광, 외교홍보 등의 틀 속에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 3) ‘마조신속’의 유네스코 등재와 명명전략

2009년 마조신앙은 ‘마조신속(媽祖俗信)’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이 명칭 선택은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으며, 종교성·미신성을 암시하는 ‘제사(祭祀)’나 ‘신앙(信仰)’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제전(祭典)’과 ‘속신(俗信)’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택한 전략적 조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민속학자 우빙안(烏丙安)은 일본 민속학의 ‘속신(俗信)’ 개념을 차용하여, 마조신앙의 종교성을 탈색하고 민속으로서의 생활습속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다.<sup>2)</sup> ‘신속’이라는 용어는 ‘신앙(信)’이 아닌 ‘습속(俗)’에 의미의 중심을 두며, 이로써 민간신앙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명명 전략은 관공신앙, 여와신앙 등 유사한 사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종교적 실천을 정치적 위험 없이 제도 내에 수용하기 위

2) 烏丙安, 胡玉瑩, 「“俗信”概念的確立與“媽祖俗信”申遺-烏丙安教授訪談錄」, 『文化遺產』第2期, 2018, pp.3~5.

한 방식으로 기능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조신앙은 ‘종교적 신앙’에서 ‘전통문화의례’로 전화되었고, 이로써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로 편입되었다. 이는 무신론 국가 체제에서 민간신앙이 제도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타협적 결과이자, 동시에 종교성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정치적 재구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4) 민간신앙의 비종교화와 전략적 활용

마조신앙의 문화자원화는 종교성을 제거한 ‘비종교화’를 통해 추진되었다. 중국 학자 첸충(陳瓊)은 마조신앙이 ‘미신’에서 ‘전통문화’로 전화한 대표 사례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 아래 새로운 문화적 부흥을 맞이했다고 평가한다. 자오웨이웨이(趙翠翠) 또한 민간신앙이 문화라는 이름 아래 지역경제와 문화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비종교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에서 마조신앙은 이 과정에서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본래 성격을 상당 부분 상실했지만, 그 대신 정치적·경제적·외교적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획득하였다. 특히 대만과의 문화적 연계를 강조하며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족주의 정체성과 체제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징 자산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 4. 결론

마조신앙은 푸젠 지역의 자생적 민간 해양신앙으로 출발했으나, 현대 중국에서는 ‘전통문화’의 외피를 통해 재정의되고, 국가 주도의 법제도와 행정관리 속에서 정치적 자산으로 재구성되었다. 특히 유네스코 등재, 무형문화유산 제도, 명명 전략 등의 과정을 거치며, 그 종교성과 공동체적 자율성은 점차 희석되고, 문화산업과 통치 전략의 일부로 전환되었다.

이는 단지 마조신앙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중국 내 민간신앙 전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 곧 ‘비종교적 문화화’와 ‘국가 전략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정치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민간신앙이 지닌 자율성과 신성성이 어떻게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형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그 사회문화적 함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18분과

(사)박물관과 박물관사람들

[특별분과] 섬과 박물관

|                                                                     |     |                |
|---------------------------------------------------------------------|-----|----------------|
| 섬과 박물관<br>-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장을 위한 박물관 활용법                               | 배기동 | (사)박물관과 박물관사람들 |
| 섬과 바다 그리고 박물관: 해양시대 박물관의<br>기능과 역할<br>-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전시관 사례를 중심으로 - | 조용철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 『계원필경집』, 『임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br>고대 동아시아의 섬과 기록의 활용방향                    | 임동민 | 계명대학교          |
| 신안군의 문화예술 소개                                                        | 최흥철 | 신안군청           |
| 강화“섬”지리를 풀어내는 전시 콘텐츠<br>만들어가기                                       | 윤승희 | 강화군청           |
| 『울릉도검찰일기』의 또 다른 기록,<br>『울도산해록』                                      | 김소정 | 국립해양박물관        |
| 세화마을 해녀체험으로 살펴본 통한 Eco<br>Museum 구현 공간으로써의 제주도                      | 김윤아 | 국립해양박물관        |

# 섬과 박물관

## - 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장을 위한 박물관 활용법

배기동 | (사)박물관과 박물관사람들 회장, 전 국립박물관장

섬은 문화적으로 대단히 독특한 환경조건을 가진 곳이다. 이것은 자연환경 뿐 아니라 문화의 유입과 발전이 인위적으로 조절되기도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연생태계에서도 섬의 생물을 island species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로 자연조건이 특수하여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육지보다도 현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인류의 확산과정에서도 바다 섬들은 대륙보다도 훨씬 늦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유전적으로도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물환경적인 조건 외에도 우리 역사에서 무인도 정책이라든지 또는 왜구나 해적의 약탈이라든지 등등의 사회적인 조건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과 사회 환경의 차이가 섬지역의 문화를 다르게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섬 부자국이다. 제주도로 부터 작은 무인도까지 합쳐서 적어도 3천개 이상의 섬이 한반도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섬문화에 보이는 다양성과 공통된 패턴은 인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섬 외부의 문화의 확산과정과 섬 주민들의 적응과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고 외부적인 영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형의 보존이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연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무분별한 사회적인 개발로 인하여 더 이상 파괴되고 사라지기 전에, 섬 문화의 진정성을 선도적으로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진전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 사회가 디지털 기술충격으로 극심하고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서 대중들의 휴식과 다양한 문화경험을 위한 관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섬지역은 경관과 고유한 문화가 핵심적인 자원이 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독특한 관광자원이 개발되어 섬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박물관의 활용을 시도하여 왔고 각 섬의 지방정부들이 박물관활용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안군의 1004섬 박물관 전략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섬문화활용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은 섬 지역의 문화적인 보존과 지역활성화의 기반으로 박물관 설립과 운용은 대단히 필요한 국가전략이다.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미래의 지속가능성의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현재보다도 훨씬 더 섬지역 간의 경쟁이 강해 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섬지역의 문화적인 다양성의 보존과 이를 문화적인 진정성으로서 섬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보다도 훨씬 다양한 주제와 형태, 그리고 실행의 박물관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는 섬지역에 반드시 전통문화가 아니라도 여행지의 특별한 경험으로서 미술과 과학 등의 주제들이 포진할 수 있을 것이고 생태박물관 eco-museum, 생활박물관 living museum, 자연생활체험박물관 living archaeology museum, 대지미술박물관 land arts museum, 등등의 작지만 고유한 형태의 박물관들을 구성하고 섬문화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미 섬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지만 효율을 고려하여 새롭고 참신한 시도로서 구성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기존의 박물관의 기능인 섬지역의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수집하고 보존 전시하는 기능과 함께 섬의 문화와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활용전략을 세우는 필수적인 기반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설정과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섬 문화의 개성화 작업은 섬지역의 관광정책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바로 박물관의 유효한 활용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박물관의 기능이 지역 문화의 창조적인 활용을 포함하여 설정함으로서 섬 지역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섬과 바다 그리고 박물관

## :해양시대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전시관 사례를 중심으로 -

조 용 철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 1. 머리말

2025년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발돋움 한지 꼭 1년이 되는 해이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전환한지 첫돌이 되는 해이다. 또한,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4번째로 발굴된 마도 4호선 발굴로부터 1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나아가 2026년은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시작점인 1976년 신안선 발굴로부터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다가오는 2027년은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건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태안선(태안 대섬) 발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처럼 향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수많은 발굴을 리마인드(Re-Mind)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본 발표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인 목포·태안 2개의 전시관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향후 두 전시관이 국가유산청 소속의 유이한 해양 전문 박물관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발표라 생각한다.

본 세션의 주제는 '섬과 박물관'으로서 199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2년에 걸쳐 섬 해양유산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입장에서는 매우 연관성이 깊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단순히 섬 해양유산조사를 넘어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유산 연구를 전반적으로 되짚고 이에 대한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장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해양 전문 박물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리하고자 한다.



## 2. 해양유산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 해양유산 연구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수중발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1976년 신안선 발굴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수중발굴을 비롯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우리나라 해양유산연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했을 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전시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추진 중인 해양유산 연구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에는 해양유산을 별도로 정의해 놓지는 않았지만 소관업무 부분에서 해양유산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발표자료 참조).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해양유산 연구에는 수중유물과 해양민속 연구가 포함되며 같은 내용이 2016년에 제정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에서도 확인된다.<sup>2)</sup> 여기에서 ‘수중유물’이란 1976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온 수중발굴 및 발굴 유물에 대한 보존·분석 연구를 의미하며, ‘해양민속’은 넓은 의미에서 해양유산을 포괄하는 역사·민속학적 조사·연구를 의미한다. 해양유산의 어원과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나 기관마다 의견이 분분하나, 본 발표문에서는 우선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기준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sup>3)</sup>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 중인 해양유산 연구는 앞서 언급한 수중유물(수중발굴) 관련 연구이다. 수중발굴 연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설립 이래 연구소의 핵심사업으로 지속 추진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발굴 성과가 전시까지 이어져 활용되었다. 반면, 또다른 갈래에 해당하는 해양민속 조사·연구의 경우 그 중요도에 비하여 활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추진되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해양유산 연구에는 지금까지 해양문화유산 연구로 통칭되던 제반 연구들이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해양민속, 해양사, 고선박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각각 섬 해양유산, 해양역사유적, 전통한선 연구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이중 가장 오래된 사업은 1993년 제주 폐배 조사로부터 시작된 섬 해양유산조사이다.

1)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발족하면서 기존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역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명칭을 일신하였다. 이하 본 발표문에서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통일하고자 한다.

2)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2024. 5. 17.)』 제4조(소관업무)

3) ‘해양유산(海洋遺産)’이란 종전까지 문화재청에서 사용해오던 해양문화재(海洋文化財)라는 표현에서 문화재를 유산으로만 바꾼 표현이다. 그러나 해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유산이라는 표현은 자칫 ‘바다’와 관련된 제반 연구만을 포괄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담수(淡水)권 관련 국가유산 연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조용철, 2024,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해양유산 연구 현황과 과제」 『2024년 3차 이코모스 포럼 - 해양유산 조사 연구 후속세대 양성』 발표자료집).

1994년은 그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수중발굴을 통해 입수한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해 국립해양유물전시관(목포)이 설립되는 시점이다. 1993년부터 시작된 섬 해양유산조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해양유산 전문 전시관을 설립하면서 기존의 수중발굴·보존 연구 사업 이외에 새롭게 시작한 해양유산 연구의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기 섬 해양유산조사는 포괄적인 해양유산연구의 한 갈래로서 섬을 함께 다루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90년대 말부터 영광 낙월도와 신안 가거도·흑산도를 기점으로 섬을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조사 내용 역시 기존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수행하던 사업들인 전통한선, 어로·민속 등을 조사대상으로 삼다가 2009년 안마도부터는 섬 그 자체를 조사대상으로 삼는 해양문화유산 종합조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섬 자체를 해양유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기존 수중발굴 중심의 연구사업을 다각화하여 각종 해양유산 관련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2007년부터는 해양사 연구의 일환으로 해양유적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양유적연구는 해양관방(수군진), 해양교통(조운), 해양제사(전통신앙) 등 해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유적을 해양유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위치를 비정하고 해양과 관련하여 함께 확인되는 제반 사항을 분석·연구해왔다.

해양유적조사는 섬 해양유산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처음 전국 수군진 유적 조사를 시작으로 조운문화유적, 해양제사유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종합 연구로 거듭나고 있다. 해양유적의 특성상 해상교통 및 군사적 요충이라 할 수 있는 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해양유적조사의 경우 섬 해양유산조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그 연구성과를 공유하기도 하였다.<sup>4)</sup>

### 3. 섬 해양유산 자원을 활용한 전시 사례 분석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수중발굴 전문기관으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축적된 발굴 성과 및 출수 유물의 전시를 위해 1994년부터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을, 2019년부터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이후 두 전시관은 각각 서해 서남부해역과 서해 중부해역의 해양유산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해양유산 전문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4) 다만, 해양유적조사는 권역별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섬 해양유산조사는 거점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범위만 놓고 보았을 때는 해양유적조사가 섬 해양유산조사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2024년 기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은 2006년부터 총 73회,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2018년부터 총 10회에 걸친 특별전을 기획·개최하였다.<sup>5)</sup> 이 중 대다수가 해양유산 관련 특별전이었으며, 그동안 수중발굴을 통해 입수한 유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특별전이나 이를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선보이는 테마전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최근 두 전시관 모두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유산 연구를 전시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섬 해양유산 자원을 활용한 전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사례 1 :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 - 진의 깃발 나부끼고 조운선 들고나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진행된 특별전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 - 진의 깃발 나부끼고 조운선 들고나네〉는 전시관이 위치한 충남 태안 근흥면 신진도리 소재의 고가(古家)에서 2020년에 조선시대 수군 군적부(軍籍簿)가 발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전시는 같은 해 전시관 건너편에 소재한 안흥진성이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하여 수군 군적부와 더불어 안흥진성을 함께 소개하는 특별전으로 구성되었다.

본 특별전은 전시관이 소재한 신진도라는 섬에서 발견된 해양유산 자원인 ‘안흥진성’과 ‘수군 군적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서해중부해역의 해양유산 연구·발굴·보존·전시의 임무를 띠고 건립되어 태안과 마도 해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주요 전시품으로 삼고 있는 해양유산 전문 박물관이다. 전시관이 위치한 태안군은 고려시대부터 해상 물류 교통의 중심지였다. 특히 반도라는 특성상 안개가 자주 끼고, 조류가 빠르고 바람이 거세며 암초가 많아 해난사고가 잦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조선의 수도인 한성의 턱밑에 위치하여 삼남 지방, 특히 곡창지대였던 전라도의 세곡이 수도로 운반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하는 교통의 요로이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만 총 5척의 고선박이 발굴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sup>6)</sup> 여기에 임진왜란 이후 왜구에 대한 해상 방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통의 삼도수군통어영을 중심으로 인근의 덕적, 영종진과 함께 서해중부해역의 관방체계가 일신되었고, 경기의 입구에 해당하는 태안 지역의 군사적 중요도 역시 함께 상승하였다.<sup>7)</sup> 이러한 이유로 태안 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안흥 지역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물류 교통과 군사 방어라는 두 가지

5)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전시관의 주요 특별전 개최 현황은 바료자료를 참조할 것.

6) 태안 지역에서 발굴된 고선박은 총 5척으로 고려시대 고선박 4척(태안선, 마도 1·2·3호선)과 조선시대 고선박 1척(마도 4호선)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고선박에 대한 발굴 보고서를 참조할 것.

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조선시대 수군진 보고서V - 경기지역편』 참조.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된 것이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위치한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의 고가에서 발견된 수군 군적부는 바로 안흥진에 소속된 수군과 관련된 것이었다. 2020년에 개최한 특별전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는 전시관이 위치한 신진도라는 섬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유산을 활용한 전시라는 측면에서 섬 해양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에 위치한 박물관이 지역 자원을 조사·연구하여 그 성과를 전시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8)</sup>

## 2) 사례 2 : 2025년 찾아가는 해양유산 - 관매도

찾아가는 해양유산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유물 등을 직접 가져감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증진시키고 기관의 홍보 성과를 제고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2016년 이전까지는 ‘이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16년 이후부터 찾아가는 해양문화재(해양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이 위치한 전남 일대의 문화취약지역 및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제공되다가 2018년부터는 태안군에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생김으로써 충남 일대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장하였다.<sup>9)</sup>

도서 지역은 대표적인 문화향유 취약지역으로 다양한 해양유산이 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각종 문화인프라(Cultural Infrastructure)는 내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교통 등의 문제로 문화인프라에 대한 접근성도 약하다. 이 때문에 찾아가는 해양유산은 사업 초기부터 전시관 인근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 초기 찾아가는 해양유산은 연구소의 수중발굴 성과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되었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수중발굴 현장 사진, 발굴 장비, 조사선 모형, 유물 복제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관의 성과를 지역민에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도서 지역을 홍보의 대상 내지는 전시의 객체로 삼는다는 한계가 분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5년 관매도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해양유산은 2023년 관매도 해양유산조사의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도서 지역민의 삶 자체를 전시의 활용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섬 해양유산조사는 통상 2년의 조사·연구 기간을 거쳐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며, 조사·연구의 대상이 된 섬에 보고서를 기증하고 경과를 보고하는 보고회를 가진다. 이번 찾아가는 해양유산은 해

8) 본 특별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특별전의 전시도록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0,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 - 진의 깃발 나누끼고 조운선 들고나네』를 참조할 것.

9) 2006~2024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찾아가는 해양유산의 성과를 정리하면 발표 자료의 내용과 같다.

당 보고회와 궤를 같이하여 관매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매도 소재 국가유산인 천연 기념물 후박나무를 비롯하여 관매도가 보유한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나아가 관매도가 소속된 진도군에서 진행되었던 진도 오류리 명량대첩 해전지 수 중발굴 성과를 함께 전시하여 관매도 주민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가유산을 전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찾아가는 해양유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만하다.<sup>10)</sup>

## 4. 맺음말 : 해양시대 해양 전문 박물관의 역할과 의무

지금까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진행되었던 해양유산연구의 일환으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성과를 전시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해양 전문 박물관으로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과제 몇 가지를 언급하며 본 발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 언급한 두 사례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섬 해양유산자원을 전시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 특별전의 경우 신진도에 소재한 섬 해양유산을 전시관의 전시의 대상으로 활용하여 섬이라는 공간을 전시관으로 끌어들이는 사례이며, 〈찾아가는 해양유산 : 관매도〉는 관매도 소재 섬 해양유산을 직접 관매도라는 공간에서 전시한 사례로서 전시관이 보유한 문화인프라를 섬으로 직접 가져온 사례라는 차이가 있다.

향후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해양유산 전문 박물관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섬 해양유산 진흥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문화인프라 접근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해양유산 안에서 섬 해양유산이 갖는 위치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유산 체제하에서 해양유산의 독자적인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3법 체제로 규정되어있지만, 해양유산은 해양이라는 범주 안에 세 가지 국가유산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국가유산 체제의 하부 범주로서 해양유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해양유산의 범주 안에서 섬 해양유산만이 갖는 특징을 부각시키고 이를 사업 수행에 접목 시킬 필요가 있다. 도서지역은 내륙지역과는 구분되는 분명한 특징을 갖추고 있는 바, 해양유산 역시 도서지역 해양유산과 내륙지역의 해양유산을 범주화하고 각

10) 진도 오류리에서 진행되었던 수중발굴 성과에 대해서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간한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I~IV를 참조할 것.

각의 특징을 부각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만이 갖는 독자적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존 섬 해양유산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절실하다.<sup>11)12)</sup> 다양한 기관에서 섬 해양유산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섬 해양유산을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의 중복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섬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우후죽순처럼 중복된 내용의 사업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될 단초이기도 하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비롯한 섬 관련 연구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하며 발표를 마친다.

11)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제외하고도 섬 해양유산 조사·연구 기관은 다수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섬진흥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해양사, 해양정책, 해양개발 등 각자의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정 정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섬 해양유산조사 사업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12) 도서지역 인문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도서문화연구원은 말할 것도 없으며,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이나 KMI의 경우에도 섬 유산 제도 도입이나 해양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섬 해양유산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 『계원필경집』,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과 기록의 활용방향

임 동 민 | 계명대학교

## 1. 머리말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과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는 9세기 신라, 일본 지식인의 일생과 동아시아에서의 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9세기 후반 신라의 최치원, 9세기 중반 일본의 엔닌(圓仁)은 각각 당에서 활동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의 활동과 여정을 위의 두 기록에 남겼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당에서 불교 수행에 정진하고 일본에 돌아온 여정을 기록한 책이고, 최치원의 『계원필경집』은 당의 관리로 있으면서 지은 시문(詩文)을 모은 문집인데, 마지막 권에 귀국 여정을 담았다.

최치원과 엔닌이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를 이동하였던 중요한 경로는 항로였다. 특히 강남지역에서 출발하여 신라, 일본으로 돌아갔던 귀국 항로는 황해 및 남해 연안의 많은 섬과 깊은 관련을 맺었다. 최치원과 『계원필경집』에 관한 연구,<sup>1)</sup> 엔닌과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관한 연구는<sup>2)</sup> 다수

- 
- 1) 200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 성과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하다(장일규, 2002, 「崔致遠 연구의 성과와 전망」, 『북악사론』9). 최치원의 재당활동과 귀국길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고(김복순, 2001, 「中國內의 崔致遠 遺蹟과 『桂苑筆耕』」, 『동악미술사학』2; 조범환, 2006, 「崔致遠의 在唐 活動과 歸國 -특히 仕宦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33 등), 『계원필경집』에 관한 해제는 다음이 참고된다(장일규, 2011, 「『계원필경집』의 편찬과 사료적 가치」, 『진단학보』112 등).
  - 2)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관한 국내 연구는 재당신라인 사회(權惠永, 2005, 『在唐 新羅人社會 研究』, 一潮閣; 金文經, 2008, 『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통해 본 新羅人群像』, 財團法人 海上王張保皋記念事業會 등), 장보고와 신라 해양사에 집중되었다(尹載云, 2002, 『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경인문화사; 崔根植, 2005, 『신라 해양사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고경석, 2006, 『淸海鎮 張保皋勢力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등). 기록의 해제는 다음이 참고되며(李侑珍, 2010, 「『入唐求法巡禮行記』 解題」, 『東國史學』48), 엔닌의 여정, 섬에 관한 검토는 다음에서 일부 이루어졌다(주성지, 2020, 「『입당구법순례행기』 지명 분석을 통한 圓仁의 路程 복원」, 『신라사학보』48; 정진술, 2009,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홍성화, 2021, 「고대 서남해 항로에 대한 고찰-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39, 40~47쪽).

축적되었지만,<sup>3)</sup> 두 기록에 보이는 동아시아의 섬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들이 활동하고 기록을 남겼던 9세기는 당, 신라, 발해, 일본 사이의 동아시아 바다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하였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섬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두 기록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 뒤, 기록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 섬의 사례를 황해와 남해 연안 중심으로 정리하고, 맺음말을 대신하여 박물관에서 섬 기록의 활용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 2. 『계원필경집』과 『입당구법순례행기』의 특징

『계원필경집』은 최치원이 879년부터 885년까지 당 회남절도사 고변의 휘하에서 활동하면서 지은 시문(詩文)을 모아 편찬한 문집이다. 최치원의 『계원필경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집으로 전해지며, 그 후로도 널리 유통되어 많은 기록에서 인용되었다. 이 문집에는 9세기 후반 당에서 일어난 황소의 난 등의 다양한 혼란과 사회변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최치원의 문장력도 엿볼 수 있다.

최치원은 신라에서 태어나 당에 들어가 빈공과에 급제하고, 고변 휘하에서 종사관을 역임하면서, 많은 문장을 남겼다. 그는 885년 28세 나이로 귀국하였는데, 아마도 당의 혼란 등으로 인한 좌절, 신라 왕실의 적극적인 요청, 고향에 대한 향수 등이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귀국 후에는 문한관을 맡아 활동하다가, 해인사에 들어가 말년을 보냈다.

『계원필경집』의 문장은 고변 휘하에서 작성한 문서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마지막 권20의 시문은 최치원이 귀국하던 무렵의 시, 편지 등을 담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기록은 당에서 알고 지내던 여러 인물과 주고받은 시문이나, 귀국 여정의 고단함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귀국 여정의 구체적 상황, 특히 고대 동아시아의 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부족하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입당구법순례행기』와 더불어 검토하면, 9세기 동아시아 바다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일본 자각대사(慈覺大師) 엔닌(圓仁, 794~847)이 838년에 일본을 출발하여, 일본 견당사 일행과 함께 당에 들어가, 847년까지 불법을 수행하고 나서 일본에 돌아온 일

3) 두 기록의 비교를 통해 최치원의 귀국 항로를 추적한 연구도 있으며(임동민, 2024b, 『『계원필경집』을 통해 본 최치원의 귀국 항로 -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엔닌 귀국 항로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신라사학보』62), 본 발표문은 해당 논문의 방법론에서 힌트를 얻어 작성되었다.

정을 기록한 일기이자 여행기이다. 따라서 문집 성격의 『계원필경집』과 달리,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는 엔닌의 이동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다.

엔닌은 당에 들어가기 위하여, 일본의 공식 견당사 일행에 합류하여, 견당사 선박을 타고 규슈 일대를 출발하여 서쪽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곧장 강남지역으로 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엔닌을 태운 배는 출발 이후 악천후에 고생하다가 표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도달한 육지는 목적지였던 당의 양주 경내였고, 엔닌은 마침내 당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엔닌은 당에서의 체류가 거절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재당신라인 사회의 다양한 도움을 얻어, 결국 산둥반도 적산법화원까지 이동하여 체류하였고, 마침내 당에서의 수행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당 무종 시기의 불교 탄압책인 회창폐불에 휘말리게 되어, 847년에 귀국하게 되었다. 이러한 귀국 과정은 산둥반도 일대에서 출발하여 신라 서쪽과 남쪽 바다의 여러 섬을 경유하여, 쓰시마를 보면서 항해하여,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엔닌은 귀국 과정에서 경유한 황해와 남해 연안의 섬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다.

### 3. 『계원필경집』과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

『계원필경집』 권20의 시문에 따르면, 최치원은 884년 10월 무렵 양주에서 운하로 이동하여 초주에 도착하였고, 회수로 이동하여 황해 연안을 따라 산둥반도에 정박하였다가, 유산에서 겨울철을 보내고,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문을 작성한 뒤, 봄에 귀국길에 올라, 885년 3월에 신라로 귀국하였다. 귀국 여정을 담은 『계원필경집』 권20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섬을 표현한 기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귀국을 허락해 준 것에 사례하는 계(謝許歸觀啓)’의 ‘해도(海島)’에 보이는 것처럼, 섬을 신라에 대한 문학적인 비유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이 문장은 권20의 처음에 나오는데, 최치원이 귀국을 허락받은 뒤에 고변에게 감사하는 내용이다. 문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최치원은 영예로운 귀국으로 해도(海島)를 찾아가는 것에 기뻐하는 동시에, 당에서의 성장과 생활에 대한 감회를 설명하고, 결국 고향의 아버지를 보러 귀국하는 감정을 토로하였다. 문장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이 기록에서 ‘해도(海島)’는 당에서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신라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활용되었다.

두 번째는 중국 전설이나 고사를 인용하면서 섬을 언급하는 것이다. ‘태위에게 올리는 별지(上太尉別紙)’의 우(又)(제3수)’에는 거센 풍랑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약주머리를 뱃머리에 매달아 두라는 고변의 조언에 따르면, 걱정 없이 ‘봉도(蓬島)’를 찾아 신선처럼 노닐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여기서 ‘봉도(蓬島)’는 중국의 전설적인 봉래산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또한 ‘태위

에게 올리는 별지(上太尉別紙)의 우(又)(제5수)에는 전횡(田橫)이라는 인물이 섬에 숨었던 고사를 활용하면서 ‘절도(絶島)’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절된 섬은 의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활용법에서 섬은 전설적인 공간, 또는 육지와 단절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육지에서 떨어진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문학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돌아가는 제비의 울음이란 시를 태위에게 바침(歸燕吟獻太尉)’에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제비를 설명하면서, 새매를 피해 ‘해도(海島)’에 몸을 던졌다는 표현이 보인다. ‘양섬 수재의 송별시에 답함(酬楊膳秀才送別)’이라는 시에도 앞서 언급한 ‘봉도(蓬島)’가 보이는데, 양주를 떠나 봉도를 찾아왔다고 언급하면서 신라로 떠나는 이별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였다. ‘바위 위의 작은 소나무(石上矮松)’라는 시에도 바위에 자란 소나무를 비유하면서, 섬의 나무(島樹)라는 언급이 보인다.

최치원은 『계원필경집』 권20에서 귀국 여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섬이라는 공간을 자신의 고향인 신라를 비유하는 의미로 활용하거나,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기도 하고, 육지에서 떨어진 공간으로 시에서 활용하였다. 『계원필경집』의 권1~권19까지의 문장에서 섬의 활용법은 ‘봉도(蓬島)’처럼 중국의 전설에서 따온 비유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권19의 ‘배줄 서자에게 답하는 글(答裴拙庶子書)’에는 자신을 멀리 해도(海島)를 떠나 당에서 학업을 이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바다 건너 신라를 섬에 비유하는 모습도 재차 확인된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문집 형태의 『계원필경집』과 달리, 일기 혹은 여행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대 동아시아 섬에 대한 현실적인 기록이 많이 보인다. 엔닌 일행의 출항 직후부터 지하도(志賀嶋), 유구도(有救嶋) 등이 등장하는데, 규슈 연안의 항해에 중요한 섬들로 판단된다. 이어서 엔닌이 입당하여 계속 당에 체류하려고 하던 834년 무렵, 그리고 상선 편으로 실제 귀국한 847년 무렵에는 호홍도(胡洪島), 상도(桑嶋), 막야도(莫耶嶋), 당각도(鎗脚島), 전횡도(田橫島) 등 회수 하구에서 산둥반도 동남쪽 끝에 이르는 연안의 섬 이름이 등장한다. 이들도 역시 하천 하구나 만에 위치하여 항해의 정박지 혹은 이정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황해와 남해의 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엔닌 일행의 상선이 847년 9월 적산포를 출항하여 일본으로 귀국하는 여정 속에 남았다.<sup>4)</sup>

4) 이하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관한 분석은 다음의 발표문과 논문을 대폭 수정, 요약한 것이다(임동민, 2024a, 「계원필경집을 통해 본 최치원의 귀국 항로」, 『제3회 최치원문화제 학술발표회 자료집』; 2024b, 앞의 논문, 108~111쪽).

| 월  | 일   | 내용                                                                                                                                                                                                                   |
|----|-----|----------------------------------------------------------------------------------------------------------------------------------------------------------------------------------------------------------------------|
| 9월 | 2일  | ①적산포(赤山浦)에서 바다 건넌, 정동쪽으로 하룻낮·밤을 감                                                                                                                                                                                    |
|    | 3일  | 날 밝을 무렵, 동쪽 ②신라국 서쪽(西面) 산이 보임<br>정북풍 변화, 돛을 기울여 동남쪽으로 하룻낮 하룻밤을 감                                                                                                                                                     |
|    | 4일  | 날 밝을 무렵, 동쪽 산도(山島)가 연달아 보임(③‘신라국 서쪽 웅주 서계’). 종일 동남쪽으로 감, 동서로 산도(山島) 이어짐, 2경(21~23시) 무렵, 무주 서남계 ④고이도(高移島) 정박, 서북 100리쯤에 동서로 긴 흑산(黑山) 있음                                                                               |
|    | 5일  | 동남풍 변화해서 체류, 3경(23~1시) 무렵 서북풍 얻어서 출발                                                                                                                                                                                 |
|    | 6일  | 묘시(5~7시), 무주 남계 ⑤황모도(黃茅島)(또는 구초도(丘草嶋)) 정박, 신라 제3재상 말 방목처. 고이도부터 산도(山島)가 연달아 있고, 동남쪽으로 멀리 탐라도(耽羅島) 보임. 육지까지 좋은 바람이면 하루에 도착함. 지난 4월, 쓰시마 백성 표류, 무주에서 데려갔음                                                              |
|    | 8일  | 나쁜 소식에 두려웠으나, 바람 없어 출발 못함. 출항하여 포구 나오니 서풍이 불어옴. 산도(山島) 사이를 따라가니, 남북 양쪽에 산도(山島) 겹겹이 있음. 사시(9~11시)에 신라 남계 ⑥안도(鴈嶋) 도착, 말 방목처, 동쪽에 황룡사 장원 있음, 서남쪽으로 멀리 탐라도 보임. 오후 출항, 산도(山島) 사이로 감. 신라국 동남쪽에 이르렀다가, 큰 바다로 나가 동남쪽을 바라보며 감 |
|    | 10일 | 날 밝을 무렵, 동쪽으로 멀리 대마도(對馬嶋) 보임. 오시(11~1시), 본국의 산이 보임. 동에서 서남으로 이어짐                                                                                                                                                     |
|    | 18일 | 코우료칸(鴻臚館) 앞에 도착                                                                                                                                                                                                      |

「표 1」 847년 9월 엔닌의 여정<sup>5)</sup>

엔닌이 탄 선박은 적산포를 떠나 정동쪽으로 항해하여 다음 날인 3일 새벽, 동쪽으로 신라국 서쪽의 산(②)을 바라보았다. 신라국 서쪽의 산은 덕적군도 혹은 격렬비열도의 섬으로 추정된다. 격렬비열도가 원양 쪽으로 떨어져 있고, 이후 동남쪽으로 향하는 항적을 고려하면, 신라국 서쪽의 산은 격렬비열도였을 것이다.

다음 날인 4일 새벽, 동쪽으로 ‘신라국 서쪽 웅주 서계’에 해당하는 산도(山島)(③)가 연달아 보였다. 격렬비열도 관측 이후 하루 정도 동남쪽으로 항해하여 ‘동쪽’으로 산도(山島)를 보았다면, 구체적으로 어청도, 십이동파도, 고군산군도 등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엔닌의 배는 같은 날 밤, 무주 서남계 고이도(高移島)(④)에 정박하였다. 고이도는 압해도 북방 고이도(古耳島),<sup>6)</sup> 신안군 하의도(河衣島),<sup>7)</sup> 신안군 우이도(牛耳島)<sup>8)</sup> 등으로 추정된다. 그

5)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大中 원년(847) 9월 2일 ~ 9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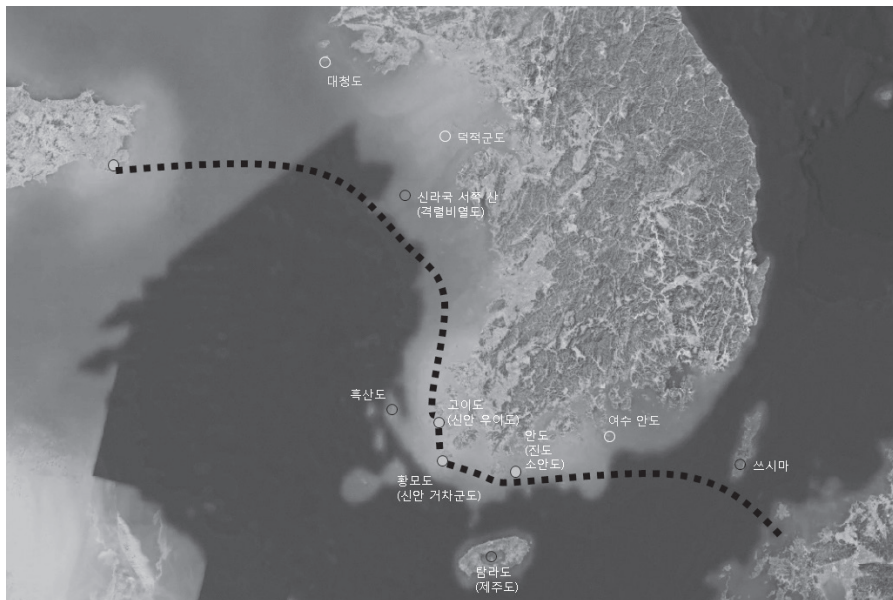
6) 강봉룡, 2013, 「고대~고려시대의 海路와 섬」, 『대구사학』110, 22쪽.

7) Edwin O. Reischauer, 1955, Ennin's diary :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Ronald Press, p.400 ; 小野勝年, 1964c, 앞의 책, 309~310쪽 ; 김문경 역주, 2001, 앞의 책, 528쪽 ; 홍성화, 2021, 앞의 논문, 42~46쪽.

8) 정진술, 2009, 앞의 책, 277~278쪽.

런데 우이도의 입지조건이나 흑산도와의 위치문제 등을 종합하면, 엔닌이 정박한 고이도는 우이도로 생각된다.

엔닌은 이어서 무주 남쪽의 황모도(黃茅島)(또는 구초도(丘草嶋))(⑤)에 정박하였는데, 말 방목처이자 동남쪽으로 탐라도가 보이는 섬이었다. 이곳은 거차군도의 한 섬으로 추정된다.<sup>9)</sup> 이어서 정박한 안도(鴈嶋)(⑥)는 신라 남쪽 땅이자, 말의 방목처였으며, 서남쪽으로 멀리 탐라도가 보이고, 동쪽에 황룡사 장전이 있었다고 전한다. 안도는 완도 동남쪽의 섬으로 생각되는데, 여수 안도(安島)<sup>10)</sup> 혹은 완도 남쪽 대모도<sup>11)</sup>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기록의 맥락을 고려하면, 대모도 혹은 소안도로 볼 여지가 있다. 엔닌은 안도에서의 정박을 끝으로, 신라를 벗어나 9월 10일에 대마도(對馬島)를 확인하고, 9월 18일에 하카다만에 도착하였다.



「도 1」 847년 엔닌의 귀국향로 가운데 적산포-일본 사이 향로 지도<sup>12)</sup>

9) Edwin O, Reischauer, Ennin's diary :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p.401 ; 기존 연구 중에는 鳥島(小野勝年, 1964c, 앞의 책, 312쪽), 大馬島(정진술, 2009, 앞의 책, 279쪽) 등으로 세부적인 비정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본 글에서는 구체적인 비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차군도의 한 섬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10) Edwin O, Reischauer, Ennin's diary :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p.403.

11) 정진술, 2009, 앞의 책, 279~280쪽 ; 홍성화, 2021, 앞의 논문, 46쪽.

12) 구글어스 타임랩스 1986년 지도 위에 수정하였는데, 붉은색 원은 엔닌이 직접 정박한 지역이고, 검은색 빈 원은 『입당행기』에 언급된 지역, 회색 원과 글씨는 참고용 지명이다.

엔닌은 834년 일본을 떠나는 과정에서 규슈 연안의 섬을 기록하였고, 당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회수 하구에서 산둥반도에 이르는 연안의 섬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847년 귀국 여정은 신라 서쪽과 남쪽, 즉 황해와 남해 연안을 거쳐 갔는데, 이 과정에서 고이도, 황모도, 안도 등 고대 황해와 남해 연안의 섬 이름과 지리적 특성, 활용 방식 등이 기록되었다. 특히 황모도에 정박한 엔닌은 대마도에서 표류한 일본 백성들의 존재, 그리고 이들을 무주에서 데려갔다는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고대 동아시아의 섬들은 항해자들의 정박지이자 지표물로 활용되는 동시에, 표류민이 도착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 4. 맺음말 - 『계원필경집』과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섬 관련 기록 활용방향

『계원필경집』은 중국의 여러 문헌에 해박한 최치원이 당에서 생활하면서 남긴 문집이고,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일본의 승려 엔닌이 당에서 불법을 수행한 여정을 남긴 일기이자 여행기이다. 두 기록의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9세기 동아시아를 오갔던 지식인의 기록이라는 점, 그리고 그 안에 고대 동아시아의 섬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남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계원필경집』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은 다분히 문학적인 요소가 컸다. 최치원은 고향인 신라를 해도(海島)에 비유하면서, 당에서 멀리 떨어진 고국을 섬이라는 표현으로 상징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최치원은 중국 전설 속의 봉래산을 봉도(蓬島)로 지칭하면서, 자주 활용하였다. 즉, 9세기 신라 지식인이었던 최치원은 문학적인 방식으로 섬을 활용하였고, 자신의 고국 신라를 섬에 비유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은 현실적인 지명이었으며, 동아시아의 항로에서 중요한 정박지이자 육상 지표물로 기록되었다. 엔닌은 규슈를 떠나는 순간부터 규슈 연안의 섬들을 언급하였고, 당에 도착한 뒤에도 산둥반도까지의 항해 과정에서 다양한 섬에 정박하거나 지표물로 활용하였으며, 귀국길에 신라 서쪽과 남쪽 바다를 항해하면서 역시 외양의 여러 섬에 정박하였다. 그리고 엔닌은 황해와 남해 연안의 여러 섬에 대해 직접 정박하면서 들은 정보를 기록하거나, 멀리 보이는 탐라도를 지표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위의 두 기록에서 보이는 고대 동아시아의 섬은 문학적인 비유의 대상으로 활용되거나, 항해에 필수적인 경유지로 기록되었다. 두 기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박물관 전시에 활용한다면, 전시 가능 원본 자료가 사실상 『계원필경집』,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책이 유일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따라서 두 자료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의 섬을 전시하려면, 다양한 매체와 스토리텔링 기법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두 기록 모두 특정 시공간 속의 인간이 바다와 섬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므로, 두 인물의 여정과 활동에 주목하면서, 시간 순서나 문집의 수록 순서에 따라 관련 섬 기록이나, 귀국길의 여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활용 가능한 전시 매체를 고민한다면, 박물관 전시실의 실내에서 직접 가보기 어려운 황해나 남해의 섬, 혹은 일본과 중국 연안의 섬을 VR 기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방식도 상정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의 신안선을 활용한 VR 콘텐츠처럼, 두 인물과 기록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추체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그 외에 국립해양박물관의 2024년 『조행일록』 특별전 「서해바다로 나라 곡식을 옮기다」처럼, 특정 기록의 여정을 따라 패널, 영상, 삽화, 모형, 기타 여정과 관련한 다른 책과 지도 등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상정된다.

『계원필경집』에 활용된 섬을 살펴보려면 국문학, 한문학, 중문학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이는 황해와 남해 연안의 섬들을 검토하려면, 지역학, 민속학, 고고학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안군을 비롯한 연안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는 최근까지 많은 섬 조사 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연계한 박물관 교육 분야에서는 비슷한 시공간을 선박으로 이동한 두 명의 동아시아 지식인에 주목하여, 일국주의나 민족주의의 시선에서 벗어나 바다의 개방성과 교류성에 주목하는 프로그램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고대 동아시아의 섬이 문학에서 활용되는 양상이나 고대 항로에서 보급처, 정박처, 피항처이자 육상 지표물로 활용되는 양상을 교육한다면, 기록이 부족한 고대 사 자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섬’이라는 주제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신안군의 문화예술 소개

최 흥 철 | 신안 예술섬 프로젝트 수석 큐레이터

## 1.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 지역 창생을 위하여 신안 도서지역 30개소 박물관 미술관 건립 및 운영

- |                |                                           |
|----------------|-------------------------------------------|
| ·문화소외 지역 격차 해소 | 문화소외지역이었던 주요 섬마다 문화예술의 기반이 되는 특색있는 뮤지엄 조성 |
| ·주민 행복 증대      | 주민 자긍심 고취와 문화향유 기회 증대로 행복감                |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창생 | 문화예술의 창조 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역 활성화 기여              |

문화예술의 새싹이 움트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지방보다는 도시이다. 향유 인구, 고도의 집적도와 다채로운 문화 자원의 유입이라는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섬은 3,352개다. 그중 2,1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는 전남 섬자원 관광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40개소의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2013년의 609만 명이던 섬 여행자를 10년 경과 후 약 2배인 1,20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다. 섬마다 고유의 테마로 개발하되,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신안군의 경우 작은 섬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탄섬 등 5곳과 그곳을 잇는 노들길을 소재로 건축적 조형물의 작은 기도와 명상을 위한 장소 12곳을 돌아보는 12 사도의 길, 일명 '섬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군구의 공립 미술관은 점점 많은 곳에서 계속 건립되고 있다. 신안군 역시 2017년 5월 민선 7기 박우량 군수의 지자체 정부가 출발하며 '1도 1뮤지엄' 정책을 시행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관들을 포함, 총 30개소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하고 지역의 소

멸 위기에 대처하여 사람을 부르는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하려고 한다. 왜 뮤지엄인가? 박 군수는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문화예술을 선택했다. 관광객이 와야 농수산물도 팔 수 있다’고 말한다. 왜 미술관인가? ‘미술관이 있는 일본 나오히마 같은 미술관 군락을 조성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안처럼 섬에 미술관을 세우는 아이디어는 처음이 아니다. 세토 내해의 예술의 섬, 나오히마의 성공담 이후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미술관을 중심으로 뛰어난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예술품이 낙후된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가치를 높여주며 대도시와 해외로부터 엄청난 숫자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한국 내에서 벤치마킹하는 지역자치단체가 여럿 있었다.

가까이는 인천시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후 침몰 사건을 계기로 시도했던 제2회 평화미술 프로젝트 〈평화의 바다\_물위의 경계〉전이 열렸다. 그해 6월 백령도에서 평화예술레지던시의 운영을 시작으로 작가들이 직접 거주하며 서해의 섬에서 작품 창작활동을 벌였다. 충격적으로 발생한 남북 사이의 연평도에서는 황해도 해안포와의 포격전이 벌어져 마을이 불타고 젊은 군인들이 순직했던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와 강화도를 배경으로 미술작품을 곳곳에 설치거나 폐교된 학교, 문 닫은 병원, 대피소 등 근대기 건축물들을 전시공간으로 개축해 왔다. 그리고 문화예술축제인 인천평화예술축제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인천광역시의 계획은 아쉽게도 2014년에 멈췄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문화예술의 섬으로 나아가겠다는 도립미술관과 문화사적지 등 6개 장소를 중심으로 2017년에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로 첫 제주 비엔날레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저변에는 지난 10여 년간 이어졌던 제주살이 행렬 속에서 제주도로 이주 정착한 예술인들과 창작자, 그리고 2019년 기준 연간 1,6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의 관광객을 맞을 48개소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의 예술인들은 이 어트랙션을 한데 묶는 제주형 예술축제로 진화시키려고 고심 중이다.

## 2. 신안 예술섬 프로젝트

- 1도 1뮤지엄의 핵심 사업, 안좌도 「태양의 미술관」을 거점으로 5곳의 예술섬을 크루즈로 연결함

- |              |                                           |
|--------------|-------------------------------------------|
| ·신안의 지역 부흥   | 화제성 높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일신, 신안 내해의 위상 확립 |
| ·국제 도시경쟁력 확보 | 국제적 예술가 적극 참여로 생태와 예술 연계 플랫폼의 국제 네트워크 참여  |
| ·주민 행복       | 생태주의 체류 여행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민 확대, 경제 효과 창출 |



이 세상에는 언제나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지역, 기업, 연구소, 대학교, 교육, 구식 제도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장을 포함한 이름들이 떠올라 맴돈다. 혁신은 창조적인 인간들이 남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도서 지역인 신안이 과거 동아시아 교류로였던 것처럼 소외지역에서 창조 산업의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그 첫걸음으로 주요 섬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특별한 미술관을 세울 것이다. 우리는 예술의 매력을 신안 다이아몬드 내해 곳곳마다 붙여넣고, 그 거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혁신의 바람을 붙여넣기 위한 신안 예술섬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이 지역을 위한 미술관의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제도권과 차이를 만드는 길이 필요하다. 지난 세기 동안, 그리고 20세기 동안 정립되어 온 공공 미술관의 관행적인 형식과 행정 위주의 운영을 재고하여 창조적인 파괴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초고속으로 달려온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로부터 제법 떨어져 있던 신안은 잘 보존된 자연 생태와 경관, 역사문화, 민속과 인물 등 가치 있는 유무형의 문화 원형과 자원이 풍부하다. 이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진흙 속에 파묻힌 진주들을 추스르듯 제도 내에 산재한 귀중한 자연과 문화 자원들을 골라내어 하나로 엮는 과정이 될 것이다.

멀리서 일부러 여행 오는 미술관에 대한 최초 구상은 2017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와 예술로 이 지역을 부흥시키려는 계획에 착수하기 위해서 구상에 영감을 주고 벤치마킹해야 할 혁신의 성공이라고 인정할 만한 몇 가지 선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지역 도시의 관광 부흥을 넘어 창의 산업의 플랫폼으로 이끈 좋은 성공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다.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거대한 습지 지역의 생태를 그대로 활용한 순천만 갈대정원, 노인만 남아 더 이상 논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멸해 가던 작은 섬을 미술관으로 되살린 나오시마 예술의 섬, 휴양지 발리에서 떨어진 시골 마을을 창조적인 4차 산업의 발신지로서 디지털 노마드 족의 세계적인 허브로 자리 잡은 바꾼 후붓(Hubud), 하천이 휘감아 돌아 고립되어 버려진 습지 위에 자연과 건축이 그 자체로 예술과 혼연일체인 미술관 군도를 세운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이 그런 경우이다.

초기에는 안좌도의 김환기 고택 인근 저수지 주변에 에코 센터로서 마을미술관과 군도형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에서 구상과 계획이 세워졌으나 계획은 점점 확장되었다. 수려한 해상 자연경관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예술 작품을 융합하여 예술섬을 특화킬 강력한 엔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기획자, 예술가, 건축가, 과학자 등의 자연요소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다도해 자연을 재해석하고 재조명한 탁월한 장소 특정적 파빌리온, 조형물, 건축 등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점(點)에서 축(軸)으로, 각 섬과 지점을 다양하게 연결하여 미술관 여행객의 다도해 여행을 유도하려는 시도이다. 거기에 더해 가능한한 예술 거점과 연결되

는 생태주의 예술정원을 조성하는 1도 1섬정원 조성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각 장소들은 주민 중심으로 유지 운영할 수 있게끔 고려하여 디자인하여 해양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였다. 여정도 작품 체험의 일부임을 자각하여 다양한 여행 방법으로 문화예술 체험을 추구하는 신 해양 관광문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중부권 다이아몬드 내해 5개 섬에 건축과 미술이 융합·특화된 국제적 예술작품 설치했거나 문화 시설로 구축 중인 신안군 예술섬 프로젝트 사례들을 소개하자면, 올라퍼 엘리아슨의 파빌리온 ‘숨결의 지구’가 도초도 수국공원 정상부에 설치 완료(2024년 11월)되었고, 안토니 곰리의 초대형 철 조각인 ‘엘리멘탈’이 비금도 원평해변에 착공(2025년 9월 중, 길이 110m), 한국 대표 화가 김환기 고택 인근 안좌도 신촌 저수지 일대에는 태양의 미술관으로 명명되어 플로팅 미술관, 온실전시관, 김환기 기념관, 예술 마을 등이 막바지 조성 중이다. 마리오 보타가 직접 명명한 ‘인피니토 미술관’ 역시 자은도 둔장 해변에 건설 중(2026년 완공)이고, 제임스 터렐은 노대도에 미술관 계획 중이다. 양곡 창고를 재생한 암태도의 서용선 미술관과 마을회관을 재생한 둔장마을미술관도 유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폐교 등을 재생하여 특화된 전시관으로 활용 중이다. 중장기 관점에서 주민 참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 예술섬을 설립(2023년)하여 위탁 운영하였다. 장차 예술섬을 지역 고유 브랜드로 자산화하고 전문 경영으로 수익 증대에 기여하여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밀접하게 하려고 준비 중이다.

### 3. 저녁노을미술관 콘텐츠 소개

#### - 신안군 최초의 공립미술관

- 전시 보타닉, 정원, 신안의 문화, 시의성 등 생태주의와 지역 기반 활동 작가 중심, 연
- 교육 지역 주민 및 어린이 청소년 대상 2022~24년 교육프로그램 126회 운영, 574명 참여
- 분관 우봉 조희룡미술관, 장산 화이트미술관, 암태 서용선미술관, 둔장 작은마을미술관

저녁노을미술관은 송공산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름 그대로 서남해 5천만평의 바다 위에 붉고도 찬란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미술관이다. 저녁노을미술관은 우암 박용규 선생님의 한국화 작품 169점의 기증과 함께 2017년에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 내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에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되었다. 우리 미술관은 지역의 다도해의 섬이 자아내는 풍경을 미적 감각을 원천으로 현대미술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잘 발달된 도시 지역과

달리 소외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취약했던 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하고, 장소 특성상 오히려 먼 지역이나 도시권에서 일부러 오는 방문객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풍경과 함께 지역 기반의 다양한 현대미술과 예술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획전시는 지역민을 주 대상으로 하되, 신안 지역의 대형 꽃축제, 자산어보와 같은 지역 역사, 문화 이벤트와 발맞추는 시의성을 중요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력하는데, 이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에도 적용하고 있다. 주말의 경우 주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중에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2025년 박물관 미술관 주간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선정되어 5~6월 사이 실내 정원 꾸미기, 정원에서의 신체활동 등을 소재로 진행하였다. 매년 성과물을 전시하고 별도로 결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타 기관과 성과를 나누고 있다.

현재 저녁노을미술관의 학예팀의 운영은 산하 4개의 분관에 별도의 학예사를 상주시킬 수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동서남북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과 미술관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크다. 현재 이 문제는 서로 이동이 힘든 섬 미술관끼리 순회전시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미 충분히 확보한 소장작품을 활용하여 순회전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중이다.



## 강화“섬”지리를 풀어내는 전시 콘텐츠 만들어가기

윤 승 희 | 강화군 국가유산과 박물관 담당

국내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설립되지 못한 까닭에 발생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자연사를 전공으로 하는 박물관 학예인력이 양성되지 못하는 점이라 생각한다. 물론 “국립” 해양 관련 박물관들은 국비를 기반으로 학예 및 연구 인력의 확보, 관련 유물 수집, 해양 관련 실감 전시콘텐츠 제작,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과학관과 자원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장협의회나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등 국립기관이 주인 모임은 있으나 전국 공립 및 대학 자연사박물관 17개소는 마땅한 협의체 하나 없이 “각자도생”, 즉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어 각자가 알아서 제 살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국립해양 관련 박물관의 전시콘텐츠가 대체로 항해, 해양생물, 고래를 필두로 실감 미디어아트를 활용하는 등 “바다”를 소재로 관람객에게 다가가고 있다면, 공립 자연사박물관은 대체로 각자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공립 자연사박물관  |             |
|------------|-------------|
| 강화자연사박물관   | 고성공룡박물관     |
| 달성화석박물관    |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
| 목포자연사박물관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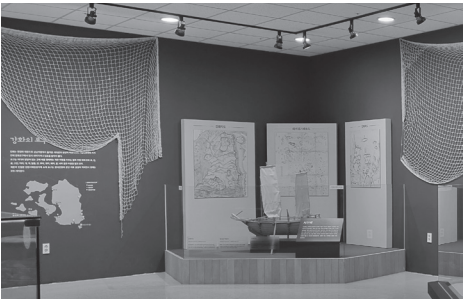
### 〈전국 공립 자연사박물관 목록〉

2015년 건립된 강화자연사박물관은 자연사박물관 상설 전시실의 의례적인 시작인 “태양계의 탄생”이라는 큰 틀을 깨지 못하였지만, 도요새를 비롯한 나그네 새들의 중간 기착지인 “강화갯벌”과 저어새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등의 조류와 염생식물을 소개하고 있다.

2010년 강화역사박물관 개관, 2015년 강화자연사 및 전쟁박물관의 개관을 완료한 후 현재 강화

공립박물관은 기획전시와 실감 전시콘텐츠 개발의 중심으로 지역 특성화 전시에 힘쓰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화군의 “각자도생”은 강화 자연에 대한 민간 단체의 성과에 크게 기대고 있다.

다행히 강화도 내에서 새 탐조에 지대한 관심과 모임을 가지고 있는 “조류클럽”과 국내에서 활발하게 표본 제작과 전시를 하고 계신 “정용훈박제연구소”와 저어새와 강화갯벌에 대한 생생교육을 오랜 시간 운영하고 있는 “물새알”뿐 아니라 생태 전문 디자인 회사 “꽃사슴”, 전국 최초로 나들길을 만든 (사)강화 나들길, 지역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화도시민연대, 어촌계와 계장님들을 보유한 덕에 강화자연사박물관은 마땅한 전공학예사도 없이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한 기획전시를 연간 진행해 오고 있어 2022~2025년간의 기획전시 콘텐츠를 간략 소개하고자 한다.

|     |                                                                                                                                                                                                                                                             |  |  |
|-----|-------------------------------------------------------------------------------------------------------------------------------------------------------------------------------------------------------------------------------------------------------------|--|--|
| 기간  | 2022. 08. 02. ~ 2023. 06. 30.                                                                                                                                                                                                                               |  |  |
| 전시명 | 강화 바다야, 고마워                                                                                                                                                                                                                                                 |  |  |
| 내용  | 강화를 둘러싸고 있는 강화의 생태, 바다의 이야기<br>황산도 어촌계가 소장하고 있는 어촌계원들의 어업 사진, 어구용품들을 중심으로<br>강화의 옛 지도, 이규보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화도의 인문과 자연의 이야기를<br>풀어낸 기획전시                                                                                                                      |  |  |
| 사진  |    |  |  |

|     |                                                                                                                                                                                                                                                                                     |
|-----|-------------------------------------------------------------------------------------------------------------------------------------------------------------------------------------------------------------------------------------------------------------------------------------|
| 기간  | 2023. 08. 01. ~ 2024. 05. 30.                                                                                                                                                                                                                                                       |
| 전시명 | 강화도의 나무와 풀                                                                                                                                                                                                                                                                          |
| 내용  | 강화도 구석구석의 나무와 풀, 그리고 고사리 총 560종<br>강화도의 나무와 풀, 고사리 등 강화도의 20개 나들길 코스를 따라 (사)강화 나들길에서<br>20년간 기록한 식물상을 풀어낸 기획전시                                                                                                                                                                      |
| 사진  |    <p>(좌 : 매화마름, 우: 칠면초)</p> |

|     |                                                                                                                                                                          |
|-----|--------------------------------------------------------------------------------------------------------------------------------------------------------------------------|
| 기간  | 2024. 07. 16. ~ 2024. 12. 30.                                                                                                                                            |
| 전시명 | 강화의 새와 유리창 조류 충돌                                                                                                                                                         |
| 내용  | 강화도에서 발견되는 새 283종을 관찰한 강화도조류클럽의 사진과 세밀화를 소개하고 조류 충돌로 사라져 가는 새들의 실상을 알리는 기획전시                                                                                             |
|     |   |

|     |                                                                                          |
|-----|------------------------------------------------------------------------------------------|
| 기간  | 2025. 03. 18. ~ 2025. 09. 14.                                                            |
| 전시명 | 플라스틱 지구: 해양쓰레기                                                                           |
| 내용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 '플라스틱 플라넷'을 강화도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로 새롭게 협업 기획한 천연기념물 멸실(정용훈박제연구소)실제 사례 중심의 기획전시 |
|     |        |



# 『울릉도검찰일기』의 또 다른 기록, 『울도산해록』

김 소 정 | 국립해양박물관

## I. 머리말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울도산해록(鬱島山海錄)』은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李奎遠, 1833~1901)이 1882년 4월부터 5월까지 울릉도를 검찰(檢察)한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에 관한 연구는 2006년 국립제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울릉도검찰일기』가 학계에 소개되면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그로 인해 19세기 후반 울릉도의 사회·지리·행정적 현황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울릉도검찰일기』는 일기의 일부분이 누락되거나, 교정부호의 남발과 일기의 중복 기재 등으로 다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어 내용 전체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반면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울도산해록』은 『울릉도검찰일기』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날짜의 누락이 없으며 또 교정 작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온전한 상태로 잘 남아 있다. 특히 『울릉도검찰일기』의 누락된 부분이 『울도산해록』에는 기록되어 있어 사료의 공백을 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울도산해록』과 『울릉도검찰일기』은 서로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문서의 구성 방식이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울도산해록』과 『울릉도검찰일기』의 문서 구성 형식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19세기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울도산해록』이 가진 사료적 가치를 확인해 보고, 추후 자료의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울도산해록』과 『울릉도검찰일기』의 구성

『울도산해록』과 『울릉도검찰일기』는 모두 1881년 고종의 명을 받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된 이규원이 1882년 4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수도 한성(서울)과 울릉도를 오가며 검찰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두 문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문서의 구성과 형식에서 일부 차이를 보여 이번 장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 1. 『울도산해록』

『울도산해록』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릉도검찰사이규원일기」, 「별단」, 「별단격식」, 「입시시연설」의 순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울릉도검찰사이규원일기」는 1881년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사로 명받은 것을 시작으로, 검찰을 떠나는 전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다. 그의 검찰 과정을 요약하면, 1882년 4월 7일 한성을 출발하여 4월 20일에 평해(平海, 울진) 도착, 이후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해 5월 10일까지 섬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사하였다. 조사를 마친 이후 5월 13일 울릉도를 떠나 평해로 복귀해 귀경길에 올랐다. 5월 27일 미타사(彌陀寺, 서울 옥수동 위치)에 도착해 고종에게 올린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기록을 끝으로 일기는 마무리된다. 일기는 날짜-날씨-간지(혹은 날짜-간지-날씨)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하루 동안 이동한 지역과 숙소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였고, 끝에는 이동한 총 거리를 기록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날씨가 기록 초반에만 확인되고 있는데, 다행히 『울릉도검찰일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 비교가능하다.

다음은 「별단」과 「별단격식」부분으로 「별단」은 고종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조사보고서이다. 4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검찰 내용이 압축·정리되어 있다. 「별단격식」은 「별단」을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서두와 발미(跋尾)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서술하고 있다.<sup>2)</sup> 「별단격식」은 『울도산해록』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입시시연설」은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을 마치고 난 이후, 고종을 알현하여, 울릉도

1) 본 글에서 사용하는 『울도산해록』과 『울릉도검찰일기』의 소재명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밝힌다. 『울도산해록』과 『울릉도검찰일기』의 원문에는 명확하게 표제(標題)가 기재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또 표제가 적혀 있더라도 지나치게 길게 서술된 경우가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제(「별단」, 「입시시연설」 등) 중 일부는 후대 연구자들이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제목을 붙이거나, 본래의 제목을 축약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이해은·이형근, 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박물관, 2004, 『울도산해록』 참고.

2) 「별단」은 표제 없이 기록이 시작되지만, 이를 「별단」이라 칭한 이유는 「입시시연설」에 「별단을 받아보았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이어지는 문서에 「별단격식」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들이 동일한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해양박물관, 2024, 앞의 책, 21~22쪽.

검찰 결과를 구두로 보고할 당시 고종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승정원일기』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sup>3)</sup>

## 2. 『울릉도검찰일기』

『울릉도검찰일기』는 총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릉도검찰사이규원일기」, 「계초본」, 「복명연설」, 「삼척퇴조비문」, 「명단」 순으로 작성되었다. 「울릉도검찰사이규원일기」는 『울도산해록』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로 울릉도로 이동하는 과정이 빠져있다. 내용은 글의 출납에 차이를 보이지만 『울도산해록』과 유사하다.

다음은 「계초본」으로 제목은 상이하지만, 『울도산해록』의 「별단」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계초본」에는 『울도산해록』에서 확인되는 보고서 형식에 관한 지침, 즉 「별단격식」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명연설」은 『울도산해록』의 「입시시연설」과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삼척퇴조비문」과 「명단」이 확인되는데, 이는 『울릉도검찰일기』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삼척퇴조비문」은 이규원이 삼척에 잠시 머물렀을 때, 허목이 작성한 〈척주동해비〉의 비문을 필사한 것이다. 「삼척퇴조비문」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적고 있는 「명단」이 마지막으로 확인된다.

## Ⅲ. 『울도산해록』의 주요 내용

19세기 조선은 개항과 근대화의 움직임을 보이던 시기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고종은 울릉도에 큰 관심을 두었는데,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했다. 울릉도 내의 타국민(왜인 등)이 불법으로 들어와 폐단을 벌이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살펴보라는 것과 함께 송죽도(松竹島), 우산도(芋山島)에 대한 정보 파악, 울릉도 개척을 위한 장소 조사가 그 이유였다.<sup>4)</sup> 이규원은 1882년 4월 7일 고종에게 하직 인사를 한 다음, 짐을 꾸려 동대문을 나서며 검찰사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다. 당시 검찰단의 규모는 상당했는데, 기록에 따라 차이는 있

3)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6월 5일 己未.

4)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4월 7일 壬戌.

나, 약 100여명의 인원이 움직였다.<sup>5)</sup> 대규모의 검찰단을 이끌고 떠난 이규원은 울릉도의 주요 지리정보와 어업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울릉도에 도착해 섬을 조사했던 기록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규원은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해 5월 10일까지 섬에 체류하며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7일간은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토산물과 섬 내부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남은 기간에는 배를 타고 섬의 해안 지형을 살펴보고, 개척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섬 내부 조사 당시 이규원이 만난 작업자는 약 230~250여명에 달했다. 작업자들의 대부분은 포구 근처에 거주하며 미역을 채집하거나, 산에 거주하며 약초를 채집하였다. 그가 만난 작업자들은 대개 전라도 출신이 많았으나, 경상도, 경기도 등에서 넘어온 자들도 많았다. 반면, 일본에서 건너온 자(倭人)들도 만났는데, 이들은 불법으로 울릉도에 들어와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 울릉도 내 왜인들의 불법 벌목은 이규원이 파견되기 전부터 꾸준히 문제 되어 온 부분이었다. 특히 관리의 어려움과 왜구의 침입 문제 등으로 인해 일찍이 공도정책을 수행해 오며 따라, 왜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은 늘 골칫거리였다. 1881년 이미 한차례 왜인들의 불법행위를 저지한 이력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1882년 여전히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해 울릉도에 들어와 있던 것이다. 이에 이규원은 왜인들의 작업을 즉각 중단시켰으며, 그들의 작업내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869년(명치 2년) 남포규곡(南浦規谷)이라는 표목(標木)을 세워 울릉도를 일본의 송도(松島)로 표시하는 만행이 있었음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규원은 해당 내용을 조정에 보고하였고, 사건을 인지한 고종은 빠른 시일 내에 울릉도 개척이 이루어져야함을 인지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제 이규원의 검찰이후 울릉도 개척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1883년 4월부터 울릉도에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강원감영에서 울릉도 호구 조사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울릉도 개척이 본격화되었다.

이규원은 섬 내부를 조사하는 동안 섬의 작업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특히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5종에 달하는 토산품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섬 내부 작업자들의 공이 컸다. 이규원은 울릉도의 험준한 산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노숙하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했었다. 그럴 때마다 이규원은 근처 작업자의 초막에 머무르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게 된다. 작업자들과 교류하며 들었던 정보가 울릉도의 토산물 조사에 큰 역할을 한 섬

5) 『울도산해록』 「별단」 4월 29일. 총 3척의 선박에 검찰단이 나누어 탑승했으며, 상선에는 사공 및 사격 17명, 포수 6명, 취수 2명, 석수 1명, 도척 1명,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 10명, 검찰사 1명으로 39명이 탑승하였고, 종선 2척에는 사격, 포군, 노군이 나누어 탑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계산해보면, 상선에는 39명, 종선 2척에 68명이 탑승해 총 107명이 울릉도 검찰을 위해 움직였다.

이다.

섬의 내부 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선박을 이용해 이틀간 섬 외부를 돌며 개척지를 살펴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섬이 험준하여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없었으며, 거주에 필수 조건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섬 내부에서는 나리동(울릉도 나리분지 근처)이 전부였다. 이규원은 섬 외곽을 돌아다니며 항구 주변으로 개척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항토구미, 대항토구미, 흑작지포 등 약 14곳의 포구지역을 개척지로 꼽았다.<sup>6)</sup>

이규원은 꽤 성실히 조사에 임했는데, 고종에게 보고할 당시에 함께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울릉도 외도·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해당 지도는 울릉도의 복잡한 해안 지형과 부속 도서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해안 지형에 대한 자세한 표현은 섬의 포구 위치나 방향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 IV. 맺음말: 『울도산해록』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 방안

『울도산해록』은 19세기 후반 울릉도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영토를 수호하고자 했던 노력의 구체적인 결과물이었다. 당시 울릉도의 지리·생태·경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료로서 그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울릉도검찰일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문서의 구성 방식이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 양자가 서로의 결핍을 보완해 주는 상호 보완적인 사료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울도산해록』을 통해 「일기」의 초고본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규원은 「일기」를 작성하면서 꽤 많은 교정 작업을 거쳤다. 실제 『울릉도검찰일기』를 살펴보면, 일기를 중복해서 쓰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는 등 복잡한 교정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즉, 하나의 원고 안에 초고본과 교정본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울도산해록』은 교정한 흔적은 보이나 그 양이 많지 않으며, 그마저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종이를 덧대어 글을 새로 작성하는 모습을 보

6) 이규원이 항구를 중심으로 개척지를 조사한 것은, 당시 포구 지역이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에 개척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포구 주변에 거주지와 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는 점을 보면, 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정광중, 2004,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에 나타난 지리적 정보」, 『국토지리학회지』46, 국토지리학회, 178-179쪽.

7) 〈울릉도 외도·내도〉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울도산해록』에 나타나는 지명과 섬의 지형이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어, 1882년 울릉도 검찰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8) 정광중, 위의 논문, 180쪽.

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울릉도검찰일기』에서는 교정한 부분이 『울도산해록』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날이 맑았음을 나타내는 용어를 『울릉도검찰일기』에서는 淸을 晴으로 고친 흔적이 확인되는데, 『울도산해록』에서는 여전히 淸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울릉도검찰일기』에서는 宿所를 止宿으로 고쳐 사용했으나, 『울도산해록』에서는 宿所로 기록하고 있다. 즉, 교정보기 전의 모습이 『울도산해록』에서 확인되고 있어, 초고본의 모습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sup>9)</sup>

이외에도 당시 울릉도까지의 이동 과정, 섬에 들어갈 때 챙겼던 물품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검찰 기간 내,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 다수의 정보가 함축되어 있어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울도산해록』이 가진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료적 특성을 바탕으로 『울도산해록』의 활용 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울도산해록』은 19세기 후반 울릉도의 모습을 자세히 담고 있는 서적으로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1차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울릉도 외도·내도>와 함께 울릉도 옛 지명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규원은 섬의 해안·산악 지형에 대해서 꽤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는 19세기 당시의 섬 지형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 개척지로서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술기관과 박물관,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울릉도에 남아 있는 19세기의 울릉도 모습을 조사하고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가능할 것이다.

연구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 외에도, 지역 박물관 및 연구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전시자료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사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과 협력하여 소장자료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공동 전시 기획이나 나아가 학술대회 개최 등 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1882년 당시 이규원의 동선을 따라 울릉도로 답사 가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국립해양박물관, 앞의 책, 29~44쪽.

 참고문헌

국립제주박물관, 2004, 『19세기말 제주의 계엄사령관 察理使 李圭遠』.

이혜은·이형근, 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박물관, 2004, 『울도산해록』.

김소정, 2004,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자료 『울도산해록』 검토」, 『해양유산』6, 국립해양박물관.

이선근, 1964, 「근세 울릉도문제와 검찰사 이규원의 탐험성과-그의 검찰일기를 중심으로 약간의 고찰」,  
『대동문화연구』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혜은, 2009, 「1882년의 울릉도 지리환경」, 『문화역사지리』2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양태진, 2013, 「조선 정부의 영토관활정책 전환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6,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이흥권, 2020, 「검찰사 이규원의 생애와 영토수호 활동」, 『이사부와 동해』16, 한국이사부학회.

정광중, 2006,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에 나타난 지리적 정보」, 『국토지리학회지』46, 국토지리학회.



# 세화마을 해녀체험으로 살펴본 통한 Eco Museum 구현 공간으로서의 제주도

김 윤 아 | 국립해양박물관

## I. 서론

숨비소리와 여성 중심의 공동체 생존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온 독특한 생태문화 유산이 “제주해녀문화”이다. 수백 년 동안 제주바다를 지켜온 해녀들의 지혜와 공동체정신을 인정받아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제주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후 2023년 11월에는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이 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에 국가무형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까지 제주해녀문화의 중요성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인정되었다.

이후 제주도에서는 해녀문화센터 건립, 해녀생태박물관 계획, 해녀축제 개최 등 해녀문화의 전승 보존에 대한 열기가 높아졌고, 등재 이후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적인 보존 및 확산 가치 역시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는 점차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 되는 해녀들로 “해녀문화”의 지속성은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서 제주 세화마을 공동체의 ‘해녀체험 교육’을 중심으로, 에코뮤지엄(Eco Museum)으로 제주도를 기능하게 실천적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에코뮤지엄(ecomuseum)

에코뮤지엄은 1970년대 프랑스의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와 위그 드 바린에 의해 제안된 개념<sup>1)</sup>으로, 특정 건물에 유물을 전시하는 기존의 박물관 모델을 탈피하여 지역 자체를 박물관으로 인식하고, 주민의 삶과 기억, 자연환경과 문화자산을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이에 에코뮤지엄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며, 전통 박물관과 비교하여 공간, 운영주체, 전시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에코뮤지엄: 지붕 없는 박물관』<sup>2)</sup>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국내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에코뮤지엄을 “커뮤니티 기반 기억과 실천의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에코뮤지엄이 물리적 공간의 박제화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서사 구성, 그리고 일상 속 유산의 경험화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에코뮤지엄의 개념은 제주해녀문화와 같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또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된 지역 회복력 및 생태문화 교육의 실천적 모델로서 에코뮤지엄의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유산이다”라는 알자스 에코뮤지엄의 철학을 인용하며, 전통문화의 주체로서 지역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유산의 전승 또한 사람과 장소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화로 기능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sup>3)</sup> 이러한 관점은 제주도 세화마을협동조합의 활동과 그 안의 해녀체험 학교 프로그램 및 해녀학교, 해녀박물관의 콘텐츠와 긴밀하게 맞물리며, 제주도가 에코뮤지엄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과정과도 연결된다. 특히 현대 에코뮤지엄은 단순한 문화재 보존을 넘어서, 지역 정체성 강화, 공동체 기반 생태교육,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유네스코 4대 보호지역이 중첩된 공간으로, 이러한 에코뮤지엄 개념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과 이론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녀들의 물질 활동, 숨비소리, 식문화를 포함하여 전승되는 생활양식은 제주도라는 지역 생태와 긴밀히 얽혀 있어, 실제 공간과 삶이 전시되고 해석되는 생태문화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세화마을의 해녀는 단순한 전승의 주체가 아니라, 체험자와 학습자에게 직접 문화적 서사를 전달하는 해설자이자 살아있는 유산이다.

1) Rivière, G.H., 1986, Ecomuseum: Evolving Definitions.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2) 김성균, 오수길, 2022, 『에코뮤지엄: 지붕 없는 박물관』, 이담북스

3) 김성균, 오수길, 2022, 앞의 책

### Ⅲ. 세화해녀 체험학교 프로그램 사례 분석

제주시 구좌읍 세화마을은 해녀문화의 역사성과 실천이 살아 숨 쉬는 장소로, 에코뮤지엄의 이론을 실제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세화마을은 1931~1932년 약 17,000명의 해녀가 참여했던 ‘해녀항쟁’의 발생지로, 해녀들의 자율성과 공동체 결속을 상징하는 역사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수성은 이후 해녀박물관의 유치와 문화적 기억의 전승으로 이어지며, 지역 기반의 문화교육과 해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세화마을은 2019년 477명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세화마을협동조합<sup>4)</sup>’을 설립하여, 해녀 체험을 비롯한 마을관광 서비스, 지역상품 개발, 주민문화복지 및 협력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에코뮤지엄이 지향하는 주민 주도형 참여와 실천이라는 구조와 일치하며, 문화유산의 주체로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2023년부터 운영된 ‘세화해녀 체험학교’는 3박 4일의 해녀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직접 현직해녀에게 해녀의 문화와 습성, 도구 사용법을 배우고, 함께 물질을 하며 해녀의 생태적 삶과 공동체적 가치를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기존 제주 내 해녀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최소 1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여 접근성과 지속성이 높고, 일반 참여자의 해녀문화 유입 확장에 효과적이다. 해녀와의 물질 이후에 물질로 잡은 해산물의 손질법을 배우고, 그 손질법을 통한 음식을 조리하여 함께 즐긴다. 이후 프로그램은 해녀와 함께 해녀박물관을 방문하여 해녀의 설명과 함께 해녀의 역사와 의식주 생활이 전시된 전시관을 관람한다. 이후엔 해녀의 집을 방문하여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로 해녀의 삶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근래 제주로 이주한 육지 청년들의 해녀의 삶에 대한 관심을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세화마을은 지속적으로 2024년에는 해녀와 지역 생태를 기반으로 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산책과 문화해설, 해녀 음식 기반 식사(식계반), 해변 명상 등이 통합된 체험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객의 단순한 힐링 관광이 아니라 참가자의 감각 기반의 정서 회복과 생태적 감수성 학습을 동시에 실현하는 참여형 교육 모델로 에코뮤지엄의 ‘공유된 기억과 실천의 장’<sup>5)</sup>이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세화마을은 해녀라는 역사 속에 살아있는 문화주체를 중심으로, 장소·사람·이야기·실천이 결합된 학습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도가 지닌

4) 세화마을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sehwamaeulcoop.com/index.php>

5) 김성균, 오수길, 2022, 앞의 책

지붕 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 구현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체화해 보여주는 공간이다.

#### IV. 제주도 에코뮤지엄 구현과 정책적 연계성

제주도는 독특하고 복합적인 생태·문화 유산의 보고이다. 단일 지역 안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랍사르습지 등 국제적 보호지역이 중첩되어 있어, 공간 자체가 복합적 생태·문화 유산의 집합체로 기능한다. 이러한 구조는 에코뮤지엄의 실천이 단일 마을이나 장소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문화적 기억과 공동체적 실천이 체계적으로 엮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김성균·오수길(2022)은 제주도와 같은 공간을 “지붕 없는 생태문화 교육장”으로 규정하며, 보호 지역 중심의 해설이나 유적 중심의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가 문화 실천과 해설의 주체가 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제주 해녀문화처럼 지역 생태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문화유산은 행정적 보호를 넘어 주민 스스로 유산을 전시하고 해설하는 에코뮤지엄적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제주도가 에코뮤지엄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그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연계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통합이 요구된다.

- 공동체 주도형 문화 교육 강화: 지역 주민들이 해녀 문화와 같은 고유한 유산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직접 교육하고 전승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화마을의 해녀 체험학교와 같이 지역민이 해설자이자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문화적 서사를 전달하는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
- 실천 중심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단순한 관람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실천하며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세화 해녀 체험학교의 물질 체험, 해산물 조리, 해녀박물관 방문, 해녀의 집 대화 등은 에코뮤지엄의 철학인 참여, 기억, 해석의 통합을 실현하는 좋은 예시이다.
- 주민 협의체 중심의 운영 모델 구축: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공동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화마을협동조합처럼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마을 관광 서비스, 지역 상품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이 제주 전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연계는 단순한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 지역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문화 회복력을 높이는 구조적인 전략으로 기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주민과 외부 방문자가 함께 만 들어가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에코뮤지엄 구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제주 세화마을의 해녀체험 프로그램과 웰니스 활동을 중심으로, 에코뮤지엄 개념이 제주도의 지역문화와 생태자원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교육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에코뮤지엄은 지역민의 삶과 기억,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단순한 유물 전시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의 경험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공간 모델이다.

세화마을은 해녀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 정체성과, 현재 운영 중인 마을협동조합 및 해녀체험학교, 해녀박물관을 통해 지역 주도형 문화유산 보존과 교육의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해녀 삼촌과 함께하는 물질 체험은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선 감각적 학습과 생태 문화 인식의 매개로 기능하며, 웰니스 명상 및 식문화 경험 등은 에코뮤지엄의 철학적 기반인 참여, 기억, 해석의 통합을 실현한다.

나아가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등 국제적 보호지역이 중첩되어 있어, 공간 자체가 복합적 생태·문화 유산의 집합체로 기능한다. 이는 세화마을의 실천과 연결되며, 제주 전체가 해석되고 체험되며, 주민과 외부 방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작은 바탕을 가진 세화마을은 에코뮤지엄 구현장으로서의 제주도의 정체성을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으로, 향후 문화유산 해설, 생태교육, 공동체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모델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균·오수길, 2022, 『에코뮤지엄: 지붕 없는 박물관』, 이담북스
- 다니엘지로다·앙리부이에, 1996, 『미술관/박물관이란 무엇인가?』
- 류서·장주영, 2019, 「지역 문화 보호를 위한 에코뮤지엄 사례 분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144-153.
- 민주희, 2011, 『제주도 에코 뮤지엄 테마별 특징 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선영·김숙진·이용수, 2025, 「다중국제보호지역의 유산 설명 체계 현황과 방향성 제언 - 제주도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37(1), 117-133.
- 정민의·이용규, 2017,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따른 해양관광콘텐츠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9권 제1호
- 최병식, 2010, 『뉴뮤지엄의 탄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19분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분과] 인류세 시대 섬과 바다 담론으로서 쿼다 모빌리티  
- 인간중심주의와 이주, 다중위기의 원인과 해법 -**

쿼다-모빌리티로 본 바다와 섬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접근

김치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제주도 남성장사 전설에 나타난 내재적·외재적  
갈등 양상의 유형과 의미

김진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바다를 통해 본 인류세 담론과 역사적 트라우마의  
교차점  
: 쓰시마 섬 사례를 통해 본 과거 재난과 현재  
위기의 만남

염현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투쟁하는 섬들, 사이의 다리를 상상하는 일  
- 퀴어적 시선으로 읽는 재일 마이너리티 여성의 삶

이혜령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인류세 시대 태평양 및 카리브해 섬 국가의  
네트워크 주권

고다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도가적 사유에서 본 섬들의 접화군생(接化群生)

김진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열린 섬 제주, 세계시민 섬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 제주 신(新) 이주 시기의 문제, 맹자의 여민(與民)  
공치(共治)를 중심으로

박주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쿤다-모빌리티로 본 바다와 섬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접근

김치완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탐라문화연구원 원장

## 1. 들어가는 말

민주화와 함께 우리 학계에도 ‘근대 이후’ 또는 ‘후기 근대’로 번역된 포스트 모던(Post-Modern) 담론장이 펼쳐졌다. 서구에서는 이미 1930년대 프랑크푸르트 학파(Frankfurter Schule)에 의해서 서양 ‘근대(Modern)’가 초래한 모순에 대한 논의가 마르크스(Karl Marx) 이론 또는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이론 모색과 함께 시작된 바 있다. 하지만 근대국민국가질서의 동아시아 이식 과정에서 냉전체제의 침단에 놓이게 되었던 우리나라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를 모델로 하는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므로, ‘근대’에 대한 비판은 곧 반공주의라는 국시(國是)를 위반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여겨졌다. 따라서 민주화 이전까지 ‘근대’에 대한 비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포스트 모던의 정의는 종종 ‘정의할 수 없음’이라는 말로 유보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열어젖힌 비판이론은 이데올로기 지배가 가진 은폐된 힘의 관계를 파악해 극복함으로써 인간이 실천의 주체로서 다시 우뚝 서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어리(John Urry)는 비판이론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사회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모빌리티 패러다임(Mobility Paradigm)을 제안하였다. 그는 ‘모던’이 초래한 모순을 “다양한 모빌리티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공간적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이동’을 키워드로 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회를 주장했다. 어리의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에 이미 ‘지구적 이동을 통해 유럽의 질서를 이식하고자 한 지구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다중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모랭(Edgar Morin)과 케른(Anne-Brigitte Kern)의 관점과도 잇닿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랭과 케른, 그리고 어리의 제안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쿤다-모빌리티(Cum多-Mobility) 담론장에서 기후 및 생태 위기 등과 함께 경고음이 고조되고 있는 바다와 섬의 위기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담론과 철학적 실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다. 오늘날 바다와 섬은 개발에 따른 기후 및 생태 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 연육도의 증가,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해양 유입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다중적 원인에 따른 다중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쿼다-모빌리티는 '포용'을 뜻하는 제주어 '쿼다'를 지구시대가 열린 '근대' 이후의 '이동' 과정에서 초래된 모순의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이는 인간 타자에 대한 포용의 실천은 물론, 사물과 기술에 대한 포용의 실천을 통해 인간이 실천의 주체로서 자신을 재인식하는 데 목표를 둔다.

## 2. 쿼다-모빌리티의 전환점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은 2018년 예멘 난민의 제주 입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반난민, 반다문화 여론이 높던 시점에 당시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제주 섬의 역사'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 출발점은 '고립된 섬' 제주에 '출현'한 예멘 난민이 낯선 존재가 아니라, 육지에 편입된 이후로 난민의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도민과 같은 처지에 놓인 존재라는 공감이었다. 이러한 공감은 천년 해상왕국 탐라가 여말선초(麗末鮮初)에 한반도에 완전히 편입되어 제주로 재편되면서 원(元)나라의 직할령, 명(明)나라의 강력한 해금정책과 조선 정부 주도의 이주 정책에 따른 절해고도의 유배지, 양란(兩亂)에 따른 조선 지식인의 심상적 이상향, 제국주의와 근대국민국가 질서의 이식에 따른 이중적 식민지 등과 같은 장소성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이 난민화되었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쿼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 담론장에서는 근대 이후 국제협약에 의해 성립된 '난민'의 출현에 대응하여 난민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난민의 삶을 살면서 체현해 낸 '쿼다'라는 삶의 양식이 무엇이며, 그것이 지구적으로 일상화된 난민과 이주 현상, 그리고 그에 따라 확산되는 반난민, 반다문화의 인식과 태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역사와 문학, 사회학, 철학적인 관점에서 모색했다. 여기에는 기존의 환대 개념이나 규범을 개체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환대의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환대(hospitalité; hospitality)' 개념과 맹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 개념이 영감을 주었다. 인간 타자와의 관계 맺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타자와 나를 '우리'로 인식하게 하는 '인간다움'의 선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쿼다 인문학'은 이러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인문학'이다. 데리다가 주장한 "무조건적 환대는 법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도착하는 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가 시행할 수 있는 최선, 곧 무한 책임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고, 또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지점에서 쿼다인문학은

패러다임의 ‘전환(turn)’, 그리고 인식의 ‘전환’, 실천의 ‘전환’과 맞닥뜨리게 된다. ‘도착하는 자는 도착한다’는 것이야말로 “사건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유일한 사건”이라는 데리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존재 일반이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맹자의 인성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중용(中庸)』의 본성론으로 확장될 수 있고,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좁다 인문학’이 ‘좁다-모빌리티 인문학’으로 패러다임을 옮겨 간 것은, 그것이 인식의 ‘전환’을 뜻하는 동시에 실천의 ‘확장’을 뜻하기 때문이다. 전환과 확장은 그 자체로 ‘이동(mobility)’을 뜻하며, ‘이동’을 통해 출현한 인간 타자를 혐오의 대상, 또는 환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데로 ‘이동’하게 하는 실천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대상은 인간 타자만이 아니라, 사물 타자에게로 ‘확장’되며, 심지어는 인간이 만든 기술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등장하여 끊임없이 ‘이동’ 중인 시스템마저도 ‘무조건적 환대’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일체의 ‘이동’이 그 주체인 인간을 인간다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소외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데리다의 ‘아포리아(ἀπορία)’가 그렇듯이 우리는 인간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 3. 다중위기 시대의 바다와 섬

모랭과 케른은 1993년작 *Terre-Patrie(Homeland Earth: A Manifesto for the New Millennium)*에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대’라고 부르는 시기를 ‘지구시대(Planetary Era)’라고 표현했다. 지구시대는 지구적 이동을 통해 전 세계에 유럽의 질서를 이식하려고 했던 15세기 이후를 가리킨다. 모랭과 케른이 ‘지구시대’라는 용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여러 문제, 적대감, 위기, 통제되지 않은 과정, 그리고 지구적인 위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중위기가 ‘지구 의식(Planetary Consciousness)’을 촉발시키므로, 근대의 ‘야만화 된 문명’에서 ‘지구문명(Planetary Civilization)’으로 전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 세계화(globalization) 열풍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당시 등장한 벡(Ulrich Beck)의 ‘위험의 지구화(the globalization of risks)’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서구 학계에서 근대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국가나 지역에서 지구(Earth)나 세계(Globe), 심지어 행성(Planet)으로 확장시킨 까닭은 과학기술문명 발달과 자본주의의 확장에 따른 문제 및 대응 방안이 국지적인 논의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이미 벡의 ‘위험사회(Risk Society)’, 베리(Thomas Berry)의 ‘지구의 꿈(The Dream of the earth)’ 등에서 지구적 위험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에 대한 논의가 지질학계를 넘어서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논

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인류가 당면한 위기가 인류에 의한 환경 조작을 정당화해 온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바다와 섬이 직면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는 것은 지구 온난화 등과 같은 기후 변화, 생활 및 산업 쓰레기의 해양 투기, 과도한 개발 및 남획,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원인이 다중적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바다와 섬의 위기가 국지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구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해수면 상승과 연륙(連陸)·연도(連島)의 증가 등으로 '장소'로서 섬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산호초 파괴와 해양 생물 및 자원 고갈 등으로 바다는 '생태계' 파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와 인구 소멸 등으로 섬과 바다를 '삶의 자리'로 삼아온 도민(島民)도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와 육지 면적의 19.7%를 차지하는 섬의 위기는 지구적 위기이다.

오늘날 다중적이며 지구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지구 온난화를 지연시키는 기후 변화 대응, 유해 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오염 방지, 섬과 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도민(島民)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다각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 대응을 비롯한 이러한 대응 방안은 정치·경제적 요인과 국제 협력 체계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와 후발 국가에서는 지구적 위기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고,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관련 정책에 대한 합의 및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심화하는 요인으로서는 다중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실천 노력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담보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손꼽을 수 있다.

## 4. 대안 담론과 철학적 실천들

'대안 담론(alternative discourse)'은 사회 현상에 대한 주류 담론(dominant discourse)에 대항하는 담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복적인 담론(subversive discourse)이나 대항 담론(counter-discourse)은 물론, 비판적 담론(critical discourse)을 포함한다. 예컨대, 모랭과 케른의 다중 위기론은 근대 이후의 위기가 국가 단위 또는 지역(유럽) 단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대안 담론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비판철학자들이 이미 경고했듯이, 인간 이성에 대한 신념에 기초한 근대 이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질서가 인간중심주의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은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대안 담론은 인간 타자에 대한 포용을 넘어서 사물 타자와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에 대한 포용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과 신유물론(Neo-materialism)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대안 담론은 근대 이후 인간 타자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던 비판이론을 넘어서 인간의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실재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물질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예컨대,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사이보그 존재론(cyborg ontology)과 다양한 존재들 사이의 친족되기(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등은 동물과 사물의 행위자성을 강조하는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도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인간만을 행위자로 보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신유물론은 이원론적 관점에서 물질을 수동적, 대상화된 존재로 파악하여 인간의 도구로 간주하던 기존 유물론에서 벗어나 하나의 연속적인 존재론적 체계 안에서 인간과 물질, 비생명체를 행위 주체로 인정하며, 존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물질을 인간의 인식으로 구성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자기 조직화와 형태 발생 능력을 갖춘’ 능동적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러한 존재론적 확장이 인식론적 전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노정하고 있다. 인간-사물의 존재론적 평등은 자칫 인간 주체의 소외, 또는 혐오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유물론의 비판 대상인 인간중심주의가 인간 타자는 물론 사물 타자와 얽혀 있음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다른 국면에서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쿰다-모빌리티 인문학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대안 담론과 철학적 실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유물론 등이 제안하고 있는 사물 타자와의 관계성을 수용한다는 점에서는 자연주의적이지만, ‘인간학’을 표방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휴머니즘이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유물론 등은 인간중심주의가 인간-자연-기계의 얽힘, 곧 혼종성(混種性, hybridity)을 부정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쿰다-모빌리티 인문학은 ‘인간의 성취인 모빌리티 안에서 인간 존재의 변화’를 역설한 어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너스바움(Martha Nussbaum)과 센(Amartya Sen) 등이 주장한 ‘역량’ 개념에 기댄 ‘인간역량(human capacities)의 관점에서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으로의 전회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5. 나오는 말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Dei imago)’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릴 권리를 가진다는 중세 신앙은 신의 죽음을 선언한 이후로도 인간 이성에 대한 신념으로 대체되어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그리고 국민국가질서의 구축과 이식 과정에서 인간중심적 휴머니즘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세계대전과 산업화, 자유시장경제의 심화와 신자유주의의 출현 등에 따른 위기의식이 인문·사회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 이후 주류 담론을 구성해 온 과학주의적 태도는 오늘날의 다중 위기를 증상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얇은 실증주의적 편향’에 불과하다고 비판되지만, ‘인류세’와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신유물론’에서 확인되듯이 현상과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 인식과 태도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바다와 섬의 위기는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육로를 회피하는 해양 항로를 개척하면서 지구시대가 개막되었고, 항공 항로 개척과 통신 기술 발달로 가속화되었지만, 그와 함께 인간 생존의 터전으로서 지구 생태계 파괴가 심화하고 있으며, 인간 종의 지속가능성도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식량을 비롯한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이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대상화는 기후 변화와 인간 소외 등과 같은 지구적 다중위기 상황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대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확장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인식과 실천의 주체인 개인의 위기의식이 근대적 패러다임에 종속되어 그것을 개인적 수준에서 규범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 근대적 패러다임에서 비롯되었다는 대안 담론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으로의 전회를 주장하는 쿤다-모빌리티 담론의 관점에서 바다와 섬의 위기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양 근대와 기원을 같이하는 지구시대의 개막이 다중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과 지구의식의 고취가 그 대안이라는 제안에 유의하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교훈을 상기하자는 것이다. 서유럽의 ‘이동’으로 지구시대가 개막되기에 앞서 명(明) 제국은 왜구와 외부 세력의 침입 차단, 조공 무역을 통한 외교적 위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실시했지만, 연해지역 경제 침체 및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쇄토 일로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속가능성이 혼종성과 개방성을 근거로 할 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제주도 남성장사 전설에 나타난 내재적·외재적 갈등 양상의 유형과 의미

김진철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I. 서론

이 연구는 제주도에 전승되는 남성장사 전설을 대상으로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내재적 및 외재적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제주도에는 비범한 힘을 지닌 장사에 관한 다양한 전설이 지역마다 전해져 내려온다. 이들 장사전설에는 인물이 지닌 탁월한 능력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은 중앙과 변방의 권력 관계, 공동체 내부의 질서와 위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제주장사와 외부 세력 간의 외재적 갈등과 제주장사와 제주 공동체 간의 내재적 갈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제주 장사 전설의 유형<sup>1)</sup>

제주도는 각 마을에 다양한 장사들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제주도 전역에서 전하는 장사 이야기가 있고, 한 지역에서만 주로 전하는 이야기도 있다. 대정의 오찰방과 성산의 현씨와 같이 유사

1) 이하 장사전설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자료에 재록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국구비문학대계(9-1)』, 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9-3)』, 정신문화연구원, 1983.,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제주연구원, 2017., 『제주문화원형-설화편2』, 제주연구원, 2018., 『제주문화원형-설화편3』, 제주연구원, 2019.,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백록어문』 1-26집, 백록어문학회, 『제주도 전설지』, 제주도, 1985., 『제주도 전설』, 현용준, 서문문고, 1996., 『제주무속자료사전』, 현용준, 각, 2007., 『남국의 전설』, 진성기, 일지사, 1968., 『무가본풀이사전』, 진성기, 민속원, 2016.

한 서사를 가진 전설이 장사 이름만 다르게 전하기도 한다. 지역별로 전하는 대표적인 장사 전설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제주도 지역별 장사 이야기 현황

| 지역       | 장사                                |
|----------|-----------------------------------|
| 애월읍      | 홍업선, 김통정, 문국성, 김기봉, 최동이, 진선달, 강초관 |
| 한림읍      | 조망이, 강당장, 고식불, 양씨, 막천충            |
| 한경면      | 김비장                               |
| 대정읍      | 오찰방, 오좌수, 막산이, 백산이, 오찬이, 새샘이      |
| 안덕면      | 정운디, 구운문, 김보선 아들, 강별장, 이익원        |
| 서귀포시 동지역 | 이좌수, 고대각, 양태수                     |
| 남원읍      | 먹쟁이, 송서방                          |
| 표선면      | 강당장, 송하철, 당팃하르방, 오별장              |
| 성산읍      | 심돌 부대각, 현씨                        |
| 구좌읍      | 한연함배임재, 평대 부대각, 이씨 하르방, 범천충       |
| 조천읍      | 김씨하르방, 이율, 강영감, 김성주, 청보 강씨        |
| 제주시 동지역  | 배큰정서방, 김팔충, 강대각, 문소랑              |

제주도에 전하는 남성장사 전설은 장사의 배경, 능력의 특성, 공동체와의 갈등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어 전설화된 장사 이야기에는 김통정이 있다. 김통정은 삼별초의 마지막 장수라는 역사성에서 비범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전설이 결부되어 실제 역사적 사실과 민중적 상상력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또한 오찰방, 부대각과 같이 겨드랑이에 날개를 갖고 태어난 인물이 비범한 힘을 갖고 있거나, 강렬한 눈빛을 지니는 등 신체적 특이성을 통해 사회적 주목을 받아 위협으로 인식되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있다. 또 낮은 신분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비범함을 활용하여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물들로 막산이, 배큰정서방과 같이 먹성이 좋은 장사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당팃당장과 같이 공동체의 관습이나 내부 권위에 저항하는 유형의 인물들의 이야기도 있다.



### III. 제주전설의 외재적·내재적 갈등 양상<sup>2)</sup>

#### 1) 외재적 갈등의 요소

외재적 갈등은 제주섬 내부에 존재하는 장사가 제주섬 외부의 세력, 즉 중앙 권력이나 외부의 공동체와의 충돌로 인해 겪는 고난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등은 장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제주가 지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다. 제주 장사 전설의 일부 에피소드에서 장사들은 중앙 정부의 사회 구조 및 가치관과의 충돌을 통해 외재적 갈등을 경험한다.

삼별초의 마지막 장수인 김통정은 여몽연합군이라는 외부 세력에 맞서 제주에서 최후의 항쟁을 펼친다. 그는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고 비범한 전략으로 방어하지만, 결국 고려군에 의해 패배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이 전설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장수가 외부 권력에 의해 좌절되는 외재적 갈등의 전형을 보여준다.

오찰방 전설에서 오찰방은 서울로 상경하여 뛰어난 능력으로 조정에서 포기한 도둑을 잡는다. 하지만 뛰어난 공로에도 불구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낮은 '찰방' 벼슬을 상으로 받는 것에 그친다. 이는 제주 출신 인물이 중앙의 권력 구조 내에서 겪는 지역 차별이라는 외재적 갈등을 보여준다. 제주의 인재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배제하려 했던 현실이 전설 속에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제주도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겪었던 소외감과 '섬 콤플렉스'의 문화적 표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 이야기들과 다른 요소를 보여주는 부대각과 한연 한배임재 전설에서는 쌀을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던 장사들이 해적을 만나 곡식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는다. 장사들은 해적들의 배로 쌀가마니를 던지면서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 상황을 역전시킨다. 한연 한배임재는 외부인과 다투기 내기에서 수십명이 들지 못하는 닻을 가볍게 들어 기를 꺾는다. 이 이야기는 외부 공동체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승리하는 장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앞선 이야기와 달리 '섬 콤플렉스'를 극복한 표상을 그리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다.

#### 2) 내재적 갈등의 요소

내재적 갈등은 제주섬 내부에서 발생하는 장사들과 제주 공동체와의 충돌을 의미한다. 이는 장사 개인의 비범한 특성이나 욕구, 그리고 제주도내 공동체의 삶의 현실과 관습, 사회적 불합리 등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2) 제주 장사전설 관련 연구는 현길언의 『제주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태학사, 2014)과 『제주도의 장수설화』(홍성사, 1981)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막산이 전설에서는 수십 명 몫의 일을 해낼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과도한 먹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식량을 구해야 하는 원초적 욕구가 나타난다. 하지만 제주도 내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결국 그는 주인 집안의 재산을 고갈시키거나 도적이 되는 등 자신의 비범함이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고 사회적 일탈을 초래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된다.

당팻당장 전설에서는 제주도 내부의 공동체 관습이나 사회적 불합리한 상황이 장사의 행동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당팻당장은 아버지의 관을 미리 짜둔 행위로 인해 마을 공동체의 비난을 받아 전통적인 상부상조 관습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 짓기 도움을 거부하자, 그는 자신의 엄청난 힘으로 마을의 돌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벌여 제주 공동체를 상대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다.

배 큰 강당장 전설에서는 자신이 만든 짚신을 사주지 않자 심술을 부려 바닷가 마을의 배들을 혼자 들어 육지로 옮겨버린다. 이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공동체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또한 소 백 마리를 다루는 비범한 테우리인 조망이는 소를 잘 다루지만 모인 소 중 한 마리를 잡아먹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는 그의 타고난 능력이 제주섬 내의 주인과의 경제적 관계에 직접적인 손실을 주어 갈등을 유발한다. 주인은 자신이 직접 소들을 다루려고 하지만 결국 소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 조망이에게 다시 일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장사의 힘에 굴복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 3) 복합적 갈등의 요소

복합적 갈등은 제주도 외부에서 비롯된 갈등이 제주도 내부의 장사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제주도 내부의 갈등이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유형에서는 갈등의 원인과 결과가 제주섬의 경계를 넘나들며 복합적으로 얽히는 양상이 나타난다.

아기장수 전설에서 아기장수는 제주도 내의 평범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그의 비범함은 그가 역적이 될 것이라는 제주 공동체 내부의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 결국 부모는 가족과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아기의 날개를 제거하는데,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행위라는 내부적 갈등과 신이 한 존재에 대한 국가적 경계라는 외재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제주의 아기장수 이야기 변이형에서는 오찰방과 같이 날개를 제거한 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시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육지부의 아기장수 이야기가 장수의 존재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힘의 원인으로 상징되는 날개만 제거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소한다.

부대각 이야기에서는 날개를 없애는 이야기와 날개가 유지된 이야기가 공존한다. 날개를 지닌 부대각은 대국을 치기 위해 왕에게 군사와 군함을 요청할 정도로 제주도 외부의 무대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포부를 지닌다. 이는 제주도 장사의 외재적 확장 욕구를 드러낸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부대각을 위협적 존재로 여겨 제거하려고 하고, 부대각 집안 사람들은 전쟁 패배로 인한 가문의 몰락을 우려하여 그의 힘의 근원인 ‘장군 바위’를 부숴버린다. 이는 외부와의 대규모 갈등을 우려하는 제주 내부의 보수적인 시각이 장사의 외적 포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부대각은 힘이 약해지고 결국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자기희생을 선택하는데, 장사의 외부적 야망과 국가의 위협 또는 제주 내부의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김통정 이야기에도 주된 갈등은 여몽연합군이라는 외부 세력과의 전쟁이다. 그러나 이 외재적 갈등의 과정에서 ‘애기엽개’ 또는 ‘머슴’이라는 제주섬 내부의 인물에 의한 배신이 발생한다. 이 배신은 성문이 열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외부 세력의 승리에 일조한다. 외부의 강력한 압력이 제주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김통정이 제주도 내부의 신들에 의해 퇴치되는 신화적 변주에서는 제주 민중의 시각에서는 김통정을 갈등을 유발하는 외부세력으로 재해석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김통정에 대해 내부 인물로 인식하는 경우와 외부 인물로 인식하는 시각에 따라 갈등 양상이 달라지는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 IV. 결론

이 글은 제주장사 전설을 대상으로 제주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재적 갈등과 제주도 외부 세계와의 갈등인 외재적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장사들의 비범한 힘은 제주섬 안팎의 사회로부터 양가적인 시선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경외의 대상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제주의 장사들은 내부 및 외부 공동체와의 다양한 갈등을 보여주며, 갈등의 결과에 따라 공동체에 배제되기도, 공동체에 수용되기도, 공동체를 굴복시키기도 했다. 이는 비범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육지부의 아기장수 전설처럼 일방적인 제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바다를 통해 본 인류세 담론과 역사적 트라우마의 교차점

:쓰시마섬 사례를 통해 본 과거 재난과 현재 위기의 만남

염현주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I. 들어가며 : 과거의 재난과 현재의 위기

일본 쓰시마에서는 10년째 제주 4·3 수장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제가 진행되고 있다. 4·3 당시 수장학살된 시신들이 해류를 타고 쓰시마로 흘러갔고, 시신을 발견한 쓰시마 사람들은 시신을 거두어 화장을 하거나, 마을의 땅이나 절의 무연고 묘지에 매장해주었던 역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위령제는 쓰시마 주민인 에토 히카루와 도쿄의 한라산회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위령제에는 4·3 희생자 유족회, 한국인, 쓰시마 주민, 후쿠시마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1950년 전후 제주 4·3 수장학살 희생자들의 시신이 떠밀려왔던 바로 그 해안에 이제는 제주 삼다수병과 막걸리병,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있다. 70여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해류를 타고 같은 해안에 도달한 이 서로 다른 ‘표착물’들은 과거의 재난과 현재의 위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국가폭력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바다에 버려진 시신들이 해류를 타고 이동했듯이, 현재 인간 문명이 눈앞에서 치워버린 쓰레기들 역시 같은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이 두 현상은 단순히 연속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폭력성이 자연환경과 맺는 관계의 연속성과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의 폭력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형태로 인간의 생명을 파괴했다면, 현재의 폭력은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형태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쓰시마에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의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모여들어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전쟁과 학살의 피해자들이 이 섬으로 떠밀려왔던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다. 다만 과거에는 인간의 시신이었다면 현재는 인간 문명의 폐기물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타국의 시신을 거두어 애도했

던 쓰시마 사람들의 실천이, 현재 바다와 생태계의 죽음 앞에서는 왜 이어지지 않는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가능했다면, 비인간 존재들의 고통에 대한 종을 초월한 연대는 왜 부재한가? 이는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류세 시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사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II. 바다의 기억: 시신에서 쓰레기로의 물질적 순환

1950년, 제주 주정공장수용소에 예비검속된 500여 명이 제주 산지항 앞바다에 떨어졌다. 증거 인멸을 위한 수장학살이었다. 하지만 바다는 인간의 의도를 따르지 않았다. 대마난류를 타고 흘러간 시신들은 약 6일 후 265km 떨어진 쓰시마 해안에 나타났다. 인간이 은폐하려 했던 폭력의 증거는 자연의 흐름을 통해 다른 국가의 땅에 도달했다.

쓰시마 곳곳의 마을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쓰시마 사람들은 이 시신의 연유는 알 수 없었지만, 옷차림 등을 통해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비참한 광경이었지만, 같은 인간이기도 하고 나라가 다르더라도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시신을 거두어 매장했다. 그 주민 중 한 명이었던 에토 히카루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현재까지도 위령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인간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신 수습과 애도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행위를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존재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70여 년이 지난 현재, 과거 시신이 떠밀려왔던 쓰시마 해안은 다른 종류의 ‘표착물’로 가득하다. 제주 삼다수병, 막걸리병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배출된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가 과거 시신이 이동했듯이, 이 섬으로 모여들고 있다. 쓰시마 쓰레기센터 CAPPA에서는 이 섬은 사실상 ‘동아시아의 쓰레기 수거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해류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쓰시마는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높은 어획량을 자랑했고, 여러 섬의 어부들이 모여드는 어업 중심지였다. 해류의 집중은 풍요로운 생태계와 활발한 교역의 기반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과거 풍요를 가져다주던 바로 그 해류가 이제는 동아시아 각국의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어버렸다. 축복이었던 지리적 조건이 저주로 전환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해양쓰레기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을 운반한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먹이사슬에 유입되어 생태계 전반에 독성을 확산시킨다. 폐그물과 로프에 얽힌 바다생물들의 죽음,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죽어가는 바다새들, 화학물질 오염으로 번식력을 잃는 해양포유류들의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대마난류는 이러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물질적 행위자다. 이 해류는 단순한 자연현

상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경계와 무관하게 자신의 리듬으로 흘러가며, 그 위에 실린 다양한 물질들을 통해 서로 다른 시공간을 매개한다. 1950년대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2020년대에는 소비문명의 폐기물들을 같은 경로로 운반하면서, 이 해류는 인간 활동의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증언한다. 해류의 관점에서 보면, 시신과 쓰레기는 모두 인간이 바다에 ‘투기’한 물질이다. 전자는 폭력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후자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일상의 결과로 바다에 버려졌다. 의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다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류가 만들어내는 ‘시간의 중첩’ 현상이다. 70년 전의 시신과 현재의 쓰레기가 같은 해안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질학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 그리고 일상적 시간이 하나의 물질적 공간에서 만나는 인류세적 현상이다. 과거의 폭력이 현재의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물질적 조건 위에서 전개되면서 구조적 유사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시간의 중첩은 기억과 망각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시신은 개별적 희생자로 기억되고 애도되지만, 쓰레기 속에서 죽어가는 무수한 바다생물들은 대부분 이름 없이 사라진다. 해류는 이 둘을 같은 공간으로 운반하면서, 우리에게 기억의 선택성과 애도의 위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결국 대마난류는 인류세 시대의 모순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물질적 행위자라 할 수 있다.

### III. 다종적 얽힘 속에서의 애도와 망각

쓰시마 사람들이 바다에 떠내려온 시신을 수습한 것은 인간적 유대와 연대에 기반한 실천이었다. 이러한 애도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2007년 에토 유키하루가 세운 공양탑의 비문에는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남녀노소의 시신이 해협의 거센 파도를 타고 한반도에서 이 해안으로 떠내려왔다”고 적혀 있다. 희생자들은 “남녀노소”로 표현되어 성별과 연령의 구분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으로 호명된다. 공양탑을 세울 당시 영매사에게 받았던 “이름을 새기지 말아라.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위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조언으로, 이 공양탑은 특정한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 애도 공간이 되었다. 국적과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애도할 수 있었던 이들의 실천은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만약 이러한 포용력이 종의 경계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어떨까?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애도가 어려운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개체성의 문제다. 전통적 애도는 명확한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에토 가문 수습한 시신들은 비록 신원불명이었지만 각각이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개별적 존재들이었다. 반면 해양생태계의 붕괴는 무수한 존재들의 집합적 죽음으로 나타나며, 개별 물고기나 해조류의 죽음은 대부분 “개체군”이나 “종”의 일부로만 인식된다.



둘째, 시간성의 불일치 문제다. 4·3 희생자들의 죽음은 1950년 8월 4일이라는 명확한 날짜와 구체적 사건으로 특정되는 사건적 죽음이었다. 반면 생태적 죽음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 명확한 애도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셋째, 관계성 인식의 부재다. 에토 히카루는 “같은 인간”이라는 종적 정체성을 통해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사이의 관계는 대부분 비가시적이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생태계는 일상과 분리된 추상적 공간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다. 인류세 담론에서 제시하는 ‘다종적 얹힘’ 개념이 그 열쇠다. 『세계 끝의 버섯』에서 애나 칭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복잡하게 얹혀 상호의존하며 공진화하는 관계에 있다. 쓰시마에서 일어나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이 서로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과정의 다른 국면됨을 인식할 때, 새로운 애도의 가능성이 열린다.

먼저 물질적 연결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950년대 시신들과 2020년대 해양쓰레기가 같은 해류를 타고 같은 해안에 도달한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같은 물질적 순환 체계 안에서 얹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시공간적 확장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 4·3 희생자들의 죽음과 현재 바다생물들의 죽음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대신, 인간의 폭력성이 시대를 달리하며 나타나는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면, 과거의 애도 실천이 현재의 생태적 위기에 대한 새로운 응답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합적 애도의 새로운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개별적 존재에 대한 개별적 애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집합적 존재에 대한 집합적 애도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에토 가문 이름 없는 존재들을 위한 보편적 애도 공간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애도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새로운 애도는 단순히 감정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인류세 시대의 새로운 윤리적 실천의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IV. 인류세적 연대: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실천

쓰시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인류세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인 ‘시간의 중첩’을 목격할 수 있다. 1950년대 4·3 희생자들의 시신이 표착했던 해안에 현재 해양쓰레기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공간적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시대의 폭력이 동일한 물질적 조건 위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반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세적 현상이다.

과거의 국가폭력과 현재의 환경위기는 폭력의 양상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전자가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살해였다면, 후자는 간접적이고 비의도적인 파괴다. 전자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폭력이었다면, 후자는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폭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폭력은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 모두 생명을 수단화하는 논리에 기반하며, 타자화의 논리를 통해 정당화되고, 권력의 비대칭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폭력이 바다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물질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과거 시신들을 바다에 유기한 것은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바다를 폭력의 저장소로 만들었다. 현재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 역시 처리비용 절약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바다를 문명의 하수구로 만들고 있다. 대마난류는 과거의 죽음과 현재의 죽음을 같은 경로로 운반하면서, 폭력의 초국가적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제주에서 발생한 폭력이 쓰시마에서 발견되고, 동아시아 각국에서 배출된 오염이 쓰시마에 집적되는 현상은 폭력과 오염이 국경을 무시하고 확산되는 인류세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성 속에서 쓰시마에서 전개되는 애도의 실천은 인간 중심적 연대에서 다종적 연대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에토 가문의 애도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이제는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대는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

쓰시마 주민들이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비인간 공동체 형성의 물질적 기반이 된다. 바다오염으로 인한 어업 수확량 감소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해안에 쌓인 쓰레기는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플라스틱 조각들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식탁에까지 도달한다. 이러한 직접적 피해를 통해 주민들은 바다 생태계와 자신들의 운명이 분리될 수 없음을 체감한다.

하지만 피해 의식만으로는 진정한 다종적 연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 자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현재 쓰시마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실천이 병행되고 있다. 하나는 제주 4·3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이다. 전자에는 주로 역사와 기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후자에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 4·3 위령제 참석자들과 쓰레기센터 CAPP 활동가들은 같은 섬에서 활동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일과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일이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보여주듯이, 이 두 실천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 시신이 떠밀려온 바로 그 해류를 타고 현재 쓰레기가 도달하고 있고, 과거의 폭력과 현재의 오염이 같은 물질적 조건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4·3의 기억이 현재 바다생태계의 위기와 만날 때, 그리고 환경보호 활동이 역사적 트라우마의 맥락 안에서 이해될 때,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다.



쓰시마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다양한 실천들 속에서 우리는 인류세 시대의 새로운 윤리와 정치의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다. 과거 타국의 시신을 거두어 애도했던 인간적 연대감은 현재 죽어가는 바다생물들에 대한 애도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이는 초국가적 연대의 모델이기도 하다. 위령제 뿐만 아니라 CAPP의 정화 활동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국경을 넘어선 환경협력의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장소 기반 실천의 의미도 중요하다. 과거 시신이 떠밀려온 바로 그 해안에서 현재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시공간적 연결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한다.

또한 쓰시마 위령제에서 선언되었던 “희생자는 없다, 당사자만 있을 뿐”이라는 내용은 기존의 피해자-가해자 이분법을 넘어선다. 죽은 자들조차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능동적 당사자로 재위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비인간 존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바다생물들의 죽음도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한 일종의 ‘응답’으로, 인간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해조류의 집단적 소멸, 어류의 서식지 이동, 새로운 종의 출현과 기존 종의 멸종 등은 모두 생태계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반응으로 읽힐 수 있다. 인간이 이러한 비인간 존재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때, 진정한 의미의 다종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사의 기억과 기후 위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과거의 애도가 현재의 연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천의 모델을 상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애도의 확장 가능성이 인류세 시대의 새로운 윤리적 실천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V. 나가며: 재난의 기억에서 위기의 연대로

2024년 9월 22일, 쓰시마에서 열린 제5회 4·3 위령제에서 한라산회의 나가타 이사무는 10년간의 실천을 ‘쓰시마사건’이라 새롭게 명명했다. 이는 4·3이 제주도라는 특정 공간과 1947-1954년이라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었던 사건에서 쓰시마라는 다른 공간에서 현재진행형의 사건으로 재탄생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쓰시마라는 경계 공간에서 과거 시신과 현재 쓰레기가 같은 해류를 타고 도달하는 현상을 통해 인류세 시대의 시간적 중첩을 확인했다. 대마난류는 과거 국가폭력의 증거를 운반했듯이 현재 소비문명의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인간의 폭력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되는지를 물질적으로 증언한다.

중요한 발견은 에토 가문의 포용적 애도 실천이 종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국적과 언어가 다르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존재들을 위한 보편적 애도 공간을

만들어낸 것처럼, 비인간 존재들을 포괄하는 다종적 애도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 현재 쓰시마에서 병행되는 4·3 위령제와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이 역사의 기억과 기후 위기가 만나는 새로운 실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는 역사적 사건을 인간 사회 내부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다. 4·3을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폭력의 연속성과 그에 대한 대응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현재적 사건으로 재독해하는 것이다.

바다는 기억한다. 70년 전의 시신도, 현재의 쓰레기도, 그리고 그 사이 사라져간 무수한 생명들도. 바다의 기억을 우리의 기억으로 만들고, 바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재난의 기억이 위기의 연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쓰시마의 실천을 통해 인류세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보고자 한다.



# 투쟁하는 섬들, 사이의 다리를 상상하는 일

## 퀴어적 시선으로 읽는 재일 마이너리티<sup>1)</sup> 여성의 삶

이 혜 령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1. 집을 잃는다는 것

재일조선인 여성 단체인 ‘미리내’가 엮은 『보통이 아닌 날들』은 일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온 22명의 여성이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은 「재일조선인 여성」, 「피차별 부락 여성」, 「아이누·오키나와·필리핀·베트남 여성」이라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이 겪어온 억압과 삶의 궤적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단지 개인의 기억을 모은 기록이 아니라 경계적 정체성과 다양한 억압이 교차하는 경험들을 통해 연대의 서사를 형성한다. 재일이라는 정체성은 경계적이고 유동적인 지점에 놓인 존재로, 이러한 위치는 퀴어적 시선과 교차할 때 더욱 복합적으로 조명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보통이 아닌 날들』에 등장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제되거나 은폐되어 왔는지를 퀴어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재일 마이너리티 담론은 종종 국적/귀화/재류 자격 등 국민국가에의 귀속 여부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퀴어적 시선은 이러한 국민국가 중심의 주체성 틀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국적·민족·젠더의 경계를 넘나드는 주체성을 상상하도록 이끈다. 예컨대 ‘정상적인 재일조선인’이라는 개념은 민족적 순수성과 젠더적 규범성이 결합된 이데올로기적 틀로 작동하며, 정상/비정상, 순수/혼종의 이분법을 통해 민족적·문화적 규범을 재생산한다. 퀴어적 시선은 이러한 민족과 젠더의 규범을 해체함으로써, 고정된 정체성 범주를 넘어서는 존재들을 조명한다.

1) 이 글에서는 책의 저자가 사용한 표현인 ‘재일조선인’을 따르며, 재일조선인을 포함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피차별부락 출신과 아이누·오키나와·필리핀·베트남 출신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재일 마이너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재일조선인’이라는 개념은 단지 민족 정체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젠더적 규범성과 권력의 작동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며, 사회적 인식의 장에서 배제되거나 감춰졌던 존재들을 가시화한다. 나아가 기존의 주체 구성 방식에 균열을 내고, 그 경계 바깥에서 새로운 주체성을 사유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경계적 존재로서 재일 마이너리티 여성의 위치성은 ‘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보통 ‘집’은 귀속감과 안정의 장소로 상상되지만, 이주자에게 ‘집’은 떠난 장소 혹은 (떠나왔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그러한 감각을 상상하게 하는 단어다. 일라이 클레어는 『망명과 자긍심』(2020)에서 이러한 감각 혹은 상태를 “집을 잃는다”는 표현을 통해 설명하며 다양한 개념들이 얹힌 복잡성을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클레어 2020: 85). 그의 사유는 재일 마이너리티 여성들의 위치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이 글에서 재일 마이너리티 여성과 퀴어라는 집단으로 표상되는 이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늘 함께 살아왔지만 “표현’의 세계에서는 늘 배제”되어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다(미리내 2019: 27). 동시에 이들은 “기존의 ‘경계’를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삼고 있던 ‘우리’라는 주체의 동일성에 균열을 내는” 비체이자, “경계 안에 갇혀 있던 ‘우리’라는 주체의 인식을 그 경계 밖으로” 끌어내는 존재들이다(김춘식 2009: 112). 이처럼 이들은 내부자/외부자 대립으로 촉발되는 위험을 일깨우는 존재이자 국민-비국민, 내부-외부, 다수-소수, 정상성-비정상성으로 이분화된 규범적 틀에 질문을 던지고 균열을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공통항을 갖는다.

## 2. 모두가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다

우리는 인종 억압, 성 억압, 이성애 중심주의, 계급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한 억압 체계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채 통합적인 분석 및 실천의 계발을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억압의 총체가 우리 삶의 조건을 창출한다.<sup>2)</sup>

재일이라는 것과 여자라는 것은 나에게 별도의 일이 아니다. 그 어느 한쪽만을 공유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좋지 않다. 민족문제로 여‘성’을 무화하는 재일 남자도, 여성문제로

2) 일라이 클레어(2020)에서 재인용하였다. 일라이는 『망명과 자긍심』의 교차성, 다중 쟁점 정치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유색인 페미니스트의 정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족‘성’을 무화하는 일본 여자도 재일 여자에게는 지배와 억압의 가해자다.<sup>3)</sup>

첫 번째 인용문은 1977년 ‘کمبافی강공동체’가 발표한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문」으로, 백인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 남성 중심의 흑인운동이 유색인 여성이 처한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1992년 ‘조선인종군위안부문제를생각하는모임’이 재일여성 해방운동의 시작을 선언하며 발표한 글의 일부다. 김이사자는 “어디에서도 해방될 수 없는 재일여성의 딜레마”를 언급하며, 복잡하게 얽힌 재일여성의 복합 차별을 고발하였다(조경희 2020: 123). 두 인용문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집단에 의해 발표되었지만,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시공간을 가로질러 공명한다.

재일 마이너리티 여성은 성차별, 민족차별, 계급차별, 경제적 소외 등 다양한 억압이 교차하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정체성은 단일한 틀로 포착될 수 없다. 이들의 삶은 국경과 민족, 인종뿐 아니라 가족과 친족 등 교차하는 삶의 조건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오랜 시간 민족차별에 저항해 온 역사 속에서도 이중삼중의 억압과 차별에 시달리며 그들의 목소리는 지워져 왔다. 『보통이 아닌 날들』은 이처럼 소거되었던 목소리를 복원하고 이들이 처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리향은 민족 차별보다 가족 내 성차별을 먼저 인식한다. 그는 할머니가 10대 때 고용살이하던 곳에서 할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고 가족사 속에 내재한 계급 문제를 발견한다. 또한, 여성들이 제사와 같은 전통 이행을 위해 엄청난 노동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의례에서는 배제되는 현실은 가부장적 억압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들이 민족 차별, 가족 내 성차별, 빈곤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별과 억압 속에 놓여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차별부락 출신인 유카리의 어머니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지만, 갈 곳이 없어 집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부락 여성에게 ‘부락을 떠난다’는 것은 인간관계와 생계를 동시에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미리내 2019: 129). 이는 사회적 차별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와 가정폭력에 대한 침묵의 강요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했으며,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치에 놓여 있었음을 드러낸다.

피차별부락 출신 남편과 결혼해 정착한 최리영의 어머니는 이국에서의 출산과 유산, 육아, 투병 생활을 겪으며 조현병이 발병했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점점 고립되었고,

3) 金伊佐子, 「在日女性と解放運動—「その創世記」に」(1992), 前夜1-4, 2003에 수록. 조경희(2020), 「포스트 식민 페미니즘의 (재)소환: 1990년대 재일여성들의 ‘위안부’ 운동과 정체성 정치」, 『문화과학』 통권 제104호, pp.123~124에서 재인용하였다.

이는 낙인의 내면화와 정신건강의 악화로 이어졌다. 낯선 땅에서 겪은 일상에서의 어려움,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녀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최리영은 대학에서 재일조선인 운동에 참여하면서 차별을 감정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비로소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차별받는 부락민으로 살아왔음에도 ‘조센진’ 머느리를 차별하는 아버지의 가족을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했고, 재일조선인 운동에 가담한 자신의 존재가 운동의 역사성과 의미를 흐리는 것은 아닐지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 3. 보통이 아닌 날들

황보강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인종, 민족, 젠더라는 관념 아래 배제되고 침묵당해온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미리내 2019: 28). 이는 일본 사회에서 다양한 억압에 맞서 싸우는 재일 마이너티 여성들의 현실과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세상과 만나면서 자신들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였고, 그 억압에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결국 이 저항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배제와 침묵을 강요해 온 일본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이자 변화의 시작이 된다.

피차별부락 출신인 도모에는 “피차별부락을 둘러싼 차별이 호적 제도로 인해 되풀이되고 있음”을 깨닫고 비혼 상태로 아이를 낳는다(미리내 2019: 142). 그녀의 선택은 호적 제도를 전제로 하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사회가 만든 규범과 제도의 억압에 대한 명백한 저항이었다.

정미유기는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치마저고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저항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상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일상생활에서 치마저고리를 입는 일은 그 자체가 스스로 재일조선인임을 드러내는 행동”(미리내 2019: 58)이자,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었다.

오키나와 출신인 후쿠코는 오키나와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치난추와 나이차<sup>4)</sup> 사이의 구조적인 차별과 민족·계층·성차별이 얹히고설킨 폭력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재일조선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수많은 마이너리티들과의 연대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이들은 자신들과 주류사회를 구분 짓는 차별의 언어로 사용되던 ‘재일조선인’, ‘자이니

4) ‘우치난추’는 오키나와 출신을, ‘나이차’는 일본 본토 출신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치’, ‘우치난추’ 등을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자신의 언어로 재점유하였다.

이들은 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함으로써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차별과 차이를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러한 목소리화는 단순한 자기 서사의 차원을 넘어, 그 차이 속에서 자신으로 ‘존재하기’를 실천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서로의 서사를 엮어내는 과정을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표현의 장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이 여성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목소리를 엮는 일은 “고립되어 온 투쟁들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다리를 놓는 일”과 같다(클레어 2020: 291). 이들은 “사적이고 친밀한 것들을 경유하고 얹혀내면서 벌어지는 일이 곧 공적이고 정치적인 일”임을 깨닫는다(클레어 2020: 259). 말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새로운 동료와 교류하며 연결 짓기를 시도함으로써 자신들의 표현을 이어 나가며 일본 사회의 차별적 현실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 4. 집을 되찾는 일

애나 칭의 『세계 끝의 버섯』(2023)은 인간이 파괴해 폐허로 변한 숲에서 일어나는 송이버섯과 소나무, 인간의 얽힘과 이들의 공존 방식을 다룬다. 이 책은 인류학과 생태학, 문화와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고 ‘경계를 넘어서야만’ 쓸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송이버섯을 따라가다 보면, 교란이 손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란으로 인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우게 된다. 이 이야기는 교란과 혼종성이 만드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며, 세상이 복잡한 얽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망각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모든 생명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서로를 ‘오염시키는 것’도 공존의 방법이 되며, ‘교란’조차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사회적 상상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에도 소수-다수, 남성-여성, 장애인-비장애인, 이성애-동성애, 내부-외부, 정상-비정상, 인간-비인간 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길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명료하게 사유할 수 없다. 어떠한 존재도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정체성은 언제나 교차적이고 관계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규범에 저항하고, 범주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언어로 존재를 말해내야 한다.

몸과 집을 되찾는 일은 바로 그 질문과 말하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얽히고 흔들리며 교란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만나고,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다 한 가운데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흘러가며 타자와 마주하는 연결의 장소다. 결국 집을 되찾는 일은 그 섬들 사이의 다리를 상상하는 일이다.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침묵이 아니라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그 섬들 위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춘식(2009), 「소수집단 문학의 정체성-기억, 이산, 장소」, 『비평문학』 제34호
- 미리내 역음(2019), 『보통이 아닌 날들』, 양지연 옮김, 사계절
- 애나 칭(2023), 『세계 끝의 버섯』, 노고운 옮김, 현실문화연구
- 일라이 클레어(2020), 『망명과 자긍심: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 전해은 옮김, 현실문화
- 조경희(2020), 「포스트 식민 페미니즘의 (재)소환: 1990년대 재일여성들의 '위안부' 운동과 정체성 정치」, 『문화과학』 통권 제104호

# 인류세 시대 태평양 및 카리브해 섬 국가의 네트워크 주권<sup>1)</sup>

고 다 슬<sup>2)</sup>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I. 서론

21세기는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류세의 시대로 정의된다. 인류세(Anthropocene) 시대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소규모 섬 국가들에게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Chandler and Pugh, 2021; 404).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위치한 이들 국가는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허리케인 등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물리적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Chandler and Pugh, 2021; 410). 이처럼 국가의 물리적 영토가 위협받으면서, 전통적인 웨스트팔리아적 주권 개념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법과 주권 이론은 고정된 영토와 명확한 경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류세 시대의 섬 국가들은 이러한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키리바시, 투발루, 몰디브와 같은 저지대 섬 국가들은 향후 수십 년 내에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영토 없는 국가’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예고한다. 이러한 실존적 위기 앞에서 섬 국가들은 혁신적인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개별 국가로서의 한계를 인식한 이들은 지역 연합을 통한 집단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Baldacchino and Hepburn, 2012; 555).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과 카리브해공동체(Caribbean Community, CARICOM)는 이러한 네트워크 주권의 대표적 사례로, 소규모 국가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Journal of Pacific History, 2024; 389). 본 연구는 인

1) 투고 준비 중인 원고로, 인용 등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수료(kodaseul@gmail.com).

류세 시대 섬 국가들의 주권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가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지구적 환경 위기 시대에 섬 국가들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주권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주권의 변화와 인류세의 도전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확립된 근대국가의 주권 체제는 명확한 영토적 경계, 배타적 관할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체제는 유럽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발전했으며, 식민지 해방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인류세 시대의 지구적 환경 변화는 이러한 전통적 주권 개념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Sabelis and Hilderink, 2022: 112). 특히 소규모 섬 국가들에게 웨스트팔리아 주권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제한된 인구와 자원, 경제적 취약성, 지리적 고립은 이들 국가가 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된다(Burkett, 2013: 663).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토의 물리적 소실 위험은 영토 기반 주권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탈식민화 과정에서 등장한 많은 섬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도 완전한 주권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형식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구 종주국이나 강대국에 의존하는 ‘의존적 주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여전히 비자치 영토나 자유연합국 지위를 유지하며, 전통적 주권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지위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주권을 이분법적 개념(있다/없다)이 아닌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뉴칼레도니아, 푸에르토리코, 쿡 제도 등은 완전한 독립국도, 단순한 식민지도 아닌 다양한 형태의 자치권을 행사하며 ‘섬 주권’의 유연성을 보여준다(Jörundsson and Baldacchino, 2017: 56). 인류세는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주요 동력이 되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의미한다. 이 시대의 특징은 지구적 규모의 환경 변화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손실 등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집단적 문제이다. 섬 국가들에게 인류세는 특히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해수면 상승은 이들의 영토 자체를 위협하며, 극한 기후 현상은 경제적 기반을 파괴한다. 투발루는 2022년 COP27에서 ‘디지털 국가’ 구상을 발표하여 물리적 영토를 넘어선 주권 개념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해양 경계의 고정화, 계획된 이주(planned relocation) 등이 새로운 주권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네트워크 주권은 개별 국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적 또는 이슈별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전통적 주권이 국가 단위의 배타적 권한이라면, 네트워크 주권은 공유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권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Rosenau, 1992: 1). 네트워크 주권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역량 강화이다. 개별적으로는 미약한 영향력을 가진 소규모 국가들이

집단을 이룰 때 국제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네트워크 주권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첫째,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나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주권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이나 어업 관리에서는 집단적 접근을 취하면서도, 내정에서는 개별 국가의 자율성을 유지한다. 둘째, 고정된 통합보다는 이슈별로 유연하게 결합하고 분리될 수 있는 연합 구조를 채택한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구조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 소지역, 글로벌 수준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효과성을 높인다. 넷째,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통 지도자, 민간 부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 III.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카리브해공동체(CARICOM)의 네트워크 주권 발현양상 비교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1971년 설립되었다. 18개 회원국과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4개국이 태평양 섬 국가들이다. 초기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지만, 점차 섬 국가들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태평양 외교(New Pacific Diplomacy)’의 중심지가 되었다. 쿡 제도와 니우에 같은 비독립 지역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정치적 지위의 태평양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플랫폼 역할을 한다. 카리브해공동체(CARICOM)는 1973년 설립되었다. 15개 회원국과 5개 준회원국으로 구성된 영어권 카리브해 국가들의 지역 기구이다. 총 인구 약 1,600만 명의 소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의 분할된 구조를 극복하고 독립 이후 소규모 경제의 한계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설립되었다.

PIF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03%만을 차지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PIFS, 2024). 이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국제 사회에 강력히 제기해 왔다. 2009년 마주로 선언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후에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또한 2019년 투발루 선언에서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에서 ‘하이 어비션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여 기후 적응과 손실 및 피해 보상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PIF는 주로 정치적 연대와 외교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9년 피지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지역적 합의를 보여 준다. 또한 뉴칼레도니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탈식민화 과정을 지원하고, 유엔 비자치영토 목록 재등재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정치적 외교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카리브해 지역

은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가뭄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CARICOM은 실용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카리브해 재해 대응 기구(CDERA)를 설립하여 지역적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9년 허리케인 도리안 대응에서 신속한 집단 대응을 시연했다. 또한 연대 기금을 조성하고 역내 구호 물자 공급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CARICOM, 2021). CARICOM의 가장 큰 성과는 카리브해 단일시장경제(CSME) 구축이다. 1989년 그랜드 안즈 선언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전문 인력의 자유 이동을 통해 지역 내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했으며, 로메 협정, 코토누 협정 등 국제 무역 협상에서 집단적 접근을 통해 개별 국가로서는 불가능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 IV. 섬 국가 네트워크 주권의 성과와 한계

네트워크 주권의 가장 명확한 성과는 소규모 섬 국가들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이다. 개별적으로는 영향력이 약한 이들 국가가 집단을 이룰 때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인정받게 된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손실과 피해 메커니즘, 기후 적응 기금 등은 모두 SIDS 그룹의 집단적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무역 협상에서도 나우루 협정을 통한 참치 어업 관리,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WTO 소규모 취약 경제 지위 인정 등 개별 국가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들을 거두었다.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 공유와 협력은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킨다. 교육 분야에서는 남태평양대학교(USP)와 카리브해대학교(UWI) 등을 통해 개별 국가로서는 불가능한 고품질의 고등교육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리브해 기상청을 통한 전문 기상 서비스 제공은 소규모 국가들이 단독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적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이다. 인력 분야에서도 순환 근무제, 원격 교육, 지역 전문가 풀을 통해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하고 있다.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 등에 대한 집단적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조기 경보 시스템, 재해 대응 프로토콜, 긴급 지원 메커니즘이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COVID-19 팬데믹에서는 백신 공동 구매, 국경 조치 조정, 의료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개별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네트워크는 소규모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도 기여한다. 지역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언어 보존에 기여하고, 기후 적응과 해양 관리에서 전통 지식을 활용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축제와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교류는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네트워크 주권의 가장 근본적 한계는 주권 딜레마이다. 집단적 행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약해야 하지만, 이는 국내 정치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CARICOM의 CSME 과정에서 나타난 통합 진전의 지체는 회원국 간 의견 차이와 주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PIF 내에서 미크로네시아 3개국의 탈퇴 위기는 지역 내 정치적 대표성과 리더십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네트워크 내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 수준 차이는 협력의 장애 요인이 된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상대적 선진국과 도미니카, 그레나다 등 최빈국 간의 격차는 통합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이견을 만들어낸다. 태평양 지역에서도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상대적 대국과 투발루, 나우루 등 초소형국 간의 차이는 협력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네트워크 주권은 외부 강대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집단화된 섬 국가들이 강대국 간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PIF 국가들이 양 강대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솔로몬 제도의 중국과의 안보 협정 체결은 이러한 복잡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 기구들의 제도적 역량 부족도 중요한 한계이다. PIF 사무국의 만성적 재정난과 CARICOM 사무국의 인력 부족은 야심찬 계획들의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복잡한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전문성 부족과 구체적 실행 역량의 한계는 네트워크 주권의 효과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일부 회원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네트워크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피지의 군사 쿠데타로 인한 PIF 자격 정지, 아이티의 지속적 정치 위기로 인한 CARICOM 내 갈등은 네트워크 주권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CARICOM 회원국들 간의 입장 차이는 일관된 집단 입장 형성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

## V. 맺음말

소규모 섬 국가들의 네트워크 주권 실험은 단순한 집단적 생존 전략을 넘어서 인류세 시대 전체 인류가 직면한 지구적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들의 경험은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 문제, 기술 혁신의 필요성,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 등 현대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네트워크 주권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다. 주권 딜레마, 발전 수준의 차이, 외부 압력, 제도적 한계 등 여전히 많은 도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도이다. 소규모 섬 국가들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은 지구적 도전에 직면한 모든 국가들에게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주권의 성공은 단순히 섬 국가들의 생존을 넘어서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인류세 시대의 도전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이다. 기후변화, 팬데믹, 기술 격차, 불평등 등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들은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접근이 필요하다. 섬 국가들의 네트워크 주권 실험은 이러한 집단적 해결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들이 보여준 선택적 주권 공유, 유연한 연합 구조, 다층적 거버넌스,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 등은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약자들이 연대를 통해 강자가 되고, 분산된 권력이 집합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류세 시대 섬 국가들의 네트워크 주권은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주권과 거버넌스의 미래를 탐구하는 중요한 실험실이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연결되고, 더욱 협력적이며, 더욱 지속가능한 세계질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겠지만, 섬 국가들이 보여준 용기와 혁신은 인류 전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도가적 사유에서 본 섬들의 접화군생(接化群生)

김진선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1. 봉인(Bungin)섬의 현재 읽기

섬은 대륙과 분리되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에 고립성과 폐쇄성을 갖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율성과 개방성을 갖는 공간이다. 해양에서의 이동은 대륙보다 어려움이 있지만, 해류의 흐름에 따라 물이 흐르듯이 사방으로 펼쳐질 수 있고 인위적으로 벽을 세워 경계 짓고 차단하기도 어렵다. 민속학자인 미야모토 쓰네이치는 섬이라는 공간을 “격리된 조건과 한정된 육지 때문에 생산, 유통의 제약으로 고통받는 장소인 동시에 바다로 열린 다양한 교통의 가능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가 매우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맥락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일 수 있는 진술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 달라진다.

작가이자 비평가인 에두아르 글리상은 “군도를 독립성이나 폐쇄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교통성이나 개방성 속에 놓는 동시에 변방성·종속성의 상황으로 밀어 넣는 것”을 대항해시대가 열리고 식민주의를 통해 진행된 세계화 그 자체라고 지적한다. 크고 작은 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군도에서 사람들은 섬과 바다의 생태계에 따라 공존하면서도 크게 실감하지 못했을 그러한 특징들은 거대한 배가 등장하면서 발견되었고 주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바다를 유목하거나 작은 섬에 거주하며 대륙으로 열린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주변 바다에서 살아가는 바자우족은 배 위에서 생활해 왔지만 섬 주변에 수심이 얇은 곳에 수상가옥을 지어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인 봉인(Bungin)섬에 약 200년 전부터 바자우족이 살기 시작했고, 죽은 산호 등으로 바다를 메우고 집을 지으며 점차 섬을 넓히고 있다. 바다의 유목생활을 그만두고 섬에 정착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인근의 큰 섬이나 육지로 나가지 않고 바다(섬) 위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봉인섬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내거나 타지로 나갔다가도 다시 섬으로 돌아온다. 바자우족 중에서 조금은 특별한 경우인 이들은 19세기 이후에 봉인섬에 정착해 스스로 섬을 확장하고 바

다의 생활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붕인섬은 바다 유목생활에 익숙한 바자우족에게 폐쇄적이고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안정적 터전이자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이다. 물론 이들이 섬에 정주하게 되면서 주변 바다가 점차 오염되고 양식이 되는 물고기도 줄고 있다.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붕인섬에 대한 관심도 마치 인류가 지구 행성에서 정주하면서 초래하게 된 현재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19세기 초 어느 바자우족 가족이 처음 섬에 정착할 때는 축구장 3개 정도 크기였지만 지금은 4배 이상 커졌고, 4천여 명이 밀집해 살고 있다. 이들은 왜 이런 방식의 생존을 지속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붕인섬은 일반적인 섬의 경우와 다른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주사회가 가지는 특징과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붕인섬이 점차 면적이 늘어나고 집을 짓기 위해 밀반침으로 사용된 것은 죽은 산호이다. 섬 주변에 원래부터 죽은 산호가 많지는 않았고, 정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 산호가 죽은 것이다. 산호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줄어들어서 점차 먼 곳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도 매년 30쌍이 결혼하고 집을 짓고 5~6명의 자식을 낳고 있다. 물론 와이파이가 있고 도시적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다. 바자우족이 바다 위 배에서 살거나 수상가옥에 사는 것, 그리고 섬에 정착해 사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붕인섬의 바자우족은 전체 바자우족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어쩌면 다른 바자우족들도 비슷한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붕인섬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하나의 문화전통으로 인식하고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붕인섬은 인근의 큰 섬과 육로로 연결돼 있어서 원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바다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한편으로 섬에 정착하여 집단 거주함으로써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바다 유목민들도 원래 어느 정도 집단을 형성하고 거주했지만 계속 이동했기에 섬 공간에 정착하면서 바뀌는 것과 생기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바꾸지 않고 지키려는 것과 기존에 (인식할 필요가) 없던 것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시도는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식하고 바꾸려고 시도해야 하는 것과 변화의 과정에서도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야트리 스피박은 『다른 여러 아시아』에서 사라져가는 ‘현재’를 막기 위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토착 정보원의 (불)가능한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문화를 읽어내고 가르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엇에 대한 대안인가? 서구의 이민자, 디아스포라가 엘리트 포스트식민적 문화연구자로서 스스로 서발턴 행세를 하면서 담론권력을 차지하고 남반구의 서발턴을 타자화하고 비가시화하면서 ‘현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다. 붕인섬의 주민들은 바다 유목민에서 정착했지만 바다를 떠나지 않으면서 다시 유목민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들은 대부분 국적이 없다. 출생증명서도 없고 신분증도 없기에 육지로 가서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어렵다. 말레이시아 사바주 해안가에 바자우족의 경우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는 이유는 거주지를 강제 철거하기도 했다. 봉인섬의 주민들도 언제 같은 상황에 내몰릴지 모른다. 이들에게 국적이거나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일뿐만 아니라 봉인섬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이 어떤 국가에 귀속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유목민의 삶을 선택했고, 섬에 정착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예측들은 어쩌면 자본주의적 욕망이 작동하는 체제와 이분법적 관계에서 도출된 것일 수 있다. 여기서 스피박은 “욕망의 비강제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비강제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감성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은 “온갖 부재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능력”으로 사유와 같으며, 인문학을 통한 초민족적 읽기능력(transnational literacy)의 함양을 통해서 욕망의 비강제적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욕망’이라는 하는 것이 의식과 이성의 억압을 받고 있는 주체의 이면에 존재하는 욕망이기에 강제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2. 관계성에서 다성성(多聲性)으로-‘접화군생’

우리는 다양한 것들과 마주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 관계성을 고유한 주체를 설명해주고 드러내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구축하고 변형시키는 핵심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포함해 비인간 사물들에 의해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천륜이라고 하는 가족도 다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고유하고 동질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부정할 수 없고 비인위적이고 자연적인 관계여서 이상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가족’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적 관점에서 그러한 고유하고 동질적인 것이 해체되고 관계적 구성물 또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을 다채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제주대학박물관에서 기획한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전시의 Part.3 ‘환상가족’에서 공동체를 관계를 맺고 해체하는 유동적 흐름속에서 다시 만들어진다는 전제에서 가족을 들여다 본다. 여기서 ‘환상’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동력”이다. 그래서 기존 가족을 해체하고, 선택가능한 이상적 관계 맺기를 상상하는 것을 통해 개인화와 고립이 심화되는 동시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함께’한다는 것은 관계를 전제하고, 이것은 접촉으로 이루어진다. 접촉(contact)의 라틴어 어원은 ‘tangere’인데, 이것은 감염병(contagion)의 어원이기도 하다.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감염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에 접촉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에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격리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들어

다 보면 ‘불필요한 접촉’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함께하기 위한 접촉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인 동시에 고통(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계성은 서양철학의 ‘존재론적 전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인간과 비인간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비인간 객체들이 가지는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 객체들의 행위성에 주목했다. 객체들과의 배치와 관계성 속에서 인간 주체의 의미를 재탐색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전회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비인간을 포함하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자를 평등하게 다루려는 평평한 존재론이다.

특히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주장한 브뤼노 라투르는 실재는 존재(being)가 아니라 생성(becoming)일 뿐이며, 고정된 본질 없이 관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속성이 변화하는 역동적 실체라고 보았다. 그런데 끊임없는 변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객체’가 존재한다는 것, 나아가 객체들이 갖는 차이에 대해서 감각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객체를 행위로 환원하며 사물 속에 숨은 어떤 심연도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존재론(OOO)에 기반한 것이다. 비인간 행위자들의 관계망, 관계와 접촉 이후의 행위성에만 주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비인간 객체를 인정하면서도 관계성만으로 환원하지 않고, 객체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공생적 존재론’을 주장한다. 객체지향존재론에서 핵심이 되는 객체는 ‘실재 객체’이고 이것은 사물의 통일성으로 물러나 있으며, 접근 가능한 감각 성질과의 융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매혹’이라고 하는데, “실재 객체가 감각 성질을 통해 드러나는 순사이 매혹의 순간이다.” 이러한 매혹을 ‘접화’(接化)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객체지향 존재론이 표방하는 존재론적 평등성은 ‘군생’(群生), 즉 모든 객체가 실재적인 것이 아니라 객체라는 의미에서 동등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접화의 접은 무한하게 다양한 객체 간의 관계성의 고리라고만 볼 수 없고, 접하고 있는 대상들 사이의 기계적으로 동등한 대칭성이 없다. 그리고 접하기 전과 접한 후에 대상에 질적차이가 발생한다. 접화군생의 접사상은 실재 객체로써 감각 성질을 통해 매혹하는 방식으로 우리곁에 있으며 만물과의 공생관계에서 비대칭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함께성’의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단순한 관계적 존재론을 넘어 공생적 존재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객체의 본질을 상정하는 것으로 존재론적 전회를 통해 극복하려고 했던 것과 닮아있다. 하지만 인간중심주의의 해체가 인간 존재의 부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맞다면, 인간과 비인간 사물의 평평한 존재론이 결국은 인간학으로서 다른 휴머니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접화군생’은 도가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동양사상의 유불선을 다 껴안고 있는 풍류(風流)의 핵심사상이며, 인간과 비인간 사물까지도 접하여 감화하고 나아가 진화해 해방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도가적 사유의 자연-무위의 도(道)와 그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 열린 섬 제주, 세계시민 섬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 - 제주 신(新) 이주 시기의 문제, 맹자의 여민(與民) 공치(共治)를 중심으로

박 주 영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편집간사

### 1. 들어가는 말

제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적 개발에서 2000년대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까지 이어진 관광화로 자본투자 증대와 대규모 개발로 급속한 양적 팽창을 경험했다. 이후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수도 같이 증가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대한 반발로, 제주의 낯선 자연경관과 인문환경을 ‘낭만의 배경’으로 하여 제주행 이동을 선택하는 ‘문화 이주’ 현상을 맞이했다.<sup>1)</sup> 또한 무사증 제도로 인해 체류 외국인과 투자 유입의 활성화 및 ‘노동 이주’를 배경으로 한 장·단기 이주자도 증가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제주는 최근 2023년 들어서 순이동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압도적인 순이동인구 증가가 있었으며, 10년 평균 약 10만 명의 전입인구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주 외국인 비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오늘날 제주를 과거 마을 중심의 켄당 사회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혼종되어 있는 ‘이주의 섬’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주와 혼종의 현상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된 세계화의 조류에 따라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주를 세계시민에게 열린 공간이라기에는 풀어가야 할 현안이 남아 있다. 이주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섬 문화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갈등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린 섬’ 제주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를 이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1) 김치완, 「모빌리티로 본 근현대 도시공간 제주의 인문지형 변동」, 『도시인문학연구』 16권1호, 2024, 289쪽

한다. 이때 국경·인종·종교·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참여 제도가 요구된다.

전국시대 사상가인 맹자는 계급사회에서도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心性)을 토대로 하여, 백성이 참여하는 여민(與民)의 국가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다국적, 다인종, 다양성의 시대로 규정되는 오늘날 강조되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민주적 참여제도와 일맥상통한다. 세계시민의식은 지역, 국가 및 세계 간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더 큰 공동체와 인류에 대한 소속감<sup>2)</sup>에서 비롯된다. 이는 맹자의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에 토대를 둔 성선(性善) 선언의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제주가 당면한 신(新) 이주 시기의 현안을 맹자의 여민과 공치 개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 2. 제주의 장소성과 신(新) 이주 시기의 현안

‘장소성’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인문환경을 포함하는 공간의 성격을 가리킨다. 제주의 장소성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제주의 인문환경을 포괄하는 복합적 의미의 공간 특성을 가리킨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의 장소성은 ‘섬’이라는 자연 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육지를 중심으로 한 인식에서는 섬의 장소성이 격절성, 폐쇄성, 낙후성 등으로 형상화되기 쉽다.<sup>3)</sup> 하지만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인식에서는 섬의 장소성이 국가 경계를 초월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진 개방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의 장소성은 바다로 막혀 고유한 문화적 특질을 가진 폐쇄성과 해로를 통해 교류하는 개방성 모두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근대 시대 제주(탐라)는 척박과 고립의 상징인 장소로, 유배지 또는 도피처로 여겨졌다.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지만 권력의 시선에서는 육지와는 동질성이 열은 통치의 대상이었다.<sup>4)</sup> 근현대에 제주는 일제강점기, 제주4·3, 한국전쟁 때마다 변방으로서 식민 수탈과 국가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오롯이 겪어낸 울분이 응축된 곳이었다. 이러한 억압과 소외의 역사에서 제주도민은 생존을 위한 연대와 상호부조의 연고 문화를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근대화 이후 제주는 교통의 발달과 1987년 민주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2000년대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과정을 거쳐 신이주 시기를 맞이하였고, 어느 때보다도

2) 김이삭,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세계시민의식 담론 분석」, 『현상과인식』 162호, 2025, 194쪽

3) 김치완, 「부재(不在)로 본 공간담론과 ‘치유 자원으로서 섬」, 『철학연구』 69집, 2024, 91쪽

4) 서영표, 「바다, 섬, 그리고 담합과 열림의 변증법-정주와 이주로 본 제주」, 『탐라문화』 79호, 2025

‘열린 섬’이 되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한 신이주 시기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요인에 따른 ‘노동 이주’와 도시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벗어나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환상으로 제주를 찾은 ‘문화 이주’ 등 두 가지 이주 유형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제주는 자본, 인구, 인프라가 급속도로 팽창했다.

이렇게 이주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도민 사회의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체감도가 낮은 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었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출현 당시 반(反) 난민 여론이 조성된 것을 비롯하여, 2025년 어린이 무료 버스 정책 외국인 등록 자녀 차별 논란<sup>5)</sup>, 2022년 색달동 야구인마을 외지인 패싱 논란<sup>6)</sup>, 2016년 공공기관 채용기준 타지인 차별<sup>7)</sup>, 제주 결혼이민자 차별·무시<sup>8)</sup>,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정책 대상 최하위<sup>9)</sup> 등이 빈발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 조명된 이러한 문제점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권위주의적이고, 연줄(권당)에 기댄 비민주적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sup>10)</sup>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제주 예멘 난민 출현 당시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반(反) 난민 여론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현안은 제주의 장소성에서 비롯된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주가 관광을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지가 아닌 노동 이주와 문화 이주를 배경으로 한 이주의 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민주적으로 열린’ 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 사익(私益)을 넘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의식 확립과 이에 대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다양성의 시대에 제주 주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인식 전환부터 제도 확립까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이주의 섬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교통카드 못 받은 아이들...제주 무료버스 차별 논란, <제주의소리>, 2025.4.25.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5956&utm\\_source](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5956&utm_source)

6) 이주민 "음식물처리시설 사업 주민협의 과정서 배제" 도 "관련 법률 미적용 시설, 마을운영 개입 곤란" 주민회 "배척한 적 없어", <제이누리>, 2022.01.19.

<https://www.jnuri.net/news/article.html?no=50814>

7) 공공기관 채용기준 '출생지 차별'...'저는 어디 출신입니까?', <헤드라인제주>, 2016.07.13.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766&utm\\_source](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766&utm_source)

8) 제주 결혼이주여성 '차별·무시' 여전...다양성 존중 '과제' <제주매일>, 2023.09.06.

[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687&utm\\_source](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687&utm_source)

9) "'이주노동자·성소수자는 남?'.. 도민 인권의식 '최하위'", <한라일보>, 2023.03.07.

[https://s1.ihalla.com/article.php?aid=1678171500739264073&page=62&utm\\_source](https://s1.ihalla.com/article.php?aid=1678171500739264073&page=62&utm_source)

10) 서영표, 「제주에서 사회학하기」, 『탐라문화』 54호, 2014, 94-95쪽

### 3. 인식의 전환과 정치적 실천

오늘날은 제주‘로의’ 이주가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근현대사에서는 제주‘로부터’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와 제주4·3 시기 제주인은 일본으로 많이 이주했고, 이주민으로서 소외된 경험이다. 따라서 원주민의 입장에서 과거 제주인의 이주 역사를 상기하면서 우리 곁의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이주민의 입장에서 제주를 관광과 휴양 목적의 단기 체류지가 아니라 제주의 장소성을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갖추고 있다.

각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편협한 사고는 갈등과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에 대해 공감을 가지는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한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은 맹자의 측은지심과 같은 것으로서, 다양성의 시대와 공간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건이다.

맹자 정치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단(四端)은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혼란기였던 전국시대에 정치지도자는 국가 경계를 확장하는 데 몰두하면서도, 국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맹자는 이러한 정치지도자에게 이익[利]을 추구하는 것은 편협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의로움[義]의 정치를 강조했다.<sup>11)</sup> 맹자는 의로운 정치가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與民)을 목표이자 수단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여민 정치는 왕도정치의 다른 이름이며, 기본 원칙이다. 군주와 인민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지도자는 리민(利民)을 내세우면서도 전쟁에 백성을 동원하였지만, 맹자는 여민이야말로 부국강병의 근본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sup>12)</sup>

여민(與民)의 근간은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벼운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한다.<sup>13)</sup>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정치, 곧 인재를 등용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백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sup>14)</sup>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11) 『孟子』, 「梁惠王上」: 王曰, 何以利吾國, 大夫曰, 何以利吾家, 士庶人曰, 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 而國危矣. 萬乘之國, 弑其君者, 必千乘之家, 千乘之國, 弑其君者, 必百乘之家, 萬取千焉, 千取百焉, 不爲不多矣, 苟爲後義而先利, 不奪不厭,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王亦曰, 仁義而已矣, 何必曰利.

12) 이순미, 「맹자의 리민(利民)과 여민(與民), 독락(獨樂)과 동락(同樂)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109집, 2022, 177쪽

13) 『孟子』, 「盡心下」: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14) 『孟子』, 「梁惠王下」: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然後, 察之, 見賢焉然後, 用之. 左右皆曰可殺, 勿聽, 諸大夫皆曰可殺, 勿聽, 國人皆曰可殺然後, 察之, 見可殺焉然後, 殺之. 故曰, 國人殺之也.

것이 맹자의 성선설이다. 백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백성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곧 선성(善性)을 갖추고 있음을 네 가지 마음을 들어 증명하려고 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주권자 서로의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미국에서 시발한 비토크라시(Vetocracy)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도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의 오작동 상태를 가리킨다. 거부권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비토크라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 곧 나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타자에 대한 반대로 담론장이 오작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견이 다른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가리킨다. 근본적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권한을 가진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선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때 민주주의는 오작동할 수밖에 없다.

비토크라시와 함께 오늘날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래 ‘통치’나 ‘관리’를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거버넌스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맹자의 성선설에서 확인되듯이 다양한 주체들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이다. 국적, 인종, 종교, 문화, 가치관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편성과 합리성을 갖춘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론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

## 4. 나오는 말

여민에 바탕을 둔 맹자의 정치철학은 인간다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덕치와 예치를 특징으로 한다.<sup>15)</sup> 이러한 점에서 그의 정치철학은 공치(共治)이며, 오늘날의 거버넌스에 해당한다. 거버넌스는 맹자가 말했듯이 인간 개개인에게 내재해 있는 선한 본성인 양심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선함을 고유한 정체성으로 삼고 인의(仁義)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15) 이승률, 「맹자의 공치 철학: 양심·전문성·문화권력·독립성·혁명성, 그리고 차등애」,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5권2호, 2016, 2쪽

계급사회에서 맹자는 주권자인 치자(治者)의 마음과 피치자인 백성이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주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정치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마음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하려는 마음[與民同樂]이며, 백성을 보호하려는 마음[保民]이다. 이것이 곧 ‘차마 참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不忍人之心]’이다. 이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왕도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민주 사회에서는 시민이 주권자로서 ‘차마 참지 못하는 사람의 정치[不忍人之政]’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권위주의나 연고주의가 개입된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주권 의사결정의 구조를 만드는 책임은 시민에게 있다.

지금의 제주, 앞으로의 제주는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잘 어우러지는 ‘민주적으로 열린 섬’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배경의 주권자가 늘어날수록 보편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다양성의 존중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주의 섬’ 제주의 장소성은 지속적으로 대리보충 된다. 따라서 보편성과 동일성에 기반을 둔 근대 국민국가질서에서 다양성과 보편 인권, 존엄과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현안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맹자의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성선의 선언은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고 그렇게 해야한다는 책임으로, 여민은 ‘열린 섬’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공치의 방법론이자 추구할 목표로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16) 위의 글, 5쪽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20분과

한국유라시아연구원

[특별분과] 강화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인천 영종도 일대의 신석기시대 제천유적

조채영

한국유라시아연구원

강화도와 요동지방 고인돌의 비교

유태용

청구고고연구원

강화 마니산 참성단제천의 성격

석혜인

한국유라시아연구원

대몽항쟁기 사상계의 중심, 수선사와 선원사

소대봉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고려시대 강화 보문사의 관음신앙

신미아

동국대학교

강화도 소재 돈대의 기본구조 및 시설에 대한  
건축적 분석

이병건

동원대학교

강화지역 기독교 문화의 유입과 변용

박아림

숙명여자대학교

# 인천 영종도 일대의 신석기시대 제천유적

조 채 영 | 한국유라시아연구원

## I. 머릿말

선도문화는 한국사의 시원에서부터 존재한 한국 민족문화의 근원 사상이다. 존재의 본질을 ‘기(氣)’로 인식,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氣)’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기(氣)철학적 사고에 바탕한다. 기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에 ‘생명력’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생명문화’라고도 한다. 생명문화는 인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유적, 유물 속에서 생명표상 등으로 드러나는데, 주로 생사관을 확인할 수 있는 무덤 등에서 잘 드러나 있다.

20세기 고고학의 발달은 후기 구석기시대 선사인들의 생사관을 알 수 있는 유적·유물의 발굴과 해석을 불러왔다. 특히 시베리아 알타이지역 데니소바(Denisova) 유적에서 출토된 3만 8천 년 전 골제, 석제 기물들에 나타난 빙하기 인류의 생명표상은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가진 생명사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시간이 흘러 후기 구석기시대인 기원전 22000~기원전 13000년경의 말타(Mal'ta)·부렛(Buret) 유적에서는 벽류, 모신상과 신수상 등이 출토되어 당시 인류가 그들이 가진 생명사상을 기물로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말타 부렛유적에 나타난 후기 구석기시대 인류의 생명표상은 기원전 11000년경 초기 신석기시대 동북아시아 지역에 이르러 옥기를 가공하고 다루는 옥기문화로 이어진다. 이 시기에는 형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정형 옥벽이 출토되는 등 조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과도기적 옥기가 나타났다. 이후 기원전 7000년경 흑수백산 지구 삼강평원 일대 소남산문화에 이르러 수준 높은 옥기문화로 드러났다.<sup>1)</sup> 이즈음에 이르러 생명

1) 정경희, "흑수백산지구 소남산문화 '옥벽류(벽.환.결)'의 요서지구 홍릉와문화 '결'로의 전파:유라시아 신석기 선도제천문화의 계승과 확산 사례," 유라시아문화 5.- (2021): 115-192.

문화는 한 층 더 발달하여 사람의 근원을 기(생명력)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기’를 밝히고 깨워내어 우주 만물의 ‘기’와 합치시키는 수행(修行)의 의미를 담은 ‘제천(祭天)’유적과 유물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제천문화 전통에서 환호, 석권, 무저통형기 등을 무덤에 두른 경우, 이는 곧 무덤이 제단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단 구축방식 중 하나이다. 따라서 소남산 유적은 단과 총이 결합되어 있는 단총결합형 제천시설로 보아야 한다. 환호는 방어목적시설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거나 산 정상부 또는 구릉의 정상부에 제천시설이나 신앙대상물을 둘러싼 형태로 축조되고, 유구 내에서 유물이 훼손되어 발견이 되는 한편 유적 내 공반되어 출토되는 유물이 의기(儀器)일 경우는 제천용 환호시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sup>2)</sup> 이때 환호는 제천시설을 보호하고 성속(聖俗)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남산 유적은 동북아 선도제천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환호를 두른 구릉성 적석단총’의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제천유적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한반도의 제천유적은 중심 제천시설이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3층원단·적석단·선돌·나무숫대·제천사·고인돌류 등이 그것이다.<sup>3)</sup> 그 중에서도 한반도 중부 서해안지역은 1954년 국립박물관에 의해 서해도서지역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여 간헐적인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통하여 신석기시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유적이 알려졌다. 특히 1994년 이후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지역 개발로 인한 대규모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영종도 일대의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sup>4)</sup>

영종도 내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을 비롯하여 공항건설을 위하여 연결된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와 그 주변의 시도, 신도, 영흥도, 자월도, 대이작도 등 도서지역, 오이도, 안산 신길동, 시흥 능곡동 등 내륙 해안지역에 인접한 지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대체로 주거지 유적, 패총 유적, 야외노지 관련 유적 등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연구의 방향성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야외노지 관련 유적은 주로 적석유구(또는 집석유구)의 형태를 띠고 있어 적석유구는 대체로 야외노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유적들 중에서도 당시 주민들의 사상성이 살펴볼 수 있는 제천유적의 요소를 살

2) 河文植. "청동기시대 제의 유적의 몇 예." 문화사학 0.27 (2007): 61-77.; 김권구.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環溝)에 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6.- (2012): 51-76.; 정경희. "백두산 서편의 제천유적과 B.C.4000년~A.D.600년경 요동·요서·한반도의 '환호'를 두른 구릉성 제천시설'에 나타난 맥족의 선도제천문화권." 고조선단군학 40.- (2019): 73-139.

3) 정경희. "백두산 서편의 제천유적과 B.C.4000년~A.D.600년경 요동·요서·한반도의 '환호'를 두른 구릉성 제천시설'에 나타난 맥족의 선도제천문화권." 고조선단군학 40.- (2019): 73-139.

4) 공민규. "중부 서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의 입지 고찰." 숭실사학 25.- (2010): 5-44.

펴보고자 한다. 서해도서지역 중 특히 영종도 일대에서 이러한 제천유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영종도의 는들유적 B지구와 시도패총 중 석층 유구가 그것이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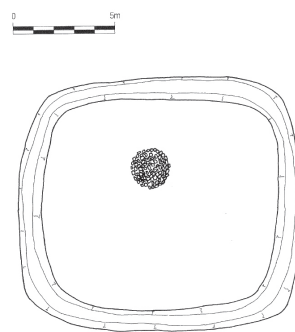
## II. 는들 유적 B지구의 현황과 특징

는들유적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 155번지 일대이다. 영종도 남서 지역으로, 백운산에서 떨어진 해발 45~50m 정도의 낮은 구릉 위에 입지하고 있다. 공항 건설을 위한 매립 이전에는 바다에 접해있었다. 삼목도 II 유적과 시도, 강화도, 동막동 등 신석기시대 유적을 마주하고 있다. 구릉의 남서사면을 A지구, 구릉 정상부 평탄면을 B지구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는데 A지구에서는 원형적석유구 1기, 주거지 1기가, B지구에서는 원형적석유구 1기와 이를 둘러싼 ‘回’자형 방형구 1기, 소형 수혈 유구 9기가 출토되었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B지구에서 출토된 원형적석유구 및 ‘回’자형 방형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B지구는 영종도 중앙에서 서쪽 해안으로 떨어진 구릉 사면의 평탄면(해발 약 40m)으로 삼목도, 신도, 시도, 강화도 등 인근의 섬들이 한눈에 조망되는 곳으로 발굴 당시에는 고추와 옥수수를 경작하던 밭으로 이용되던 곳이다.



영종도 는들유적 위치



B지구 유구 배치도

원형적석유구는 직경 약 2m로 이 적석유구 주위에 12×12m 가량의 ‘回’자형 유구가 둘러져 있었다. 원형의 적석유구는 10×10cm 가량의 작은 할석들이 점성이 강한 점토와 함께 덮혀 있었으며, 유구의 바닥면은 주변보다 최대 14cm가량 낮고 불을 맞은 흔적이 있었다. A지구의 적석유구에 비교하였을때 규모가 훨씬 컸으며, 할석과 점토 사이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이 상당량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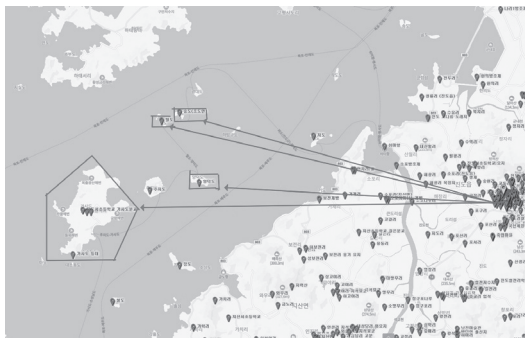
‘回’자형 방형구는 너비 0.9m, 최대 깊이 45cm의 단면 U자형 도랑으로 바닥에 입자가 고운 검은 니토(泥土)가 있어 어느 정도 물이 고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구 안의 니토에서는 다량의 빗

살무니토기편이 출토되었으며 그 외 별다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북 12.4m, 동서 12.7m 가량의 말각방형이다. ‘回’자형 방형구 북쪽으로 10여m 되는 지점에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소형 수혈(豎穴)9기에서도 많은 양의 빗살무늬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원형적석유구와 ‘回’자형 방형구의 관계 및 용도에 대하여 발굴보고서에서는 원형적석유구는 불을 지폈던 노지이며, ‘回’자형 방형구는 생활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回’자형 방형구 내 노지시설인 원형적석유구를 중심으로 한 신성공간으로 일련의 제의(祭儀)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적시하였다.<sup>5)</sup>

### Ⅲ. 시도패총 석총 유구의 현황과 특징

시도는 영종도 북쪽에 위치하며, 1916년 일본인 학자 도리이류조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1957년 국립박물관, 1966년 서울대학교에 의하여 시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970년 2차례에 걸친 발굴을 진행하여 2개소의 신석기시대 패총과 1개소의 원삼국시대 패총(보고서명 : 김해식토기 패총), 석총과 3지구 패총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시도패총 석총유구 위치



석총 유구

본고에서 살펴볼 석총은 시도 최북단의 구릉 위이다. 이 석총이 있는 구릉 위에서 북쪽으로 단애를 이루어 그대로 바다와 연결된다. 남쪽으로 400m 떨어진 곳에 제 1지구 패총있다. 석총이 발견된 구릉 위는 비교적 평탄한 면을 이루고 있으며, 석총 외에 다른 주거지나 유구의 흔적은 없다.

석총은 직경 약 10-15cm의 할석을 쌓아 조성하였으며, 가장자리에는 직경 25cm의 큰 돌을 둘

5) 서울대학교. "영종도 는들 신석기유적: 신공항고속도로건설지역 발굴조사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1999.

렸다. 장축이 165cm, 단축이 145cm로서 정원한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적석은 생토층에서 약 20cm 정도 높이로 쌓았으며, 중앙부는 약간 함몰되어 있다. 적석 사이에는 흑색 부식토와 숯이 많이 박혀있었는데 특히 동서 단면에 더욱 많이 쌓여있었다. 또한 적석 사이에서 다량의 빗살무늬토 기편이 함께 출토되었다.

적석을 제거하면 깊이 30cm, 장축 150cm, 단축 120cm 정도 크기의 원형 토광이 있다. 토광의 바닥은 고르지 못하며, 많은 숲과 유기질이 상당히 포함되어있는 흑색토가 깔려 있었으며, 토광 바깥쪽의 생토층 위에 놓여 있는 돌레돌과 생토층 사이에도 적지 않은 양의 숯이 깔려 있었다.

이런 석층의 성격에 대하여 크게 무덤으로 보는 견해와 야외조리시설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적석 사이에 다량의 빗살무늬 토기편과 다량의 숯이 출토되었고, 적석의 중앙이 함몰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의 무덤으로 보았다. 토광을 파고 시체를 넣은 후 토광 위에 나무를 걸쳐 놓고 그 위에 적석을 한 구조로 본 것이다.<sup>6)</sup> 그 외에도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매장유구 중 적석유구가 무덤으로 사용된 예가 있으며 시도 석층 역시 마찬가지로 적석이 무덤으로 사용된 예로, 특히 패총과 떨어진 구릉상에 위치한 점이 무덤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sup>7)</sup>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석무덤은 대체로 깊이않은 반원형 굴착이 이루어진 묘광과 집석 또는 부석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시도 석층은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 묘광을 판 후 그 안에 석제를 적석하는 형태로, 돌레돌을 두른 것이 특징으로 보기도 한다.<sup>8)</sup> 야외조리시설로 보는 견해는 1986년 김원용이 암사동 유적의 야외노지와 비교하여 시도패총의 적석유구를 야외조리시설로 본 이후 일반적인 의견을 이루고 있다.<sup>9)</sup>

#### IV. 맺음말

느들유적 B지구에서는 원형적석유구와 그를 둘러싼 '回'자형 방형구, 용도를 알 수 없는 소형 수혈유구 9기가 출토되었다. 원형적석유구는 불을 맞은 흔적과 함께 다량의 빗살무늬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같은 느들 유적 내 A지구의 원형적석유구와는 다른 출토정황을 보이고 있다. '回'자형

6) 국립박물관. "矢島貝塚." 서울: 國立博物館, 1970.

7) 任鶴鐘. "新石器時代の 무덤." 한국신석기연구 -15 (2008): 65-115.

8) 유태용. "한국 신석기시대 적석무덤의 검토." 유라시아문화 7.- (2022): 155-210.

9) 김원용. "韓國考古學概說." 서울: 一志社, 1983.; 소상영. '시도패총의 재검토', "牛行 李相吉 教授 追慕論文集." 서울: 진인진, 2015: 60-76.; 홍은경. "新石器時代 集石遺構의 機能에 대한 批判的 檢討." 한국고고학보 81.- (2011): 245-268.

방형구에서는 물에 잠긴 흔적과 함께 역시 다량의 빗살무늬 토기편 출토되었다. 는들유적 B지구는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형적석유구를 중심으로 '回'자형으로 호를 둘렀다는 점에서 '환호를 두른 구릉성 제천시설'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원형적석유구는 중심제천시설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적석사이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공반되어 출토되었다는 점, 불을 맞은 흔적을 보인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回'자형 방형구는 중심제천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어 시설로 산 정상부 또는 구릉의 정상부에 제천시설이나 신앙대상물을 둘러싼 형태로 축조되고, 유구 내에서 유물이 훼손되어 발견이 되는 한편 유적 내 공반되어 출토되는 유물이 의기(儀器)일 경우는 제천용 환호시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는들유적 B지구에서 출토된 유적의 성격은 제천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시도패총 유적 중 석총유구의 성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석총은 시도에서 가장 북쪽 지역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였으며, 주변은 해안 단애로 바다에 접해있다. 신석기시대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제천단이 주로 위치하는 구릉 정상부 평탄면으로 석총은 중심제천시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적석 내부의 다량의 토기편과 숯, 불 맞은 흔적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석총이 무덤으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나, 제단이 무덤을 겸하는 단총결합의 구조는 초기 신석기시대 이래 동북아에서 흔히 나타나는 제천유적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영종도 는들유적 B지구, 시도 석총 등은 동북아시아 제천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 제천유적이다. 다만, 지면의 한계와 연구의 미진함으로 행간의 여백이 많다. 추후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별고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 강화도와 요동지방 고인돌의 비교

유 태 용 | 청구고고연구원

## I. 머리말

한국의 고인돌은 한국의 고대문화가 원시적 평등사회에서 국가와 같이 조직화된 계층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의 중간단계에 있는 고고학적 유적이다. 특히, 강화도를 포함한 한반도의 고인돌은 한국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가운데 하나이며, 청동기시대의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고고학적 기념물이기도 하다. 강화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의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교차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강화도는 선사시대 이래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지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강화도에서 조사된 고인돌은 강화도에 족장사회라는 정치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고고학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요동지방 고인돌의 지리적 분포는 한민족 초기국가들인 고조선·고구려·부여 등의 영역 범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민족의 원류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요동지방 고인돌의 이해는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한국의 고인돌이 한강을 경계로 남으로 갈수록 탁자식 고인돌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반식이나 개석식 고인돌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강 하류에 위치한 강화도의 자연지리적 위치는 바로 한반도의 문화 지리적으로 중간지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요동지방 고인돌의 경우 서쪽으로 요하를 넘지 못하며, 북쪽으로는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제1 송화강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민족에게 있어서 정치체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강화도와 요동지방의 고인돌 축조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검토를 진행하고, 이들 고인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후 한민족의 고대국가로의 진입 전야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II. 고인들의 분포와 입지 비교

강화도에서 보고된 고인들은 5개 지역군 39개 지점에서 모두 176기<sup>1)</sup>가 조사되다. 이를 지리적 분포에 따른 지역군별로 살펴보면, 먼저 1지역군의 송해면, 강화읍, 하점면 일부(하점성당 동쪽)를 포함한 동쪽지역 10개 지점에서 42기(23.8%)의 고인들이 조사되었고, 2지역군의 내가면과 하점면 일부(하점성당 서쪽)를 포함한 서쪽지역 20개 지점에서 96기(54.5%)가 분포하며, 3지역군의 양사면 일대 7개 지점에서 32기(18.1%)가 조사되었다. 4지역군의 양도면 일대 1개 지점에서 5기(2.8%)가 분포하며, 5지역군의 화도면 동막리 1개 지점에서 1기(0.5%)가 알려져 있다.



〈도면 1〉 강화도 고인들의 분포현황

요동지방에서 보고된 고인들은 4개 지역군에서 모두 105곳 430기이다. 요동지방 고인들은 밀집 분포된 범위에 따라 네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지역군은 천산산맥 이남의 요남지역(遼南

1) 본 통계 수치는 현재까지 학술조사보고서나 단행본을 통해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만일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또는 보고되었더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본 통계치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地域), 2지역군은 혼하 상류 유역의 무순(撫順)·개원(開原) 지역, 3지역군은 혼강에서 삼통하를 거쳐 휘발하로 이어지는 통화(通化)·매하구(梅河口) 지역, 그리고 4지역군은 제2송화강 상류에서 흠마하(欽馬河) 유역까지 이어지는 화전(樺甸)·반석(磐石) 지역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강화도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의 축조입지는 산마루, 산능선, 산하사면, 평지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화도의 고인돌 축조는 강화도라는 자연 지리적 조건이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요동지방의 고인돌은 요남지역 고인돌은 주로 높지 않은 산능선이나 산하의 평지에 입지하는 반면, 요동 서북부나 동북부의 고인돌은 산마루나 산능선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고인돌은 산 아래의 평지든 아니면 산능선이나 산마루에 위치하든 간에 주변의 조망이 매우 좋은 지점을 선택해서 축조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요동지방 고인돌의 지리적 위치는 큰 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위치하고 있는데, 산지형은 산마루·산능선·구릉지·산비탈·산하사면(산기슭) 등에 축조된 경우이고, 대지형은 산하의 대지나 강안의 충적지 또는 이들 산하 대지와 충적지 사이에 형성된 평지 등으로 구분된다.

### Ⅲ. 고인돌의 구조와 형식 비교

고인돌은 개석과 지석에 대형 석재를 이용하여 시신(屍身)을 안치할 수 있는 묘실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거석문화의 전통에 속하는 묘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무덤으로서 고인돌은 매장주체부인 묘실을 조성하는 구조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고인돌의 가장 큰 특징은 지상에 드러난 커다란 개석(또는 상석)과 支石, 積石, 墓室 등으로 다양한 구성된 하부구조로 되어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묘실을 구성하는 하부구조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구조적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강화도 고인돌의 구조적 특성에서 개석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부정장방형, 방형, 타원형, 세장방형 등으로 나타나며, 암질은 대개 화강편마암(Granite Gneiss)이다. 고인돌의 하부구조는 구조나 형식에 따라 다른데, 개석식 고인돌은 지하에 매장주체부인 묘실을 조성하는 방식이며, 탁자식은 지상에 지석을 장방형으로 세워 묘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요동지방 고인돌은 크게 지상의 거대한 대형 개석과 이를 떠받치는 지석으로 하부구조인 묘실을 구성한 탁자식 고인돌과 대형 개석 아래에 특별한 지석이 없이 토광·석관·석곽 등과 같은 묘실을 구성하는 개석식 고인돌로 구분된다. 탁자식 고인돌은 4매의 지석을 이용하여 지상에 상자 형태로 매장주체부인 묘실을 구성한 것이며, 개석식 고인돌은 대형 판석이나 괴석을 개석으로 사용하고, 개석 아래에는 지석 같은 시설이 없이 매장주체부인 묘실을 지하에 구성하며, 묘실은 지역에 따라 석관이나 석곽 또는 토광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 IV. 출토유물의 종류와 고인돌 편년

동북아의 고인돌에서는 유물들에는 토기류, 석기류, 청동기류, 옥기류, 골각기류 등이 출토되고 있다. 제천 황석리에서와 같이 고인돌에서 인골이 조사되기도 한다. 강화도 고인돌의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은 석기류, 토기류, 옥기류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석기류에는 마제석촉, 마제석검, 마제석부, 환상석부, 마제석착, 관옥, 반월형석도, 석검(돌낫), 갈판, 방추차 등이 있다. 토기류에는 빗살무늬토기, 팽이형토기, 홍도편, 무문토기 등이 있다. 요동지방의 고인돌에는 청동기류, 철제류, 토기류, 석기류, 옥기류, 동물뼈 등이 있다. 토기류에는 미송리형토기, 공귀리형토기, 쌍방형 심발형토기, 정가와자형 장경호, 동산형 단경호, 홍도, 두형토기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豆形罐, 豆形壺, 夾砂紅褐色土器片, 夾砂黑褐色土器片, 黑色磨研土器片 등이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토제품으로는 침상기·방추차·鼎足片 등이 출토되었다. 금속기류는 철기류와 청동기류 등이 있다. 철기류는 철도자, 철분(鐵鏝), 철검(鐵鑕) 등이 있고, 청동기류는 비파형동검·세형동검·청동촉·청동도자 등 무기류, 동경·청동용수철·십자형동기 등 생활용구류, 그리고 청동팔찌·청동고리·청동반지·청동관식·청동단추 등 장신구류 등이 있다. 석기류는 마제석부·마제석분·반월형석도·갈돌·砥石·有孔石器·달도끼·방추차·침상기·원형석기·돌잔(石杯)·석범(石範)·석구(石球)·석추(石墜)·강돌 등이 있다. 옥기류에는 옥부(玉斧)·옥착(玉鑿)·관옥(管玉)·식옥(飾玉) 등이 있다. 고인돌에서 출토된 옥기류는 종류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하여 출토 수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옥의 용도가 관옥이나 식옥과 같이 많은 수량이 요구되는 장식품 등에 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골기류는 조골(鳥骨)·수골(獸骨)·관골(管骨)·골추(骨錐) 등 모두 4종이다.

고인돌의 편년은 강화도 고인돌은 관련 주거지에서 발굴된 팽이형토기편이 고려된다. 팽이형토기는 서북한 지역의 청천강유역, 대동강유역, 그리고 황해도 지방 등지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나 고인돌 등에서 널리 출토된다. 강화도 삼거리 주거지에서 출토된 팽이형토기의 형태가 석교리(石橋里)와 금탄리(金灘里)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를 토대로 강화도 고인돌은 B.C. 8~7세기 경으로 편년된다. 요동지방 고인돌의 축조시기는 허옥림은 요남지구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석기나 청동기의 편년을 고려하여 대다수의 대석봉(大石棚)과 중석봉(中石棚)은 B.C. 15~11C에 축조되었고, 소석봉(小石棚)은 중석봉 말기인 11~5C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서황산둔 고인돌에서 각종 청동기류와 함께 철도자(鐵刀子)·철분(鐵鏝)·철검(鐵鑕)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들 철제품을 토대로 요동지방 고인돌들 가운데 가장 늦은 초기철기시대에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강화도와 요동지방 고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강화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의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교차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요동 지방 고인들은 서쪽으로 요하를 넘지 못하며, 북쪽으로는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제1 송화강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지리적인 북방 한계선을 보여준다. 강화도에서 보고된 고인들은 5개 지역군 39개 지점에서 모두 176기가 조사된다. 그런데 강화도 지역의 고인돌 대부분은 섬의 북쪽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요동지방에서 보고된 고인돌은 4개 지역군에서 모두 105곳 430기이다. 그런데 요동지방 고인돌은 지리적 공간의 넓이나 지형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요동지방 남단의 벽류하 유역과 동남쪽의 대양하 유역이나 요녕성의 혼하 상류 지역에서 길림성의 휘발하 상류에 이르는 동북 산간 분지에 매우 제한적이고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고인돌 입지는 강화도 고인돌은 산마루, 산능선, 산하사면, 평지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산하사면의 입지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대체로 평지나 산마루보다는 지대가 완만하면서도 조망하기 좋은 위치가 축조 입지로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인돌의 형식은 강화도 고인돌은 탁자식과 개석식 등 2가지 형식이 조사되었고, 요동지방 고인돌도 석봉(탁자식)과 대석개묘(개석식) 등 2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다만 요동지방 고인돌은 크기나 하부구조 형태에 따라 탁자식은 대석봉, 중석봉, 소석봉 등으로 세분하고, 개석식은 하부벽체에 따라 생토, 생토+석재, 수혈 암반 등으로 세분한다. 고인돌 출토유물은 강화도 고인돌에서는 석기류, 토기류, 옥기류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토기류에서 팽이형토기와 홍도편이 출토된다. 요동지방 고인돌의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유물은 청동기류, 철제류, 토기류, 석기류, 옥기류, 동물뼈 등이 있는데, 이 중 철기류는 화전·반석지역의 개석식 고인돌에서만 출토되며, 토기류에는 미송리형토기, 공귀리형토기, 쌍방형 심발형토기, 정가와자형 장경호, 동산형 단경호, 홍도, 두형토기 등이 있다. 고인돌 축조연대에서 동북 아시아는 유럽보다는 늦고 동남 아시아나 인도쪽 보다는 약간 빠른 편이다. 강화도 고인돌의 축조는 강화도에서 출토된 팽이형토기의 구연부와 저부 형태가 석교리와 금탄리 주거지 출토 팽이형토기(B.C. 10~9세기 경)와 매우 유사하여 전기 청동기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요동지방 고인돌의 축조는 대개 B.C. 16~14C 전후로 보고 있고, 철제품이 출토되는 수혈암반식 서황산둔 고인돌은 가장 늦은 시기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 金載元·尹武炳, 1993, 『韓國支石墓研究』,  
 도유호, 1959, 「조선헌석문화연구」, 『문화유산』 59-2.  
 俞泰勇, 『韓國 支石墓 研究』, 2003.  
 李亨求, 1992, 『江華島 고인돌무덤(고인돌) 調査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許玉林, 1994, 『遼東半島石棚』, 遼寧科學技術出版社.  
 三上次男, 1961, 『滿鮮原始墳墓の研究』, 吉川弘文館.



# 강화 마니산 참성단제천의 신격

석 혜 인 | 한국유라시아연구원

## I. 머리말

한국인의 오랜 전통의 하나로 제천을 들 수 있다. 제천을 가장 간단히 말하면 하늘을 만나기 위해 하늘에 올리는 수행의례이다. 이런 의례를 통해 인간 내면에 있는 밝음[광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국선도에서는 이를 ‘밝문화·광명문화’라고 한다. ‘밝음’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물로서의 밝음이나 해·달 등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에너지로서의 ‘밝음’을 의미한다. 곧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밝음을 온전히 깨어나게 하기 위한 수행으로 제천을 한다. 한국인들은 상고시기 이래 제천을 주로 하늘과 가까운 산 정상부에서 행해 왔다. 산에 생명에너지, 곧 기(氣)가 가장 왕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선도는 근원적 생명력을 기에너지로 바라보는 기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선도기학에 서는 존재의 본질이자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에너지를 ‘一(一氣)’로 보고, ‘일(일기)’을 이루고 있는 세 차원으로 天·地·人 三元, 곧 ‘三(三氣)’를 제시한다. 존재의 본질 ‘일(일기)’와 천·지·인 삼원 ‘삼(삼기)’는 불가분리성을 띠므로 ‘일·삼’, ‘일기·삼기’로 표현한다. 한민족은 오랜 역사 전통에서 ‘일·삼’, ‘일기·삼기’를 주로 ‘삼신하느님’이라는 친근하고도 인격화된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곧 ‘일’을 ‘하느님(일신)’으로, ‘삼’을 ‘삼신’으로 인격화하되 이를 분리하지 않고 ‘삼신하느님’이라 칭하여 왔다.<sup>1)</sup> 삼신하느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밝고 신령스런 존재로서 모든 창조의 과정을 주관하는 창조의 주체이다. 창조의 주체인 창조주의 또다른 이름이 『부도지』에 등장하는 ‘마고’이다. ‘

1) ‘일·삼’, ‘일기·삼기’, ‘삼신하느님’, ‘마고’ 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정경희, 「『천부경』·『삼일신고』를 통해 본 한국선도의 일·삼·구론」, 『법한철학』44, 2007 ; 「한국선도의 ‘삼신하느님」, 『도교문화연구』26, 2007 ; 「『부도지』에 나타난 한국선도의 일·삼론」, 『선도문화』2, 2007.

마고'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생명에너지이다. 삼신하느님이 마고이고 마고가 삼신하느님이기에 '마고삼신'이라고도 표현한다.<sup>2)</sup> 그러므로 선도제천의 신격이 '일기·삼기, 삼신하느님, 마고삼신'이 된다. 본고에서는 통칭 '마고삼신'이라 한다.

원래 제천은 본질적으로 천인합일·신인합일을 이루기 위한 수행문화의 일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행문화의 한편으로 신앙의 측면으로도 드러나게 되었다. 단군조선의 와해 이후 유·불·도 외래 삼교의 유입으로 선도제천문화가 약화되자 제천의 수행적인 측면은 약화되고 점차 신앙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생명에너지인 '일기·삼기'의 의인화·인격화된 모습이 삼신하느님 곧 '마고삼신'인데, 이 마고삼신에 대한 경배와 믿음은 수행력이 약화되면 신앙화되기가 매우 쉽다. 제천이 그 본질을 잃고 신앙화된 것이 이른바 천신신앙·산신신앙이 되겠다. 실제로 사람들의 내면에는 제천수행적 측면과 천신신앙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천의 신격이 하늘에 있다고 믿으면 천신, 산에 내려오면 산신이다. 제천을 올리는 제천산에 마고삼신이 내려와서 산에 좌정하면 여산신이 된다. 생명에너지 마고가 지닌 창조성으로 인해 마고삼신은 여성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산에 내려와 여산신이 된 마고삼신은 주로 한어미[대모·성모·신모], 곧 할미신앙의 형태로 나타난다. 마고삼신이 '마고할미·삼신할미·천왕할미' 등으로 불리면서 제천산의 '여산신'이 되고 민간신앙의 대표 신격으로 자리잡았다. 또는 무속화되어 무속신이 되기도 하였다. 한어미(할미) 곧 성모가 된 마고삼신은 주로 백산성모·백의성모의 단계를 거치면서 불교와 습합되어 백의관음으로 신앙화되기도 하였다. 마고제천의 주관자였던 환웅은 문수보살이 되어 문수신앙화되었다.<sup>3)</sup> 오늘날 민간신앙화된 성모나 할미, 또는 여산신의 원류는 '마고삼신'이 되겠고, 장군이나 할아버, 또는 남산신의 원류는 환웅으로 대표되는 '삼성'이 되겠다. 이러한 민속화·무속화된 여산신·남산신 형태는 한국의 제천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일찍이 손진태(1934)가 '지금의 산신은 호랑이를 탄 남성신 곧 기호백발노인(騎虎白髮老人)이지만 고대의 산신은 여성신이었다'<sup>4)</sup>는 탁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고대의 산신은 여성신이었는데 지금은 남성신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김영수(1939)도 '우리나라 산신의 정체는 하늘에 있으면 천왕, 산에 내려오면 산왕이다'<sup>5)</sup>라고 하여 천신이 산에 내려오면 산왕, 곧 산신이 된

2) 석상순, 『한국의 '마고' 전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9~107쪽.

3) 정경희, 「중국 요하문명론의 장백산문화론으로의 확대와 백두산의 '선도제천' 전통」, 『선도문화』24, 2018, 80~87쪽.

4) 손진태, 「조선 고대 산신의 성에 취하여」, 『진단학보』1, 1934, 147~149쪽.

5) 김영수, 「지리산 성모사에 취하여」, 『진단학보』11, 1939, 135~170쪽.

다고 설파하였다.

이에 필자는 고대에는 하늘에 여성천신(곧 마고삼신)이 있었고, 이 여성천신이 산으로 내려오면 여성산신(곧 마고할미·삼신할미·천왕할미)이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여성산신이 남성산신(곧 기호백발노인)이 된다. 이 여성산신·남성산신의 원류는 모두 ‘마고삼신’이 된다고 보았다.

현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제천산으로 백두산, 태백산, 마니산, 지리산 등을 들 수 있겠다. 백두산 제천의 여성 신격으로 등장한 웅녀신, 백의성모, 백의관음, 삼선녀 등은 모두 ‘마고삼신’을 원류로 하고 있고, 태백산과 지리산의 경우도 제천신격은 마고삼신을 원류로 하는 여성신격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대표 제천산의 하나인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제천의 경우 제천 신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참성단제천의 여성 신격

동북아 흑수백산지구의 으뜸산[祖宗山, 聖山, 靈山]<sup>6)</sup>은 백두산이다. 백두산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뻗어내린 중심줄기가 백두대간이다.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면 제천산이 많다. 전통적으로 제천시설은 하늘과 가까우면서 사방을 조망하기 좋은 구릉성 산의 정상부에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름하여 ‘(환호를 두른) 구릉성 제천시설’<sup>7)</sup>이다.

천·천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인 산 정상을 찾게 된다. 현전하는 제천 유적들도 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장에서는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제천의 제천 신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표 제천시설 참성단이 있는 곳의 산이름은 강화도 마니산·마리산이다. 마니산(摩尼山)·마리산(摩璃山, 摩利山)의 옛 이름은 ‘두악(頭嶽)·두산(頭山)’ 곧 ‘머리산’이다. 북애자는 강화도(갑비고차)의 ‘마니·마리’를 ‘두악·두산(頭嶽·頭山)’으로 해석하여 ‘머리산’이라 하고 강화도에서 제천하는 곳이 ‘두악’이라고 했다.<sup>8)</sup>

마니산 곧 머리산에서 선인들이 제천하였다는 기록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6) 김정배·이서영 외,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0, 15쪽, 35쪽.

7) 정경희, 『백두산문명과 한민족의 형성』, 만권당, 2020, 211~216쪽 : 김권구,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에 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76, 2012 참조.

8) 『규원사화』 「단군기」, 東方諸山 有馬耳摩尼等山 俗人并以摩利呼之 曾不相別 蓋馬耳摩尼并出於頭字之意也 … 而馬耳摩尼之爲頭嶽或頭山之訛尤可辨矣 太白之一名曰白頭 甲比古次之祭天處曰頭嶽 此非檀君祭天必隨頭名之山也 乃檀君祭天處必成頭名之山也 蓋頭字最上或元首之稱也 白頭爲東方諸山之宗 而又時東人始降之地 兼復元首檀君恒行祭天禮于其山 當時之人名之曰頭山也必矣 而甲比古次之頭嶽亦不出於此外也 참조.

『단군세기』에 단군왕검 시기에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삼랑성을 혈구에 건설하고 제천단을 마리산에 쌓았는데 이것이 지금의 참성단이라고 하였다.<sup>9)</sup> 『태백일사』에 단군왕검이 친히 마리산에 거동하여 삼신에게 제천을 하였고<sup>10)</sup> 고구려 광개토대왕도 말을 타고 순행할 때 마리산에 이르자 참성단에 올라 천악을 사용하여 친히 삼신에게 제천하였으며,<sup>11)</sup> 선인(仙人) 을지문덕도 매년 3월 16일이 되면 말을 타고 마리산으로 가서 제물을 올려 경배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제천하는 것은 신시의 옛풍속<sup>12)</sup>이라고 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이암, 이강 등의 선가들이 왕명을 받들어 참성단에서 제천을 하였다.<sup>13)</sup>

『규원사화』 「단군기」에도, 단군이 부소 부우를 보내어 갑비고차에 성(삼랑성)을 쌓아 남쪽을 지키게 하였고, 마리산에 단(참성단)을 쌓아 제천하였다<sup>14)</sup>는 기록, 단군이 제천한 곳은 마리산뿐만 아니라 북쪽을 순행할 때 태백산에서도 제천하였고, 남쪽 순행 시 갑비고차는 바닷가라 배를 타고 가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참성단에서 제천하였다<sup>15)</sup>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마니산·마리산 제천은 단군조선시기를 거쳐 고구려시기, 고려시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제사 제천을 거행하였고, 이 시기 제천 신격은 ‘삼신’ 곧 마고삼신이라고 본다

그런데 점차 불교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선도는 약화되어 선불습합이 일어나면서, 마고삼신이나 태백선인과 같은 선도의 천신(天神)들이 점차 불교의 부처나 보살신 등으로 대체되어졌다. 고려 인종 9년(1131) 묘청의 건의로 서경 임원궁 안에 팔성당을 세웠는데, 팔성의 첫째가 백두악태백선

9) 『단군세기』 시조 단군왕검 51년 무오, 帝命雲師倍達臣 設三郎城于穴口 築祭天壇於摩璃山 今塹城壇 是也

10)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天王 親幸摩璃山祭天; 壬申三月十六日 親幸摩璃山 祭三神塹城壇

11) 『태백일사』 「고구려국본기」, 廣開土境好太皇…巡騎至摩璃山 登塹城壇 親祭三神 亦用天樂

12) 『태백일사』 「고구려국본기」, 乙支文德…每當三月十六日 則馳往摩璃山 供物敬拜而歸… 祭天 乃神市古俗也

13) 『태백일사』 「고려국본기」, 敬孝王五年三月 杏村李岳 以命祭天于塹城壇; 敬孝王十二年 癸卯三月 密直使李岡 以命祭塹城壇: 岡陵王禍五年三月辛未 命遣使致祭于塹城壇

14) 『규원사화』 「단군기」, 檀君既封諸侯 天下清靜 …… 後益遣夫蘇夫虞 築城於甲比古次 以備南巡 今江華三郎城是也 摩璃山又有塹城壇 此即檀君設壇祭天之頭嶽也

15) 『규원사화』 「단군기」, 夫檀君祭天 非但頭嶽也 北狩則祭太白 南巡則祭頭嶽也 而甲比古次傍在海濱 通航容易 則南巡之祭必致祭於壇所也

인, 팔성의 여덟째가 두악천녀이다.<sup>16)</sup>

고려시대 선인 이명(李茗)<sup>17)</sup>에 의하면, ‘두악천녀는 지상의 선악을 맡은 신씨씨의 황후로서 곧 환검신인의 어머니이며, 주신이 조화롭게 다스리는 아래에서 천하의 모든 일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을 맡은 신’<sup>18)</sup>이라고 한다. 곧 두악천녀는 환웅천왕의 비(妃)이자 단군왕검의 어머니인 ‘웅녀·웅녀군’의 또다른 이름이 된다. 배달국·단군조선시대 이래 제천 신격인 ‘일기·삼기, 마고삼신’이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팔성당에 ‘두악천녀’라는 이름의 여성신으로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강화도 마니산의 명칭이 ‘두악’이고 마니산 참성단제천의 신격은 여성 신격 ‘두악천녀’임을 살펴봐왔다. 단군조선 시대까지는 마고삼신께 올리는 마고제천을 하였겠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제천 신격이 두악천녀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제천의 신격은 ‘두악천녀’라는 이름의 여산신이고 이 여산신의 원형은 ‘마고삼신’이라고 하겠다.

16) 『高麗史』卷127「列傳」卷第40 妙清, 妙清又說王, 築林原宮城, 置八聖堂于宮中, 八聖, 一曰護國白頭嶽太白仙人, 實德文殊師利菩薩, 二曰龍圍嶽六通尊者, 實德釋迦佛, 三曰月城嶽天仙, 實德大辨天神, 四曰駒麗平壤仙人, 實德燃燈佛, 五曰駒麗木覓仙人, 實德毗婆尸佛, 六曰松嶽震主居士, 實德金剛索菩薩, 七曰甌城嶽神人, 實德勒叉天王, 八曰頭嶽天女, 實德不動優婆夷, 皆繪像. : 『규원사화』 「단군기」

|   | 산악·지역명         | 선도 명칭 | 팔성의 역할                          | 불교식 개명 |
|---|----------------|-------|---------------------------------|--------|
| 1 | 호국백두악          | 태백선인  | 대혜대덕으로 주신을 도와 큰 세상을 만드는 환웅천왕    | 문수사리보살 |
| 2 | 용위악            | 육통존자  | 인간세상의 화복을 관장하는 신                | 석가불    |
| 3 | 월성악            | 천신    |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풍백·우사·운사에 해당하는 신)   | 대변천신   |
| 4 | 구려평양           | 선인    | 광명을 관장하는 선인(밝음, 수행, 제천을 담당하는 신) | 연등불    |
| 5 | 駒麗木覓<br>(句麗木覓) | 선인    | 인간세상의 수명을 관장하는 선인               | 비파시불   |
| 6 | 송악진주           | 거사    | 병권(군사)을 관장하는 거사(치우씨에 해당하는 신)    | 금강색보살  |
| 7 | 증성악            | 신인    | 농사(식량)초목을 관장하는 신인(고시씨에 해당하는 신)  | 늑차천왕   |
| 8 | 두악             | 천녀    | 신씨씨의 왕후이자 환검신인의 어머니 곧 웅녀신       | 부동우바이  |

17) 북애자는 『규원사화』 「단군기」 첫머리에서, ‘고려시대 청평산인 이명이란 사람이 있는데, 『진역유기(震域遺紀)』 3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은 『조대기』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옛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일면이 지은 삼국유사와는 큰 차이가 있고, 이 속에는 선가의 말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북애자는 청평의 진역유기를 택하며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규원사화』 「단군기」, 古有清平山人李茗高者麗時人有震域遺紀三卷引朝代記備載我國故史比於一然之書甚相逕庭中多仙家語…余寧取清平之說而欲無疑云)

18) 『규원사화』 「단군기」, 高麗仁宗九年因妖僧妙清之說置八聖堂于西京林原宮中 清平爲之說曰 第一曰護國白頭嶽太白仙人有大慧大德助主神造大界 卽桓雄天王之謂也 …第八曰頭嶽天女 掌地上善惡卽神市氏后 桓儉神人之母 皆在主神調度之下掌治天下諸事之神云云

### Ⅲ. 맺음말

강화 참성단(塹星壇, 塹城壇)은 단군이 하늘에 제를 올리기 위해 쌓은 것으로 전해지는 제단인데 실제로는 단군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고려·조선시대에는 국가제사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제천의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1955년 전국제천의 성화를 재화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는 개천대제라는 이름으로 제천의식이 거행되고 있다.<sup>19)</sup>



19)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홍왕리 산42-1, 마니산(摩尼山)에 있다. 면적은 5,603㎡. 국가유산청에서 1964년 07월 11일 사적으로 지정한 국가문화유산이다. 이칭으로 마니산 제천단으로도 불린다. [출처: 강화 참성단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5281\(2025.02.23 검색\)](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5281(2025.02.23%20검색))

## 참고문헌

## 원전

『단군세기』 『태백일사』 『규원사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 단행본

김정배·이서행 외,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0.

이형구, 『강화도』, 대원사, 2000(1994).

윤이흠·서영대·김성환·이욱·장장식·최종수, 『강화도 참성단과 개천대제』, 경인문화사, 2009.

정경희, 『백두산문명과 한민족의 형성』, 만권당, 2020.

김성환, 『마니산 제사의 변천과 단군 전승』, 민속원, 2021.

## 논문

손진태, 「조선 고대 산신의 성에 취하야」, 『진단학보』1, 1934.

김영수, 「지리산 성모사에 취하야」, 『진단학보』11, 1939.

서영대, 「참성단의 역사와 의의」, 『고조선단군학』19, 2008.

석상순, 「북한산의 여산신 연구」, 『동북아고대역사』4, 2021.

정경희, 「홍산문화 여신묘에 나타난 '삼원오행'형 '마고7여신'과 '마고제천」, 『비교민속학』60, 2016.

정경희, 「중국 요하문명론의 장백산문화론으로의 확대와 백두산의 '선도제천' 전통」, 『선도문화』24, 2018.

정경희, 「통화 만발발자 제천유적을 통해 본 백두산 서편 맥족의 제천문화(I)-B.C.4000년~B.C.3500년경 '3층원단(모자합장묘)·방대'를 중심으로-」, 『선도문화』26, 2019.

정경희, 「통화 만발발자 제천유적을 통해 본 백두산 서편 맥족의 제천문화(II)-제2차 제천시설 '선돌2주·적석방단·제천사'를 중심으로-」, 『선도문화』27, 2019.

## 기타

국가유산청 <https://www.khs.go.kr/main.html>

강화군청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

# 대몽항쟁기 사상계의 중심, 수선사와 선원사

소 대 봉 | 민화협 정책위원

## 1. 머리말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에 있던 선원사(禪源社, 1291년 이후에는 禪源寺<sup>1)</sup>)는 고종(재위, 1213~1259) 때 최우가 사재를 희사하여 창건한 최우의 원찰(願刹,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던 법당)로, 1246년 진명국사(眞明國師) 혼원(混元)을 법주로 모실 때 국내의 고승 3000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강도(江都)시절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는 절로 식구가 항상 수천·수만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고(食指常不下數千萬)<sup>2)</sup> 크고 작은 집채가 오백 여 칸이요, 늙고 젊은 승려들이 수백 명 이상이었던<sup>3)</sup> 선원사는 무려 16년에 걸쳐 이루어진 高麗新雕大藏經[일명 팔만대장경] 판각사업을 관리한 사찰<sup>4)</sup>로 1398년 서울로 옮기기 전까지 대장경판을 보관한 장소<sup>5)</sup>로도 알려져 있다.

팔만대장경 판각사업은 최이(崔怡)와 최항(崔沆)이 연이어 사재를 내놓고 지휘하여<sup>6)</sup> 불력(佛力)

1) 오용섭, 「팔만대장경의 造成과 江華」, 『인천학연구』 2002, 408쪽.

2) 최해, 「禪源寺齋僧記」, 『동문선』 권 68.

3) 息影菴, 「復禪源寺疏」, 『동문선』 권 111.

4) 황인규, 「고려말 송광사의 고승과 불교계」, 『보조사상』 61, 2021, 17쪽. 한편, 1236~1251년까지 16년 동안 이루어진 대장경 조판 사업이 1245년 창건된 선원사에서 주도한 것은 시기가 맞지 않고 사료 기록도 없다는 주장은, 임학성, 「고려팔만대장경의 강화도 조판과 선원사의 위치 비정에 관한 제문제」 2002, 419~423쪽 참조.

5) 『太祖實錄』 권14, 태조 7년 5월 병진.

6) 『高麗史』 권129 열전42 반역3 최항, 고종 42년.

으로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sup>7)</sup> 국가적 사업이었기에 대몽항쟁의 사상적 배경은 불교로 알려져 왔다. 이 글에서는 그 불교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 2. 고리왕실 불교의 성격: 불교와 습합된 선도사상

태조 왕건은 고리<sup>8)</sup>의 입국 이념 및 정책적 지향점의 대체를 「훈요십조(訓要十條)」<sup>9)</sup>에서 밝혔다. 그중 1, 2, 4, 6조는 태조의 사상적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1조: 우리나라의 대업은 오로지 모든 부처의 힘을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분향하고 수도하게 함으로써 각각 자신의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2조: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미루어 점쳐서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였다. “내가 점을 쳐 정한 곳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하면 지덕을 손상케 하여 조업(祚業)이 길지 못하리라.”

제4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악이 다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제6조: 내가 지극하게 바라는 것은 연등과 팔관에 있으니,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까닭이고 팔관회는 하늘의 신령 및 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까닭이다.

1, 2조를 보면 태조의 입국 이념은 불교이지만 도선(道詵)에 기반했음을 알 수 있다. 도선은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을 주장한 바, 비보사탑이란 풍수비보(산천의 순역(順逆)을 살펴서 땅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강한 기운을 보완하는 것)사상에 그 보완책으로 사원·탑·불상·당간 등 불교적인 건축물이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sup>10)</sup> 풍수비보에 능했던 도선(827~898)은 동리산문(銅裏

7) 이규보, 「大藏經刻板君臣祈告文」, 『동국이상국전집』 권 25. 제석(帝釋)은 降魔之力이 있어서 일체의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사람들이 경전을 서사(書寫, 간행 유포)하여 독송하고 교의를 수지(受持)하면 제석이 지상의 인간계에 내려 온다고 高麗인들이 믿었기에 대장경을 판각한 것이었다.(서운길, 「高麗의 帝釋神仰」, 『불교학보』, 1978, 104~106쪽.)

8) 高句麗와 高麗는 본디 한자가 아니고 나라이름인 ‘고구리’와 ‘고리’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나라이름으로 읽을 때 麗는 ‘리’로 읽어야 한다.(서길수, 「高句麗와 高麗의 소리값(音價)에 대한 연구」, 『高句麗研究』 20, 2007.)

9) 『高麗史』 권2 世家2 태조 26년 4월

10) 김진숙, 「고려시대의 비보사탑과 불상조성」, 『불교연구』 42, 2015, 255~258쪽.

山門) 계통의 선승(禪僧)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선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선가(仙家)였다.

조여적이 한국 선파(仙派) 인물들의 행적과 담론을 기술한 선도서 『청학집(靑鶴集)』(1648년)은 도선을 신라초의 대표적인 선가 물계자(勿稽子)의 전통을 이은 선가로 기록하고 있다.<sup>11)</sup> 서거정이 편찬한 『동문선(東文選)』에는 도선이 ‘지리산 주인 성모천왕(聖母天王)의 밀촉(密囑)을 받은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sup>12)</sup> 지리산성모는 지리산 제천단의 신격으로 ‘마고성모, 마고할미’로도 불린다.<sup>13)</sup> 마고는 한국선도 기학에서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에너지이자 모든 존재의 본질로서의 ‘일기·삼기(一氣·三氣)’다. 물계자의 후손 박제상이 쓴 『징심록』 「부도지」에는 마고성 아래 황궁씨-유인씨-환국-배달국-단군조선으로 이어진 마고사상이 북부여 파소(婆蘇)를 통해 신라로 전해져 신라 선풍의 중심이 되었다고 했다. 월유산 화엄사에서 출가하여 곡성 동리산에서 법을 깨닫고 지리산 구령(毆嶺) 암자에서 이인(異人)을 만나 풍수비보설을 배웠으며 만년에도 지리산 권역의 옥룡사에서 오래도록 머문 도선<sup>14)</sup>은 신라 물계자계 지리산파 선가였다고 할 수 있다.

도선 선풍의 내용이 북부여 파소-신라 물계자-지리산 이인-도선으로 이어진 마고사상임을 인지할 때, 도선이 한국선도 기학의 출발점이자 선도제천의 중심 신격인 마고로 상징되는 기에너지 [일기·삼기] 운용에 능통한 선가였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의 비보사상은 선도의 요체인 ‘조화론(調和論, 天符調和論)’에 따른 ‘비(裨)·사(瀉)’의 원리, 곧 기세를 보아 기를 더하거나 뺌으로써 조화로운 기운의 상태로 만드는 원리에 대한 지칭이므로 ‘선도비보사상’으로 부를 수 있다. 도선이 기 운용에 능통한 선가였으므로 도선에 기반하여 태조가 표방한 불교는 실상 선도가 중심이었고 그 위에 불교적 외피가 덧씌워진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4, 6조에서 태조는 고유의 풍속을 강조하고 후왕들이 중시해야 할 국가의례로 ‘연등’과 ‘팔관’을 제시했다. 연등과 달리 원간섭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연기된 적이 없어 더 중시되었던 ‘팔관’은 고구리의 동맹을 계승한 전형적인 선도제천의례였다.<sup>16)</sup> 팔관이 선도제천의례였으므로 팔관의 신격으로 먼저 제시된 ‘천령(天靈)’은 북두칠성 근방의 하늘에서 시작된 일기□삼기의 다른 표현

11) 『靑鶴集』, “元曉道詵託身西教 是乃勿稽之餘韻”

12) 박전지, 「靈鳳山龍岩寺重創記」, 『東文選』 권 68, “昔開國祖師道詵 因智異山主聖母天王密囑”

13) 석상순, 「한국의 ‘마고’ 전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5쪽.

14) 최유정, 「白鷄山玉龍寺贈諡先覺國師碑銘」, 『東文選』 권 117.

15) 정경희, 「고려 후기 수선사세력의 동향과 고성 이씨 가문-여말 선도사학의 등장 배경-」, 『2015년 세계환단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14쪽.

16)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7 祠宇,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 其十月東盟之會 今則以其月望日 具素饌 謂之八關齋 禮儀極盛”

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일기·삼기는 하늘에서 펼쳐져 이 세상을 만들었기에[일·삼·구론, 기·화·수·토·천부론] 그 다음 신격으로 제시된 ‘오악□명산□대천□용신’은 실상은 일기□삼기의 화현(化現)으로 바라볼 수 있다.<sup>17)</sup>

선도제천의례로서의 팔관은 불교적으로는 ‘제석(帝釋)’신앙 형태로 표현되었다. 제석은 힌두교 천둥번개신(雷神)으로 전쟁을 관장하는 인드라(Sakradevanam-Indra)를 불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불경의 한역(漢譯) 과정에서 석가제파인दार(釋迦提婆因陀羅) 또는 제석환인(釋提桓因)이 되었고 이를 줄인 이름이 불법의 수호신인 제석(帝釋)이다.<sup>18)</sup> 티베트·인도 북부지역에 환웅의 선도 문화가 전해지면서 천둥번개신인 환웅이 힌두신앙의 인드라신으로 숭앙되었다. 이 것이 불교 형식으로 포장되어 나타난 것이 제석신앙이다. 따라서 제석신앙의 뿌리는 선도, 형식은 불교라는 의미에서 선불습합(仙佛習合)<sup>19)</sup>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고리 건국 초 태조에 의해 강조된 선도비보사상-팔관-제석신앙은 공히 선도에 기반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리 왕실의 사상 정책 기조는 선도이고 여기에 불교적인 외피를 씌웠으므로 ‘선불습합’ 사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sup>20)</sup>

### 3. 대몽항쟁기 사상계의 중심, 수선사와 선원사

1170년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무신정변으로 문벌귀족 지배질서가 와해되자 반란이나 소요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무력 기반은 대부분 문벌귀족체제와 연결된 교종이 주축이 된 사원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sup>21)</sup> 고리 초부터 사원에는 재산을 소유하면서 사원에 예속된 수원승도(隨院僧徒)가 많게는 천 명에 달했으며<sup>22)</sup> 이들은 국가와 사원이 처할 수 있는 유사시 상황에서 승군(僧軍)과 같이 군대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sup>23)</sup> 이들 사원에 소속된 승도들이 승군으로 조직되어 사원 자체에

17) 정경희, 앞의 글, 2015, 15쪽.

18) 서운길, 「高麗의 帝釋神信仰」, 『불교학보』, 1978, 79~81쪽.

19) 불교는 재래적인 전통을 인정하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포교되었다. 토착적인 종교 신격(神格)이나 신명(神名)을 불교식으로 변화는 시켰으나 존재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김철준, □고려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 『삼국사기』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 『한국사연구』 9, 1973, 68쪽.)

20) 정경희, 앞의 글, 2015, 16~19쪽.

21) 민현구,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36, 1973, 28~29쪽.

22) 『高麗史』 권96 尹瓘傳.

23) 김광식, 『高麗 무인정권과 불교계』, 민족사, 1995, 29~31쪽.

소속되거나 군대에 편성되었던 사례<sup>24)</sup>들은 사원이 자체적으로 유지하였던 독자적인 군사 기능을 담보하였음을 보여준다.<sup>25)</sup>

고리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마땅히 사원에 대한 군사적·사상적 통제가 요구되었다. 집권무인이 계속 교체되는 불안한 정국은 최종적으로 최충현의 집권으로 안정되었다. 그 배경에는 성공적인 사원정책이 있었다. 최충현은 집권 직후 ‘권력과 결탁한 사원세력의 문제를 지적하며 비보사찰 외에는 모두 삭제할 것’<sup>26)</sup>을 요청하였고, 폐위된 명종을 이은 신종 원년(1198년)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圖鑑)을 설치하여 사원세력을 정리하였다. 최씨정권은 태조 이래 고리왕실의 사상적 방향이었던 선도비보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고리 중기의 선도비보사상은 왕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사굴산문 담진·탄연 일파, 개경 한안인·이자현 일파가 주도하여 서경 및 남경을 중심으로 하였다. 반면 무인집정인 최씨정권에서는 선도비보사상의 발원지이자 당시 선도비보사상의 중심세력인 사굴산문의 중심지가 자리한 곳, 무엇보다도 최충현의 외향(外鄕)으로 최씨정권의 세력 근거지가 자리한 지리산 일대 서부 경남<sup>27)</sup> 및 전라남도 지역이 부각되었다. 최충현은 당연히 왕실과 밀착된 세력은 일차적으로 배제하였으며<sup>28)</sup> 따라서 왕실과 긴밀히 연결되어 선도비보사상을 주도해왔던 사굴산문의 중심세력인 단속사 세력 대신 사굴산문의 방계인 수선사 세력을 선택하였다.

사굴산문에 속한 종휘(宗暉)의 문도 지눌(知訥, 1158~1210)은 보수적·귀족적인 개경의 불교계에 환멸을 느끼고 신종 3년(1200년) 송광산 길상사(吉祥寺, 전남 순천 소재)를 정혜결사(定慧結社, 1204년 왕실에서 修禪寺로 사액)로 고치고 정착, 불교계 혁신운동을 시작하였다. 문벌귀족체제를 비판하면서 성장한 지방 사회의 향리층·독서층은 물론 일반민들의 지지까지 받아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된 수선사였기에 최우의 지원을 받아 불교교단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9)</sup>

초기 수선사의 경제사정은 탁발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을 계승한 2세 사주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諡) 단계에 이르러 최우가 종문(宗門)의 외호(外護)

24) 『高麗史』 권96 尹瓘傳; 『高麗史』 권81, 兵志 1 肅宗, 明宗, 高宗, 元宗, 恭愍王.

25) 정영준, 「고려 江都時代 사원의 기능과 역할」, 『역사민속학』 32, 2010, 139~140쪽.

26) 『高麗史』 崔忠獻傳, “使陰陽官檢討 凡裨補外 輒削去勿留 無爲後人觀望”

27) 晉州는 최충현이 3천호의 食邑과 3백호의 食實封을 받은 것을 시초로 최씨 일가가 대대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곳이다.

28) 명종 27년 최충현 살해모의에 연루되어 단속사 주지 연담(淵湛) 등 승려 10여 명이 영남으로 귀양갔다. (『高麗史節要』 권13 명종 27년 9월)

29)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39~40쪽.

가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sup>30)</sup> 사원세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혜심은 지눌의 간화선(看話禪) 사상만을 견지한 것이 아니라 조탑(造塔), 주종(鑄鐘) 활동 등 실천공덕신앙과 밀교<sup>31)</sup>적인 요소도 수용하고 있었으니,<sup>32)</sup> 곧 사굴산문의 오랜 전통인 선도비보사상을 토대로 하였던 것이다. 수선사의 6세 사주 원감국사(圓鑑國師) 충지(冲止)는 “오산(鰲山) 꼭대기에 좌선암과 행도석이 있는데 先覺(도선)·眞覺(혜심) 두 국로(國老)가 편안히 앉아 수도하던 자취였다”<sup>33)</sup>고 하여 혜심이 도선의 선도비보사상을 승계한 인물임을 암시했다.<sup>34)</sup>

혜심 이후 3세 청진국사(淸眞國師) 몽여(夢與) 때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유지되었고, 제 4세 사주인 진명국사(眞明國師) 혼원(混元)과 제 5세인 원오국사(圓悟國師) 천영(天英) 단계에서는 그 절정에 이르다가 최씨정권이 몰락한 1258년 이후에는 가지산문의 일연 계통이 부각됨으로써 서서히 퇴조하게 된다.<sup>35)</sup> 최충헌의 후계자인 최우는 두 아들 만종, 만전을 혜심의 문하에서 삭발케 하는 등 수선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원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이렇게 최씨정권과 밀착하게 된 수선사는 선도비보사상의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sup>36)</sup> 또한, 수선사에는 최충헌에 우대되었던 선승 지점이나 승형의 문도, 또 백련사나 화엄종 등 각 종파의 승려들 뿐 아니라 최씨정권 하 최고의 문인들인 정숙·정안 부자, 임경숙, 이장용 등 수많은 문인지식층들이 모여들어 상호 교류하였으니<sup>37)</sup> 당시 수선사는 고리 사상계의 중심이었던 셈이다.

사굴산문은 신라말 강릉 일원에 근거한 통효대사(通曉大師) 범일(梵日/品日, 810-889)에서 비롯되었다. 범일은 당에 유학하여 지나의 선법을 배운 바 있으며 화엄학에도 조예가 깊었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선가의 모습을 보였다. 처녀의 머리 위에 태양이 비친 후 범일이 탄생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표주박 물 위로 태양이 비친 후 그 물을 마신 처녀가 범일을 낳았다는 탄생설화는 동명왕·박혁거세 등 한국선도 전통을 이은 신성왕(神聖王)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밝사상적 요소다. 범일은 문성왕 9년(847년) 당에서 귀국한 후 문성왕 13년(851년)까지 白達山(백산, 태백산)에 머무르

30) 이규보, 「西普通寺行同前榜」, 『동국이상국전집』 권 25.

31) 밀교란 불교가 전파되면서 그 지역의 사상·수행법을 포용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다.(정경희, 앞의 글, 2015, 19쪽) 불교전파 이전의 사상·수행법을 말함은, 곧 불교 이전의 한국선도를 이르는 것이다.

32)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49쪽.

33) 『圓鑑國師歌頌』, “鰲山之頂 有座禪巖行道石 蓋先覺眞覺兩國老 宴座修道之遺跡也”

34) 정경희, 앞의 글, 2015, 34쪽.

35)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39~47쪽.

36) 정경희, 앞의 글, 2015, 30~32쪽.

37) 정혁, 「고려후기 진각국사 혜심의 佛儒同源思想」, 『북악사론』 3, 1993, 211쪽.

며 정진한 후 굴산산문을 개창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수행력의 근간이 되었다. 또한 세계 어느 지역 불교사에서 보이지 않는 특이한 진귀조사설(眞歸祖帥說)을 주장한 점도 그의 선가적 면모를 알게 한다. 진귀조사설이란 ‘석가가 홀로 수행을 통해 깨달았으나 미진하였는데 석가불 이전의 노사나불(盧舍那佛)의 심인을 이어받은 진귀조사를 만나 심법을 전수받아 비로소 대오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sup>38)</sup> 불교 측에서는 이를 여래선 중심에서 조사선 중심으로 발전되는 선종의 발달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sup>39)</sup> 그러나 세계 각처로 전해진 배달국·단군조선 선도 전통의 한 계통이 불교라 한다면, 석가가 스승을 찾아 먼 곳으로 떠나갔으며 스승을 만나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불교의 선도적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하여 범일이 사후 동예지역 제천의례 무천(舞天)의 후대적 형태인 강릉단오제의 주신(主神)인 국사성황신으로 모셔진 점도 그의 선도적 성향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사굴산문의 개창주 범일의 선가적인 면모는 고려시대 사굴산문이 ‘선도비보사상’을 주도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을 알게 한다.<sup>40)</sup>

장기적인 대몽항쟁을 위해 강화도 천도를 단행한 최우는 전시에 가장 중요한 사상 통합을 위해 수선사를 중심에 세웠다. 고종 32년(1245년)에는 수선사의 강화도 분원으로 선원사를 창건하였다. 선원사에는 수선사 사주들이 순환직 방식으로 주석하였으며 선원사는 강화도내 최대 사찰이자 최우의 원찰로 대몽항쟁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sup>41)</sup>

수선사 제4세 사주(1252~1256) 진명국사 혼원이 사주로 재임하기 전에 선원사 초대 사주(1246~1252)로 임명되었던 사실, 수선사 제5세 사주(1256~1286) 원오국사 천영이 사주로 재임하기 전에 선원사 법주(1251~1256)로 임명되었던 사실<sup>42)</sup>에서 알 수 있듯이 수선사의 고승들이 선원사의 주지 자리를 이어 가면서 선원사는 제2의 수선사로 자리매김 되었다. 강화도 선원사는 수선사를 표방하고 수선사의 사주가 되는 고승들이 법주(法主)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수선사의 선풍이 수용되었을 것이다.<sup>43)</sup>

38) 天頊, 『禪門寶藏錄』 卷上; 정경희, 앞의 글, 2015, 22쪽에서 재인용.

39)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2007, 283~288쪽.

40) 정경희, 앞의 글, 2015, 22쪽.

41) 김광식, 『高麗 무인정권과 불교계』, 민족사, 1995, 203~204쪽, 252~262쪽.

42) 이익배, 『佛臺寺 慈眞圓悟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下, 1984.(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개방 자료)

43) 황인규, 「고려 후기 禪源社의 창건과 禪僧들」, 『경주사학』 21, 2002, 65~66쪽.

## 4. 맺음말

고리인들은 제석(帝釋)의 항마지력(降魔之力)으로 몽골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국가적 사업으로 대장경 판각사업을 하였다. 고리 왕실의 사상 정책 기조는 선도를 내용으로 불교적 외피를 씌운 ‘선불습합’ 사상이었다.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하여 사원세력을 정리한 최씨정권도 선도비보사상을 기본으로 하였다. 무려 16년에 걸쳐 이루어진 대몽항쟁의 상징인 고리 대장경 판각사업의 중심 역할을 한 강화도 선원사는 선가 범일에서 비롯한 사굴산문을 계승한 수선사의 분원이었다.<sup>44)</sup> 이러하다면 대몽항쟁의 사상적 배경은 단순히 지나(支那)에서 전래된 불교로 보기보다는 불교라는 외피를 입었으나 고유의 선도사상을 간직한 ‘선불습합’ 사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44) 황인규, 「고려말 송광사의 고승과 불교계」, 『보조사상』 61, 2021, 17쪽.

# 고려시대 강화 보문사의 관음신앙

신 미 아 \* | 동국대학교

## I. 머리말

삼국시대 불교가 유입된 이래 우리나라 관음신앙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관음성지는 동해안의 양양 낙산사(洛山寺)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수도 개경과 금강산 일대에 새로운 관음성지들이 형성되었다. 강화 보문사는 고려 중기 강화 도읍 시기(1232-1270) 새롭게 부각된 관음성지이다. 보문사에는 강도(江都) 시기 고려 정권 차원에서 봉안한 재조대장경 인출본 2질과 고위 대신이 개인 차원에서 시주한 1질 등 대장경이 3부 봉안되어 있었고, 많은 전각과 관음보살상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말 이후 보문사는 급격히 쇠퇴하여 기록에서 사라졌다. 이 글에서는 강화 보문사가 강도 시기 관음성지로 새롭게 떠오르는 배경과 보문사에 봉안된 관음불의 특징, 보문사가 관음도량으로서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 II. 고려시대 강화 보문사의 창건

고려 전기 대표적인 관음성지는 동해안의 낙산사였다. 낙산사는 송나라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1095년 송(宋)의 상인들과 자은종 승려 혜진과 함께 고려에 왔는데, 혜진이 “보타 낙산(普陀落山)에 있는 성굴(聖窟)”을 보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조정에서 의논하여 끝내 허

\*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rivermia12@gmail.com

락하지 않았다.<sup>2)</sup> 그에 비해 강화 보문사는 고려 전기 관련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주목할 만한 점은 무인정권이 강화로 천도한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점이다. 이것은 보문사가 그 전부터 있다 하여도 존재감이 미미하였거나 무인정권 이후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문사 창건 관련하여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되었다거나 진덕여왕 때 어부들이 보문사 앞 바다에서 석상을 걷어올려 보문사 석굴에 봉안했다는 이야기 등은 모두 일제 강점기 이후 기록이다.<sup>3)</sup> 고려 회정선사(懷正禪師)가 금강산 보덕암을 중창(1156)하고 강화로 내려와 보덕암을 중창하였다는 견해도 있다.<sup>4)</sup> 이 역시 고려 의종 때 인물인 회정선사를 일제 강점기의 금강산 유점사 보덕굴 기록(1942)에 근거하여 동일인물로 보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회정은 개경 총지사(摠持寺)의 주지로서 주술(呪嚮)로 왕의 총애를 얻어 많은 이들이 그에 아부하고 뇌물을 주었다.<sup>5)</sup> 이러한 인물인 회정이 굳이 세간의 관심 밖에 있던 강화 석모도까지 가서 새로 관음도량을 조성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현재까지 보문사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은 고려 후기 문신 민지(閔漬(1248-1326)가 찬술한 「고려국대장이안기(高麗國大藏移安記)」이다.<sup>6)</sup> 이 글은 원의 선종계 승려 철산 소경(鐵山 紹瓊)이 1304년(충렬왕 30) 고려를 방문하고 1306년(충렬왕 32) 원으로 돌아가면서 강화 보문사에 있던 고려대장경 1질을 기증받아 자신이 주석하고 있던 강서도 의춘현 대양산(江西道道宜春縣大仰山)으로 가져간 내용을 담고 있다. 철산은 강화 보문사에 들렀다가 대장경 3질을 보고 유래를 물어보니 2질은 군신이 봉안한 것이고, 1질은 당시 봉익대부 지밀직사사 군부판서 상호군(奉翊大夫知密直司事軍簿判書上護軍) 허평(許評)과 부인 염씨가 인출하여 봉안한 것이었다.<sup>7)</sup> 이 대장경들은 봉안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재조대장경일 가능성이 높다.<sup>8)</sup> 철산은 보문사 대장경을 100척 깊이의 우물이자 여의주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주석하고 있는 대양산 산문에 불이 나 법보가 누락되었는데,

2) 辛卯 宋商黃冲等三十一人, 與慈恩宗僧惠珍來. 王命近臣文翼, 備軒蓋迎珍, 置于普濟寺. 珍常曰, “爲欲見普陀落山聖窟而來, 請往觀之.” 朝議竟不許. 《高麗史》 세가 권 10. 헌종(獻宗) 원년.

[https://db.history.go.kr/goryeo/compareViewer.do?levelId=kr\\_010r\\_0170\\_0020\\_0040](https://db.history.go.kr/goryeo/compareViewer.do?levelId=kr_010r_0170_0020_0040), 2025. 7. 5. 접속.

3) 朴漢永, 「普門寺法堂重建記」, 『普門寺: 觀音信仰의 聖地』, 1996, p. 148.

4) 박한영, 앞의 논문, pp. 37-41.

5) 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11년.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

6) 이 글은 1306년(충렬왕 32)에 찬술되어 비석에 새겼는데, 비석은 없어지고 비문을 옮긴 글이 『天下同文』전갑집(前甲集) 권7에 수록되어 있다. 『천하동문』은 현재 일본 동경(東京)의 세카도분고(靜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고려국대장이안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2025. 7. 5. 접속.

7) 閔漬, 「高麗國大藏經移安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8) 강호선, 「13~14세기 대장경 인출·유통과 고려대장경」, 『한국문화』 91, p. 41.

“옛날의 뜻을 빼앗을 수 없지만 지금의 뜻은 혹 옮길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은근히 허평에게 보시하라는 압력을 행사한다. 허평은 철산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는지 철산이 돌아가는 배에 실어 보내줬다고 맹세하고, 이 일을 영원토록 전하고자 민지에게 이 글을 쓰도록 부탁한 것이다. 여기에서 “옛날의 뜻”은 군신이 봉안한 2부를 뜻하는데, 이는 강도 시기 조성한 재조대장경으로 정권 차원에서 봉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허평이 대장경을 봉안한 것은 개경 환도 후 1300년 전후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아마도 공덕을 쌓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층 등이 사찰에 대장경 인출본을 많이 시주하였던 것 같다. 「고려국대장이안기」는 “대장경을 베껴서 만든 것으로는 금으로 쓴 대장경, 은으로 쓴 대장경, 먹으로 쓴 대장경 등이 있으며, 인쇄하여 만든 것으로는 요나라 대장경, 송나라 대장경, 우리나라[향본(鄉本)] 대장경 등이 있다. 우리나라 대장경은 현재 유행하는 판으로서 내외의 이름난 절에는 없는 곳이 없다.”고 하였다.<sup>9)</sup>

이를 통해 보면 고려 강도 시기부터 강화 보문사의 명칭은 보문사였으며, 강도 시기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절이었으며, 개경 환도 이후에도 고위대신이 대장경을 봉안하고, 철산이 보문사를 방문할 만큼 아직 이름있는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문사라는 이름으로 보아 관음을 주존으로 모시는 도량일 가능성이 높다. 관음신앙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초기 경전은 『법화경(法華經)』 「보문품(普門品)」과 무량수경 관련 경전이다. 「보문품」은 당초 1세기경 간다라 지역에서 『관음경(觀音經)』이라는 독자적 경전으로 성립되었다가<sup>10)</sup> 후에 『법화경』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1)</sup> 법화경은 여섯 차례 한역되었는데, 현존하는 법화경들은 모두 관음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널리 듣고(普門) 다양한 모습으로 재난에서 구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2)</sup> 고려 불화 가운데 일본 〈단잔진자(談山神寺) 소장 수월관음도〉에는 짧은 화찬(畫讚)이 있는데, 관음보살을 ‘대사보문(大士普門)’이라고 부르고 있다.<sup>13)</sup>

다음으로 보문사에 대한 기록으로는 1478년 간행된 『동문선(東文選)』에 담긴 고려시대 시문이 네 수이다. 이수(李需)의 〈보문사(普門寺)〉<sup>14)</sup>, 이장용(李藏用)의 〈차이수보문사시운(次李需普門

9) 민지, 「고려국대장이안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2025. 7. 5. 접속.

10) 金剛秀友外, 『佛教文化事典』, 佼成出版社, 1989, p. 485.

11) 정병삼, 「인도와 한국의 관음신앙 비교연구」, 『한국학연구』 제6집, 1994, 58쪽.

12) 법화경 서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2025. 5. 3. 접속.  
[https://kabc.dongguk.edu/content/pop\\_seoji?dataId=ABC\\_IT\\_K0116](https://kabc.dongguk.edu/content/pop_seoji?dataId=ABC_IT_K0116)

13) ‘大士普門境 栴檀紫竹林 懸崖垂手處 童子是知音 比丘善哉排書’. 김소연, 「화찬(畫讚)으로 본 수월관음도의 선(禪)적 해석-일본 단잔진자(談山神寺) 소장품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80호, 2024, p68. 저자(김소연)는 이 화찬이 일본에서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보았다.

14) 李需, 普門寺, 東文選, 卷18. 한국고전종합DB.

寺詩韻》, 박효수(朴孝修)의 〈보문사서루(普門寺西樓)〉, 석선탄(釋禪坦)의 〈차보문사각상시운(次普門寺聞上詩題)〉를 말한다.<sup>15)</sup> 특히 이수의 〈보문사〉는 당시 보문사에 봉안된 관음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수의 생몰년은 정확하지 않으나, 유명한 문인이었으며, 최이(崔怡, 1166-1249)의 측근이었다.<sup>16)</sup> 그는 1243년(고종 30)에 귀양갔는데, 〈보문사〉를 지은 시기는 그 이전, 곧 강도 시기였을 것이다.<sup>17)</sup> 이 시에 차운한 이장용(1201~1272)은 고종 때 과거 급제자로서 이수와 비슷한 연배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역시 강도 시절에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sup>18)</sup> 박효수는 1337년 사망하였으며, 석선탄은 익재 이제현(益齋 李齊賢, 1287-1367)에게 글을 칭찬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박효수보다 더 늦은 14세기 중후반일 가능성이 높다.<sup>19)</sup> 이후 강화 보문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는 찾아볼 수 없다. 『강화부지(江華府志)』(1783)는 강화 보문사를 “媒音島의 후미진 곳에 있으며, 절 옆에는 石室과 石舟가 있는데 심히 기이하다”<sup>20)</sup>고 하는 정도이다. 『여지도서』 「강도부지」 강화편에는 보문사를 보문암으로 소개하면서 석실과 석주를 지니고 있는데 기산이 바다에 임하여 경치가 빼어나 유객이 찾는다고 하는 등<sup>21)</sup> 조선시대 보문사는 관음성지의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당초 강화 보문사가 대중적인 관음성지가 아니었으며, 강도 시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성되었다가 개경 환도 후 세간의 관심에서 점차 사라졌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 Ⅲ. 고려시대 강화 보문사의 신앙

고려시대 강화 보문사의 신앙은 앞서 언급한 시문들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먼저 이수의 시를 보면 보문사에 수월관음 양식의 그림이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을 살펴보겠다.

15) 오용섭, 「팔만대장경의 조성과 강화」, 『인천학연구』 창간호, 2002, p. 16.

16) 오용섭, 앞의 논문, p. 17.

17) 오용섭, 앞의 논문, p. 17.

18) 오용섭, 앞의 논문, p. 17.

19) 오용섭, 앞의 논문, p. 17.

20) 金魯鎮, 「江華府志」卷上 第25張右, “普門寺, 在媒音島僻處, 臨海灌漑, 無際, 寺側有石室石舟, 甚奇”. 오용섭, 「팔만대장경의 조성과 강화」, 『인천학연구』, p. 410. 재인용.

21) 김창현, 앞의 논문, p. 223.

“바다 위에 구름을 뚫어 외줄 길이 통한 곳에, 미간의 옥호광이 수정궁을 꿰뚫네  
 눈 앞엔 넘실넘실 새파란 유리판, 혀끝엔 분명히 붉고 붉은 연꽃  
 머리 위엔 장엄한 무량수를 이었고, 손을 돌려 선재동을 끌고 어루만지네  
 곱슬곱슬 파란 머리털 푸른 옥을 드리운 듯, 비치는 원광은 오색 무지개(彩虹) 두른 듯  
 보배 손바닥에 달려 있는 세상 건지는 큰 공덕, 인자한 눈에 어려있는 중생을 불쌍히 보시는 빛  
 책상에 한 권 한 권 뽑아보는 경문, 빨간 사룡에 줄줄이 늘어선 등불  
 한 부처님 연을 따라 취령을 여옵시니, 오정(五丁)인들 제 어찌 잠총(蠶叢)에야 오를소나  
 성년 물결 출렁거림은 금사자의 부르짖음, 쇠 코끼리 엮드린 듯 바위도 기이해라  
 장엄한 전각들은 천 세계를 다 삼키고, 높이 솟은 누대는 허공에 걸려 있는 듯  
 숲의 중은 한 평생 화병(畫屏) 속에 사는구나, 강 늪은이 명경(明鏡) 속을 빠져나기 어렵겠네  
 바위 밑엔 황면로(석가)가 공을 보며 앉아 있고, 뜰안엔 녹염옹이 법을 듣고 서 있네  
 비림대 평상에 뚫린 구멍 오랜 세월 일지로세, 누더기 층층으로 기웠으니 몇 날이나 공부했나  
 길 찾아 돌아온 이는 어디서 온 분인고, 손 맞아 온아한 이는 바로 이 절 주인공  
 아홉 줄 옷은 수전(水田) 무늬 펼쳐 말리고, 세 개피 장작을 품자로 포개어 불지피네  
 벽을 향하여 앉은 이 눈썹이 눈을 떠었고, 차를 달이니 펄펄 거드랑에 바람이 이네  
 이른 아침 경 소리에 국경의 평온함을 빌고, 한밤 우는 종소리에 온 나라가 풍년일세  
 오체를 던지니 금방 부식지려는 듯, 쌍부를 맺고 앉아 오뚝 귀머거리인 양  
 용마(戎馬)를 물리치니 요북(遼北)이 편안하고, 영귀(靈龜)를 길들여서 해동(海東)을 진정하네.  
 한 후(一侯)의 문에 있는 이 몇 사람이던가, 세 번째 객이 모두 다 동의하여  
 한 달 동안 재를 올리며 은근히 비나니, 수저(繡邸)의 복이며 수가 천 년이나 넓으소서”<sup>22)</sup>

강화 보문사는 바다 옆 상당히 가파른 경사지대 중턱에 있다. 바다 위 수정궁은 보문사인 것으로 보인다. 관음은 『화엄경』 및 『천수경』 등 여러 경전에서 천궁 또는 보배로 장식된 궁전에 거처한다고 한다.<sup>23)</sup> 머리 위 보관에는 무량수불을 모시는 것은 『관무량수경』에 관음이 화불이 있는 천

22) “海上穿雲線路通。玉毫光透水精宮。眼前瀲灩瑠璃碧，舌上分明苒苒紅。頂戴莊嚴無量壽，手回摩撫善財童。回旋紺髮垂蒼玉。掩映圓光繞彩虹。度世眞功懸寶掌。憫人愁色着慈瞳。經抽卷卷披黃机。燈列行行羃絳絳。一佛應緣開鷲嶺。五丁無計達蠶叢。簸揚怒木金猊吼。搪突奇岩鐵象雄。殿閣盡吞千世界。樓臺直掛一虛空。林僧長在畫屏裏。江叟難迷明鏡中。巖下觀空黃面老。庭中聽法綠髯翁。黎床作穴多年事。霞衲成層幾臘功。問路歸來何處客。接賓溫雅主人公。九條衣拂田文曬。三箇柴成品字烘。向壁寥寥眉帶雪。烹茶習習腋生風。寅朝擊磬三邊靜。乙夜鳴鍾九野豐。五體投來疑欲碎。雙趺結處兀如聲。退殘戎馬安遼北。馴養靈龜鎮海東。在一侯門人有幾。第三番客意愈同。營齋一月殷勤祝。繡邸千年福壽洪。”， 이수, 〈보문사〉, 東文選卷之十八, 한국고전종합DB(번역 포함). 2025. 7. 10. 접속. [http://db.itkc.or.kr/inLink?DCI=ITKCGO\\_1365A\\_0210\\_010\\_0040\\_2007\\_001\\_XML](http://db.itkc.or.kr/inLink?DCI=ITKCGO_1365A_0210_010_0040_2007_001_XML)

23) “一時，釋迦牟尼佛在補陀落山，觀世音宮殿，寶莊嚴道場中，坐寶師子之座。”  
 『불설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다라니경』 1권(ABC, K0294 v11, p.963a01-a05) 011\_0963\_a\_05L

관을 쓰고 있다는 데에서 근거한다. 관음이 선재동자를 어루만진다는 구절은 고려 불교미술에서 관음이 대부분 선재동자와 함께 등장하는 것과 일치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구도과정에서 보타락가산에 있는 관음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관음이 직접 선재동자를 어루만지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데, 간접적으로 선재동자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길게 드리운 머리카락 역시 관음보살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관음의 뒤에 비치는 원광이 색깔있는 무지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수가 본 것은 불상조각이 아니라 채색 수월관음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존하는 고려 수월관음도의 원광은 흰색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무지개라고 한 것은 고려 이전 당이나 송 등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채색의 원광일 수 있다. ‘보배 손바닥에 달려있는 세상 건지는 큰 공덕’은 관념적 표현이 아니라 관음이 중생 구제를 위해 들고 있는 감로수가 담긴 정병이나 수정염주, 또는 버드나무가지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6세기경 만들어진 『고왕관세음경(高王觀世音經)』의 내용 중에 바닷가 보타산에 있는 관세음보살 주변에 세 그루의 보라색 대나무가 있고, 앵무새는 꽃을 물고 오며, 관음보살은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계송이 들어있었다.<sup>24)</sup> 현재 고려 수월관음도 중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작품은 일본 경신사 소재 1310년 수월관음도이다. 보문사의 수월관음은 무신정권 시기 수월관음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후(侯)는 당시 무신정권 최고권력자 최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의 문객들이 한 달 동안 최우의 복과 장수를 기원하며 한 달동안 재를 올린다고 하였다.<sup>25)</sup> 보문사가 특히 최우를 위한 관음도량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도 시기 전통적인 관음사찰이었던 양양 낙산사나 개경 인근의 사찰들이 관음기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한 자연환경을 지닌 석모도에 보문사를 창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장용은 이수의 시에 차운하면서 “향로 앞에 원통한 부처님께 고개 숙이고 만상에서 조화의 공을 깊이 찾아보네(爐靜稽圓通境 萬像冥搜造化功) 하였다.”<sup>26)</sup> ‘원통(圓通)’ 역시 능엄경에 근거한 관음보살의 표현으로 당시 보문사의 주존이 관음보살일 가능성을 높여준다.<sup>27)</sup> 보문사의 중심전각이 원통전이었을 가능성도 높다.<sup>28)</sup>

박효수는 <보문사 서루(普門社西樓)>에서 관원의 일로 바쁜 가운데에도 보문사 스님을 찾아가

24) “海中湧出普陀山 觀音菩薩在其間 三根紫竹為伴侶 一枝楊柳洒塵風 鸚鵡銜花千朵現 手持楊柳度衆生.” 황금순, 황금순 40화엄

25) 김창현, 앞의 논문, p. 219.

26) 東文選卷之十八

27) 김창현, 앞의 논문, p. 220.

28) 김창현, 앞의 논문, p. 220.

는 내용을 적었다.<sup>29)</sup> 석선탄은 보문사에 십년 동안 정을 담고 살아왔다는 내용을 남겼다(此軒贏得十年情). 석선탄은 보문사를 바다 위의 부용성(신선이 사는 성)이라고 하며, 보문사 주변을 앵무주鸚鵡洲라고 하였는데, 앵무새는 고왕경에서 관음보살에게 꽃을 바치는 존재(鸚鵡銜花千朵現)이다. 이 역시 보문사가 관음도량임을 우회적으로 알려준다.

## IV. 맺음말

강화 보문사는 고려 시대 강화 도읍시기 무인정권 실력자인 최우의 수복을 위해 기존의 관음성지와 유사한 석모도에 새로 조성하였거나 기존에 있던 작은 암자를 증창한 것으로 보인다. 강도 시기 보문사는 최우의 천수를 위한 재를 한 달 동안 지내거나, 재조대장경 인출본 2질을 사찰에 봉안하는 등 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문사에 봉안된 관음상은 선재동자, 원광, 버들가지 또는 수정염주 등 고려불화에 나오는 수월관음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려 수월관음도 양식이 강도 시기에도 존재하였으며, 보문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조성되었다는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동해안 중심이었던 관음성지가 서해안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9) 술 사이로 갈도하며 멀리 스님 찾아오니 봄도 다해 산꽃이 반이나 떨어졌네. 공문서 더미 속에 몸은 절로 늙어도 운수 그윽한 곳에 꿈은 노상 달렸네. 조선께 매양 마음을 가지고 묻고자 하나 민생고에 어찌 의원의 손을 때리. 와서 놀면서 좋은 경치 시로 쓰기 전에 다락을 내리느라니 속진 도로 감도네(松間喝道遠尋師 春盡山花半在枝 薄領堆邊身自老 水雲鄉裏夢常馳 祖禪每欲將心問 民瘼那堪放手醫 徒倚未能題勝景 俗塵還繞下樓時), 양주동 역,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65A\\_0190\\_010\\_0340\\_2002\\_002\\_XML](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65A_0190_010_0340_2002_002_XML)

 참고문헌

《高麗史》

『普門寺: 觀音信仰의 聖地』, 사찰문화연구원, 1996.

강호선, 「13~14세기 대장경 인출·유통과 고려대장경」, 『한국문화』91,

오용섭, 「팔만대장경의 조성과 강화」, 『인천학연구』창간호, 2002.

김창현, 「고려 강도의 문수신앙과 관음신앙」, 『한국중세사연구』제23호, 2007.

고려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 강화도 소재 돈대의 기본구조 및 시설에 대한 건축적 분석

이 병 건 \* | 동원대학교

## I. 머리말

강화에는 고려와 조선시대 군 시설이었던 54(53+1)개소의 돈대 유적이 있다. 고려시기 대몽 항쟁의 방어시설로 쌓기 시작한 돈대는 대부분 조선 중기 숙종 5년(1679)에 축조되었다. 청나라에 치욕적인 삼전도 굴욕을 당한 병자호란으로부터 40여 년 후의 일이다. 이후 프랑스(1866, 병인양요), 미국(1871, 신미양요), 일본(1876, 강화도조약) 등과의 전쟁에서 무기의 절대적인 열세로 강화도는 외세의 침탈 전초기지가 되었다. 한편으로 돈대는 강화 주변 해역에 넓게 발달한 갯벌로 특히 강화남안(江華南岸) 구역은 적의 상륙이 매우 어려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구한말에 침략한 프랑스, 미국, 일본군들이 강화 내륙에 진입하는데 크게 고전한 것도 이러한 지형적 강점 때문이었다. 강화의 돈대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오롯이 품에 안고 있으며, 지금도 북한과 최북단에 접경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돈대의 기본 구조는 성곽 출입구인 석문(石門), 사방을 에워싼 성벽(城壁), 포좌(砲座), 상층에 쌓은 여장(女牆), 무기고 겸 생활공간 돈사(墩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 3丈(9.09m) 내외의 높이로 성벽을 쌓되, 상층과 하층의 이중구조를 갖추었다. 하층에는 바다 방향 성벽에 3~4개의 포좌를 만들어 화포를 배치하고, 병사들의 생활공간인 돈사(墩舍)와 무기고를 두었다. 성곽 상부에 자리한 상층에는 여장을 둘러쌓고 총안(銃眼)을 만들어 조총 등 개인화기를 동원해 근접하는 적병을 제압하는데 활용되었다. 여장 수는 기록에 잘 남아있는데, 보통 30~50개소가 만들어졌다. 여장의 수로 돈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듯 강화 돈대유적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접경지역이라는 한계로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강화에 있는

54개소의 돈대에 대한 최근까지의 조사 성과를 정리하여 건축 방면에서 강화 돈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점검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순서로 제Ⅱ장에서는 돈대의 축조 시작과 유적 분포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돈대 축조의 조영적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월곶돈대의 유적현황을 소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앞 장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돈대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 제Ⅴ장 맺음말에서는 강화돈대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정리하였다.

## Ⅱ. 강화 돈대의 건설과 유적 분포 현황<sup>1)</sup>

돈대란 한자사전에 돈(墩)은 ‘평지보다 좀 높직하게 된 곳’이며, 대(臺)는 ‘높고 평평한 곳’을 뜻한다고 나와 있다. 개념어사전에서는 돈(墩)은 ‘봉화를 올리는 곳’, 대(臺)는 ‘적의 동정을 살피는 곳’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돈대의 역사는 고려와 조선뿐 아니라 삼국시대에도 한반도의 지형학적 특징에 맞추어 접경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였다. 삼국시대의 각축지였던 양주지역 독바위보루에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sup>2)</sup>

강화도의 경우 돈대는 일종의 해안에 설치된 군 초소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규모가 큰 군사시설을 진(鎭)이라 하고, 작은 것은 보(堡)와 돈대라 했는데, 원래 돈대는 성을 쌓기 곤란한 지역에 만든 성곽 대체 시설로서 소규모의 방어용 성채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적 선박 침입을 경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돈대는 대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안가 구릉지나 절벽 위에 설치되었다.

강화 돈대의 입지는 대략 꽃형(串形), 산정형(山頂形), 산사면형(山斜面形), 평지형(平地形)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꽃형이 24개소로 가장 많고, 산정형 12개소, 산사면형 12개소, 그리고 평지형이 5개소 순으로 확인된다. 돈대의 형태는 사각형, 원형, 곡형, 장구형, 장방후원형 등이 있으며, 대략 크기는 대·중·소로 나눌 수 있다.

강화에는 5진(鎭: 월곶진·제물진·용진진·덕진진·초지진), 7보(堡: 광성보·선두보·장곶보·정포보·인화보·철곶보·승천보), 54돈대가 있었다. 돈대는 윤이제의 지휘로 숙종 5년(1679) 6개월에 걸

\* 동원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 교수: bglee@tw.ac.kr

1) 강화도 돈대 유적현황은 국가유산청과 강화도청 문화유산 검색에서 제공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연구자가 직접 현장 조사한 내용을 첨가하였다. 또한 <이광식, 『강화돈대 순례』, 들메나무, 2022>와 <이경수, 『강화도史』, 역사공간, 2016>에서 언급한 내용을 대부분 활용하였다.

2) 양주 독바위보루 주변의 당시 방어시설 관련 내용은 다음 글이 참고가 된다. 백종오, 「한국고대 관방문화의 원류, 양주 독바위보루(瓮岩堡壘)-堡壘 및烽燧의 출현과 전개-」, 『2025 양주 독바위 보루 학술세미나 자료집』, 양주시·고구려발해학회, 2025년 6월 27일, 17~56쪽.

쳐 48개소가 축조되었다. 고려시대에 축조된 바탕이 있었으므로 짧은 기간에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18세기까지 검암, 병현, 철북, 초루, 작성 등 5개소의 돈대가 더 축조되어 53개소가 되었으며, 19세기 병인-신미양요 이후 용두돈대가 추가됨으로써 총 54개소의 강화돈대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강화 남쪽 선두포 일대의 수로를 방어했던 갈곶, 양암 두 돈대가 폐쇄됨으로써 실제 52개소의 돈대가 운영되었다.

54개소의 강화돈대는 대략 4개의 모듬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강화도와 석모도를 가르는 강석해협(江席海峽)구간,<sup>3)</sup> ②강화남안(江華南岸)구간,<sup>4)</sup> ③강화도와 김포시 사이의 염하가 위치한 염하수로(鹽河水路)구간,<sup>5)</sup> ④강화북안(江華北岸)구간<sup>6)</sup>이다. 이들 돈대는 축조된 지 340년이 지난 만큼 거의 허물어지거나 완전 멸실(장자평·제승·휴암·낙성·병현돈대)되었지만, 지난 1990년대에 일부 복원작업이 이루어져 상당수 옛 모습을 되찾았다. 성벽 일부라도 남아서 보존되고 있는 돈대는 현재 35개소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특히 북쪽 해안 구간에 자리한 돈대들은 북한과의 군사 접경지역으로 폐쇄되거나 현재 군 시설로 재활용되고 있어 접근이 금지되고 있다. 반면, 일반인의 출입 통제로 다행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돈대들도 있다.

### Ⅲ. 강화 돈대유적 고찰 : 월곶돈대

월곶돈대는 월곶진(月串鎭)의 관할 아래에 있던 돈대로, 강화도 북동쪽 학무산에서 해안 방향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어진 독립 능선에 자리했다. 월곶진에는 월곶돈대 이외에 옥창돈대, 휴암돈대, 적북돈대가 있으며, 출입문은 월곶돈대 옆에 조해루(朝海樓)라는 누각건물로 복원되어 있다. 돈대는 조강(祖江)과 염하(鹽河)로 갈라지는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sup>7)</sup> 강화와 김포, 황해도 연백 일대가 모두 관찰되는 군사 요충지이다. 하구 한가운데에는 토사의 퇴적으로 형성된 하중도(河中島)인 유도(留島)가 있다.

3) 11곳: 무대, 망월, 계룡, 석각, 삼암, 망양, 건평, 굴암, 송강, 선수, 장곶 돈대

4) 11곳: 북일곶, 미루지, 송곶, 분오리, 양암, 갈곶, 후애, 택지, 섬암, 장자평, 동검북 돈대

5) 15곳: 초지, 덕진, 용두, 손돌목, 광성, 오두, 화도, 용강, 좌강, 가리산, 갑곶, 염주, 제승, 망해, 옥창 돈대

6) 17곳: 월곶, 휴암, 적북, 낙성, 숙룡, 소우, 병현, 석우, 천진, 철북, 의두, 불장, 초루, 작성, 구등곶, 광암, 인화 돈대

7) 조강(祖江)은 '한강 하구'의 원래 이름이다. 한강, 임진강, 염하, 예성강은 하구에서 만나 서해로 흐른다. 환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해 황해도를 거쳐 임진강이 한강과 만나는 한강 하구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조강(祖江)"으로 기록되어 있다.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앞에서 이 강들은 임진강과 만나 흐르다가 북측의 예성강과 어우러져 서해로 빠진다. 출처: 남북경협뉴스(<http://www.snkpress.kr>)

1999년 육군박물관 조사 당시 기록을 보면 전체 성벽 중 동벽 약 30m, 남벽 약 5m 길이의 구간이 훼손되었으나 그 이외 구간은 약 1.5m 내외 높이의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었으며, 문지는 흥예 구조의 아치와 문주석 등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돈대 가운데 몇 앓되는 흥예식 출입문이다. 이후 2006년 전면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sup>8)</sup>

성벽의 전반적인 축조 방식은 육군박물관 조사 당시 평면 실측 도면에서 면석(面石)이 표현된 성벽 외벽과 달리 내벽은 성돌을 두른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편축법으로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문은 높이가 성 내부 지표면보다 낮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면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구조이다. 내부에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연미정(燕尾亭)이 있는데, 1976년 복원되었다. 포좌는 총 4개이며, 복원 이전 여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나, 여장 일부 흔적이 있었다. 돈대의 전반적인 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 IV. 강화 돈대의 건축적 특징

강화 돈대의 평면형태는 크게 ①방형(정방형, 장방형, 말각방형 포함), ②원형(원형, 타원형), ③반월형(半月形)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방형은 총 26개소(제송, 염주, 화도, 덕진, 섬암, 후애, 양암, 송곳, 북일곶, 검암, 송강, 건평, 망양, 석각, 계룡, 망월, 무태, 인화, 광암, 구등곶, 작성, 불장, 의두, 철북, 숙룡, 휴암돈대)로 가장 많으며, ②원형은 총 11개소(망해, 좌강, 용당, 오두, 손석항, 미루지, 장곶, 삼암, 초루, 월곶, 옥창돈대)이며, ③반월형은 3개소(가리산, 굴암, 석우돈대)이다. 분오리돈대와 같이 지형에 맞추어 초승달 형태로 특이하게 축조된 경우도 있다. 41개소 이외에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원형이 훼손되거나 복원 과정에서 원래 형태를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총 13개소(갑곶, 광성, 용두, 초지, 장자평, 택지, 동검북, 갈곶, 천진, 빙현, 소우, 낙성, 적북돈대)가 있다.

강화 돈대의 규모는 김석주(金錫胄)의 『식암유고(息菴遺稿)』 권17 「강도설둔처소별군(江都設墩處所別軍)」과 『강화부지(江華府志)』 등에 보(1步=4尺:1.2m) 단위로 둘레가 기록되어 있다. 둘레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잔존 상태가 불량·멸실 되었거나 후대의 복원으로 원형을 알 수 없는 돈대, 일반적인 돈대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돈대(동검북돈대)를 제외한 41개의 둘레를 합산하여 평균치로 환산할 경우 대체적으로 둘레가 100여 미터 정도가 된다. 돈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형으로 환산할 경우 한 변 길이  $25.39 \times 25.39 = 644.65\text{m}^2$ 의 평균면적이 추산된다. 물론 대부분

8)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조선의 보장지처, 강화 그리고 진·보·돈대 I』,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20, 198쪽.

의 돈대가 정확한 실측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sup>9)</sup>

강화 돈대의 시설은 크게 성벽과 성문, 전방 포좌, 배수시설인 누조(漏槽), 상층 바닥 위 체성벽에 이어 쌓은 여장, 생활공간 돈사가 있다. 각각의 건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성벽(城壁)은 보통 지형에 따라 안쪽으로 퇴물려 쌓은 기단부와 그 위의 체성벽, 그리고 여장이 있다. 성벽을 축조하기 전에 부지를 풍화 암반층까지 노출시킨 후에 기초작업을 하였다. 돈대가 대체로 경사가 있는 산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지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성곽의 외부 둘레에 맞추어 석축 또는 토석혼축식으로 토대를 만들었다. 이 토대 위에 지대석을 설치하였는데, 경사도에 따라 암반 상부에 바로 지대석을 놓거나 지대석 없이 바로 면석을 쌓는 경우가 있다. 체성벽은 한국 성곽건축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구조인 협축, 편축, 혼합식이 모두 적용되었다. 성곽 내부는 포좌, 계단, 돈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성벽은 협축식으로 쌓을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모두 석축으로 되어있는데, 장방형 혹은 정방형으로 다듬은 면석을 사용하였다. 자연석을 활용하여 각 층을 허튼 층쌓기로 하였으며, 부분 부분 필요한 곳에 그랭이질도 하였다. 망양돈대 등 일부 복원된 돈대의 경우 체성벽과 여장 사이에 미석(楸石)을 쌓기도 하였으나 실물이 확인될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된 근거자료가 없어 불분명하다.

성문(城門)은 전방 포좌가 있는 바다쪽 반대편에 자리하며 모든 돈대가 1개씩 있었다. 입면 형태에 따라 평거식(平居式)과 홍예식(虹蜺式)으로 분류된다. 평거식이 일반적인 형태로 출입문 상부 인방을 하나의 긴 장대석을 덮는 방식이다. 홍예식은 출입문 상부를 아치 방식으로 마감하는 방법이다. 강화 돈대 가운데 위의 월곶돈대를 비롯하여 구등곶돈대, 미루지돈대의 3개소가 이 부류에 속한다. 입구 형태와 상관없이 문을 구성하는 문돈테 구조는 모두 동일하다. 외측 선단석을 통로부 안쪽으로 20cm 정도 내어 세웠다. 선단석 바로 안쪽에 문을 달 수 있도록 양측 통로부 벽 쪽으로 바닥에 문지도리석을 상부에 문돈테석을 놓았다. 이유는 문설주를 보호하고 두 짝의 문이 안쪽으로만 열리도록 의도한 것이다. 내부 통로 폭은 약 1.5~1.6m 정도이고, 상부 문돈테석는 지름 15cm 크기의 원형이다. 문지도리석의 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격은 1.2~1.3m 정도로, 철문의 폭이 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장군목(빋장)을 끼우기 위한 장군목 빋장돈테석 흔적도 양쪽 벽 높이 중간 부분에서 볼 수 있다.

포좌(砲座)는 돈대의 전방인 바다 방향을 지향하여 배치되며, 대부분 3~4개의 포좌가 배치되었다. 포좌는 포실(砲室)과 포혈(砲穴)로 구성되어 있다. 포실은 평면 장방형으로 폭이 약 1m 정

9) 돈대의 건축적 특징은 주로 다음의 세 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배성수, 「肅宗初 江華島 墩臺의 축조와 그 의의」, 『朝鮮時代史學報』27, 朝鮮時代史學會, 2003.12, 131~169쪽; 『조선의 보장지치, 강화 그리고 진·보·돈대I』,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20, 36~39쪽/302~323쪽; 李旺訓, 『조선 후기 강화 돈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34~53쪽.

도이고, 길이가 약 4m 정도이며, 높이가 약 1.5m 정도이다. 전면 포혈 쪽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인데 포혈은 정방형으로 가로 및 세로가 35cm 크기이다. 포좌 안쪽 내부 포실 좌측면 벽체에는 이방(耳房)이란 감실(龕室)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북일곶돈대, 장곶돈대, 송곶돈대, 망양돈대(복원), 삼암돈대 등 주로 강화 서해안 일대 돈대에서 확인되는데, 형태와 구조를 통해 볼 때 포탄을 수납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추정된다.

누조(漏槽)는 폭우 등으로 인한 성벽 붕괴를 막기 위해 외부로 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수시설로 형태에 따라 상방하원형(上方下圓形), 방형(方形), 합구형(合口形)으로 분류된다. 크기는 너비 기준 70cm가 넘는 대형부터 30cm 내외의 소형까지 다양하나 남아있는 유구가 많지 않아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여장(女牆)은 흔적은 보이지만 강화돈대에서 현존하는 온전한 여장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추정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록과 당시 사진을 통해서만 유추될 뿐이다. 기록에 따르면 매음도(煤音島)의 박석(薄石)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진은 갑곶돈대와 초지돈대 사진이 있는데, 갑곶돈대 사진 판독 결과 여장은 1개소의 총안으로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초지진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는 돈대 여장에 근총안과 원총안이 도합 3개씩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지진의 경우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의 주요한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파괴와 재축이 계속된 곳이다. 반면 갑곶돈대는 직접적인 전투에 관한 기록이 돈대 축조 후에 보이는 않는다. 따라서 숙종 초에 축조된 돈대는 좀 더 고식(古式)의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장의 높이는 6尺(1.83m), 두께는 3尺(0.92m), 길이는 9尺(2.76m)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 기록된 여장의 개수로 추정해 본다면 여장과 여장 사이 간격은 2.5步(3m) 정도 되었던 것으로 계산된다.

돈사(墩舍)는 그 원형이 남아있는 돈대가 없다. 그러나 돈대가 집중적으로 조영되었던 숙종 시기에 모든 돈대에 돈사를 구축할 계획은 있었던 것 같다.<sup>10)</sup> 신미양요 당시 미군이 촬영한 초지돈대 사진과 내부 발굴에서 기와편이 출토되는 것을 통해 돈사가 돈대 내부에 존재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사진을 참고하면 건물의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3량가이다. 여기에 빗마루가 설치되어 있어, 퇴칸까지 합하면 측면 2칸에 4량가 건물로 추정된다. 건물 좌측면에 굴뚝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주거공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붕은 기와이지만 하부는 움집 형태이다. 이 외에 많은 돈대에서 생활용구와 기와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강화돈대에는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돈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李旺訓, 『조선 후기 강화 돈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48쪽.

## V. 맺음말

대몽 항쟁 최후의 보루였던 강화돈대는 고려시기의 방어시설을 근간으로 하여 조선 후기에 집중 조영되었다. 54개소에 이르는 방어용 돈대들이 10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약 2km마다 분포되어 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역사적, 전쟁사적 가치가 탁월한 문화유산이다. 돈대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조망이 수월하면서도 접근이 어려운 접경이나 해안지역의 높은 평지에 9m에 이르는 성곽을 쌓았다. 54개 돈대 시설은 대부분 숙종 5년(1679)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승군 8,900명과 어영군 4,300명, 석공 등 전문과 보조 인력 2,000여 명이 축성에 투입되어 80여 일 만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고려 때 대몽 항쟁을 위해 쌓았던 토대가 있어 짧은 시일 내에 가능했을 것이다.

강화도에서 유사 이래 이러한 큰 역사(役事)는 없었다. 구한말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서구 열강 그리고 일본은 조선 침략을 위해 교두보 차원에서 강화도를 맨 먼저 점령하고자 했다. 조선군은 절대적인 화기의 열세로 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강화도는 목숨을 다해 싸웠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된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최근 강화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많은 고려시기 문화유산(능묘, 궁성, 사찰)과 조선시기 문화유산(관방유적) 그리고 구한말 서양인의 문화유산(성공회 성당)이 밀집되어 있다. 여기에 방직업과 어업 등 1970년대 근현대 문화유산(조양방직과 갯벌)이 있어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강화 돈대유적은 세계유산 등재에 갖추어야 할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충분하다. 강화돈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현장 조사와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역사의 산실 강화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큰 투자와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하루속히 진행되어야겠다.



 참고문헌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조선의 보장지처, 강화 그리고 진·보·돈대 I·II(2권)』, 2020.
- 배성수, 「肅宗初 江華島 墩臺의 축조와 의의」, 『朝鮮時代史學報』27, 朝鮮時代史學會, 2003.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華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墩臺篇), 1999.
- 이경수, 『숙종, 강화를 품다』, 역사공간, 2003.
- 이경수, 『강화도史』, 역사공간, 2016.
- 이광식, 『강화돈대 순례』, 들메나무, 2022.
- 이병건, 「강화도 소재 돈대유적에 대한 초보적 고찰」, 『東元大學校 論文集(第29輯)』, 2024.
- 이왕훈, 『조선 후기 강화 돈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통문화대 석사논문, 2022.



# 강화지역 기독교 문화의 유입과 변용

박 아 름 | 숙명여자대학교

## 1. 강화지역 기독교 교회의 설립

현재 강화군의 행정구역은 교동면·삼산면·서도면을 포함하여 강화읍과 12개 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69,562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2023년 종교시설 현황을 보면 강화지역에는 성공회와 감리교를 비롯 약 220개의 교회가 있다.<sup>1)</sup> 잘 알려진 강화읍 성공회 성당, 온수리 성 안드레 성공회 성당, 주문도의 서도 중앙 감리 교회, 교동도의 구 교동 감리 교회 등은 한옥 또는 한·양 절충식의 근대 기독교 교회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온수리 성 베드로 성공회 성당, 길상 감리 교회, 동검도 가톨릭 채플에서는 대표적인 현대 교회 건축가인 이은석, 한국 스테인드 글라스 대표 작가인 조광호 신부, 온수리 출신의 서양화가 김용철 등 현대 기독교 미술을 대표하는 이들의 작품도 찾아볼 수 있다.

강화지역에서는 19세기 초 신유사옥(1801년)의 순교로 기독교, 특히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sup>2)</sup> 그러나 강화읍에 강화 천주교 본당이 시작된 것은 1922년이며, 1956년 강화읍 관청리에 대지를 구입하고 1957년 강화공소를 세우고 1958년 노기남 주교로부터 정식 성당 설립 인가를

1) 이덕주·조이제, 『강화기독교 100년사』, 강화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편찬위원회, 1994. 2000년의 강화의 종교 현황에서는 강화의 종교단체로 교회 179개와 신자 수 17,170명으로 강화군 인구 67,100명 대비 25.6%를 차지하였다. 불교 18.85, 천주교 5.8%이다. 교파별로 감리교회가 120개 교회에 신자 수 13,327명, 전체 기독교인의 77.6%, 장로교가 16개 교회에 성도수 1,465명으로 8.5%, 성공회가 12개 교회에 신자 수 988명으로 5.8%였다.

2) 천주교의 강화 본당 설립은 1958년이지만 강화 천주교회의 역사는 조선 말기 신유박해(1801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1년 천주교인 박해로 강화도에 귀양 온 은언군(恩彦君) 인(綱)의 부인 송 마리아와 며느리 신 마리아가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에게 영세를 받고 천주교인이 된 것이 발각되어 사약을 받고 순교한 것이 강화 천주교인 첫 순교였다. 이덕주·조이제, 『강화기독교 100년사』, 강화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역사편찬위원회, 1994. pp.58-60. 이민구, 『강화중앙교회100년사』, 강화중앙교회, 2002, pp.32-34

받아 천주교의 성당 건축은 성공회와 감리교보다 늦다. 19세기 말부터의 성공회와 감리교회의 적극적인 선교로 신자 수가 급증하면서 기독교 교회가 다수 설립되었다. 1890년 제물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성공회 코프 주교와 워너 신부가 1893년 강화도 갑곶 나루터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감리교는 1898년 미감리회 존스 선교사가 강화읍 갑곶나루를 통해 강화읍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건이 시초이다.

성공회 존 코프(John Corfe, 고요한) 주교는 1892년부터 워너(L. O. Warner) 신부에게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선교지를 탐색하게 하면서 강화도에 교회가 없는 것을 파악하고 1893년 7월 워너 신부를 파송하여 당시 갑곶의 조선수사해방학당(해군사관학교)옆에 초가집을 구입하여 성 니콜라 성당 겸 선교사 사택을 설립하였다. 이곳은 1894년 1월 20일 코프 주교가 성 니콜라 회당으로 축복하여 강화 최초의 성공회 회당이 되었다. 워너가 귀국한 후 트롤로프(Mark N. Trollope, 조마가, 제3대 주교) 신부, 힐러리(F. R. Hillary, 길강준) 부제, 외과 의사인 로스(A. F. Laws, 노인산) 의사와 피어슨(Pearson) 인쇄공 등 5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1896년 11월 수십 명의 입교자들에게 영세를 주었고, 1897년 11월 7일 인천 성 미카엘 성당에서 김희준, 김군명에게 영세를 베풀었는데 선교 7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에게 영세가 이루어졌다. 김희준은 이후 견진을 받고 1915년 최초의 한인 사제로 서품되었다.

1900년 트롤로프 신부는 강화읍에 700평의 대지 위에 동서 길이 10칸, 남북 길이 4칸 총 40칸 규모의 전통 한옥 고건축 형식의 성공회 성당을 세웠다. 같은해 강화읍에서 의료선교를 하던 로스와 힐러리 부제가 강화 남부의 온수리 지역으로 선교를 확대하여 길상면 온수리 난저골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와 의료봉사를 하였다. 로스 선교사의 의료 활동으로 1903년 한 해 동안 3,541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1906년 온수리 교우들의 봉헌과 헌신으로 성공회 성 안드레 성당이 세워졌다. 1901년 내리, 초지, 삼흥리, 넓성리 교회, 1902년 흥왕리 1905년 냉정리, 1906년 석포리, 1908년 송산에 이어 교동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진명, 신명학원을 설립하여 학원 선교가 활성화되었다. 1915년에는 2개의 성당, 15개의 회당, 9개의 학교, 2,000명의 교인으로 성장하였다.

감리교는 1885년 미감리회 소속 한국 주재 첫 선교사로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인천 제물포교회(현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강화지역 감리교 선교가 이루어졌다. 1892년에 배재학당에서 교육과 문서 선교활동을 하던 존스 선교사가 인천 지역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존스는 한국인 전도인들과 함께 인천지역의 네 거점 가운데 강화를 거점으로 하는 섬 지역을 첫 번째 지역으로 삼고 교동, 황해도 연백, 해주 지역까지 선교사업을 확장하였다.

1898년 미감리회 존스 선교사가 강화읍 갑곶나루를 통해 강화읍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남문에서 강화 유수에 의해 거절당하였다. 이에 강화선교는 강화읍에서 시작하지 못하고 북쪽에 위치한 서사면 교항동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확산하였다. 강화 최초의 감리교회는 강화 교산교회(시

루미, 교향)이다. 1893년 이승환의 집에서 시작한 시루미의 신앙공동체는 1894년 초가 12칸의 예배당을 마련하여 시루미에서 교향으로 이전하였다. 교산교회를 설립한 인물은 이승환과 김상임인데, 김상임(1850-1902)은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기독교에 반대하다가 개종하여 1894년 존스에게 학습과 세례를 받았으며 전도사로 일하다가 1902년 열병으로 별세하였다. 교향 교회가 세워진 지 3년 후 1896년 설립된 홍의교회는 강화 최초의 기독교식 장례로서 홍의 교회 교인인 ‘고씨 부인 장례식’이 잘 알려져 있다. 장례식에서 찬송을 부르고 십자건을 쓰고 저고리에 십자를 놓아 입고, 묘에는 비석 대신 십자패를 세워서 사후에도 기독교도임을 표시하였다.

감리교 교회가 강화읍에 세워진 것은 존스 선교사가 입성에 실패한 7년 후로 1900년 강화읍 신문리 천교하에 기도처를 세웠다가, 1901년 4월 부내면 홍문동 잠두 부락으로 교회를 옮겼다. 기와집 25칸과 초가집 16칸을 사서 교회당으로 봉헌하였는데 현재의 강화중앙교회(창립일 1901년 4월 1일)이다. 이로써 강화 선교의 구심점이 교향에서 홍의를 거쳐 강화유수가 있는 강화읍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3년 후인 1914년에는 서양 현대식 벽돌 건물로 건축하고 ‘강화읍 잠두교회’를 ‘강화읍교회’라고 바꾸어 불렀다.<sup>3)</sup> 잠두 교회는 강화읍교회를 거쳐 1976년 강화중앙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하였다. 강화중앙교회는 일제강점기에 교육·계몽·민족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강화도의 서쪽의 석모도에는 1901년 3월 3일에 북감리회 소속이었던 기이부(奇伊富, E. M. Cable) 선교사가 안신애, 김치권과 석모리 174번지 초가집에서 현재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석모교회(인천시 강화군 삼산면)를 개척하였다. 석모도의 감리교회는 5곳으로 송가교회, 석모교회, 삼남교회, 석포교회, 향포교회이다.

교동도의 구 교동교회(1899년,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는 원래 교동 읍내리에 건축되었으나 일제 탄압으로 1933년 2km 거리의 상룡리로 해체, 이전하였다. 시각장애인용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생가터 앞에 위치한다. 건물 전면 우측에 세워진 종탑에는 일제 때 징발을 피한 종이 걸려있다. 교회 전면에는 남녀 출입구가 좌우로 구분되어 있으며, 팔작지붕 앞면에 십자가를 달았다.

3) 이민규, 『강화중앙교회 100년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강화중앙교회, 2002.

## 2. 강화 지역 교회의 건축적 특징

한국의 초기 교회 건축은 한옥 또는 한·양 절충, 고딕 양식이다가 1960년대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성미술 운동의 영향으로 모더니즘(근대주의) 양식으로 변천한다. 1950년대 말~1960년대 근대주의 교회 건축은 베네딕도회 수도신부 알빈(Alwin Schmid, 1904-1978), 오스트리아인 건축가인 오토카 울(Ottokar Uhl), 그리고 해방 이후 건축을 전공한 한국인 건축가들에 의하여 발전하였다. 교회 건축은 현대에 와서는 포스트모던과 다원화의 시대로 변천한다.<sup>4)</sup> 강화도 지역의 교회 건축은 근현대의 다양한 교회 건축 양식을 하나의 섬 안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강화도 지역에 근대 기독교 문화의 유입을 보여주는 건축의 예는 성공회와 감리교의 교회들이 있다.<sup>5)</sup> 성공회 성당들은 대개 1890년대에서 1900년대에 설립되었으나 초기 건립 당시의 건물이 남아있는 것은 성공회 강화 성당과 온수리 성 안드레 성당이다.<sup>6)</sup>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인 성공회 강화 성당(사적 제424호)은 대한성공회 초대 주교 코프에 의하여 1900년에 건립되었다. 유럽의 교회의 바실리카 양식과 동양의 불교 사찰 양식을 조합하였다. 본당은 동서 길이 10칸, 남북길이 4칸, 총 40칸 규모이다. 본당 내부는 한 열에 9개의 고주를 세우고 동서 두 곳 끝에는 중간에 한 개씩 세워 20개의 고주가 건물 중간 16칸을 중층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24칸은 1층이 되도록 한 익공식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중층에는 자연채광이 되도록 유리창을 내었다. 건물 내부는 1층에 전실(현관)과 퇴실(예복실), 두줄로 늘어선 기둥 외측에 회랑을 배치하고, 기둥 내측 부분에는 지성소(제단 구역)와 회중석을 배치하였다.

온수리 성 안드레 성당(인천시 유형문화재 52호, 1906)은 종각을 겸한 2층 누각식 외삼문과 단층 팔작지붕 일자형 단층 한옥의 본당이 있다. 본당은 정면 3칸 측면 9칸이고, 솟을삼문 형식의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중앙 1칸은 2층 종루이다. 팔작지붕에 용마루 양 끝에 연꽃 모양으로 된 돌 십자가가 달려있다. 12사도들을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으로 제단과 회중석이 구분되어 있고, 측랑이 없으며, 회중석 가운데 복도는 남녀 좌석을 구분하고, 후진(後陣)이나 고창(高窓)의 전

4) 김정신, 『한국의 교회건축』, 미세움, 2012, pp.191-205.

5) 손장원, 『문화재가 된 인천 근대 건축』, 인천도시역사관, 2020

6) 강화도의 12개 성공회 교회는 강화읍교회(1900), 온수리교회(1906), 내리교회(1901), 넘성교회(1901), 삼흥리교회(1901), 초지교회(1901), 흥왕리교회(1902), 냉정리교회(1905), 석포리교회(1906), 송산교회(1908), 장화리교회(1952), 선수교회(1953)가 있다. 강화성당축성백주년행사준비위원회, 『대한성공회 강화읍성당 축성백주년(1900~2000)』, 대한성공회 강화읍교회, 2000, pp.30-33

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이 생략되었다. 출입구 상부 ‘성 안드레 성당’이라는 현판을 달았다.<sup>7)</sup>

2004년에는 성 안드레 성당 옆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새 성전을 건축하여 축성식을 가졌다. 교우인 홍익대 서양화 교수인 김용철 작가가 제대 모자이크와 천창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하였다. 강화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공회 성당이다.

감리교회의 초기 한옥 성당으로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의 서도 중앙 교회가 있다. 건립 당시 이름은 ‘진촌교회’였으나 1978년 ‘서도 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1902년 감리교 전도사 윤정일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주문도에 들어온 이후, 1923년 3월에 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5월 12일에 상량식을 하였다. 한옥 교회 대들보에 먹으로 “久住降生 一九二三年 五月 十二日 午前 八時 立柱上梁”이라는 상량문을 기록하였다. 상량식 후 두 달만인 7월에 공사를 마치고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팔작지붕에 정면 4칸, 측면 8칸, 모두 50여 칸(32평)의 2고주 7량 건물이다. 종탑과 본당 두 건물로 구성되었다. 교회 전면에 2층 높이의 종탑 건물을 세우고 뒤에 장방형의 단층 본당 건물을 세웠다. 종탑 2층은 평북 출신으로 주문도에 들어와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주문교회 초대 교인 윤기현이 기증한 구리종을 걸었다. 교회 종은 일제 말에 공출되어 현재는 본당 밖에 세운 철탑 위에 1972년 제작한 철제종이 있다. 종각 2층에는 세 벽에 팔각 창을 냈다. 건물 벽체 위쪽 벽에는 격자 창문을 남쪽에 4개, 북쪽에 3개 어긋나게 달았다. 출입구는 좌우로 두 개 있다. 예배당 내부는 목조 마루이며 기둥 12개를 두 줄로 세우고 그 위에 들보와 도리를 일곱 개씩 얹었다. 기둥 12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

내부는 바실리카 삼랑식 건물로 신랑과 측랑, 후진으로 구성되었다. 후진에 있는 강단은 앞에 화문을 새긴 판자를 댄 난간을 설치하였고 강단에 오르는 계단이 양쪽에 있다. 강단의 강대상 위쪽 천장에 격자무늬 형태의 보개가 장식되어있다. 왕의 옥좌 장식과 비슷한 강단과 강대 장식이다.<sup>8)</sup>

강화도의 현대 교회 건축의 예로는 서울의 새문안 교회를 지은 이은석 건축가가 세운 길상 감리교회와 명때림 채플(Meditation Chapel)이 있다. 명때림 채플은 ‘바다 채플’, ‘골방 채플’, ‘하늘 채플’로 구성되었다. 바다 채플의 우측 벽에 12개 사각 깔대기로 디자인된 스테인드글라스 벽면은 외부의 자연이 연속적으로 인식되도록 추상적으로 녹음을 변환하여 내부로 관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은석은 모더니즘 건축가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신을 따른 시리아니(Henri Ciriani)의 제자이다. 미니멀리즘을 의도하는 건물이면서 순례자의 실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순수하고 기능적인 단순성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기하학적 추상성, 단순성의 미학을 추구하며 자연광을 건축

7) 주성식 모세 신부, 『대한성공회 온수리교회 선교 125년사』,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온수리교회 125년사편찬위원회, pp.90-91

8) 이덕주, 『주문도 한옥 예배당 100년 이야기』, 신앙과 지성사, 2023, pp.110-114.

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빛과 함께 건축을 구성하는 르코르뷔지에 계열 건축가로서 이동을 동반하는 자연광을 강조한다. 교회 건축에서 본당의 강단 뒤편 또는 측면, 상부에서 벽에 유입되는 자연광이 빛의 유입구 위치와 빛이 들어오는 방향성에 따라 영적 분위기를 살리도록 설계한다. 합리적인 기능성과 실용성, 들림과 열림을 통한 소통,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환대의 건축’을 교회 건축의 목적으로 삼는다.<sup>9)</sup>

### 3. 교회 미술의 유입과 현대화

강화 성공회 성당과 온수리 성 안드레 성공회 성당의 십자가의 길 14처 성화는 강화지역의 근대 교회 미술의 사례이다. 강화 성당의 14처 성화는 고전적인 유럽의 성화풍을 보여주는 반면, 온수리 성 안드레 성당의 성화는 영국의 라파엘 전파의 화풍으로 그렸다. 강화읍 성당의 성화는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들에 의해 세워진 전북 익산 나바위 성당, 전북 진안 어은 공소 등에 유사한 예를 볼 수 있어서 근대기에 외국 선교사에 의하여 인쇄물로 유입되어 들어온 교회 미술을 대표한다.<sup>10)</sup>

강화지역의 현대 교회 미술의 사례로는 성 베드로 성공회 성당의 김용철 작가의 한국과 강화도 지역의 토속미를 살린 모자이크와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교산 감리 교회의 조원희 작가의 추상적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동검도 채플의 조광호 신부의 비움과 명상을 유도하는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있다.

교산 감리 교회의 제단 후벽과 성전 우측 벽을 장식하는 스테인드글라스는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한국 가톨릭 미술가회 소속으로 갑곶 성지, 연동 110주년 교회, 영락교회 50주년 선교관, 정동교회 110주년 선교관, 존슨 110주년 교회 등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한 조원희 작가의 작품이다. 성전 우측 벽면에 장방형으로 설치된 7점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은 ‘천국의 영광·왕관과 열쇠,’ ‘기쁨과 감사·보리단·언약의 무지개,’ ‘섬김·희생·물고기·떡·쟁반,’ ‘십자가의 구속·보혈과 어린양,’ ‘영접과 기원·기도의 손과 성령의 불,’ ‘구도의 길·노아의 방주,’ ‘죄성(혼돈된 삶), 바벨탑과 돌든 손’을 주제로 구약부터 신약의 주요 사건을 담은 성경의 내용을 추상화하여 표현하였다.

2004년도에 바실리카 양식으로 건축된 성 베드로 성당에는 온수리 교회 복사(服事) 출신으로 홍익대 교수를 지낸 김용철이 제작한 제대의 제단 벽면 모자이크와 34개의 천창과 성당 양쪽 벽면

9) 이은석, 『건축가 이은석의 환대, 열린 건축을 향한 7가지 시선』, 픽셀 하우스, 2023, p.265.

10) 근대 십자가의 길 14처 성화에 대해서는 박아림, 「강화지역 성공회 성당을 중심으로 본 근대 한옥 성당의 건축과 유물」, 『유라시아연구』, 11권, 2024, pp.303-339.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다. 고향 강화의 온수리 한옥 성당에서 복사를 서면서 성장한 김용철 작가는 2004년 완공된 강화 온수리 성 베드로 성당의 종탑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프랑스에 까지 가서 스테인드글라스를 배워서 작업을 하였다. 이후 2007년 대학로의 성 베다 교회의 재건축 때에 5층 성당의 4면 벽면 전체의 스테인드글라스도 제작하였다.

제단 모자이크화는 <부활하신 예수님 강화에 오시다>(504 x 360cm, 2004-2005)의 제목으로 비잔틴 모자이크 타일로 제작하였다. 예수가 부활 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한 말이 하단에 새겨있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교좌 성당의 제단화인 <왕좌에 앉아 있는 예수>의 이미지를 모델로 하여 강화도 정족산 삼랑성 아래에서 강화도 땅을 밟고 서 계신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고 한다. 예수상 좌우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란 글이 쓰인 성경과 성체성사의 보혈잔과 면병이 각각 제대보 위에 그려져 있다. 제단화의 가장자리 둘레 띠에는 하늘을 향해서 피는 흰색 산딸나무꽃의 연속무늬가 둘러쳐 있으며, 하단 띠에는 물고기 문양이 이어져 있다. 제단 안쪽 종루 천장의 스테인드글라스 빛이 모자이크화로 떨어지고, 이 모자이크화로부터 제대와 회중석이 연결된다. 양쪽 벽면으로 10개씩 아치형 스테인드글라스 창이 있고, 제단 반대편 벽면 상단에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원형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다.

김용철은 2003년 프랑스 낭시의 유리 학교를 방문하여 스테인드글라스를 배웠으며 다음 해에는 프랑스의 스테인드글라스 기술자가 온수리로 와서 성 베드로 성당의 종루에 설치할 여덟 개 창 의 스테인드글라스를 공동 제작하였다. 2007년에는 성전의 회랑의 스무 개 창문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하였다. 2023년에는 온수리 성공회 선교 125주년을 맞아 대성전 제단화와 같은 재료인 비잔틴 모자이크 타일로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성당 현판을 제작하여 걸었다.

김용철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빛깔그림창(2004-2019)>은 15년 동안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작업하였으며, 성베드로성당 대성전 31개와 소성전 3개 등 모두 34개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프랑스산 엔틱 유리와 미국산 판유리를 사용하여 전통 페인팅 기법으로 완성하였다. 작품 주제는 성경의 내용이며 민화풍의 수탉과 모란꽃, 한복, 한글, 강화 성당의 문과 온수리 한옥 성당과 종루 등의 모티프와 단청과 오방색을 사용하여 한국적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성공회의 토착화 노력이 현대에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전 벽면에는 김용철 작가의 <십자가의 길 14처 성화>(아치형 판넬에 과슈 아크릴릭, 2004)가 있다. 아치형 판넬에 담긴 14처의 장면이 성베드로성당 대성전 내부 3면에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다. 온수리 성공회 경내에서 베어낸 참죽나무를 이용하여 판제를 결합한 아치형 판넬 위에 과슈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다.

강화도 성 베드로 성당 2층 회랑의 창문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완공 10년 후 정년 퇴임 후부터 작업하여 전체 20점을 완성하였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머리 밑에 ‘너는 베드로다. 내

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는 글이, 좌우로는 모란과 같은 전통 문양을 담았다. “우리 전통 문양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 미술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강화도의 남쪽에 위치한 동검도에는 한국의 대표적 스테인드글라스 작가인 조광호 신부의 동검도 채플이 있다. 조광호 신부는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선교사가 본당 신부인 성당을 다니다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소개받아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안동교구 성당과 공소에 여러 점의 벽화를 남긴 앙드레 부통(1914-1980) 신부로부터 판화, 벽화, 동양화 등을 배웠다. 독일 뉘른베르크대학에서 교회 미술을 연구하였고 현 가톨릭조형예술연구소 대표이자 인천가톨릭대 명예교수이다. 동검도 채플은 3m×6m 크기의 작은 경당과 스테인드글라스 전시 갤러리로 구성된 곳으로 영성과 미술 간의 융합 작업의 전시공간과 기도공간으로 설계하였다. 마니산을 바라보는 자리에 경당을 배치하고 뒤쪽에 갤러리를 배치하였다. 채플의 후벽과 갤러리의 바다를 바라보는 벽은 마니산으로 향한 유리창과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으로 되어 있어 강화도의 마니산이 창에 담기면서 갯벌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이다. 채플에는 벽에서 천장으로 이어지는 십자가 창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당 내에 십자가상을 설치하는 상식을 벗어나 채플의 바깥 자연 공간에 십자가상을 비스듬하게 설치하여 마니산을 바라보는 채플의 후벽 유리창을 통하여 십자가상을 바라보게 하였다. 마니산을 향하여 선 소형의 채플로 미니멀리즘을 구현한 현대 교회 건축과 미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 21분과

## 한국유럽학회

### [특별분과] 유럽의 해양과 도서지역 : 환경, 지속가능성, 지정학적 도전

EU 초외곽지역(Outermost Regions)의 섬  
: 역사와 관리를 중심으로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유럽학회

대서양 섬에서 태평양 섬으로  
: 포르투갈 아소레스 및 마데이라 출신 노동  
자들의 초기 하와이 이주 역사와 배경

정호윤

국립부경대학교

바다가 가르쳐주는 인문(人文)의 지혜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산호 -

임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트연구센터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  
: 현대 국제법 역사의 기념비

Tomasz  
Wierzbowski

EURAXESS KOREA

생태현대화 이론과 지속 가능한 섬 개발  
: GR-eco Islands 사례 분석

이하얀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EU 초외곽지역(Outermost Regions)의 섬

## :역사와 관심을 중심으로

김 봉 철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한국유럽학회 회장, 법학박사

### 1. 서 설: EU의 초외곽지역과 관심의 필요성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통합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유럽 대륙에 한정하지 않고, 유럽 외부의 회원국 일부 지역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괄한다.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74조와 제349조에서 회원국의 섬 영토와 초외곽지역(Outermost Regions, OMR)을 명시하였다. 본토에서 떨어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EU 법에서 별개의 영토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초외곽지역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유럽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인 경우가 많지만, 해당 지역이 속한 국가는 정식 EU 회원국이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EU의 관세동맹, 단일시장, 공동의 법제 체계에 포함된다. 한편 이들 EU의 초외곽지역은 고립된 지리적 위치, 협소한 시장 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교통 및 물류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EU 본토와는 다른 경제적 구조와 도전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농업, 어업, 관광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고용 불안정성과 경제 다변화의 한계를 초래한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많아 EU 차원의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EU는 초외곽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조건에서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맞춤형 지원이라는 도구를 운용한다.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및 유럽사회기금(ESF)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농업,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곳에 특화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곳이 EU 정책이 구현되는 실험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7년에는 「초외곽지역에 대한 EU 전략 갱신」이 발표되어, 이들 지역을 EU 정책의 주류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EU의 초외곽지역은 유럽 국가들의 대항해 시대와 식민제국주의 등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며, 현재는 EU의 영토와 정치적 정체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통합성에 도전 과제

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글은 EU의 초외곽지역에 포함되는 주요 대서양 섬들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더하여, 이 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 대한 EU 차원의 관리 정책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 2. EU의 주요 초외곽지역

현재 초외곽지역에는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 생마르탱과 같은 프랑스령 지역,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 그리고 포르투갈의 아조레스 및 마데이라 제도가 포함된다.<sup>1)</sup> 일부의 예외도 있으나, EU의 초외곽지역에 포함되는 대부분 경우는 대서양의 섬과 제도이다.

EU의 초외곽지역 중 프랑스령은 전 세계에 분포한다. 과들루프(Guadeloupe)와 마르티니크(Martinique)는 카리브해의 소앤티리스 제도에 위치하며, 남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에는 프랑스령 기아나(Guyane française)가 있다.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에 있는 레위니옹(La Réunion)과 모잠비크 해협 마요트(Mayotte)는 해양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었다. 카리브해 북동부의 생마르탱(Saint-Martin)은 섬의 북쪽이 프랑스령이며, 남쪽 절반은 네덜란드령인 신트마르텐(Sint Maarten)이다. 이처럼 프랑스령 초외곽지역은 대서양, 인도양, 카리브해 등 다양한 해양 공간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 EU의 지리적 외연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스페인의 영토인 카나리아 제도는 북서 아프리카 해안에서 가까운 대서양에 7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고대에는 원주민인 과란체족(Guanches)이 거주했으나, 15세기 말 카스티야 왕국이 정복하고 신항로 개척 시대의 중간 기착지 및 사탕수수 재배지로 발전하면서 스페인에 통합되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인근 지중해의 세우타(Ceuta)와 멜리아(Melilla)는 각각 15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정복하였고 이후 스페인 영토로 편입되었다.<sup>2)</sup> 카나리아 제도는 EU의 초외곽지역에 포함되지만, 세우타와 멜리아는 EU의 특별지역으로 일부 EU 규정의 적용이 제한된다.

포클랜드 제도는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남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군도이다.<sup>3)</sup> 포클랜드보다 더 남쪽에는 영국이 실효 지배하는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가

1) 임소라·양수영·박철용, “유럽의 섬 관리 제도와 관광정책: 스페인, 포르투갈 사례를 중심으로”, EU연구 제64호, 2022, 75면.  
2) 이곳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나 스페인의 자치도시로서 스페인 본토 법령이 전면 적용되는데, 국경과 이민 문제로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외교적 긴장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3) 영국이 이 섬을 발견하고 상륙했을 당시 해군 재무담당관이었던 포클랜드 자작의 이름에서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프랑스식 명칭인 말루인 제도에서 비롯된 스페인어식 ‘말비나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위치하며, 이는 남극을 제외한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 중 하나로 간주된다. 세인트 헬레나와 어센션섬은 남대서양 북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남아메리카보다 아프리카 대륙에 더 가까운 섬들이다. 브렉시트 이전 영국이 EU 회원국이었던 시절에는 이 섬들도 EU의 초외곽지역에 포함되었다.

포르투갈의 자치령인 마데이라(Região Autónoma da Madeira)와 아조레스(Região Autónoma dos Açores)는 포르투갈 본토와 북아프리카로부터 서쪽 대서양에 있는 여러 섬(군도(群島) 또는 제도(諸島), archipelago)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 섬들은 15세기 초 포르투갈의 항해자들에 의해 발견되어, 항해왕자 엔리크의 해양 정책에 따라 포르투갈 왕실의 직접 통제로 식민화되었다. 이곳은 각각 사탕수수와 곡물, 목축 중심의 농업 경제를 형성하였으며, 대항해 시대에는 대서양 무역로의 전략적 거점으로 발전하였다.<sup>4)</sup>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여러 국제 분쟁에서 미국 등 외세가 군사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전통 농업의 쇠퇴, 자연재해,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주민이 해외로 이주하였다.<sup>5)</sup>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이 민주화와 식민지 해체 과정을 거치며, 마데이라와 아조레스는 헌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인 자치지역으로 인정받았다. 포르투갈 헌법 제6조와 제225조는 이들 지역이 단일국가 내 자치권을 갖는 정치·행정 단위임을 명시하며,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주민들의 자치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두 제도는 자치정부를 설립하고 입법 및 행정 권한을 이양받았으며, 이는 주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자율적인 지역 개발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1986년 포르투갈의 EU 가입 이후, 이 두 제도는 EU의 초외곽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3.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174조와 제349조의 내용과 EU의 특별지원정책

TFEU 제174조는 EU의 경제적·사회적·영토적 결속 강화(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유럽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4) 특히 아조레스의 앙그라는 환승 및 보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 스페인-포르투갈 합병과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군사 요충지로 요새화되었다.

5) 그러나 이민자 사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포경업이나 새로운 작물 재배 등을 통해 경제 생존을 모색하였다.

In order to promote its overall harmonious development, the Union shall develop and pursue its actions leading to the strengthening of its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In particular, the Union shall aim at reducing disparities between the levels of development of the various regions and the backwardness of the least favoured regions...

이 조항은 회원국과 지역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 조항인데, 특히 산업구조 전환 중인 지역,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산악지역, 도서 지역, 북극지역 등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지닌 지역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명시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여러 장치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포용적 성장과 지역적 통합을 지원한다. 제174조는 초외곽지역의 개발 지원도 포함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는 제349조를 통해 다루어진다.

Taking account of the structural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outermost regions... due to their remoteness, insularity, small size, difficult topography and climate, economic dependence on a few products... the Council... may adopt specific measures aimed, in particular, at laying down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of the Treaties to those regions...

TFEU 제349조는 초외곽지역의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제약 요인을 인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EU 법령의 특수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제약에는 원거리성, 도서적 특성, 영토의 협소함, 열악한 지형과 기후, 일부 상품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이 포함되며, 이는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EU 단일시장과의 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EU법의 일반원칙과 조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관세, 무역, 세제, 국가보조,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제349조는 초외곽지역이 EU의 법적·정책적 틀 내에 통합되되, 차등적 적용과 맞춤형 유연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성과 통합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이들 지역이 EU 일반법의 적용과 경제정책의 구현에서 독자적이고 예외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EU는 브렉시트 이전에 STABEX(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 프로그램<sup>6)</sup>을 통해서 수익 안정화 목적으로 포클랜드 제도를 포함한 대서양의 영국 영토 섬들에 약

6) STABEX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1차 상품 수출 소득의 하락에 대하여 EU가 보상 용자하는 제도이다. 1983년의 UNCTAD에서 개발도상국 측이 이 제도 창설을 요청하였으며, EU는 제3차 로메협정에서 코코아, 커피, 땅콩, 바나나, 철광석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들 상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 대 EU 수출 소득의 하락분에 대하여 EU가 용자하기로 하였다.

42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은 농업 인프라와 지역 개발에 약 52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sup>7)</sup> 이러한 조치에는 포르투갈 영토인 마테이라와 아조레스 제도에 관세, 세제, 공공조달, 농업 및 어업 규제와 같은 공동정책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우선적인 재정지원으로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결속기금(Cohesion Fund, CF) 등의 보조율을 최대 85%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포함된다.

#### 4. 구체적인 관리 및 지원 정책의 내용: 마테이라와 아조레스의 사례

포르투갈의 영토인 마테이라와 아조레스는 EU의 초외곽지역 관리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지이다.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시장 규제 및 보조금 지급에 있어 통합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마테이라와 아조레스에는 지역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생산 환경의 제약을 고려하여 낙농업, 바나나, 포도 재배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맞춤형 보조금이 허용된다.<sup>8)</sup> EU의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어획량 제한, 보존 조치 등 엄격한 규제를 특징으로 하지만, 마테이라와 아조레스 제도에서는 전통 어업의 보호와 지역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 보다 탄력적인 어획량 할당 기준이 적용된다.<sup>9)</sup>

EU 환경정책은 폐기물 처리, 수질 보호, 대기 오염 저감 등 다수의 영역에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회원국에 적용하지만, 이 두 섬은 화산 지형, 해양성 기후, 물류·기술 인프라의 제약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설정하거나 점진적 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 채택된다.<sup>10)</sup> EU 단일시장은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 통합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섬들은 지리적 고립성과 제한된 시장 규모로 단일시장 규칙의 전면적 적용에 제약을 겪으므로, 일부 분야에서는 자유시장 원칙의 예외로서 특정한 규제나 지역 보호 조치가 허용된다.

7) 주민들은 EU 해외 영토 포럼에 참여하며 유럽위원회와 협의를 지속하였다.

8) 이것은 농가 소득의 안정화와 지역의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EU가 유연한 정책 적용을 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9) 이것은 소규모 연안 어업 중심의 구조를 반영한 조치로,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10) 이것은 환경 보호라는 EU의 핵심 가치와 지역 여건 사이의 현실적인 조율을 보여준다.

〈EU의 정책과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에 대한 특례 적용〉

| EU 정책 영역 | 일반 EU 적용 방식                |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에 대한 특례                  |
|----------|----------------------------|------------------------------------|
| 농업정책     | 시장 규제·보조금 공동 기준            | 지역 맞춤 농업 보조금                       |
| 어업정책     | 어획량 할당 및 규제 엄격 적용          | 지역 어민 보호를 위한 탄력적 할당                |
| 환경정책     | 폐기물 처리·수질 등 EU 엄격 기준       | 일부 유예 혹은 단계적 적용                    |
| 단일시장 규칙  | 국경 없는 자유로운 상품·서비스·노동 이동 보장 | 지리적 제약으로 완전한 자유시장 운영 불가능: 일부 규제 유지 |

마데이라 제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금융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EU의 국가보조금 규제에서 일부 제외되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Madeira International Business Centre, MIBC)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의 기업은 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면세 보관 및 국제금융 특례 조항 등 혜택을 얻는다. 아조레스 제도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에서 본토보다 인화된 세율을 적용받으며, EU의 최저세율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정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제약과 교통·물류의 불리함을 극복하도록 배려하는 조치이다.

마데이라와 아조레스 제도는 EU의 European Green Deal과 REPowerEU 등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전환 정책의 실험장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기후 중립성 달성을 위한 EU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이다. 마데이라 제도는 EU 차원의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sup>11)</sup> 아조레스 제도는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열 및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전력 자급을 도모하고 친환경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sup>12)</sup>

이 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EU의 범유럽 교통네트워크(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의 주요 연계망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EU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

11) 마데이라의 Galomar 호텔은 100%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 호텔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하였다. 호텔은 태양열 집열기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400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빗물 재활용, 회색수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효율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15세기부터 시작된 마데이라의 레바다(Levada) 수로는 현재 Socorridos 수력 발전소에 물을 공급하여 섬 전체에 전력을 제공한다. EU는 이 수력 발전소의 현대화를 위해 4,5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생산 용량을 38MW로 확대하였다. 이밖에 마데이라는 전기차 충전소를 50개소 이상 설치하여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2) 아조레스 제도는 São Miguel 및 Santa Maria 섬에서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교통과 전력망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H2AzoRES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잉여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H<sub>2</sub>)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 및 수출하는 것인데, 특히, São Miguel 섬에서 생산된 수소를 Santa Maria 섬이나 마데이라로 수출하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Terceira 섬에서는 34개 유럽 파트너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IANOS(Integrated Solutions for the Decarbonization and Smartification of Islands)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하며, 전기차의 양방향 충전 기술(Vehicle-to-Grid, V2G)을 도입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완적 보조금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항공 및 해운 운임에 대한 운송 보조금이 허용되어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공항과 항만 등 교통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여 지역 접근성과 물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다. 이러한 교통 보조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보전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이동권 보장이라는 유럽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질적 수단이 된다.

## 5. 결 어: EU의 관리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러한 대서양의 EU 최외곽지역은 EU 및 회원국의 영토주권 확대, 안보 및 외교 전략, 경제 다변화, 문화 정체성 유지, 그리고 정치 제도 실험의 장으로서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위상은 다음과 같이 국제질서 속에서 EU와 회원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첫째, 영토주권의 확장이라는 해양 국가 정체성의 구현 측면에서, 이러한 섬들은 대서양에 위치하여 EU와 회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확장시킨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 EU가 여전히 해양 관할국으로 활동하는 결정적 기반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대륙붕 연장으로 국제적인 심해 자원 탐사와 개발권 확대를 모색하게 한다.

둘째, 이곳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의 전진기지로서 역할도 뚜렷하다. 예를 들어, 아조레스 제도의 테세이라섬에 있는 라제스(Lajes) 공군기지는 미국과 NATO의 전략적 작전기지로서, 대서양 항공 통제, 기후 및 해양 감시, 대잠수함 작전 등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마테이라는 북아프리카 및 남대서양 국가들과의 외교적 연결점으로 기능한다.

셋째, 이러한 공간은 경제적 다각화와 EU의 유럽통합을 구현하는 정책 실험의 공간이다. 농업과 어업 부문에서는 본토와는 다른 작물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으로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또한 이 지역은 Europe Green Deal과 REPowerEU 정책의 실험지로 지정되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작은 섬에서 대규모 정책을 실험’하는 정책 실험실인 셈이다. EU 차원에서는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넷째, 이러한 대서양의 섬들은 과거 해외 이주의 주요 출발지 또는 중간 기착지였으며, 노예무역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시기도 있었다. 따라서 이곳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디아스포라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관련된 가치를 발견하고 보존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섯째, 정치적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실험모델로서 이곳을 주목할 만하다. 많은 경우 독립적인 자치정부 운영으로 분권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일국가 체제 내에서의 다중 제도 실험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가능케 한다. EU와의 관계에서는 EU 구조기금, 공공 인프라 개발, 사회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토와 협력하는 정책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

# 대서양 섬에서 태평양 섬으로

## : 포르투갈 아소레스 및 마데이라 출신 노동자들의 초기 하와이 이주 역사와 배경

정 호 윤 | 국립부경대학교

### I. 서론

포르투갈은 유럽 최초의 해양국가로써 대항해시대의 첫 번째 주인공이었다. 비록 다른 유럽의 경쟁국 및 신흥세력의 뒤이은 출현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전성기를 구가하는 데 그쳤으나, 1415년 세우타(Ceuta) 정복을 시작으로 1999년 마카오의 중국 반환까지 포르투갈 제국이 무려 584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포르투갈이 가진 대항해시대에서의 상징성을 대변한다. 포르투갈은 1488년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Bartolomeu Dias)부터, 국가적 숙원이던 인도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와 같은 걸출한 탐험가의 성지였다. 이는 포르투갈 아비스 왕조의 항해왕자 엔리크(Dom Enrique)의 대서양 탐사 개시 이래 100년이 채 안 된 기간 내에 이룬 결실이었다(최영수, 2006). 16세기 이후, 포르투갈은 신대륙, 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의 식민지를 건설했다. 특히 인도의 고아(Goa)지역, 마카오,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내 다수지역을 통치하며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확장하였다(Subrahmanyam, 1993).

한편,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는 영국의 항해가 제임스 쿡(James Cook)에 의해 1778년 처음 발견된 이래 1789년 미국의 무역가 멧카프(Simon Metcalfe)를 위시하여 수많은 탐험가 및 투자자들이 방문하게 되었다(Nordyke & Lee, 1989). 이후 하와이는 사탕수수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감소추세와 맞물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와이로의 이민행렬은 하와이를 다문화사회로 이끈 요인 중 하나였다. 중국인의 경우 1852년부터 1899년 사이 약 46,000명의 이민자가 하와이로 입국했으며(Glick, 1980), 일본인의 하와이 공식이민은 1868년에 시작되어 대규모의 인구가 하와이에 유입되었다(Goto, 1968). 한인의 경우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공식이민이 시작되었다.

동아시아 3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인도 하와이에 상당수 이주하였으며, 이에 연구자들은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한 하와이로의 이민사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아시아인들의 대규모 하와이 유입의 물결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본 논문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이다. 포르투갈인들은 사탕수수 노동자로 1878년 9월 30일, 처음으로 하와이에 이주하였고, 1913년까지 약 25,000명의 노동자가 입국하였다(이덕희, 2014).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공식이민보다 더 빨랐다. 이 영향으로 1920년, 하와이 내 포르투갈인 인구는 약 27,000명을 기록하며 당시 하와이 인구(26만 명)의 10% 이상을 차지하였다(조은정·송병건,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은 아시아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대중적·학술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하와이로의 이민을 환태평양 이민사의 관점에 천착하고 있으며, 이에 대서양-태평양 하와이 이민과 연계에 대한 연구물은 매우 드물다. 또한, 많은 역사가들은 그동안 포르투갈 항해의 역사를 ‘정복’, ‘발견’, ‘탐험’, ‘해상무역’, ‘노예무역’과 같은 ‘정복의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처럼, 정복자로서의 포르투갈이 하와이에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계약노동자로 변모한 역사적 사실은 매우 흥미로우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물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포르투갈인들은 왜 하와이를 이민대상지로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포르투갈인들의 하와이 이민을 추동하였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 II. 초기 하와이 포르투갈인 이민(1878-1913)의 역사

이덕희(2014)에 따르면, 포르투갈인들은 임금 계약노동자로 1878년 9월 30일, 공식적으로 처음 하와이에 이주하였고, 그 이래 1913년까지 약 25,000명의 노동자가 유입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공식이민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으며 이는 일본인과 한인의 하와이 공식이민보다 더 앞섰다는 점이다. 당시 인구센서스를 살펴보면 공식이민 시작 직전인 1878년 하와이에 거주하는 포르투갈인은 43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포르투갈의 아조레스(Azores)나 마데이라(Madeira)섬 출신으로 포경선(whaling ship)을 이용해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전해진다(Rodgers, 1891).

하와이 사탕수수농민협회(Hawaiian Sugar Planters' Association)는 1878년 마데이라로부터 첫 번째 계약노동자를 받아들였으며, 2년 뒤인 1880년 아조레스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시작되었다. 1878년 9월 30일, Priscilla호를 탄 120명의 포르투갈 이민자가 호놀룰루에 도착하였으며, 이중 60명이 남성, 22명이 여성, 그리고 나머지 38명은 아이들이었다(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그 이후 1878년부터 1888년 사이, 10년간 약 11,000명의 포르투갈인이 하와

이로 입국하였다. 1882년부터 제반 비용상의 문제로 포르투갈 계약노동자들의 입국이 잠시 중단 되기도 하였으나, 사탕수수 산업계의 반발로 곧 재개되며 1913년까지 약 13,000명의 포르투갈 노동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아소레스와 마데이라에서 건너왔으며, 포르투갈 본토의 인구 또한 이주하였다(Caldeira, 2010). 이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지역에 거주하던 포르투갈인 및 우루과이 몬테비데오(Montevideo)의 포르투갈인 커뮤니티에서도 비록 소수지만 하와이로 이주하였다(Curammeng, 2018).

많은 중국인, 일본인 및 한국인 계약노동 이민자들이 독신 남성이었던 반면, 포르투갈 이민자들은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하는 가족 단위의 이민이 대다수였다. 이로 인해 하와이의 농장주들은 안정성 측면에서 포르투갈인을 선호하기도 했다(Coman, 1903). 이는 포르투갈인의 하와이행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당시 하와이 내 포르투갈 인구가 점증세를 기록하게 되었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00-1920년 사이 포르투갈인의 남녀 성비를 보면 거의 동일하나, 중국인, 일본인 및 한국인의 경우 성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1900, 1910, 1920년 하와이 내 포르투갈 인구는 각각 13,272명, 22,301명, 그리고 27,002명으로 확인되며, 이는 외국인 이민자 가운데 일본인 다음으로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이다. 1910년과 1920년 기준, 하와이 내 포르투갈 인구 비중은 각각 11.6%와 10.6%였다.

〈표 1〉 하와이의 인구, 1900-1920

|         | 1900    |        |         | 1910    |        |         | 1920    |         |         |
|---------|---------|--------|---------|---------|--------|---------|---------|---------|---------|
|         | 남성      | 여성     | 합계      | 남성      | 여성     | 합계      | 남성      | 여성      | 합계      |
| 원주민     | 15,642  | 14,157 | 29,799  | 13,439  | 12,602 | 26,041  | 11,990  | 11,733  | 23,723  |
| 백인계     | 3,460   | 3,439  | 6,899   | 4,438   | 4,334  | 8,772   | 5,528   | 5,544   | 11,072  |
| 아시아계    | 1,558   | 1,400  | 2,958   | 1,812   | 1,922  | 3,734   | 3,524   | 3,431   | 6,955   |
| 포르투갈인   | 9,785   | 8,487  | 13,272  | 11,571  | 10,730 | 22,301  | 13,737  | 13,265  | 27,002  |
| 푸에르토리코인 | -       | -      | -       | 2,878   | 2,012  | 4,890   | 3,133   | 2,469   | 5,602   |
| 스페인인    | -       | -      | -       | 1,078   | 912    | 1,990   | 1,326   | 1,104   | 2,430   |
| 기타백인    | 5,699   | 2,848  | 8,547   | 9,255   | 5,612  | 14,867  | 12,309  | 7,399   | 19,708  |
| 중국인     | 22,296  | 3,471  | 25,767  | 17,148  | 4,526  | 21,674  | 16,197  | 7,310   | 23,507  |
| 일본인     | 47,508  | 13,603 | 61,111  | 54,784  | 24,891 | 79,675  | 62,644  | 46,630  | 109,274 |
| 한국인     | -       | -      | -       | 3,931   | 602    | 4,533   | 3,498   | 1,452   | 4,950   |
| 기타      | 421     | 227    | 648     | 2,765   | 667    | 3,432   | 17,260  | 4,429   | 21,689  |
| 합계      | 106,369 | 47,632 | 154,001 | 123,099 | 68,810 | 191,909 | 151,146 | 104,766 | 255,912 |

출처: 송병건·조은정(2011: 109).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계약노동자로 일하게 된 포르투갈인들은 주로 플랜테이션 회사가 제공하는 캠프 내 독립적인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대체로 한 캠프에는 5-6개 단위의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전해진다. 포르투갈을 떠나 하와이로 오기까지 한배를 탔던 가족들은 같은 캠프에 배치되어 서로 우호적이고 사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테이라와 아조레스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하와이에 이민을 온 포르투갈인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업에 잘 적응하였으나, 농사 경험이 없었던 몇몇 포르투갈인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경우, 사려가 깊은 농장 관리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농업 대신 다른 재능을 가진 포르투갈인들을 해당 직군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초기 하와이 포르투갈인들은 몇몇 개의 우호적인 지역사회 단체를 결성하였고 대부분의 포르투갈인 남성은 그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경제적·사회적으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시 도움을 제공하는 협력적 조직이었다(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하와이 원주민들은 포르투갈인 이민자들을 푸키키(Pukiki)라 불렀다. 이들은 이민 초기부터 가족 단위를 매우 중요시하는 남유럽적, 로마카톨릭적 가치를 고수하였다.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고, 그 권위가 유지되는 가부장적 가족 양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져 하와이에 거주 중인 포르투갈계 인구의 대부분은 여전히 카톨릭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초기 하와이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의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은 비단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넛의 일종인 말라사다(Malasada)는 마테이라와 아조레스에서 건너온 포르투갈인에 의해 소개되어 현재 하와이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다. 이외에도 포르투갈식 콩죽(bean soup), 포르투게스 소세지(Portuguse sausage) 등이 오늘날까지 하와이인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포르투게스 소세지는 현지화(localized)되어 화와이 맥도날드의 아침식사 메뉴로 쌀밥과 함께 제공되며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Bastos, 2018).

현재 하와이 음악문화의 핵심축을 구성하는 우쿨렐레(Ukulele) 또한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소개한 것이다. 우쿨렐레는 포르투갈의 마테이라에서 연주된 브라기냐(Braguinha)에서 유래한 것으로, 처음 하와이에 브라기냐를 소개한 인물은 1879년 하와이에 이주한 마누엘 누네스(Manuel Nunes), 아우구스투 디아스(Augusto Dias), 그리고 주제 두 에스피리투 산투(José do Espírito Santo)로 알려져 있다(King & Tranquada, 2003). 우쿨렐레는 하와이 원주민어로, 그 의미는 ‘작은 벼룩’이며 이는 우쿨렐레 연주자들이 작은 악기를 들고 통통 튀며 연주하는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879)가 제공하는 당시 신문기사 아카이브에 따르면, 최근 도착한 마테이라 사람들이 기타보다 작은 이상한 악기를 가지고 밤마다 길거리에서 콘서트를 연상시키는 공연을 열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포르투갈인의 하

와이 이민은 1878년 이후 광범위하게 진행되며 역사적 의미를 남겼으며, 이들이 남긴 사회·문화적 유산은 현재 하와이의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 III.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 요인

상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하와이로 이주한 포르투갈인들은 주로 마테이라 및 아소레스 섬 출신이 대다수였다. 당시 마테이라라는 사탕수수 단일작물경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해충의 발생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당시 아소레스와 포르투갈 본토의 경제 상황 또한 매우 열악했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브라질로 이주했다. 하지만, 브라질에는 당시 치명적인 황열병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던 많은 사람들은 브라질의 대안으로 하와이를 선택했다. 게다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포르투갈의 부족한 공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앞으로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하다고 믿었다. 당시 포르투갈에서는 공공교육이 부재한 상황이었고, 근대적 공교육제도는 1907년에 이르러서야 마련되었다. 하지만 당시 하와이는 공공교육을 8학년까지 제공하고 있었으며, 하와이 플랜테이션 측에서 포르투갈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공공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이 포르투갈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한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젊은 남성 또한 이민을 질병의 부담에서 탈피할 기회로 인식하였다 (Portuguese Historical Museum, n.d.).

또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1877년 하와이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것 또한 이민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 이 계약 조건은 1882년 포르투갈 정부와 하와이의 칼라카우아(Kalakaua) 국왕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하와이 입국까지의 제반 여행경비, 36개월의 계약기간, 월 근무일수 26일, 하루 10시간 근무, 정원 공간을 갖춘 적절한 주거시설, 일일 식량 배급, 10달러의 월급 및 무료 의료 및 의약품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Coman, 1903; 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이처럼 포르투갈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 공교육의 부재, 질병부담에서의 탈출, 합리적 노동조건의 제시와 더 나은 삶을 위한 포르투갈인의 합리적 선택이 하와이행을 추동한 주요 요인이었다.

당시 하와이는 이민대상지로 매우 적절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여러 조건들 가운데, 하와이의 대(對)캘리포니아 사탕수수 수출 증가가 해당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이는 곧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력의 수요를 증대시켰다(Kuykendall, 1967). 반면, 당시 하와이의 원주민 수는 서구권 국가와의 접촉이 잦아짐에 따라 홍역 등의 전염병으로 인해 급감하였고, 이에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결국 하와이는 1852년 첫 번째로 중국 노동자들의 이민을 활용하기 시작했다(Coman, 1903).

이처럼 하와이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으로 1878년 하와이 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이 이루어졌다.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은 숙련된 기술로 노동에 열심히 임했으나, 종종 도박, 매춘 및 아편 흡연 등의 문제를 일으켜 하와이 당국은 대체 노동자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당시 하와이는 중국인 혹은 다른 아시아 출신 이민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유럽인들의 이민을 받기를 원하기 시작하였다(Coman, 1903; 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 요인 중 하나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의 적합성에 대한 추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1876년, Jacinto Pereira라는 주하와이 포르투갈 영사는 1876년 하와이 사탕수수농민협회에 포르투갈의 마테이라 및 아소레스 섬 주민들이 야말로 믿을만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라 역설했다(Thrum, 1886). 이는 마테이라와 아소레스가 하와이와 매우 비슷한 기후를 갖고 있었으며, 당시 하와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400년간 사탕수수 농업이 경제의 핵심축이었던 탓에 대다수의 마테이라 및 아소레스 주민들이 농업의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Coman, 1903). 이에 하와이 정부는 과거 하와이에 거주하다 마테이라로 이주한 독일 출신의 Hillebrand 박사에게 서신을 보내 포르투갈인의 노동이민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데, 당시 Hillebrand 박사는 마테이라와 아소레스 사람들 만큼 바람직한 자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특유의 정직성, 근면 성실성 및 평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하와이의 기후에 매우 잘 적응할 것임을 강조했다(Kuykendall, 1967). 이에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Hillebrand 박사는 이민자 모집 등을 위시한 이민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포르투갈의 배출요인과 하와이의 흡인요인이 어우러져 1878년부터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대우 조건은 타국 출신 노동자보다 우위에 있었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포르투갈인들의 월평균 임금이 타국 출신의 이민자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 절에서도 기술했듯 합리적 계약조건과 함께 심지어 이민자들에게 매일 1.5파운드의 쌀, 1.5파운드의 쇠고기 혹은 생선, 1.5파운드의 야채와 1/3 온스의 차(tea)까지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이는 포르투갈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Bastos(2018)는 하와이 당국에서 왜 그렇게까지 포르투갈인에게 더 좋은 계약을 제시했고, 하와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라가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을 동반하며 이민 오는 그들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였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는 향후 더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하와이의 주 흡인요인은 사탕수수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증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족과 그로 인한 대안으로 유럽 출신의 이민자 선호현상, Pereira와 Hillebrand의 포르투갈인 이민 적극 추천 등과 같은 요소를 들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초기 하와이 이민에 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이 아시아인들의 대규모 유입에 대한 설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에 주목하여 이들의 이민의 역사와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1878년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공식이민이 시작된 이래 1913년까지 약 25,000명의 계약노동자들이 입국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1920년 하와이 인구대비 포르투갈인의 비율은 10% 이상을 기록하였다.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공식이민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공식이민보다 더 빨랐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포르투갈인들은 이민 초기부터 남유럽적·로마카톨릭적 가치를 고수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은 현재 하와이에 거주 중인 포르투갈계 인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초기 하와이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의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은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음식, 우쿨렐레를 위시한 음악 분야까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이 남긴 각종 유산은 하와이의 문화적 다양성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포르투갈인의 비교적 대규모 하와이 초기이민은 포르투갈의 배출요인과 하와이의 흡인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었다. 특히, 당시 마테이라와 아소레스의 경제위기, 공교육의 부재, 징병제 회피, 및 하와이 플랜테이션측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합리적 노동조건의 제시와 같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을 추동한 주요 요인이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와이의 주 흡인요인은 사탕수수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증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인구의 급감과 노동력 부족 현상, 1인 가구가 대다수였던 중국 노동자들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불만족과 그로 인한 유럽 출신의 이민자 선호현상, Pereira와 Hillebrand의 포르투갈인 이민 적극 추천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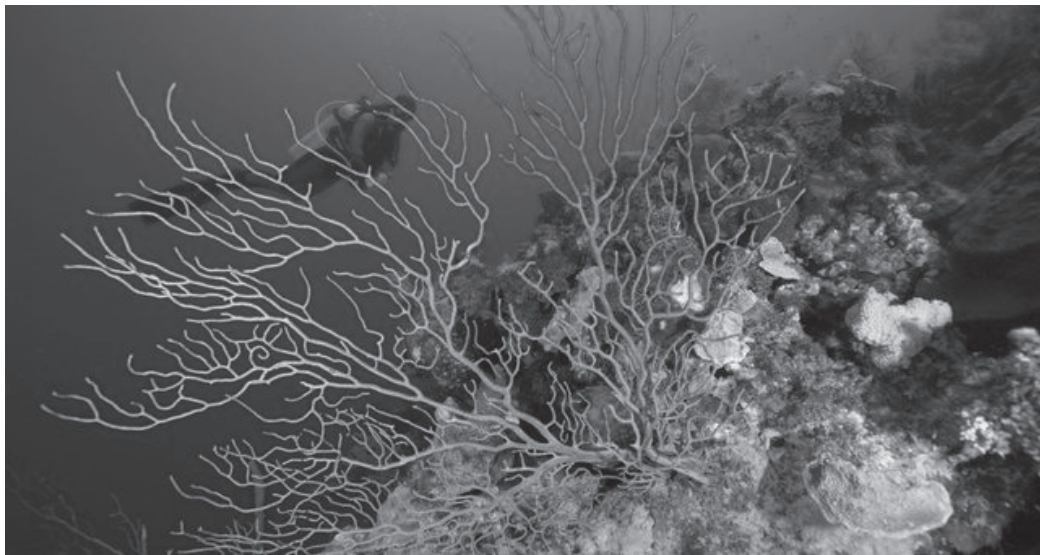
# 바다가 가르쳐주는 인문(人文)의 지혜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산호 -

임 지 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트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1. 바다와 인간

보티첼리의 1485년 작(作) 〈비너스의 탄생〉에서 여신 비너스는 해안가로 밀려든 파도의 거품 위에 떠 있는 조개껍데기 위에 맨몸으로 서 있다.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바람을 맞으며 해안가에 상륙하는 찰나의 비너스에게 봄의 여신은 꽃이 수놓인 외투를 건네준다. 비너스는 바다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사랑하는 마음과 신체적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여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바다는 인간의 기원이고 생명의 원천이며 사랑과 미의 덕성을 심어주는 절대성을 상징한다고 해도 억지되는 아닐 성싶다.



출처 : 프랑스 정부 (허용 자료 mer.gouv.fr)

인간은 바다 앞에서 생기를 얻고, 내 안의 봄의 태동을 느끼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회복한다. 생명을 얻은 인간은 이때 자연, 하늘, 바다, 인간 하나하나를 감각적으로 포착한다. 그제야 비로소 인간의 말은 시가 되고 생각은 삶의 의미를 일깨우는 지혜가 된다. 바다는 언제나 인간 안에 존재하여 삶의 생기를 점화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도록 해 준다. 바다는 이렇게 “또 다른 나(Alter Ego)”이다.

그런데 바다는 어느 사이부터 문명의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바다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타자(Other)로 존재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2025년을 ‘해양의 해’로 지정하고 코스타리카와 공동으로 지난 6월 ‘제3차 유엔해양회의(UNOC: UN Ocean Conference)’를 니스와 모나코에서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해양 보존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한 긴급 행동 지원’이라는 주제로 수중생명보호(SDG 14)(해양 생태계 보존)에 관한 논의와 주요 안건을 채택했다.<sup>1)</sup>

## 2. 세계적인 해양 강국 프랑스

프랑스는 세계 2위 해양 국가이다. 5대양에 걸쳐 해외 영토(Outre-mer : La Martinique, La Guadeloupe, Saint Martin, Saint-Pierre-et-Miquelon, Saint Barthélemy, La Guyane, La réunion, Mayotte, La Polynésie; La nouvelle Calédonie, Wallis et Futuna)가 존재하고 프랑스 경제수역<sup>2)</sup>의 97%를 차지한다.

| 지역    | 예시                 | 설명                    |
|-------|--------------------|-----------------------|
| 카리브해  |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생마르탱  | DROM (본토와 동일한 법 적용)   |
| 남미    | 프랑스령 기아나           | 유일한 남미 EU 영토, 유럽 우주센터 |
| 인도양   | 레위니옹, 마요트          | 아프리카 인근 섬들            |
| 태평양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누벨칼레도니 | 문화·언어 다양성 풍부          |
| 남극·해양 | 프랑스 남극 남방령(TAAF)   | 인구는 없지만 EEZ 확보        |

1) Third UN Ocean Conference (UNOC3) (Nice, 9-13 June 2025)  
<https://onu.delegfrance.org/third-un-ocean-conference-unoc3-nice-9-13-june-2025>

2)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국제연합협약(UNCLOS)에 근거해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킨다. 유엔 해양법에 의해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 수산 및 광물자원 개발 권리를 가지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 3. 자연 정복

15세기 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개막한 대항해 시대는 신향료와 식민지 개척의 경쟁적 양태로 전개되었다. 17세기부터 시작한 프랑스의 대항해는 19세기 말에 이르자 알제리, 세네갈, 인도차이나(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뉴칼레도니아, 폴리네시아 등 5대양 6대주의 광범위한 식민지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영국 다음으로 드넓은 식민 영토를 거느리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탈식민지화(1945~1970년대)가 진행되고 대부분의 프랑스 식민지는 독립했으나 몇몇 지역은 프랑스와의 정치적 연합을 택하거나 프랑스령으로 남았다. 세계 2위의 해양 국가의 풍요를 거머쥔 배경에는 인간과 자연을 정복한 유럽의 오만한 지배 의식과 폭력 행위가 있었다.

인간이 자연과 타 문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에 한껏 불을 지핀 것은 19세기 과학 기술주의의 급격한 발달 때문이다. 과학 지식이 전쟁 무기 개발에 적극 활용되고 유럽 대륙의 빈번한 전쟁 발발은 무력 지배에 의한 폭력성을 인간의 의식 세계에 안착시킨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 깨알 같은 인간의 윤리와 양심은 내팽개쳐지고, 자연 파괴와 인간 살해조차 쉽게 용인되는 현실이 정상적 현상으로 수용되었다.

도시적 삶은 그것대로 자연 파괴를 진행시켰다. 기계화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는 대량 생산에 따르는 자연 파괴와 오염 물질을 발생시켰다. 공장의 검은 연기, 공기 중 먼지, 위생과 보건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된 독성 화학 물질, 그리고 도시의 쓰레기. 정치적 권위주의가 상승하고 경제 발전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과학 만능주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에게 무해 완벽한 자연 파괴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인간이 자연을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를 시간적 선상에서 훑아보면, 해양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1907-1964)의 『침묵의 봄(1962년)』 출간이 세상에 던진 충격은 최초로 DDT 화약 물질의 유해성과 생태계 소멸을 알린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인지가 모든 일의 끝에서 가장 뒤늦게 찾아오는 것임을 확인시킨 데 있지 않은지 재정의해 볼 일이다.

### 4. 지구 남반구의 끝, 폴리네시아

폴리네시아는 타히티, 보라보라, 모레아 등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남태평양 바다의 프랑스령 제도이다. 지구 남반구 폴리네시아의 자연은 프랑스의 정책적 딜레마 속에서 다양한 전략적 이용 실태를 보여준다. 우선 폴리네시아의 바다는 군사 기지가 운용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폴리네시아 바다는 프랑스의 군사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서 확보하는 물길이다. 둘째 폴리네시아의 바다는 과학 연구 및 기후 연구의 산실로 이용된다. 프랑스는 극지방·열대 해양 연구 분야

에서 세계적인 과학 기술 연구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한다.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앞선 과학 연구 경쟁은 해양 자원 확보와 지구 보존의 이중 과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폴리네시아의 바다 생태계에 허용한 과학 기술 현상은 단연코 문제적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무려 30년간 국제적 제재 없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핵실험을 폴리네시아 무루로아와 팡가타우파에서 실시했다. 인류에게 핵 원전의 공포를 알게 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인간은 인간이 자연에 가한 패악의 재앙을 여전히 명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반윤리적, 반친환경적 폴리네시아 생태계 운용은 이제 인간에게 자연 파괴의 잔혹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산호의 구조 요청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에 의해 오염되고 방해를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믿고 싶었던 지구의 가장 고립된 폴리네시아 바다에서 자연 파괴의 이상 징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꺼림칙한 낭패감을 준다. 천연 자연의 마지막 보루, 태평양의 깊은 바다가 최소한 인간의 패악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인간 편의 위주의 생각을 조롱이나 하듯.

## 5. 산호 백화현상

산호 백화현상은 산호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산호 백화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의 온도 상승이다. 지구의 기후 변화는 해수면과 수온을 상승시켰다.

폴리네시아의 산호 상태는 인간 활동에서 위협받는다. 관광지 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화학성 물질의 바다 유입은 산호 자연 서식지를 오염시킨다. 이 수질 오염의 문제는 섬 내륙의 부족한 식수 및 담수를 더욱 고갈시켜 생수 구입이 일반적 상황이 되었고, 이것은 정부와 주민 간 갈등 관계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의 어업 생계와 식량 안보에도 문제를 유발한다.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고는 정부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었다.

요컨대 폴리네시아의 바다 오염은 산호초와 열대우림의 병적 질환 상태를 가져왔고 인간들의 식량 및 생계 수단을 위협한다. 우리는 이제 바다와 인간의 동시적 아비규환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호의 고통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감시와 인간의 행위 규제를 요청했다.

## 6. 폴리네시아 수중 생명 보호 대책

지난 6월 제3차 유엔해양회의(UNOC)에서 폴리네시아 산호초 파괴를 우려한 수중생명보호 대



책을 확정하였다. 기후 회복력 향상을 목표로 한 ‘폴리네시아 기후 계획(PCPF)’<sup>3)</sup>이 그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가장 우선적 사항은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이다. 폴리네시아에는 2006년 유네스코 지정 “파카라바(Fakarava) 생물권 보호구역”이 있다. 고유 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에서 산호, 물고기, 조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관리되고 있다. 이번 기후 계획에서는 지역적 전통적 방식을 활용하는 자원보호 정책도 채택했다. 라후이 제도에서 실시하는 특정 기간 어업을 금지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지구 기후 회복력 증진에 기여할 취지이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가 직접 자연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 해양보호구역 확대, 환경 법규 시행 등은 해당 지역이나 단일 국가에 제한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폴리네시아 기후 계획(PCPF)은 지역 커뮤니티의 협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마련한다. 자연환경 보호란 프랑스 정부, ‘프랑스 산호 보호를 위한 행동(IFRECO: Rinitiative Française pour les Récifs Coralliens)’<sup>4)</sup>, 폴리네시아 지역 환경국(DIREN), 국제 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만 이 지구적 자연보호 계획이 가능한 것이다.

## 7. 바다의 인문(人文)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였던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1908-2009)는 유럽 사회에 의해 주도되는 근대 문명을 비판하며 문명 관찰지 『슬픈 열대(1955년)』를 썼다. 그는 문명에 대한 환멸감을,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자연과 문화 이론을 확립시켰다. 인간성 확립의 미명 하에 자연 파괴와 타 문화를 말살하는 근대 문명의 지배는 레비스트로스에게 인간성 파괴의 제일 요인이었다.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열대』의 배경이 된 브라질 아열대 기후 아마존이 아닌 남태평양 아열대 기후 폴리네시아의 깊은 심해로 들어갔다면, 그의 철학적, 예술적, 문학적 성찰력에 비추어 보아, 그는 틀림없이 바다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의 미덕을 찬미하며 자연과 인류 공존을 서술했을 것이다. 바다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인간성과 인류를 성찰했을 것이다.

나는 바다로 간다. 바다 앞에 섰다가 바다를 바라보고 다시 떠나온다. 그리고 다시금 바다를 찾을 것이다. 바다는 타자로서, 즉 유물론적 실재의 대상으로서 언제나 그곳에 있다. 내가 바다를 보지 않는 새에도 거대한 기계 장비가 해저를 뚫고 남이 뺏기라도 하는 듯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

3) Plan d'actions pour la protection. Des récifs coralliens des outre-mer français  
file:///C:/Users/oui30/Desktop/%ED%83%80%ED%9E%88%ED%8B%B0%ED%99%98%EA%B2%BD/plan%20d'action%20pour%20la%20protection%20des%20recifs%20coralliens%20des%20outre%20mer%20francais.pdf

4) 프랑스 본국과 해외 영토에 있는 산호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협력 프로그램

당할 자원을 자연에서 발굴한다. 도시 문명은 갖은 오염 물질을 쉴 새 없이 바다로 흘려버린다. 수 세기 동안 진행된 자연 파괴로 인해 나는 바다 앞에서 피해자가 되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연 파괴로 획득된 문명의 이기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가해자가 되어 있다.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오묘한 억울함과 죄의식이 어느새 나의 운명처럼 주어졌다. 바다와 인간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폭력적인 악성 관계에서 나는 바다와 비너스의 예술적 관계에서만 위로받을 수 있을 뿐인가?

바다 속 산호초에 서식하는 조개는 진주를 품는다. 바다 밑 고요한 적막 속에서 칼슘과 단백질 막이 겹겹이 층층이 쌓이면서 고즈넉이 어느새 겹이 된다. 표면이 말끔하고 둥글둥글한 모양의 바다 진주가 완성될 때, 하늘의 빛을 받은 진줏빛이 드러난다. 바다는 자연의 신비한 법칙 속에서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 내고, 바다가 내뿜은 진주는 인간에게 물질적 장신구의 가치가 아닌 드높은 인간 정신의 지혜를 안겨 준다. 그것은 자연이 생명의 기원임을 아는 지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지혜이다. 자연 개발과 물질만능의 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자연과 인류가 공존하는 생명의 삶과 자연 운명 공동체로서의 인간성 회복이라는 지혜일 뿐이다.



#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

## : 현대 국제법 역사의 기념비

Tomasz Wierbowski | EURAEXESS KOREA

### 1. 북극과 북극해의 문제들

북극지역의 범위는 여러 목적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북극점과 북위 약 66도 사이의 지역을 의미한다.<sup>1)</sup> 이곳은 혹독한 환경으로 인하여 최근까지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및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 지역은 더 이상 접근하기 불가능한 지역이 아닌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sup>2)</sup> 이 공간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연결된 북극해에 북극점이 있으며, 육지인 러시아, 유럽, 북미 대륙의 상부가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북극해는 북극지역의 중심을 차지하며 여러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

북극해와 북극지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아오고 있는데,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서구의 문명이 진출한 이후 북극지역의 도시들은 열악한 환경 위에서 탄생했고, 기존에 형성된 일부 도시 이외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전략상의 거점, 자원개발의 거점, 과학연구 및 관측의 거점, 또는 소수민족의 거주지 등으로 흩어져있다. 특히 북극해의 섬들은 북극지역의 지리적, 지형적, 기후적 특색을 고스란히 가진다.

이 지역은 다양한 광물과 동식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극지역은 소수민족들에게는 어업과 목축을 위한 터전이면서, 동시에 연구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이다. 연구자들은 과학적 분석부터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관찰해왔다. 정부와 기업들도 자원개발을 포함한 경제적 개발을 목적으로 북극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고

1) 김봉철, “북극항로 협력 등 한-러 무역활성화 구축을 위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4권 제4호, 2019, 116면.

2) 이용희, “북극 북서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89-90면.

있다. 예를 들어, 북극지역에 속하는 노르웨이, 러시아, 캐나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지질조사가 완료되어 2007년까지 400여 곳 이상의 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서 284곳은 육지라고 한다.<sup>3)</sup>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방문의 대상지가 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에 영토를 두고 있는 국가들은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의 정책이나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극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러시아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북극에 인접한 지역의 영토와 영해에 관하여 국내법을 제정하면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sup>4)</sup> 유럽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북극지역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정책에 반발하며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집단적 대응을 하기도 한다. 북극지역의 중심인 북극해는 이와 같은 북극의 여러 논제를 모두 포섭하는 공간이다.

북극지역에 인접한 국가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실천하려는 노력도 한다. 현재 북극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북극이사회이다. 북극이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와 오염원의 북극권 이동, 북극해의 변화, 북극지역 원주민의 보호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sup>5)</sup> 결과적으로 북극지역 8개국 국가들의 정치적 협력에 기초한 북극이사회 중심의 법제도, 북극지역 국가의 국내법, 양자 또는 지역협정 등이 공존하는 것이다.<sup>6)</sup> 여전히 북극의 문제에 관한 규율체계와 관련 규범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며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sup>7)</sup>

## 2. 북극해의 섬: 스발바르 제도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해에 스칸디나비아반도와 북극점 사이에 자리한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群島, Archipelago)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제도는 노르웨이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북극해에 위치하며, 주요 섬으로는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 노르데우스트란데(Nor-daustlandet), 엣지아(Edgeøya) 등이 있다. 이 섬들의 총 면적은 약 61,000km<sup>2</sup>에 이르며, 대부분

3) 이재성, “북극항로 및 북극권 자원 이용 전략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38호, 2017, 131면.

4) 노영돈·박원, “북극해항로 관련 러시아 법제의 최근동향”,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1, 101-103면.

5) 라미경,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 『한국시베리아연구』 제24권 제1호, 2020, 3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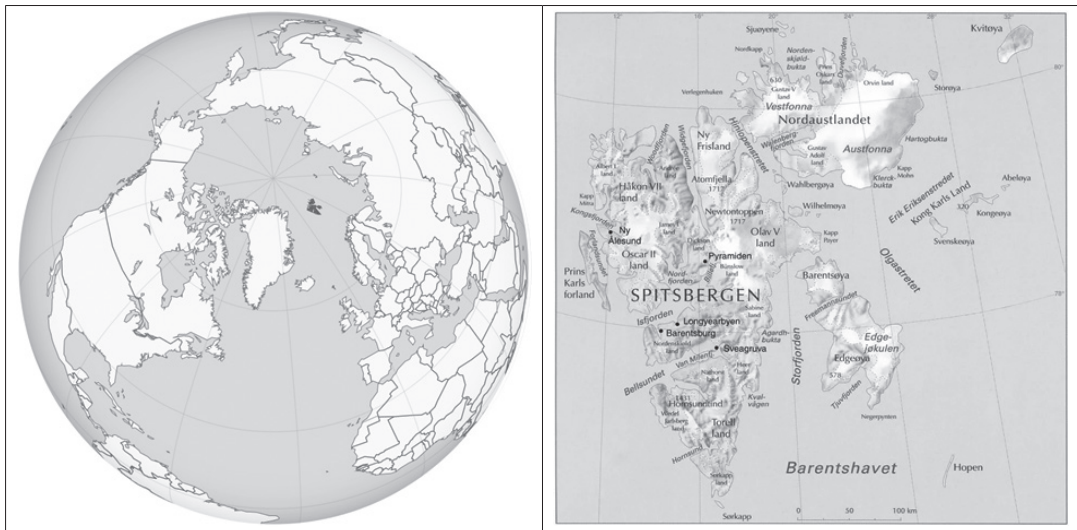
6) 김민수, “북극 거버넌스와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해양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2020, 182면.

7) 김기순,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1호, 2010, 14면.

이 빙하와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의 기후는 북극 해양성 기후로 분류되며, 연중 대부분이 영하의 기온을 기록하지만,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의 다른 북극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화하다.

이 제도의 존재는 1596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빌렘 바렌츠(Willem Barentsz)에 의해서 유럽 사회에도 알려졌다. 이후 17세기부터는 북극해의 이 섬이 주로 고래잡이와 모피 무역, 광물 탐사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나, 18세기까지 주로 고래잡이 기지로 활용되었다. 20세기 초부터 영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의 여러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보다 경쟁적으로 스발바르 제도를 활용하였고, 석탄 및 채광이 시작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섬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적 개발과 활용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스발바르 제도는 지리적, 정치적, 생태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 〈스발바르 제도의 위치와 구성〉



이러한 관심은 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주장과 갈등으로 이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Svalbard Treaty)’은 이러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곳에 대하여 노르웨이가 주권을 갖는 대신,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북극항로 개방, 자원 확보 문제 등과 맞물려 이곳의 전략적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이곳의 여러 섬에는 인간의 정착지가 존재하며, 러시아인 탄광촌과 과학 연구를 위한 기지 등이 세워져 있다. 한국의 북극 ‘다산과학기지’도 스발바르 제도에 설치되었다.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지역이 가지는 특유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극곰, 바다코끼리, 순록 등 다양한 극지 생물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국립공원 또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빠르게 반영하는 지역으로 지목되며, 빙하 후퇴,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연구에 중요한 관측 지점으로 활용된다. 특히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Global Seed Vault)’는 전 지구 생물다양성 보존의 상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 3. 스발바르 조약: 현대 국제법 역사의 기념비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제도가 무주지라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서 1910년, 1912년, 1914년 세 차례에 걸쳐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가 참석하여 스발바르의 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멈추었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처리를 위해 파리에서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공식 명칭은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이며, 10개의 조항(Article)과 부속서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국제법이다. 이 조약은 국제법상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과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이 조약에 근거하여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통치권을 얻게 되었다. 이후 1925년, 국내법인 ‘스발바르 법’을 통해 공식적인 노르웨이 영토가 된다.

그러나 이 조약은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통치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일반 국내법 전체가 이곳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스발바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르웨이의 일부로서 스발바르 제도: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 영토의 일부이며, 이 조약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노르웨이 정부가 통치한다.
- 과세: 노르웨이 정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세금은 모두 스발바르 제도에만 사용된다.
- 환경 보전: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환경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한다.
- 차별 금지: 모든 국가의 시민과 기업은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해양, 산업, 광업 또는 무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스발바르 제도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거주자는 노르웨이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정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다.
- 군사 제한: 스발바르 제도는 해군기지를 포함하여 전쟁과 같은 목적으로 스발바르를 사용할 수 없다.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던 1920년에는 미국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

르웨이, 스웨덴, 영국, 캐나다와 같은 영국 해외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14개의 국가가 최초 서명국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1924년에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 그리고 1925년에 독일과 중국도 가입하였다. 한국도 2012년에 참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스발바르 조약에는 북극이사회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 모두 조약 당사국이며,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 국가도 모두 이 조약의 당사국이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은, 이제 4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자조약이 되었다. 이 조약을 근거로 서명국들은 평화롭고 자유롭게 북극해의 이 섬을 활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러시아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은 분쟁의 가능성을 제어하고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2010년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해에서의 여러 영유권 분쟁을 스발바르 조약 사례를 적용하여 협상에 의한 양자조약(바렌츠협약)의 체결로 평화롭게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 4.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 섬이 가지는 의미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지리적 중요성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생태 보전의 관점에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이 가지는 상징성에 더하여 북극지역 고유의 기후를 활용한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Global Seed Vault)’의 존재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특히 북극 항로의 개방과 에너지 자원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의 국제적 이슈와 관련하여 이 지역은 그 상징성과 실질적 가치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이 섬의 의미는 현대 국제법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스발바르 조약은 유럽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다자조약으로 확대되었으며, 현대 국제법 역사에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스발바르 제도를 경제특구와 평화로운 비무장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 조약의 체결국은 스발바르 제도에서 평등하게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 권리를 이용하여 채굴 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나, 현재는 연구와 관광이 스발바르 제도의 추가적인 산업이 되었다.

따라서 스발바르 제도가 가지는 독특한 지리적 상황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그리고 현대 국제법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독특하다. 그러나 이 섬이 가지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상징성은 최근 북극지역에서 팽창하고 있는 안보적 위기감으로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발바르 조약에 체결된 100여 년 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제법 기준들은 이 조약의 해석에 대한 갈등을 만드는 것도 현실이다. 예를 들어, 1982년 마련되어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등 연안국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므로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권리가 스발바르 조약의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극해의 작은 군도인 이 스발바르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국제협력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북극 거버넌스 체계 형성에도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리라고 기대된다. 최근 한국 사회가 북극항로에 관한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 역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위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스발바르 조약의 체결국임을 자각한다면, 향후 이 섬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한국의 이익만이 아닌, 국제사회 공영을 위한 목적에서라도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 생태현대화 이론과 지속 가능한 섬 개발 : GR-eco Islands 사례 분석

이 하 안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연구교수

## 〈요약〉

본 연구는 그리스의 GR-eco Islands 프로젝트를 생태현대화 이론(Ecological Modernization)의 틀에서 분석하고, 약한 EM과 강한 EM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정책적 요소와 성과를 평가하였다.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정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실행되는 점에서 생태현대화 이론의 실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할키(Chalki), 아스티팔라이아(Astypalaia), 포로스(Poros) 섬을 사례로 들어 프로젝트의 정책 설계, 실행 과정,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강한 EM의 핵심 요소인 생태 중심적 접근,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적 개혁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자립 실현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협력의 부족, 데이터 접근성의 한계, 장기적 효과 평가의 미흡함 등 일부 한계점도 확인되었다.

## 1. 들어가며

환경문제가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대두되면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이 등장했다. 그중 생태현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 EM)는 1980년대 초 등장한 이론으로,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적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아 왔다(Mol and Sonnenfeld 2000). EM은 전통적인 환경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와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이론은 국가의 개입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환경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본다. EM은 단순히 환경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경제적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m)와는 달리,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한다.

생태현대화 이론은 약한 EM과 강한 EM으로 구분되며, 이는 환경 정책의 접근 방식, 목표,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약한 EM은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적 혁신에 중점을 두며,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시장 중심의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반면 강한 EM은 제도적 개혁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생태 중심적 결과를 추구하며,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시한다(Christoff 1996). Howes et al.(2010)은 약한 EM이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는 반면, 강한 EM은 환경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태학적, 제도적,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의 접근을 채택한다고 지적한다. 이 차이는 환경 정책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실행되는 방식과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생태현대화 이론을 그리스 GR-eco Islands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이 프로젝트를 평가하고자 한다.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정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실행되는 점에서 생태현대화 이론의 실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약한 EM과 강한 EM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생태현대화 이론의 정책적 유용성과 적용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생태현대화 이론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생태현대화 이론의 등장 배경과 연구 목적을 소개하며, 그리스 GR-eco Islands 프로젝트를 사례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약한 EM과 강한 EM의 개념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GR-eco Islands 프로젝트의 각 섬에서 시행된 정책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생태현대화적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GR-eco Islands 프로젝트의 정책적 시사점과 생태현대화 이론의 글로벌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며 글을 마무리 하겠다.

## 2. 이론적 배경

〈표 1〉 EM의 약한 모델과 강한 모델

| 항목      | 약한 EM                                    | 강한 EM                                      |
|---------|------------------------------------------|--------------------------------------------|
| 환경 관점   | 환경문제를 경제적 기회로 보며, 효율성과 자원 관리를 통해 해결하려 함. | 생태 중심적 접근을 채택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경제적 성장보다 우선시함.   |
| 국가의 역할  |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          |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도적 재구조화와 규제를 통해 환경 정책을 주도. |
| 정책 설계   |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          | 숙의적 민주주의와 의사소통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정책 설계.        |
| 정책 적용범위 | 주로 국가적 맥락에서 작동하며, 단일 전략에 의존하는 경향.        | 국제적 협력을 중시하며,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을 채택.           |
| 의사결정방식  | 기술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            |

출처: Christoff (1996)

생태현대화 이론은 1980년대 초 Arthur P.J. Mol과 David A. Sonnenfeld에 의해 발전된 환경 사회학적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전통적인 ‘환경 보전 vs 경제 성장’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와 환경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주장하며 등장했다(Mol and Sonnenfeld 2000).

EM의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와 환경의 통합으로, 환경문제를 경제 시스템 내부로 통합하여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기술 혁신의 역할을 강조하며, 환경친화적 기술이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법적 규제,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Philip Christoff(1996)는 EM을 “약한 EM”과 “강한 EM”으로 구분했다. <표 1>에서 보듯이, 약한 EM은 시장 중심적 접근을 통해 환경을 경제적 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다. 반면 강한 EM은 생태 중심적 관점에서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Janicke(2008)는 EM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정책 평가 기준을 제안했으며, Esty와 Porter(2005)의 환경성과지수(EPI)는 EM 이론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그러나 EM 이론은 약한 EM과 강한 EM 간 경계의 모호성(Spaargaren et al. 2009), 개발도상국에서의 제한적 적용 가능성(Mol 2001), 제도적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고려 부족(York와 Rosa 2003) 등의 한계를 지닌다.

국내 그리스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경제위기, 재정 긴축, 정치적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구혜란 2013; 김석우 외 2020; 은민수 2021; 박상준 2020; 이승주 2011; 박송연 2024; 김현정 2012). 환경문제나 지속 가능성 정책 관련 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는 독창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GR-eco Islands 프로젝트를 생태현대화 이론의 틀에서 분석하며, 약한 EM과 강한 EM 관점에서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각 섬(할키, 아스티팔라이아, 포로스)의 정책 설계 및 실행 과정, 환경적·경제적 성과, 정책적 한계 분석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 3. 그리스의 GR-eco Islands 프로젝트

그리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그리스 2020(The Sustainable Greece 2020)”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시스템 수립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독일의 지속 가능성 코드를 모델로 한 그리스 지속 가능성 코드를 도입하여,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 행정부, 시민사회 단체 등 모든 조직의 참여를 요구한다.

지속가능성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로 정의되었으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

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를 적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 활동이 환경,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스는 Hellenic Petroleum S.A., Mytilineos S.A. 등 에너지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대사로 참여하며, 지속 가능성 관측소에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그리스 이니셔티브의 핵심 구성 요소다.

그리스에는 6,000개 이상의 섬이 존재하며, 이 중 227개 섬에 사람이 거주한다. 에너지망과 연결되지 않은 섬들은 지리적 제약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GR-eco Islands 프로젝트를 통해 섬 단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자급자족 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그리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 접근으로, 섬 지역의 탈탄소화와 녹색·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지속 가능한 폐기물 및 수자원 관리, 운송 전기화, 녹색 항구 개발 등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여 섬을 순환 경제의 전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으로부터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재정 지원을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소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할키(Chalki) 섬 사례

2021년 그리스 총리가 할키 섬을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했다. 에게해 남동부 도데카네스 제도에 위치한 할키 섬은 에너지 공동체 ChalkiOn을 설립하여 1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섬의 연간 에너지 수요를 완전히 충족했다. 프랑스 시트로엥과의 협력으로 전기차를 도입하여 교통 시스템을 전기화했다. 그 결과 연간 약 1,800톤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전기 요금을 55% 절감하여 연간 18만~25만 유로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했다.

## 아스티팔라이아(Astypalaia) 섬 사례

인구 약 1,300명, 연간 약 7만 명 관광객이 방문하는 아스티팔라이아 섬은 “스마트 그린 섬” 프로젝트를 통해 디젤 발전을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대체했다. 독일 폭스바겐과 협력하여 차량 수를 1,500대에서 1,000대로 줄이고 전기화를 촉진했으며, 모바일 앱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를 도입했다. 향후 섬 전체 에너지의 8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 포로스(Poros) 섬 사례

아테네에서 58km 떨어진 포로스 섬은 2023년 COP28에서 세 번째 대상 섬으로 선정되었다.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와 협력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설치, 대중교통 전기화, 폐기물 재활

용을 통한 순환 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강한 EM 모델 실현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 에너지, 순환 경제, 관광, 교통 전환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독창성을 갖는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항구 개발까지 포함한 포괄적 정책으로 더 광범위한 지속 가능성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 개입과 EU 및 국제 기업과의 협력을 결합한 점이 차별화 요소다.

그러나 국제 협력이 특정 기업과 EU 회원국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광 수익의 지역 분배 메커니즘이 부족하며, 정부와 기업 주도로 인한 주민 참여 한계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관광 수익과 지역 경제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며, 장기적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나가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생태현대화 이론을 실천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약한 EM과 강한 EM의 요소를 지역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GR-eco Islands 프로젝트와 EM 모델의 일치성 평가

| EM 요소    | GR-eco Islands 특징              | 약한 EM과 일치성                        | 강한 EM과 일치성                 |
|----------|--------------------------------|-----------------------------------|----------------------------|
| 환경 관점    | 재생 가능 에너지, 순환 경제, 탄소 배출 감축 중심  | 부분적 일치<br>(경제적 관점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 일치<br>(생태 중심적 접근 강조)       |
| 국가의 역할   | 정부 주도의 적극적 정책 개입, 재정 지원, 국제 협력 | 부분적 일치<br>(기술적 지원에 중점)            | 일치<br>(제도적 개혁 및 적극적 국가 개입) |
| 정책 설계    |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주민 참여, 공공-민간 협력  | 부분적 일치<br>(기술 혁신 및 경제적 효율성 중점)    | 일치<br>(민주적 의사결정 및 속의적 접근)  |
| 정책 적용 범위 | 지역적 특성 반영, 국제적 확산 가능성 모색       | 일치<br>(국가 수준의 에너지 자립 강조)          | 부분적 일치<br>(국제적 협력은 부족)     |
| 의사결정 방식  | 주민, 민간 기업, 정부 간 협력 및 민주적 의사결정  | 부분적 일치<br>(일부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 일치<br>(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 주요 성과    |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자립, 지역 경제 활성화    | 부분적 일치<br>(경제적 이익에 초점)            | 일치<br>(환경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 강조) |

이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순환 경제 구축,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생태 중심적 접근은 강한 EM 모델과의 높은 일치성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 주도의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민간 기업, 지역사회의 협력이 결합한 점은 강한 EM의 핵심 원칙인 제도적 재구조화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충실히 반영한다.

프로젝트의 정책 설계는 각 섬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실행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강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약한 EM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접근을 넘어서는 것으로, 강한 EM의 숙의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설계와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 그러나 국제적 협력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강한 EM의 이상적 모델과 비교할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구조가 구현되었으며, 이는 기술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약한 EM의 특징과는 상반된다. 또한,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인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자립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는 강한 EM의 생태 중심적 접근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강한 EM의 이상을 구현한 사례로 평가되며, 생태 중심적 접근과 제도적 개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제적 협력의 확대와 글로벌 적용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며, 이는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GR-eco Islands 프로젝트를 생태현대화 이론의 틀에서 분석하여 약한 EM과 강한 EM의 정책적 요소를 평가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는 할키, 아스티팔라 이아, 포로스 섬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프로젝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다른 섬이나 이니셔티브 전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를 전체 프로젝트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둘째,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정책으로, 특히 포로스 섬의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논의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현재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의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 셋째, 데이터의 제한성이 연구의 제약으로 작용했다. 일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워 모든 정책적 실행 과정과 성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질적 데이터 부족으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수용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가능성이 있으며, GR-eco Islands 프로젝트와 생태현대화 이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을 소망하며 연구를 마친다.



#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 22분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지역학회-대학원생 및 학부생

### [특별분과] 친환경 선박, 해사 데이터, 바다인문학 / 해운과 인권

|                                                                                                                            |            |                  |
|----------------------------------------------------------------------------------------------------------------------------|------------|------------------|
| 친환경 연료전환에 기반한 해운산업 전략적<br>방향성 탐구에 관한 연구                                                                                    | 이정민        | 국립한국해양대학교<br>대학원 |
|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IPCC Tier 3<br>기준 컨테이너터미널 환경 효율성 분석                                                                        | 심민섭        | 국립한국해양대학교<br>대학원 |
| 친환경 디지털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해사데이터 권리<br>구조와 법적 정합성<br>(EU 데이터법을 중심으로)                                                               | 어상운        | 국립한국해양대학교<br>대학원 |
| 친환경 해운 패러다임 전환기에서의 안전문화 다중비교 연구<br>: Hofstede 문화 차원 이론과 Helix Matrix 기법을 활용<br>한 한국·노르웨이·영국·일본 해운기업 분석 및 한국형<br>안전문화 모델 제안 | 정준한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 EU Data Act에 따른 해사데이터 관리에 대한 다층적<br>법적·제도적 분석과 해운기업의 전략적 대응                                                                | 임하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br>대학원 |
| 바다와 기후변화,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br>(ITLOS Case 31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 장제민<br>최민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 바다가 만든 식탁<br>: 동서양 해양 식문화의 교차와 확산                                                                                          | 신재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br>: 지배의 문명에서 공존의 문화로                                                                                        | 정지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 부산 북극항로 환적중심항만 구축을 위한 중요요인<br>우선순위도출                                                                                       | 김유찬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 Handy Size Bulk 중고선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김현진<br>김나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 LNG 가격과 LNG 운임 및 금리 간의 동적 상관관계 분석<br>(VAR 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 김준서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 선내 폭력과 괴롭힘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동향과<br>시사점 분석                                                                                      | 구본민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 선원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br>(지표선정을 중심으로)                                                                                         | 장유진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 최근 3년간 승선실습생인권 통계 분석 및 시사점                                                                                                 | 구동진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 친환경 연료전환에 기반한 해운산업 전략적 방향성 탐구에 관한 연구

이 정 민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IMO는 1973년 선박기인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or Ships, 이하 “MARPOL”로 약칭)을 국제협약으로 채택한 이후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 규칙(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이 포함된 MARPOL의 부속서 VI를 1997년에 채택하여 2005년 발효시켰다. IMO는 MARPOL의 부속서 VI에 따라 선박이 운항 중 배출하는 각종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제한하고, 오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였다(Serra and Fancello, 2020). 또한 IMO는 2011년 7월 「MARPOL Annex VI」를 개정하여 세계 최초로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EDI)를 모든 선박에 적용하는 에너지 효율 관리계획(SEEMP)을 통해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IMO는 2018년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기전략(IMO Initial Strategy)을 채택하여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를 설정하였으며, 2023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0차 회의에서 기존 초기전략의 목표를 상향 개정한 “2023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2023 IMO GHG Strategy)”을 채택함을 통해 2050년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도전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Charles et al., 2021). 이처럼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한 해운기업의 ESG 경영을 완성하기 위하여 ①선형개조, ②운항구간 조정, ③노후선 폐선 등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차별화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① 고유황유인 병커C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선박기인 배출가스 세정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를 추가하는 방법, ② 황 함유율이 높은 중유 대신 저유황유(Low-Sulfur Fuel Oil, LSFO) 혹은 선박용 경유(Marine Gas Oil, MGO)로 연료를 교체하는 방법, ③ 석유(Oil)가 아닌 대체 연료인 브릿지 연료로서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로 약칭), 메탄올, 중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수소 등과 같은 선박연료유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Stark et al., 2022).

이 연구는 2023년 7월 3일부터 MEPC(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제80차 2023 IMO GHG(Green House Gas) Strategy에 따른 IMO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기존 Heavy Fuel Oil(HFO)기반의 벙커C를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대전환(Paradigm Shift)이 우리나라 해운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운기업(Korea shipping company)은 친환경 선박연료 대전환에 있어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국내외 제도, 이해관계자, 해사산업계 등이 정치, 경제, 기술적 변화의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결합되어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데 유의미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초국가성과 초월경성에 기반한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 이론, 사회기술변화에 따른 수용 이론 및 기회의 창 이론을 통해 친환경 해사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어떠한 효과와 한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IMO의 적극적인 환경규제 속도에 맞춰 다양한 선박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요소가 된 것으로 새로운 선박대체연료에 관한 연구와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지원, 경제적 요인 등이 해운산업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선박대체연료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활성화되며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긍정적인 추세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IMO의 강력한 환경 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사회, 기술, 환경적으로 미지수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미지수의 공간을 이끌어나가는 데에 발생하는 도전요인과 기회요인, 그리고 그 속의 틈새혁신전략(Niche Innovations Strategy)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는 해운산업이 향후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echo-friendly fuel shift)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포착할 수 있도록 실제적 상황이나 맥락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회기술시스템 방법에 기반하여 틈새 혁신을 Gap Filling 방식으로 친환경선박연료 전환의 방향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기여점을 도출하였다.

해운기업들은 선박을 장기간 사용하는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실증데이터를 우선시하며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할 때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운기업들은 반드시 해운시장의 선두주자나 추격자가 아니더라도, '친환경'에 중심을 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무버(Smart Mov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49].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국내 해운기업이 IMO 2020 황산화물 규제 및 탄소중립을 위한 ESG 기반의 해운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연료 추진선박을 발주하는 것이 해사분야의 사회기술 레짐의 전환을 해석하는 적합한 '기회의 창' 방법에 기반하여 Multi layer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에서 Niche stream에 수반되는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특징을 요약하고, 틈새혁신 전략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해운기업들은 COVID-19,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단기간 운임 급등으로 인한 호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투자 대신 경로유지형 전략에 기반한 위험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운기업들의 '저비용 고효율 선박운항 전략'은 높은 생산 및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친환경선박연료 전환'에 핵심 도전요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운기업이 직면한 도전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에 따른 맞춤형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우량화주들은 친환경선박연료 전환에 기반한 선박 신조를 유도할 수 있는 FOB(Free On Board)기반의 장기운송계약을 해운기업들과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연료의 공급자는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Off-Taker와의 10년~15년 정도의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길 희망한다. 더불어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연료의 독점 공급 구조로 인하여 형성된 높은 친환경선박연료의 공급 가격과 사전에 완비되지 못한 제반 인프라의 제약은 해운기업의 친환경선박연료 선택의 핵심 도전요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결국 수요자인 해운기업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연료 중 어떠한 연료를 선택하는 것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박연료 시장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위한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친환경선박 연료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연료공급망 안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신뢰성을 상호 확인하는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운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경로의존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의 전환에 대한 혁신적이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친환경에 대한 수용자세는 결국 해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중소형 해운기업의 소극적인 기술수용 전략은 미래에 본인들이 기술격차를 주어진 Time limit 범위안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위험요인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결국 중소형 해운기업은 대형 해운기업과의 기술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위험과 상호 교환하겠다는 의지

를 전략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해운기업들은 현재의 보수적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추진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해운기업들은 선도자와 추격자 전략만으로 새로운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Smart Mover” 처럼 기업규모 및 여건에 맞춰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빠르게 쟁취할 수 있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국내 해운기업의 현실은 가까운 미래에 더욱 엄격해진 글로벌 친환경선박연료 규제 및 해운기업에 대한 ESG 실천을 선도적으로 수용하여 이러한 규제를 따라가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선박운항 영업에 불이익을 받아 해운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늦지 않게 대응할 전략을 가지고 해운기업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정책, 기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과 관련된 복잡성과 다층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연구는 한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른 지역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고, 문헌연구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실증적 결과 도출에 이르지 못한 점과 특정한 편향이나 미묘한 측면에서 해석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해운산업에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지역적 맥락에서 유사한 연구를 통해 글로벌 패턴을 이해하고, 다양한 친환경 연료의 장기적인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 협력과 정책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통해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미래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IPCC Tier 3 기준 컨테이너터미널 환경 효율성 분석

심 민 섭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IPCC(202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 기온은 1850-1900년 대비 2001-2020년 약 0.99℃ 상승하였다. 세계 평균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1세기 말 최대 1.01m, 해수온도는 최대 3.7℃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산화탄소(CO<sub>2</sub>)이다(Jung and Chung, 2004).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화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2016년 파리협정 및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면서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였다(KMI, 2021).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향상된 Port Master Data를 통한 선박·선석 호환성 개선, 선박 재하중량 최적화, 항만 간 운항속도 최적화 등 8대 온실가스 감축 조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순환경제 활성화, 지역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50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5대 부분(해양에너지, 항만, 블루카본, 수산·어촌, 해운) 중심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항만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항만분야는 저탄소 친환경 항만 구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항만 구역 내 LED 조명 교체, 항만 탄소저감 건설기술 마련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항만에서는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등 항만장비

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하여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는 부산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조성하고자 LNG 하이브리드 셔틀캐리어(S/C)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는 인천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과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E1컨테이너터미널(E1CT) 3개사의 야드 트랙터 75대와 트랜스퍼 크레인 4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DPF)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1년 12월 공공기관 탄소중립 주관을 맞아 친환경 항만하역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에코 안전조끼 전달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광양항에서 운영 중인 야드트랙터 85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DPF)을 진행하여 항만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항만공사는 우리나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과제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탄소중립 규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컨테이너물동량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컨테이너물동량의 증감은 항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항만 경쟁력은 물동량의 이동과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Liu and Lee, 2019).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 항만에서 탈탄소화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 등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Chang, 2013; Shin and Jeong, 2013; Lee, 2017; Na et al., 2017; Lin et al., 2019). 그리고 국토해양부(2008), KMI(2009, 2021, 2022) 등 정부 및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산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성을 비교할 때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Tier 1(단일 오염물질 당 공통된 기본 배출계수 활용)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Chang, 2013; Na et al., 2017; Lin et al., 2019), Tier 2(특정 오염물질에 대해 장비 종류와 연료 종류로 구분하여 국가고유 배출계수와 국가고유의 통계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Tier 3(실제 장비 대수, 출력, 부하율 등의 데이터 재원 활용)의 기준에 따라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17개를 대상으로 KMI(2022)에서 발표한 Tier 3 방식(실제 출력, 부하율, 장비 대수 등의 데이터 재원 활용)에 따라 도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표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이산화탄소(CO) 배출량은 KMI(2022)에서 발표한 2021년 항만별 컨테이너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유해산출물

고려 전후의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DEA-SBM 모형과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을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DEA-SBM 모형 분석 시 산출변수는 컨테이너물동량을 고려하였으며, Undesirable Outputs 모형에서는 산출변수로 컨테이너물동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후 두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초자료는 각 항만공사 홈페이지 및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대상으로 DEA-SBM 모형 분석결과, 전체 평균 효율성은 0.643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온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부산항의 PNC, HJNC로 나타났다. 인천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평균 수준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광양항, 평택당진항, 군산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효율성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대상으로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결과, 전체 평균 효율성은 0.697로 나타났다.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온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부산항의 PNC, HJNC, 인천항의 HJIT, E1CT, 평택당진항의 PCTC로 나타났다. 광양항과 군산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DEA-SBM 모형 분석과 동일하게 효율성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컨테이너물동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항만의 특성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의 효율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환경친화적인 운영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타 항만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결과 부족한 컨테이너물동량을 극복하고 효율성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탄소중립(Net-zero 2050)을 제안하면서 항만의 친환경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IPA)는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고자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하역장비 친환경화, 노후예선에 대한 친환경 연료전환, AMP 설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컨테이너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점과 Undesirable Outputs 모형을 통해 크게 향상된 컨테이너터미널 효율성을 부각시키며 컨테이너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항만 장비의 친환경 전환, 항만 내 재생에너지 발전, 수소 전원 도입 등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부산항 북항에 위치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HBCT, BPT, DPCT)는 DEA-SBM 모형 분석결과 대체로 평균 보다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CO)을 고려한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 시 효율성이 평균보다 낮아졌다. 2021년 BCC 모형을 기준으로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HBCT, BPT, DPCT)는 각각 960.8kgCO/TEU, 375.2kgCO/TEU, 1,259.8kgCO/TEU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은 컨테이너물동량과 환경적인 운영 측면을 동시에 고려 시 타 운영사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선사들의 항만선택요인을 살펴보면, 항만시설(Murphy 1991), 항만효율성(Tai and Hwang, 2005), 지리학적 위치(Nir et al., 2003), 배후단지와의 연계성(Wiegmans et al., 2008)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그리고 부산항은 미주항로와 구주항로와 같은 기간항로의 중심에 위치하여 있다는 지리학적 위치와 항만시설 등의 장점으로 경쟁력 있는 컨테이너 환적항만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항만운영의 기조에 따라 항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새로운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Liao et al., 2010, Li et al., 2019), 컨테이너터미널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광양항과 군산항은 유해산출물 고려 전후의 효율성 변화를 파악한 결과 두 가지 분석에서 모두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컨테이너터미널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항만운영의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친환경 디지털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권리 구조와 법제 정합성 (EU 데이터법을 중심으로)

어 상 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1. 서론: 자율운항선박(MASS)과 데이터권의 문제 제기

자율운항선박(MASS)은 AI, IoT, 위성항법, 클라우드 기술이 융합된 운항 시스템으로,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방대한 해상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그러나 데이터의 소유·접근·활용 권한에 대한 법적 기준은 국내외에서 미비한 상황이며, EU 데이터법은 이에 대응하는 대표적 입법으로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권리를 강조한다. 본 논문은 MASS 환경에서의 데이터 권리 구조, 선원의 데이터 주권과 인권 보호, 국내 법제의 정합성 및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본론

### 2.1 이론적 접근 & 2.2 방법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에 따른 해운 데이터 환경 변화 속에서 선원의 인권과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을 채택하여 선원을 단순 기술 객체가 아닌 데이터 권리의 주체로 간주하며, 선원의 데이터 접근·이동·제공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또한 Foucault의 판옵티콘 감시사회 이론을 적용해 MASS가 선원에게 미치는 심리적·행동적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규범 텍스트 분석을 통해 EU 데이터법과 국내 법제의 권리 구조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미국, 일본, 노르웨이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제도 요소를 도출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선원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조문화 방안을 제안하며, 궁극적으로 인권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2.3 EU 데이터법 핵심 구조

규율 대상은 IoT 기반 커넥티드 제품 및 서비스이다. MASS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커넥티드 제품과 관련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므로, 데이터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으로 위치하게 된다. 데이터 생태계 내에서 중심이 되는 권리 주체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선원)는 데이터 생성 주체로서 열람, 이전, 삭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반면 데이터에 대한 법적 또는 실질적 관리 권한을 가진 자가 데이터 보유자이다. 데이터 보유자는 기술·법적 통제자이나 사용자 권리 보장 의무가 있다. 데이터 수신자는 사용자의 요청이나 공공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받는 제3자이다. 수신자(공공기관 등)는 명시적 동의와 공공 목적 하에서 제한적 접근이 가능하다.

## 2.4 계약 기반 구조

EU 데이터법은 자율운항선박(MASS) 환경에서 선원을 데이터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접근권·이동권·공유권·삭제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열람·이전·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연속적으로 작동해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데이터 보유자는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는 GDPR의 보호를 받아 사용자 동의와 고지가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EU 데이터법은 기술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권리 구조를 통해 선원의 프라이버시와 노동권을 보호하며, 한국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5 데이터법의 계약 구조와 이용 조건

EU 데이터법은 자율운항선박(MASS) 환경에서 선원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기반의 데이터 이용 구조를 강조한다.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수집되더라도 반드시 명확한 계약을 통해 사용·이전되어야 하며, 사용자(선원)는 데이터 제공 범위, 목적, 형식 등에 대해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자나 공공기관 제공 시에도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와 최소한의 데이터 제공이 원칙이며, 정당한 목적과 사후 통지가 필수이다. 또한 데이터 보유자와 사용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조건 금지,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보호 장치도 포함된다.

## 2.6 데이터 공유와 공공성: 해운산업 내 공공책무

EU 데이터법은 재난, 공중보건, 환경 위기 등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기업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도화한다. 자율운항선박(MASS)에서 생성되는 해사데이터는 해양 재난 대응, 환경 규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제공은 최소한의 범위와 명확한 목적,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허용되며, 사용자 권리와 기업 이익을 함께

고려한다. 또한 기업의 공공 데이터 제공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이는 한국 해운산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 2.7 EU 데이터법의 한계와 비판적 논점

EU 데이터법은 사용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당한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데이터 전송 방식과 계약 조건 결정이 보유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사용자 권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해운업은 민감한 데이터가 다량 생성되는 특수 산업임에도, 데이터법은 MASS 환경의 인권적·노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법이 완성된 규범이 아니라 산업별 맞춤형 보완이 필요한 출발점임을 시사한다. 한국도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 자국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2.8 일본, 미국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비교법적 분석

일본은 『데이터 전략 2022』를 통해 기술 실증을 기반으로 단계적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데이터 주체 권리 규정은 미흡하다. 반면 자율운항 기술 관련 실증-조정-입법의 선순환 모델은 한국에도 유연한 법제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미국은 CCPA 등 소비자 권리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를 운영하지만, 직무 기반 데이터나 노동자의 디지털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계약 중심 구조는 기업 유연성은 높지만, MASS 환경에서는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 한국은 두 모델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 2.9 노르웨이: 실증 기반 규범 정비와 국제 협력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Yara Birkeland’를 상용화하며 자율운항선박의 설계, 운항, 통신 시스템 등에 관한 포괄적인 기술 지침을 마련했지만, 선원의 인권 및 데이터 주권 보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부족하다. 선원 개인정보 보호는 자율운항 지침이 아닌 EU GDPR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노르웨이 개인정보보호법(PDA)에 따라 규율되며, 정보주체 권리, 감독 체계, 벌칙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운항 환경에 특화된 선원 인권 보호 규범은 미흡해, 기술 발전에 비해 인권 보장 측면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2.10 자율운항선박의 데이터 흐름 구조와 권한 분배의 기술적 전제

자율운항선박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 외부 환경과 항해 상태, 해양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자율적으로 항로 설정과 조타·추진 제어를 수행한다. 이 데이터는 선내 통합 네트워크를 거쳐 자율화시스템에 전달되며, 경제운항, 비상대응, 사고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항해자료

기록기(VDR)에 순환 저장되며, 무결성 확보, 접근 통제, 암호화 등 보안 조치를 통해 법적 책임 규명과 기술 개선에 기여한다. 통신 시스템은 LOS, 무선, 위성통신으로 구성되어 원격운항센터(RCC)와 실시간 연계하며, 안정적 운항을 위한 우선순위 전송 체계를 갖춘다. 수집된 데이터는 항만당국, 조선사 등과 제한적으로 공유되며, 정보 주체 권리 보호를 전제로 법적 규범 하에 관리된다.

## 2.11 자율운항의 발전 단계별 쟁점과 향후 논의 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수준이 AL3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실제 승선자의 역할은 줄어들고, RCC 근무자와의 통신 내용, 지시 로그, 데이터 접근 등이 새로운 기록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항만 근로자, 파일럿, 정비 인력 등 일시적으로 선박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영상·음성 장비를 통해 비의도적으로 수집되고, AI 학습 자료로 장기 보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 보호 논의가 포착하지 못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구조를 반영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 2.12 국내 법제와의 정합성 평가

국내 법제는 자율운항선박(MASS)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 EU 데이터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선원법』은 전통적 노동 규율에 머물러 데이터 권리 개념이 부재하고,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데이터를 주로 산업 자원으로 다뤄 사용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다. 반면 EU 데이터법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열람, 전송, 삭제 등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한다. 국내에서 이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정의 조항과 사용자 권리 조항을 신설하고 계약 기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 MASS 환경에서 데이터 권리 보호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인권과 통제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해운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 2.13 해사데이터 권한 분쟁과 계약 기반 조정 구조

자율운항선박(MASS)의 확산에 따라 해사데이터를 둘러싼 선원, 운행사, 공공기관 간 권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계약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 선원은 데이터 생성 주체임에도 열람·삭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며, 퇴직 후에도 데이터 삭제 요구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인사 평가 등에도 활용되거나 공공기관에 절차 없이 제공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 운행사와 공공기관 간에도 정보 제공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 이에 EU의 데이터 처리계약서(DPA)를 참고하여 고용계약서 내 데이터 권한 명시, 표준화된 요청서 양식 마련, 공공기관 대응 프로토콜 구축, 해사 특화 DPA

도입 등이 필요하며, DPA는 선원 권리 보호와 다층적 데이터 흐름 관리를 위한 핵심 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 2.14 연구 설계 요약 및 학문적, 정책적 기여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MASS) 환경에서 선원이 생성하거나 기여하는 데이터가 단순한 기술적 산출물이 아닌 인격적·노동적 결과물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현행 「선원법」과 「데이터산업진흥법」은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권리 구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MASS 환경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인권적 함의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U 데이터법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 노르웨이의 관련 법제와 실증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기반 권리 보호, 기술 실증 연계, 국제 정합성 확보 등의 유형을 도출하고, 한국 법제의 수용 가능성과 제도적 공백을 제시하였다.

## 3. 결론: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MASS)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권리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 법제 대응 전략을 제시했으나, 비교법 분석이 원칙 수준에 그치고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제도의 시간차, 그리고 선원 중심 분석에 한계가 있다. EU 데이터법과 국제 규범을 비교하여 한국 법제 정합성을 평가하고, 일본·미국·노르웨이 사례를 참고한 실천적 입법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선원법」 개정을 포함한 데이터 권리 구조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 기초를 마련했으며, 실증 기반 선제적 입법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해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권 중심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친환경 해운 패러다임 전환기에서의 안전문화 다중비교 연구

: Hofstede 문화 차원 이론과 Helix Matrix 기법을 활용한  
한국·노르웨이·영국·일본 해운기업 분석 및 한국형 안전문화 모델 제안

정 준 한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본 연구는 글로벌 해운산업의 핵심 구성요소인 안전문화의 형성과 문화적 수용 차이에 주목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해운 선진국(영국, 노르웨이, 일본)의 안전문화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해운안전문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출발점은 국내 해운기업의 형식적·절차 중심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실습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체크리스트만으로 안전문화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ISM Code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안전관리체계이지만, 동일한 제도적 규범이 국가별 문화적 토대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실행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국의 고유한 안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ISM Code를 수용하면서도 비처벌 기반의 보고문화(Just Culture)와 자율적 위험 공유 시스템(CHIRP)을 정착시켰고, 현장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과 DP(Designated Person) 제도 강화를 통해 실질적 책임 중심의 안전문화를 구현하였다. 노르웨이는 수평적 협의 구조와 현장 맞춤형 Simple SMS를 통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제도 수용을 특징으로 하며, VR 기반 교육, 일상적 디브리핑, 자율 보고 루프가 일상화되어 있다.

일본은 ISM Code를 문서화 중심, 계층적 승인 체계, 형식적 인증 시스템과 접목시켜, 정형화된 교육 체계(NAV9000, E-learning)와 규정준수 중심의 보고문화로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이 뚜렷하다. 이처럼 ISM Code라는 동일한 규범이 적용되었음에도 각국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제도의 해석, 운영 방식, 실천 전략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이것이 안전문화의 실제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을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적 특성이 해운기업의 안전문화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Helix Matrix 기법을 도입하여 국가-기업-개인의 계층 간 상호작용 구조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단순 비교가 아닌 다층적이고 순환적인 문화 내재화 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한국 해운기업의 문화적 현실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정착 전략을 도출하고, 정책·제도·조직운영·교육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ISM Code의 문화적 수용 차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비교 문화 분석틀을 제안하며, 실무적으로는 국내 해운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은 국가 간 문화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적 도구로서, 기업 조직, 정책 수립, 교육, 리더십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Hofstede의 문화 차원 지표가 해운안전문화의 제도 수용, 조직 운영, 행동 양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비교문화 분석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6가지 문화 차원 중 해운 현장의 조직 운영 및 행동 기반 안전관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력 거리 지수, 불확실성 회피 지수, 개인주의 지수의 세 가지 지표에 집중하였다.

Helix Matrix는 원래 경영학 및 조직이론에서 제안된 이중 리더십 기반의 조직 구조 분석 도구로, 역량 중심의 기능 리더(Capability Leader)와 가치 창출 중심의 사업 리더(Value-Creation Leader)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헬릭스 구조의 핵심 원리를 국가비교문화 분석에 확장 적용하였다.

즉, 해운 안전문화를 구성하는 세 가지 계층(국가 정책, 기업 운영, 개인 의식)을 Helix의 기능적 병렬 구조에 대응시키고, 이들이 각기 독립적인 구조로 존재함과 동시에 상호 피드백과 조율을 통해 순환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각 계층은 위계적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영향력을 갖는 상호작용 구조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일방향적 문화 수용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의 상호변형과 상호 내면화의 동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과 Helix Matrix 기법을 활용하여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해운 선진국의 안전문화 특성을 계층별로 분석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국제 규범(ISM Code)이 각국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수용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다. 국가별 교차분석의 핵심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세 국가는 제도적 형식 측면에서는 국제기준의 조기 수용, 인증체계 운영, 교육·보고문화 정착 등 유사한 구조를 공유하였으나, 각 계층별 실행 메커니즘에서는 뚜렷한 문화적 차이를 보였다. 국가 계층에서는 영국이 자율규제와 산업 중심의 실행 지침을 채택한 반면, 노르웨이는 실용주의적 현장 자율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일본은 중앙집중적 규범 통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Hofstede의 권력거리(PDI), 불확실성 회피(UAI) 수준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났다. 기업 계층에서는 공통적으로 행동 기반 안전관리, 내부 감사, 위험정보 피드백 루프 등의 제도화를 이루었으나, 일본은 표준화와 계량화 중심의 운영, 노르웨이는 자율적 리스크 기반 운용, 영국은 절차 개선 중심의 피드백 문화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 계층에서도 보고 문화, 교육 방식, 팀워크 수행 방식에서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졌다. 영국과 노르웨이는 심리적 안전성, 자율 보고, 참여 중심 교육이 정착되어 있었으며, 일본은 위계 기반 보고와 문서 중심 훈련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국제 제도와 문화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다. 동일한 국제안전관리(ISM) Code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해당 제도의 수용 방식과 실행 전략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제도의 실질적 정착과 안전문화 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그 제도가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내면화되는지를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계층 간 순환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다. 본 연구는 Helix 구조를 통해 국가 정책, 기업 운영체계, 개인의 안전 인식 사이의 다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 구조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은 기업의 안전관리 운영체계에 영향을 주고, 기업문화는 다시 선원 개인의 보고 행위나 안전 인식에 작용하며, 이러한 개인의 경험과 실천은 다시 상위 계층의 제도 개선과 정책 환류로 이어진다. 이러한 수직적·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Helix 구조는 안전문화 분석의 새로운 해석 도구로 기능한다.

셋째, 한국형 해운안전문화 모델 개발의 실증적 기초 마련이다. 한국은 문화 지표상 일본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보다 자율적이고 실용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킨 영국과 노르웨이의 사례는 전략적 벤치마크로서 의미가 크다. 영국의 비처벌 기반 보고문화, 노르웨이의 수평적 피드백 구조 등은 한국 해운산업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본 분석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형 해운안전문화모델 설계에 있어 문화적 기준점과 정책적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조직문화와 해운 산업 구조에 적합한 한국형 해운안전문화 모델을 Egg 모델 형식으로 설계하였다. Egg 모델(TEAM: The Egg Aggregated Model)은 기술적·제도적 요소(Yolk), 심리적·인식적 요소(Protein), 조직의 핵심 가치와 문화적 기반(Air layer)을 계란의 구조에 비유하여 조직의 안전문화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는 이 Egg 모델에 Helix Matrix 기법을 접목하여, 기존의 정적 층위 구조에 국가-기업-개인 간의 동적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문화가 단순히 제도나 절차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차이에 따라 제도가 어떻게 수용·변형되고, 각 계층에서 순환적 피드백을 통해 내면화되는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형 헬릭스모델은 Egg 모델의 'Technological, Organisational, Human domain'을 Helix의 국가,기업,개인 계층으로 대입했다.

이러한 층위 간의 관계는 수직적 위계가 아닌 상호 피드백과 환류(feedback)의 나선 구조로 형성되며, 각각의 변화가 다른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재구조화되는 순환성을 갖는다. 예컨대, 정부 정책이 기업의 리더십 및 보고체계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선원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유도하며, 구성원의 경험은 다시 기업문화와 정책 개선으로 피드백된다. 이러한 구조는 안전문화의 진화가 단일 행위자 또는 규범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구조적-문화적-개인적 요인의 통합과 상호작

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 모델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설계 및 교육 시스템 강화, 기업 차원의 안전기후 조성 및 리더십 훈련, 개인 차원의 심리적 안전성과 참여 기반 행동 개선이 단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Air(신뢰 기반 조직 문화), Protein(심리적 안전과 자율 행동), Yolk(제도 작동성과 학습기반 점검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3단계 실천 로드맵과 통합적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로드맵은 단기 캠페인 중심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며, 교육·조직 운영·정책 설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 가능하다. 요컨대, ‘K-maritime Safety Culture Helix Model’은 제도와 문화의 상호작용, 계층 간 순환구조, 내면화 메커니즘을 통합한 이론·실무 연결형 모델로서, 한국 해운산업의 안전문화 혁신을 위한 종합적 분석 도구이자 실천 전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향후 정부의 해사안전 정책, 기업의 조직 진단 및 교육 전략, 해양대학의 교과과정 설계 등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확장성과 적용 가능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기존 해운 안전문화 논의가 제도 도입 여부나 보고율 등의 결과 지표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간 상호작용, 계층 간 피드백 구조, 문화적 내면화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한국 해운산업이 직면한 제도-문화 간 불일치, 상하 간 의사소통 단절, 형식주의적 보고 관행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자율적 보고문화 정착, 리더십 기반 피드백 구조 구축,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 설계 등 실천 가능한 개선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구의 주된 분석은 문헌조사와 비교문화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선원 또는 관리자 대상의 실증조사와 인터뷰 등 1차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정성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영국·노르웨이·일본 세 나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문화권(예: 남미, 동남아, 중동 등)의 사례를 포함한 확장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셋째, 제안된 헬릭스모델은 이론적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해운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적용된 실증적 결과나 효과 검증은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해운기업 내 다양한 조직 유형별 안전문화 특성과 제도 수용 구조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선원과 관리자 간 인식 차이, 리더십의 작동 방식, 심리적 안전성과 행동 변화의 연계 구조 등을 현장 조사 기반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안된 헬릭스모델을 실제 교육훈련 체계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평가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EU Data Act에 따른 해사데이터 관리에 대한 다층적 법적·제도적 분석과 해운기업의 전략적 대응

임 하 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1. 서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해운산업에도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의 도입은 선박 운항 과정에서 생성되는 해사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방식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재조명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럽연합(EU)은 2023년 「EU Data Act(Regulation (EU) 2023/2854)」를 제정하고,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였다.<sup>1)</sup> 본 법률은 데이터 접근권, 사용권, 이동권, 공유의 무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을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개인 정보 보호를 넘어선 비개인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자율운항선박의 상업화에 대응하기 위해 MASS Code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사데이터의 생성, 저장, 이동, 공유와 관련된 국제 규범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sup>2)</sup>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데이터 규범 변화 속에서 해운기업이 직면하게 될 법적·제도적 도

1) European Union. (2023)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OJ L, 22.12.2023, Article 50[pdf]. Available at: <http://data.europa.eu/eli/reg/2023/2854/oj> (Accessed: 1 April 2025).

2) Issa, M., Ilinca, A., Ibrahim, H. and Rizk, P., (2022)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Problems and challenges facing the regulatory process', Sustainability, 14, 15630. Available at: <https://doi.org/10.3390/su142215630> [Accessed 1 July 2025].

전과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sup>3)</sup>

## 2. 이론적 배경

### 해사데이터의 역사적 주권성

해사데이터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의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구조적 현상이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항해 데이터는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토르데시야스 조약(1494)을 통해 항해 데이터를 국가 기밀로 관리하며 폐쇄해(mare clausum) 담론을 강화하였다.<sup>4)</sup> 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자유해(mare liberum) 원칙을 주장하며 데이터 공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쿡의 탐사 항해는 당시 최대 규모의 해상 탐사 데이터를 생산하였고, 이를 국가가 통제된 방식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식 주권과 해양 패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sup>5)</sup>

### 데칼코마니적 구조와 전략적 변곡점

이러한 역사적 선례는 현재 EU Data Act가 지향하는 데이터 주권과 공유의 패러다임 전환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과거 항해 데이터가 은폐에서 공개로 전환되었던 것처럼, 현대 해운산업 역시 폐쇄적 데이터 운영에서 공유와 협업 기반의 데이터 활용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이는 앤드루 그로브(Andrew Grove)의 변곡점 이론에 부합하며, 해운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변곡점(Strategic Inflection Point)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sup>6)</sup> 즉, 데이터는 더 이상 기술적 부속물이 아닌,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되었다.

3) Chiarella, M.L. & Borgese, M. (2024) 'Data Act: New Rules about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thens Journal of Law, 10(1), 47-62.

4) 정문수 (2022), 「바다 공간에 대한 담론과 태평양 탐사: 토르데시야스 조약(1494)에서 누트카 협정(1794)까지,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6(2), p.33

5) 이학수·정문수 (2019), 「영국 범선의 용당포 표착 사건」,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0(9), pp.271-276.

6) Grove, A. (1999) Only the Paranoid Survive: How to Exploit the Crisis Points That Challenge Every Company, Crown Currency. pp.8-10.

### 3. EU Data Act의 주요 내용과 법적 함의

EU Data Act는 IoT 기기와 커넥티드 제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정하게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규율한다. 핵심적으로, 데이터 접근권 강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 데이터 이동권 보장, 그리고 제3국으로의 무단 데이터 이전 제한을 골자로 한다.<sup>7)</sup>

데이터 보유자(data holder)는 선박 제조사, 장비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으로 정의되며, 데이터 사용자(data user)는 선주사, 선박 운영자, 용선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데이터 수신자(data recipient)는 항만당국, 기국, 보험사, 정비업체, 제3의 해운사 등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역할 구분은 기존 해운산업의 공급망 구조와는 다른 법적 지형을 형성하며, 해운기업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 관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EU Data Act는 자율운항선박 운용 중 생성되는 해사데이터에 대해 명확한 소유권과 접근권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선박 건조자와 기자재 공급자가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가졌으나, 이제는 선주와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항만당국, 기국 등 공공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전환과 데이터 상호운용성도 법적으로 보장된다.<sup>8)</sup> 동시에, GDPR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이동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 4. 해운산업의 법적·제도적 대응 전략

EU Data Act 시행은 해운기업의 데이터 관리 및 운영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데이터 소유권과 활용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운영자와의 계약에서 데이터 접근 및 이동권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해사데이터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이동성과 보안을

7) European Commission (202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COM(2022) 68 final, 2022/0047(COD), Brussels, 23 February[pdf]. Available a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2PC0068> (Accessed: 1 April 2025).

8) European Union. (2023)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OJ L, 22.12.2023, Article 50[pdf]. Available at: <http://data.europa.eu/eli/reg/2023/2854/oj> (Accessed: 1 April 2025). pp.54-58.

확보하고,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 DPO) 및 데이터 관리자(Data Manager)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국제 규범에 대응하는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MASS Code, GDPR, EU Data Act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법무 체계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동시에 갖추는 필요가 있다.

넷째,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데이터 전략이 필요하다. 즉, 필요에 따라 데이터의 일부는 공공 데이터로 제공하고, 일부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데이터 구획화 전략(Data Segmentation Strategy)이 요구된다.

## 5. 결론

EU Data Act는 해운산업,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상업화 과정에서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률이다. 해사데이터는 단순한 운항 보조 정보가 아니라, 해운기업의 경쟁력, 안전성,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 변화가 아닌, 산업 패권의 재편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운기업은 EU Data Act를 단순한 규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대응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 체계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법규 준수를 양립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실질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시대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바다와 기후변화,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 (ITLOS Case 31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장 제 민 · 최 민 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I.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사건번호 31번)

2024년 5월 2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Case No.31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기초한 기후변화 관련 해양환경 보호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본 의견은 바누아투, 투발루, 팔라우 등 9개국으로 구성된 소도서국위원회(COSIS)가 제기한 질의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기후변화를 국제해양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해석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권고적 의견 내용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환경오염은 물질 또는 에너지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되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행위는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한다.
- 2)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 3) 기후변화 및 그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의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을 고려할 때, 협약당사국은 '엄격하고 상당한 주의의무'(stringent due diligence obligation)를 부담한다.
- 4) 그러한 의무는 결과적 의무가 아니라 입증 가능한 최선의 조치와 협력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절차적 성격의 의무이다.

본 권고적 의견은 해양법의 해석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범적으로 확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전통적 해양오염 개념에 포함시킨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법적 논의를 넘어서,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소도서국의 거주하는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 보호와 국제적 연대와 책임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 II. 기후위기로 인한 소도서국의 실제적 문제

해수면 상승은 소도서국에서 단순히 해안선의 후퇴를 넘어 국가 존립과 주민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해수면은 최대 1미터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국가의 영토가 물리적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투발루와 키리바시, 마셜제도, 니우에 등 다수의 태평양 소도서국은 평균 고도가 불과 수 미터에 불과해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에 취약하다. 투발루 정부는 주민 일부의 해외 이주를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sup>1)</sup>, 바누아투는 이미 일부 공동체를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계획을 실행하였다.<sup>2)</sup> 바하마, 세인트루시아, 팔라우 등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국가들도 점진적 해안 침식과 지하수 염류화, 농지 손실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주가 임시적인 재난 피난이 아니라, 국토 상실과 공동체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디아스포라는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결권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에도 근본적 위협을 가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를 “점진적 실향(slow onset displacement)”으로 규정하며, 난민 지위나 법적 보호 체계의 공백을 지적해 왔다. 현행 국제난민법과 이주 관련 협약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주민을 보호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III.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향민

앞에서 논한바와 같이 해수면 상승은 갑작스럽고 일시적이거나 회복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진적(slow onset)’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슬로우 온셋 현상은 단기적인 재난으로 인한 이주보다 장기적이고 영구적이며 회복불가능한 이주를 유

1) McNamara, K. E., & Farbotko, C. (2017). Resisting a 'Doomed' Fate: An Alternative to Climate Change Determinism in Tuvalu. *Asia Pacific Viewpoint*, 58(3), 362-375. doi: 10.1111/apv.12157 (투발루 정부는 뉴질랜드와 협력해 Pacific Access Category Visa를 통해 주민 이주의 경로를 제도화했고, 이를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간주)

2) 바누아투의 공동체 내륙 이주 사례, Republic of Vanuatu(2015), p.10; Campbell(2010), p.65; Reuters(2019).

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많은 섬나라 국가에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sup>3)</sup>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향은 이미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다수 소도서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피지의 Vunidogoloa 마을은 해수면 상승과 반복되는 해안 침수로 인해, 2014년 주민 전원이 약 2킬로미터 내륙으로 강제 이전하였다. 이는 태평양 섬 국가 최초의 공식적 기후 이주 사례로 기록된다. 피지 정부는 이후 약 830개 취약 공동체를 대상으로 추가 재배치 계획을 수립 중이다.<sup>4)</sup> 또한, 키리바시 정부는 해수면 상승과 염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피지에 6,000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 일부를 이주시킬 수 있는 안전망”으로 활용할 방침임을 공표하였다.<sup>5)</sup> 투발루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상실될 위기에 놓였으며, 뉴질랜드와 “Pacific Access Category” 협약을 통해 매년 일정 수의 주민이 이주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화하였다.<sup>6)</sup> 이러한 사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실향이 점진적이며 영구적인 특성을 지니며,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 IV.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실향민의 난민 지위 인정 및 인권 동향

### 1. 국제법상 공식 ‘기후 난민’ 지위

기후위기로 인한 실향민의 대표적인 사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거주지의 상실과 심각한 훼손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1951년 난민협약은 ‘박해(persecution)’를 근거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박해의 사유에 기후·환경적 이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3) IOM Outlook on Migrati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2022)

4) Fijian Government. (2014). Relocation Guidelines for Communities Displaced by Climate Change. Government of Fiji.; McNamara, K. E., & Des Combes, H. J. (2015). Planning for community relocations due to climate change in Fiji.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6(3), 315-319. <https://doi.org/10.1007/s13753-015-0065-2>

5) Government of Kiribati. (2015). Kiribati Joint Implemen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KJIP).; Reuters. (2015, August 11). Kiribati buys land in Fiji as rising seas threaten homeland.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climatechange-kiribati-idUSKCN0QO16M20150811>

6) UNHCR. (2019). Tuvalu Country Profil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Retrieved from <https://www.unhcr.org/news/stories/2019/9/5d8e6d7b4/tuvalu-facing-sea-level-rise.html> ; McNamara, K. E., & Farbotko, C. (2017). Resisting a 'doomed' fate: An alternative to climate change determinism in Tuvalu. Asia Pacific Viewpoint, 58(3), 362-375. <https://doi.org/10.1111/apv.12157>

이에 따라 현재 국제법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 난민(climate refuge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법적 지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인구에 대한 보호 체계에 근본적 공백이 존재한다.

## 2. 지역적·국제적 진전 사례

2025년 7월 미주인권재판소(IACHR)는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명시하고,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며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관점을 강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주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멕시코·바하마 등 기후 실향 사례가 공식 증언으로 제출되었으며,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기후 실향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3. 해외 정책 및 입법 시도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 이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비자(humanitarian visas)’를 도입하거나 임시 체류 제도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착 허가나 영주권 부여 등 영구적인 보호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경우, 기후 이주 대응을 위한 Climate Displaced Persons Act 등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의회 통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V. 기후위기 실향민의 난민 지위 인정의 필요성과 한계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단지 환경 문제를 넘어 인간의 생존과 국제법 질서에 도전하는 복합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실향민 문제는 단순한 국내 이주의 범주를 넘어서, 국제 사회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해야 할 국경을 초월한 인권·환경·법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법상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며,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여 기후 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논의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후위기 실향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데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 피해의 발생과 특정 국가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온실가스는 복수의 국가에서 수십 년 간 누적되어 온 결과이며, 피해 발생 또한 간접적이며 비선형적이다. 따라서, ‘국가책임론’(State responsibility)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난민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1982년에 채택된 조약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나 온실가스 배출 통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약 해석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해양환경오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쟁점

으로 남아 있으며, 해석론적 접근을 통해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1951년 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실향민은 이러한 박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협약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해수면 상승으로 물리적 국토 자체가 잠식되고 있는 투발루, 키리바시, 몰디브 등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국제법상 난민 보호 대상이 아니다. 결국, 기후위기 실향민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은 단지 법적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실현의 문제이며, 국제사회가 전지구적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논의 확대에도 실질적인 구속력 및 강제성을 가진 법적 규범이 여전히 부재하다. 현재 대부분의 관련 논의는 권고적 의견, 비구속적 선언, 자발적 이행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실향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거나 책임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다. 파리협정 역시 기후 이주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언급할 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후 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 VI. 결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이주와 실향으로 인한 난민 등의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바누아투, 투발루와 같은 소도서국 주민들은 자국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권리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의 의무로 다가오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기후위기를 해양환경오염의 범주로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강조했다. 이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판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기후위기 실향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 간 협력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시점이다. 해양법과 난민법, 인권법을 포괄적으로 연결하는 법적·정책적 고민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기후 위기 시대에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바다가 만든 식탁

## : 동서양 해양 식문화의 교차와 확산

신재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저희가 매일 접하는 음식은 단순히 식재료의 조합이 아닙니다. 음식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유산입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살아온 지역은 해양이라는 독특한 공간과 환경에 의해, 매우 고유한 식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동아시아, 지중해, 그리고 선박 위라는 세 가지 공간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해양 식문화의 형성과 전파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인류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1. 동아시아의 발효음식 문화 - 자연과 공존한 보존의 기술

동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쌀 문화권으로, 밥과 함께 곁들일 다양한 반찬 문화가 발달해왔습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철 식량 보관이 필수적이었던 환경은, 발효 기술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은 모두 메주에서 출발한 장류이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풍미가 깊어 주식인 밥과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중국에서는 두장(豆醬)이라는 콩을 발효시킨 장이 그 시초가 되었고, 이 두장은 이후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며 지역의 기후와 입맛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일본의 쇼유(간장)와 미소(된장)는 한반도를 거쳐 들어온 장문화의 또 다른 진화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장류 외에도, 야채를 소금에 절여 만든 김치, 장아찌류, 그리고 생선이나 해산물을 염장한 젓갈은 겨울철 저장과 항해용 식량 확보라는 목적에서 발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젓갈은 매운 양념을 더해 비린내를 줄였고, 일본은 재료 본연의 향을 살려 술안주 등으로 활용하며 각기 다른 미감을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발효 음식은 단순한 조리 기술을 넘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기 위한 생존 방식이자 문화적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효 문화는 동남아시아로도 전파되며 새로운 음식 문화와 조리법을 창조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시로 중국의 황두장을 볶아 만든 ‘자장면’이 한국에서 자장면으로 변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 2. 선박 위의 식문화 - 바다에서 만들어진 생존의 레시피

인류는 오래전부터 바다를 항해해왔고, 그만큼 선박 위 식문화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 반영된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선박에서의 식사는 제한된 재료, 긴 항해 시간, 보존의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음식이 \*\*하드택(Hardtack)\*\*입니다. 밀가루, 물, 소금만을 섞어 돌처럼 굳힌 이 건빵은 수개월 이상 부패 없이 보관이 가능해 선원들의 기본 식량이었습니다. 단단한 만큼 입 안이 까지고 이가 부러지는 사례도 많았지만, 물이나 스투에 불려가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사로 기능했습니다.

또한 염장 고기와 말린 생선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salt pork)는 그 효율성과 보존성 덕분에 영국 해군의 식량 배급표에 오랫동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는 방식은, 바다 위에서도 부패 없이 단백질을 확보하려는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Lobscouse(랍스카우스)\*\*라는 스투입니다. 선원들이 배에 남은 재료를 끓여 만든 이 스투는 일정한 레시피 없이 ‘그날그날 있는 재료로 만든 즉흥 요리’였지만, 모든 선원이 같은 냄비에서 나눠 먹는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리버풀 등 북유럽 항구 도시에서는 랍스카우스를 지역 전통 음식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정체성과 소속감을 상징하는 문화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선상에서의 럼(Rum) 문화도 주목합니다. 단순히 술이 아닌 럼은 물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항균·보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었습니다. 럼을 물에 타서 마신 ‘그록(Grog)’은 괴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선원 생존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더불어 전투에서의 승리나 국가 기념일에 럼을 나누는 문화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하나의 의식으로 기능했습니다.



### 3. 지중해의 해양 식문화 - 교류 속에서 피어난 다양성

지중해는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식문화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이슬람·유럽·아랍·아메리카 등 다양한 문화가 오가며 만들어낸 융합적 성격이 강합니다.

고대 로마는 그리스로부터 전파된 **\*\*가룸(Garum)\*\***이라는 젓갈을 즐겼고, 이는 현대의 엔초비 소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젓갈 문화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해산물을 소금에 절여 저장성과 풍미를 확보하는 방식이 양쪽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랍과의 교역을 통해 들어온 생선 초절임 요리는, 튀김 생선에 식초 소스를 얹는 **\*\*에스카베체(Escabeche)\*\***로 변화하였고, 이슬람 제국의 쌀 요리 필라프는 스페인에 들어와 **\*\*빠에야(Paella)\*\***로 발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재료의 수입이 아니라, 문화 간 접촉이 새로운 음식 형태를 탄생시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5~17세기 신향로 개척 이후, 신대륙으로부터 토마토와 파프리카 같은 작물이 유입되며 지중해 음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관상용이던 토마토는 점차 파스타에 활용되며 해산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재료가 되었고, 파프리카는 빠에야나 다양한 소스 요리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중해 식문화가 타문화 수용에 유연하고, 열린 생태계를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동아시아의 발효음식, 선박 위 생존식, 지중해의 융합요리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된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해양이라는 자연환경이 만든 보존, 교류,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닌, 지역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한 숟가락의 된장국, 한 그릇의 파스타, 그리고 따뜻한 스투 한 접시에는 수백년을 거쳐 발전한 바다의 기억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식탁 위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 : 지배의 문명에서 공존의 문화로

정 지 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1. 서론 - 신화 속 바다와 인간의 한계

인간에게 바다는 태초부터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 영웅이었지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 무려 40년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신화는 인간의 교만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징한다.

동양 사상에서도 바다는 겸허함과 순응의 원리로 읽힌다.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여 물을 최고의 선에 비유했다. 모든 물의 궁극적 귀착지인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도 다투지 않는다. 『통감절요』에는 “해납백천(海納百川), 유용내대(有容乃大)”라는 구절이 전해진다. 바다의 위대함은 곧 그 수용성과 관용성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인간은 더 이상 바다 앞에서 겸허하지 않았다. 자연을 극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근대적 신념이 지구 전역의 바다를 변화시켰다. 그 변화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인류세(Anthropocene) 이다.

### 2. 인류세란 무엇인가: 다양한 기원설과 우리의 관점

인류세는 인간의 활동이 지질학적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뜻한다. 2000년대 초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첸은 인류세라는 용어를 통해 인간 중심 문명이 초래한 지구 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부 학자들은 인류세의 출발점을 1950년대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 동위원소 확산으로 본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대항해시대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해양 교역을 인류세의 초기 징후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산업혁명을 인류세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본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화석연료, 철강 기술이 결합하며 인간의 이동과 생산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특히 강선(steel ship)의 발달은 대륙을 잇는 바닷길을 비약적으로 확장시켰다. 계절풍과 무역풍에 의존하던 항해가 증기선과 강선을 통해 연중 항해가 가능해졌다. 이는 바다를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자원 수송로로 만들었다.

그러나 강선의 발달은 곧 화석연료 소비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CO<sub>2</sub> 농도는 50% 이상 상승했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는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지구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바다는 인간의 산업 활동이 남긴 배출물을 흡수하며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그 한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결국 산업혁명은 바다가 단순한 두려움과 경외의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파괴되고 착취되는 자원 공간'으로 전환된 출발점이었다.

### 3. 기술 진보의 그림자 - 바다 생태계의 파괴

근대 이후 기술 진보는 인간의 바다 지배를 가속했다. 강력한 저인망 어선, 음향 탐지기술, 위성 관측, 자율운항선박 등은 해양 자원 개발과 어획 효율을 극대화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다의 파괴였다.

1950년대 이후 지구 전체 물고기 비축량은 급격히 줄었다. 가입남획과 성장남획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붕괴시켰다. 바다거북과 상어 같은 해양 상위 포식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연안 어촌 공동체는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

해양 오염도 심각하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제 해양 생물의 위장에 남아 먹이사슬을 타고 인간의 식탁에 도달한다. 태평양 쓰레기섬은 이미 대한민국 면적의 16배 이상으로 추산된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인간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전락시켰다.

### 4. 섬, 인류세의 경계

산업혁명이 가져온 해양 산업의 팽창은 섬 공동체의 운명도 바꿔놓았다. 대륙간 항로는 섬을 중계 기지로 만들었고,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통해 '국가의 해양영토 확장'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은 이 섬들을 사라질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몰디브, 투발루, 마셜제도 등 국토 대부분이 해수면과 불과 2~5m 차이이다. 투발루는 이미 피지에 대체 영토를 매입했



고,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침수 위협으로 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바다는 더 이상 무한한 자원의 바다가 아니다. 오히려 바다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공존해야 하는 생명의 경계선이다.

## 5. 해문과 인문 - 관계의 복원

『해문과 인문의 관계』는 바다의 무늬(海文)와 인간의 무늬(人文)가 서로 얹히며 전개되어 왔다고 말한다. 고대에는 바다의 물리적 운동과 계절풍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인류는 바닷길을 통해 사람·상품·사상을 교류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과학기술은 바다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꿨다.

이제 우리는 다시 바다를 '관계의 장(場)'으로 회복해야 한다. 해양 인문학은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천문, 지질, 기후, 생태, 지역문화 연구가 융합되는 '학제적 복원'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단지 해양사 연구의 확장이 아니다. 기술 중심 해양정책과 자원 개발 담론을 넘어, 바다와 섬을 공존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해양문화 콘텐츠와 교육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 6.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해양, 해양 인공지능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실은 해수면 상승, 쓰나미, 태풍, 데드존, 플라스틱 쓰레기, 기름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 진보는 해양 자원 수탈의 속도를 가속했을 뿐, 바다의 파괴를 멈추지 못했다.

결국 바다를 지배한다는 인간의 신화는 실패했다. 이제 인류는 깨달아야 한다.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인류세는 인간의 전능을 증명하는 이름이 아니다. 인류세는 인류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경고의 언어다.

## 7. 결론 - 인류세의 해양문화학

인류세 시대에 해양문화학은 더 이상 부차적 학문이 아니다. 해양문화학은 '지배의 문명'을 넘어 '공존의 문화'를 설계하는 지적 프레임워크다.

우리는 바다와 섬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해양 문화의 회복적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산업혁명이 남긴 CO<sub>2</sub>의 그림자를 넘어, 바다와 인간이 다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 부산 북극항로 환적중심항만 구축을 위한 중요요인 우선순위도출

김 유 찬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환적중심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요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은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이 방법론은 북극항로의 전략적 중요성과 부산항의 기존 환적항만으로서의 역량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연구는 북극항로의 상업적 가능성과 부산항의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기반으로, 환적 중심항만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문헌조사는 북극항로와 환적항만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정부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 해운·물류 산업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북극항로의 경우, 수에즈 운하를 통한 기존 항로 대비 약 40%의 운항거리 단축 효과와 이에 따른 연료비 절감(약 2030%) 및 탄소 배출 감소 가능성이 주요 이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산항의 환적화물 처리 현황(2024년 기준 연간 약 1,200만 TEU)과 기존 인프라의 강점 및 한계를 분석하여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북극항로의 계절적 운항 제약(7-10월 중심)과 극지 환경의 기술적 요구사항이 환적항만 구축의 주요 도전 과제로 식별되었다.

문헌조사는 또한 경쟁 항만(상하이, 후쿠오카)의 사례를 분석하여 부산항의 비교 우위를 평가하였다. 상하이항의 경우 효율적인 환적 시스템과 디지털 물류 플랫폼이 강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산항의 발전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북극항로의 상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규제(IMO의 극지운항규칙, Polar Code)와 환경적 요인을 검토하여 연구의 이론적 틀을 강화하였다.

문헌조사로 도출된 예비 요인들을 검증하고 실무적 통찰을 얻기 위해 해운, 물류, 항만 인프라, 극지 기술 분야의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방식으로 2025년 4월까지 약 1개월간 수행되었다. 질문은 부산항의 지리적 이점(아시아-

유럽 항로의 중심지), 북극항로의 상업적 잠재력, 그리고 환적 중심항만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은 배후공간 확보, 쇄빙선 및 극지 특화 선박 기술,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최우선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부산항의 기존 환적 터미널(부산신항)의 용량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해신항 개발의 중요성이 다수 언급되었다. 또한, 북극항로의 계절적 제약을 고려할 때, 항만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화 및 자동화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터뷰 결과는 AHP 분석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되어 중요 요인의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AHP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하고, 쌍대비교를 통해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AHP를 활용하여 부산항의 북극항로 환적중심항만 구축에 필요한 중요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AHP 분석은 상위 기준과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분석이 진행되었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총 18개의 하위 요인을 식별하였으며, 이를 5개 상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를 구성하였다:

### 1. 항만 인프라

배후공간 확보(물류단지 및 창고 확장 가능성)

환적 터미널 용량(컨테이너 처리량 증대)

항만 접근성(심해 항만 및 철도·도로 연계)

항만 디지털 인프라(스마트 항만 시스템)

### 2. 기술적 역량

쇄빙선 및 극지 특화 선박 기술

항만 자동화 기술(무인 크레인, AGV 등)

물류 디지털화 역량(블록체인, IoT 기반 추적 시스템)

극지 항해 안전 기술(위성 내비게이션, 기상 예측)

### 3. 경제적 타당성

운항비용 절감 가능성(연료비, 시간 단축)

환적화물 유치 경쟁력(글로벌 선사 유치)

투자수익률(ROI, 장기적 경제 효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고용 창출, 산업 활성화)

#### 4. 정책적 지원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세제 혜택, 투자 지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행정 효율성 증대)

국제 협력 및 외교 전략(북극이사회, 러시아·노르웨이 협력)

#### 5. 환경적 지속 가능성

탄소 배출 감소(친환경 항로 활용)

극지 환경 보호 기술(오염 방지 시스템)

친환경 선박 기술(LNG 연료, 전기 추진 선박)

이러한 요인들은 북극항로의 특성과 부산항의 기존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특히, 배후공간 확보와 쇄빙선 기술은 북극항로의 물리적·기술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었다. AHP 예비 분석은 10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은 2025년 6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각 상위 기준과 하위 요인에 대해 1~9 척도를 사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항만 인프라와 경제적 타당성을 비교할 때, 전문가들은 항만 인프라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쌍대비교 행렬의 일관성 비율(CR)은 모든 경우 0.1 미만으로 유지되어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AHP 분석 결과, 부산항의 북극항로 환적 중심항만 구축을 위한 최우선 요인은 배후공간 확보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신항 및 진해신항(예정)의 물리적 확장 가능성과 물류 처리 용량 증대가 환적 중심항만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운항비용 절감 가능성으로, 북극항로의 경제적 이점(연료비 절감, 운항 시간 단축)이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 번째 요인은 쇄빙선 및 극지 특화 선박 기술로, 북극항로의 계절적 제약과 극지 환경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하위 요인 중에서도 환적 터미널 용량과 항만 접근성은 부산항의 물리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만 자동화 기술과 물류 디지털화 역량은 장기적인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었다.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우선순위는 부산항이 북극항로 환적중심항만으로 자리 잡기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명확히 제시한다. 배후공간 확보는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이

며, 이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부산신항의 물류단지 확장 및 진해신항 개발은 환적화물 처리 용량을 증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운항비용 절감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글로벌 선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쇄빙선 및 극지 특화 선박 기술은 북극항로의 계절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한국의 조선 산업(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 항만 자동화 기술과 물류 디지털화 역량은 부산항의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스마트 항만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도입이 필요하다. 정책적 지원으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가 중요하며,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항만 관련 정책의 신속한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탄소 배출 감소와 극지 환경 보호 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북극항로의 친환경적 이점을 강조하고, LNG 연료 선박 및 전기 추진 선박과 같은 기술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IMO 2030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준수와도 연계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AHP 분석에 의존하여 중요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AHP 분석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추가적인 정량적 데이터(예: 실제 환적화물 처리량, 비용 분석, 북극항로 운항 데이터)를 보완하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북극항로의 계절적 제약과 국제적 규제 변화(예: IMO Polar Code 개정 가능성)에 대한 동적 분석이 부족하였다. 셋째, 경쟁 항만(싱가포르, 상하이, 로테르담)과의 비교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운항 데이터와 비용 분석을 통해 북극항로의 경제적 타당성을 정밀히 평가할 계획이며, 부산항과 글로벌 주요 환적항만의 인프라, 기술, 정책적 지원 비교를 통해 차별화 전략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부산항의 북극항로 환적중심항만 구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 Handy Size Bulk 중고선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김 현 진 · 김 나 영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운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동되며, 특히 벌크선 시장은 원자재 수요와 경제 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Handysize 벌크선(10,000~35,000 DWT)은 다양한 항만 접근성과 다목적 활용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요를 유지하며, 특히 신흥경제국(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곡물, 석탄, 철광석 등 소규모 원자재 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Handysize 벌크선의 중고선 거래를 활성화시키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유연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중고선 투자는 신조선 발주에 비해 초기 자본비용이 낮고, 인도 후 즉시 시장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Stopford(2009)에 따르면, 중고선은 신조선 대비 짧은 인도 기간으로 인해 운임 급등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자본비용이 선박 운항비용의 약 40%를 차지해 정확한 선가 평가와 투자 타이밍이 해운기업의 수익성과 생존에 직결된다. 특히 금리는 자본 조달 비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해운산업의 대규모 자본 투자 특성상 금리 변동은 선박 가격, 환율, 시장 심리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연간 또는 월간 단위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해상운임과 선가 간 관계를 단편적으로 분석해왔다. 이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특히 Handysize 벌크선 시장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월간 데이터를 활용해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통해 해상운임, 금리, 중고선가 간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의 실증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Handysize 벌크선의 중고선 투자는 해운기업의 자산 관리와 수익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이 선행은 다양한 화물과 항로에 적합하며, 특히 신흥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박 가격은 운임, 선령, 환경규제, 금리 등 다변수적 요인

에 의해 변동하며, 이는 투자 결정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Alizadeh와 Nomikos(2007)는 선가와 운임 간의 장기적 공적분 관계를 확인하였으나, 단기적 동태적 상호작용과 금리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금리는 자본비용과 환율에 영향을 미쳐 해운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안영균(2018)은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시장에서 금리가 선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는 Handysize 시장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IMO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고선의 연료 효율성과 기술적 적합성을 더욱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부각시킨다.

기존 연구는 주로 단일 변수(운임, 섀령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다변수 간 동태적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VAR 모형을 통해 운임, 금리, 선가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히 분석함으로써, 해운기업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운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Handysize 벌크선 중고선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해상운임, 금리, 선가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VAR 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 타이밍 최적화를 통해 운임, 금리, 선가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여 최적의 투자 시점을 식별한다. 둘째, 리스크 관리 체계화를 위해 분산분해와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각 변수의 리스크 기여도를 정량화하고, 시나리오 기반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둘째 정책적 시사점 제공을 위해 해운기업과 정책 당국이 신흥시장 수요와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교한 선가 예측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해운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은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여러 변수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모델링한다. 문권순(2023)에 따르면, VAR은 변수의 과거 값이 현재 값을 설명하며, 경제학에서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론 중립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VAR 모형을 통해 운임, 금리, 선가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VAR 모형의 장점은 단일 변수 분석과 달리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또한 변수 수(N)와 시차(p)를 행렬로 표현해 대규모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론적 가정 없이 데이터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다음 세 변수를 내생변수로 선정하였다. LIBOR 금리는 런던 금융시장의 단기 자금 거래 기준 금리로, 자본비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Handysize 벌크선 중고선가는 5년 섀령 기준의 시장 가격이며, Baltic Dry Index를 활용해 벌크선 운임 수준을 측정한다.

데데이터는 2010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월간 데이터를 활용하며, 출처는 Clarksons Research의 Shipping Intelligence Network와 IMF의 LIBOR 데이터이다. 결측치는 선형보간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총 174개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변수(BDI, LIBOR, 선가)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Augmented Dickey-Fuller(ADF) 검정을 수행한다. 비정상 시계열은 1차 차분(differencing)을 적용하여 정상성을 확보한다. 이는 VAR 모형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Granger 인과성 검정을 통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BDI의 과거 값이 선가 예측에 유의미한지, LIBOR가 BDI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F-검정으로 확인한다.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을 기준으로 최적 시차를 결정한다. 시차는 모형의 예측력과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AIC 최소화 기준으로 1~12 시차를 테스트한다.

정상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VAR 모형을 추정하며, 상수항을 포함한 VAR(p) 모형을 구성한다. 계수행렬은 변수 간 상호작용의 강도를 나타낸다.

Cholesky 분해를 적용하여 특정 변수의 충격이 다른 변수(선가, LIBOR)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12개월 시계열로 분석한다.

선가 변동의 예측오차 분산에서 각 변수(BDI, LIBOR, 선가 자체)의 기여도를 정량화한다. 이는 리스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다.

Ljung-Box Q 검정을 통해 잔차의 자기상관성을 확인하고, 특성방정식으로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잔차가 백색잡음(white noise) 특성을 만족해야 모형이 적합하다.

VAR 모형 분석 결과, BDI의 10% 상승은 3개월 후 Handysize 중고선가를 약 7%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nger 인과성 검정에서 BDI는 선가에 유의미한 인과성을 보였으며, LIBOR 금리의 1% 상승은 단기적으로 선가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으로 자본비용 증가로 선가를 약 3%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분산분해 결과, 선가 변동의 45%는 BDI, 15%는 LIBOR, 40%는 선령 및 시장 심리 등 기타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충격반응함수는 BDI 충격이 선가에 3~6개월 내 최대 영향을 미치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LIBOR 충격은 6개월 이후 선가 하락 효과가 뚜렷해졌다. 잔차 검정(Ljung-Box Q)과 특성방정식은 모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BDI 상승 초기 단계에서 중고선 투자를 신속히 결정하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DI가 10% 상승하면 3개월 내 선가 7% 상승이 예측되므로, 상승 초기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하다. LIBOR 금리 상승은 자본비용 증가로 장기적 선가 하락을 유발하므로, 금리 상승 기에는 대출 구조 최적화와 같은 자본비용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분산분해 결과, 운임이 선가 변동의 45%를 설명하므로, BDI와 같은 운임 지표를 선행지표로 활용해 투자 타이밍을 조정해야 한다. 환경규제(EEXI, CII) 준수 여부는 중고선의 연료 효율성과 시장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악(운임 하락, 금리 상승)

및 최선(운임 상승, 금리 안정) 시나리오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해운기업은 BDI 상승 초기 단계에서 중고선 투자를 우선시하고, 금리 상승 시 자본비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분산분해를 통해 운임(45%)과 금리(15%)의 리스크 기여도를 고려한 다변량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여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친환경 중고선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해운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IMO 환경규제(EEXI, CII) 변수를 추가로 분석하고, 신흥시장별(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수요를 세분화하며, AI 기반 예측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력을 강화할 수 있다.



# LNG 가격과 LNG 운임 및 금리 간의 동적 상관관계 분석 (VAR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김 준 서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1. 서론: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LNG 운임 시장, 그리고 국제 금리 사이의 동적 상관관계를 VAR(Vector AutoRegression)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LNG는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 비해 친환경적인 대체 연료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NG 운임 시장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LNG 시장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LNG 가격, 운임, 금리 간의 상호작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LNG 가격과 운임 간의 관계를 주로 단편적이거나 정적인 분석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연구들은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과 LNG 운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지만, LNG 시장의 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LNG 가격과 운임 외에도 국제 금리를 분석에 포함하여 세 변수 간의 동적이고 시간적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명확히 차별된다.

### 3. 이론적 배경

VAR 모형은 둘 이상의 시계열 변수 간 동적 상호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계량경제 모형이다. 단일 방정식 모형과 달리 모든 변수를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s)로 간주하여 각 변수의 현재 값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변수의 과거 값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VAR(p)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수학적 형태로 표현된다:

$$Y_t = c + A_1 Y_{t-1} + A_2 Y_{t-2} + \cdots + A_p Y_{t-p} + e_t$$

여기서,

- 는 분석하고자 하는 내생변수 벡터이다.
- 는 계수 행렬로, 과거의 변수 값이 현재 값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 는 오차항 벡터로,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은 외부 충격(innovation)을 의미한다.

### 4. 연구 방법론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 분석 절차를 거쳤다.

(1) 데이터의 정상성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검정)을 통해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비정상 시계열은 로그 변환 및 1차 차분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 최적의 시차(lag)를 선택하기 위해 VARselect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Hannan-Quinn(HQ) 기준에 따라 최적 시차를 2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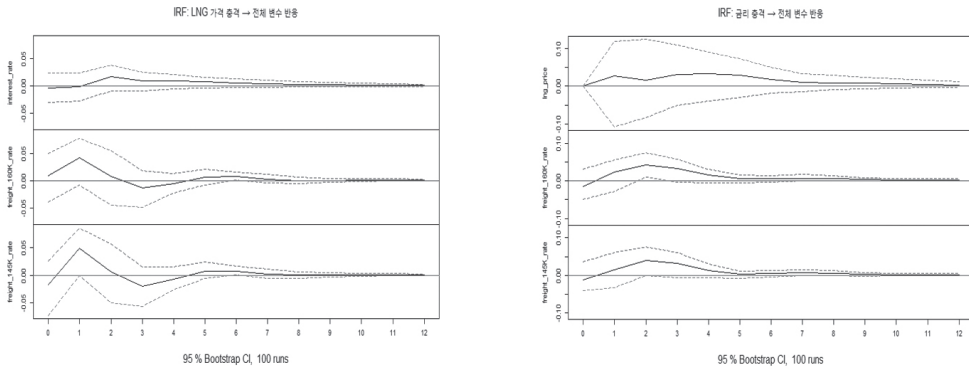
(3) 변수 간의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하였다.

(4) 특정 변수의 충격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IRF)를 적용하였다.

(5) 각 변수들의 예측 오차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평가하기 위해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FEVD)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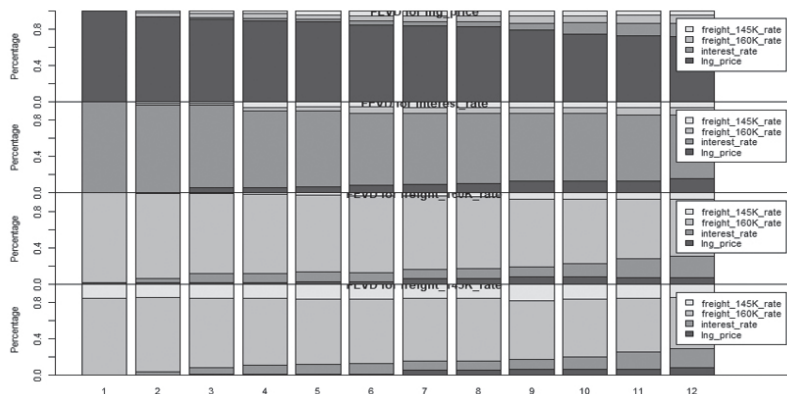
### 5. 주요 실증 분석 결과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 LNG 가격은 LNG 운임에 대해 강력한 단기적 인과성을 나타냈다. 반면 국제 금리는 LNG 가격과 운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인과성을 보였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에서 LNG 가격에 단위 충격이 발생했을 때, freight\_160K 운임과 freight\_145K 운임은 모두 초기 1~2개월 동안 뚜렷한 양의 반응을 나타낸 후 점차 그 효과가 약화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와 같은 초기 반응은 LNG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운송 수요를 자극하거나 계약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임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반응이 안정화되는 것은 시장이 충격을 점차 흡수하며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금리에 대해서는 LNG 가격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양의 반응을 유도하였다. 이는 LNG 가격 변화가 금리 결정 메커니즘보다는 해운 물류 수요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금리 충격이 발생한 경우, LNG 가격은 2~5개월 구간에서 완만한 양의 반응을 나타낸 후 점차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금리 인상이 투자 및 거래 활동에 지연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에너지 가격 전반에 간접적인 상승 압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운임 변수들 (freight\_160K\_rate, freight\_145K\_rate)은 전반적으로 금리 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단기의 반응을 보였다. 이는 장기 계약 비중이 높은 LNG 해상 운송 시장에서는 금리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 결과, LNG 가격과 국제 금리는 자기 자신의 충격에 의한 설명력이 각각 매우 높은 반면, LNG 운임 변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와 LNG 가격 충격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2개월 후 예측오차 분산에서 LNG 가격 충격이 LNG 운임의 약 10~15%를 설명했다.

## 6. 실무적 시사점 및 전략적 대응 방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선주 입장에서는 LNG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장기적인 고정 운임 계약을 통해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LNG 가격 연동형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화주 입장에서는 LNG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미리 고정 운임 계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단기 계약이나 현물 시장을 활용하여 가격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 금리 변동은 LNG 운임 및 가격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므로, 선주 및 화주는 운항 자금 조달 전략을 금리 변동 추이와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7.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VAR 모형을 통해 LNG 가격, 운임, 금리 간의 동적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규명하였으며, 특히 LNG 가격과 운임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변수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유가, 항로 혼잡도, 선박 수급 등 추가적인 외생 변수를 고려하여 확장된 구조적 VAR 모형(SVAR)을 적용하거나, 실제 계약 데이터를 통한 외적 타당성 검증,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예측모델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 방법론과 결과는 향후 보다 정교한 LNG 운송 계약 설계 및 시장 예측 전략 개발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내 폭력과 괴롭힘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동향과 시사점 분석

구 본 민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최근 해운산업 내의 폭력과 괴롭힘 문제가 국제적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규범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상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은 개인에게 다방면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의 인력 유출을 가속화하고 신규 유입을 저해함으로써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운영상의 비효율을 고착화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므로 선원 권익 보호와 해운의 구조적 발전을 위해 선내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발표는 최근 국제기구의 선내 폭력·괴롭힘에 대한 논의 분석을 통해 향후 해사 규범 발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MO와 ILO 공식 문서, MSC, HTW, STC 회의 결과 보고서, STCW, ISM code 및 MLC 등의 국제 협약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2024년 제2차 공동작업반(Joint Tripartite Working Group, 이하 “JTWG”라 한다.) 회의에서도 출된 정책 권고와 실개정 동향을 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직장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문제를 규범화하려는 국제적 시도는 ILO의 폭력 및 괴롭힘 근절 협약(C190-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 채택에서 비롯된다. 해당 협약은 직장 내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전 산업 분야의 규범 의제로 승격시키며, 해사 부문에서도 선원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제적 주목을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IMO와 ILO는 2022년 선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 논의의 기구로써 삼자 JTWG를 출범시키고, 각 회원국 정부, 선주 단체와 선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다자간 논의를 시작하였다. 2024년 2월 제2차 JTWG 회의에서는 선내 폭력·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 정책, 구조적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해당 회의를 통해 선내 폭력과 괴롭힘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를 ‘Shipboard Violence and Harassment, including Sexual Harassment, Bullying and Sexual Assault’로 합의하고, MSC 107에서 승인된 STCW 협약의 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ISM code와 MLC 개정 방향을 위한 권고문 작성을 필두로 WHO,

IMO, ILO의 삼자 협업, 관련 데이터의 수집 체계 구축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가 권고되었다.

IMO는 JTWG가 최초 출범한 2022년에 이미 제105차 해상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이하 MSC)에서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이하 HTW)에 선내 괴롭힘에 관한 STCW 협약의 개정안 세부화를 위임하며 승무 자격 요건의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논의 결과 MSC 107에서 승인된 STCW 협약의 개정 사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선내 폭력, 괴롭힘과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필수 교육 내용의 신설이다. 이는 기본 안전 훈련(STCW A-VI/1-4) 상에 삽입되어 모든 선원이 최초 승선 전, 그리고 5년마다 수료해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비준국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의 자격 제한 조치 권고이다. 이는 성폭력 전과자나 승선 중 가해자의 승무 자격 정지·박탈을 통한 행위자의 격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5년 6월 MSC 108에서 채택되어 2026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다.

다음으로, JTWG에서 최초 제안된 ISM code의 개정 권고문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적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에 선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
2. 선내 괴롭힘에 관한 위험성 평가 절차와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 관리 목표를 제시
3. 개정된 안전관리시스템이 기존의 강제 규정과 상충하지 않을 것
4. 해운선사의 선내 괴롭힘 사례 관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자원의 지원
5. 선내 괴롭힘 금지 정책의 내용과 이행에 관한 친숙화 교육의 제공

해당 권고사항은 2025년 6월 MSC 110에서 승인되어 향후 3년간 HTW와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의 협력 아래에 개정안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JTWG는 관련 대응 절차 수립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MLC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 협약 비준국과 해운선사에 관련 정책 및 메커니즘 개발 유도
2. 기국, 항만국, 선원의 국적국, 선박소유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무 규정 및 협력 촉구
3. 신고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성 강화
4. 보복 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고자 보호 조치

위 권고사항은 제5차 특별삼자위원회(STC; Special Tripartite Committee)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강제 규정(Standard)상 비준국에 대하여 ILO C190에 따른 선내 괴롭힘 식별, 방지, 대응 및 금지 규범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했다. 선박소유자 등에는 해당 규범에 따라 세부화된 예방, 대응 정책을 수립, 선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는 해당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후 권고 규정(Guideline)상에서 선원의 채용·배승 과정에 선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추가, 관련 사건에 관한 비준국 모두의 협력 의무를 규정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7년 12월 23일 발효 예정이다.

추가로 WHO, IMO, ILO의 삼자 연계를 통한 국제선박의료지침 개정 권고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데이터 수집 체계 개발 권고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행되거나 논의된 바는 미비하다. 이에 더하여 2016년 국제운송노동연맹(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과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선내 괴롭힘 근절 지침서에 국제적 논의 결과의 반영을 권고함으로써 산업계 지침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마지막으로 JTWWG는 선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IMO와 ILO가 연계하여 국제 캠페인 실시를 권고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선원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된 #MyHarassmentFreeShip 캠페인을 통해 각 해운 주체들의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 전 세계 해기 인력이 SNS를 통해 관련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선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IMO와 ILO가 협력하여 인권 의제를 적극 수용하는 것은 국제 해사 규범이 안전·기술 중심에서 인권·노동권 중심의 복합 규범 체계로 전환 중임을 시사한다. 특히 선내 폭력과 괴롭힘을 규제하기 위한 IMO, ILO, 각 회원국 정부, 선박소유자와 선원 등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 논의가 국제 협약 개정으로 이어지는 동향은 국제 다자 협력 거버넌스가 규범적 개선으로 연계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인권 의제에 적용 가능한 규범 형성 모델을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규제는 각 비준국의 입법적 수용 능력과 실행 수준의 차이에 의한 규범 이행의 편차가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표준화된 이행 지표, 감독 및 인증 체계의 설계, 국가 간 데이터 공유와 같은 국제적 협력적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제2차 JTWWG 회의에서 언급되었음에도 가시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국제선박의료지침 개정과 해상 폭력·괴롭힘 데이터 수집 체계의 구축에 관해서도 국제적 협력이 촉구된다.



# 선원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지표선정을 중심으로)

장 유 진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의 근원은 고대부터 논의 되어왔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세계 인권 선언(UDHR, 1948)과 유럽 인권 협약(ECHR, 1953) 등의 국제적 선언에 근거를 두고 각 국가의 헌법이 수호하는 주요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직무 특성상 폐쇄·고립된 해상에서 장기간 제한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선원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선박 내의 수직적 문화와 근무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021년 10월, 미국 상선사관학교(USMMA)의 기관 실습생이었던 당시, 1등 기관사에게 음주를 강요받고 의식 불명 상태에서 강압적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온라인 익명(Midshipman-X) 게시물로 공론화했다. 2022년 6월 14일 1등 기관사는 선원을 밝히며 실습생 보호 의무 해태를 근거로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회사가 실습생에 대한 안전 확보, 적절한 감독,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명시되었으며, 여성 실습생이 해당 선박에서 성폭력을 당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이 그간 어떠한 보호 조치나 신고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음이 지적됐다. 해당 사건은 회사의 내부 정책 보완과 미국 연방 차원의 제도 개선(Safer Seas Act)으로 이어지며 미국 내 여성 선원 인권의 인식 제고에 이바지했으나, 가해자인 1등 기관사의 처벌은 업무 자격 박탈에 그쳤다.

2017년 8월, 한국의 실습 선원은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 무리한 갑판 작업을 진행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실습 선원이 승선했던 화학제품 운반선의 선장은 실습생이 승선했던 직후부터 갑판 녹 제거 작업을, 사망 시점까지 약 일주일간 1일 12시간씩 탱크 청소 작업을 지시했다. 탱크 청소 작업은 6시간 근무 후 6시간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계획되었지만, 해당 선박은 냉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 온도가 섭씨 38도에 이르러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 환경이 보장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은 해당 선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법원은 선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실습 선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로, 실질적인 근로에 종사하면서도 최저임금, 초과 근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해상에서 선원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MLC)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정립했다. 국내에서는 선원법 제116조 3항의 개정예 따라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선원법 제25조의3, 제25조의4로 삽입된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대응 절차가 실습 선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수강 형식의 짧은 교육은 실효성이 낮으며,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기존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가진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와 지수가 꾸준히 개발·활용되고 있는 데 반해, 선원에 대한 인권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선원인권지수’의 개발 현황은 여전히 미흡하다. 선박은 폐쇄적 공간으로, 생활과 업무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선원은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며, 위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선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문제 제기가 어려운 구조다. 현재 일부 선원 인권 침해 사례 중심의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인 지표로 통합해 정량적·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하다.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선원 인권은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수·지표 기반의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습 선원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실습 선원의 인권지수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실습 선원 인권 지수의 지표 개발과 지수 산정은 실습 선원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실습 선원의 인권지수 개발을 위하여 국가 인권 지수, 경영 지수 등 유사한 지수 산정 방법 및 지표들을 국내외로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각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도출한다. 경영지수 등에 활용하는 PDCA 기법을 사용하여 실습 선원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규범·정책·교육 등의 영역별 세부 지표를 선정하고, 수집한 정량·정성적 자료의 수치화를 거쳐 1차 지표를 산출한다. 이후 표준화된 1차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영역별 점수를 통해 종합 인권 지수를 계산하고, 해당 지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한 등급화 기준을 산정할 것이다. 이 방식은 국내외 인권지수 개발의

표준적 절차를 반영하며, 실제 측정 가능성과 정책적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발된 인권 지수를 최근 3년간 승선 실습생 인권 통계와 연계하여 실습 선원의 인권지수를 산출하고, 지수 산출 과정에서 미비한 영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완점을 제시할 것이다.



# 최근 3년간 승선실습생인권 통계 분석 및 시사점

구 동 진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오늘날 선박에서의 근무는 제한된 공간 및 선내 작업의 특수성,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선원은 육상 대비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종사하고 있으므로 선원의 인권 및 노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하위 직급에 분포하고 있는 승선 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승선 실습생에 대한 인식과 인권 침해 현황 등을 조사하여 향후 승선 실습생의 권익 향상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승선 실습생에게 행해지던 부당한 대우들이 “지속적인 인권 교육과 여러 노력들로 인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최근 3년간의 통계 동향을 분석하여, 승선 실습생에 대한 선박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인권 교육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승선 실습 전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선내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2022년 전체의 27%에서 2024년 48.5%로 증가하였고, 승선 중 부당한 강요가 전혀 없으리라 응답한 인원은 2022년 25.4%에서 2024년 45.3%로 증가했다. 성희롱에 대한 우려또한 전혀 없으리라 응답한 인원은 2022년 53.1%에서 2024년 67.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24년도 기준 승선 실습 후 인식 변화에서 폭력 행위가 전혀 없을 것이라 응답한 학생은 64.5%로 약 16% 증가하였고, 강요 행위는 66.8%로 21.5%, 성희롱 행위는 86.4%로 19.7% 증가했다.

실습 중 경험에 대한 조사도 폭력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응답한 비율은 2022년 53.9%에서 2024년 64.5%로 증가하였고, 강요 경험 없음은 59.3%에서 66.8%로 증가했다. 성희롱 경험 없음은 87.7%에서 86.4%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승선 실습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 또는 목격한 비율은 실습한 회사의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2022년 중소기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목격 또는 경험한 비율은 18.3%, 중견기업은 24.8%, 대기업은 23.1%였으나, 2024년에는 중소기업 23.5%, 중견기업 12.5%, 대기업 18.8%로 나타났다.



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대우 목격 및 경험 비율은 증가한 데 반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율은 10%를 밑도는 수치이지만, 이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기업별로 마련된 신고 절차와 신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의 차이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 신고 절차와 신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승선 실습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발생 빈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당한 대우를 겪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실습생은 '다른 선원에게 상의'하거나 '친구, 동기에 상의'하거나, '가족, 친척에게 상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고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원인은 '신고해도 바뀔 것이 없을 것', '본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취업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우려로 밝혀졌다. 기업, 학교 등 지정교육기관마다 개별적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해당 제도들에 대한 실습생들의 신뢰도는 낮았다.

실습을 앞둔 2학년 학생들은 '위탁 실습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위탁 실습을 학교 실습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해당 학생들이 위탁 실습에 앞서 '처음 접해보는 상황, 환경에 관한 적응 문제', '선원, 해기사와의 관계 문제', '부당한 대우에 관한 문제'를 가장 큰 걱정으로 뽑았다. 해당 학생들은 위탁 실습에서 부당한 대우가 전혀 없을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낮아, 승선 실습에 대한 우려가 실제 4학년 학생들이 경험한 것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승선 실습 전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할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22년에 비해 2024년에 감소했으며, 승선 실습 후 부당한 대우가 존재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더욱 감소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인권 교육과 선내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가 반영되어 승선 실습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승선 실습 중 겪게 될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기에 인권 교육과 더불어 선내 문화 및 승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승선 실습 중 부당하게 겪은 대우도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긍정적 변화이나, 폭력, 강요, 성희롱 등 각 100건 이상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던 만큼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인권 교육과 더불어 선내 문화 개선 및 근본적 원인을 식별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024년 발생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율은 기존 신고 체계에 대한 불신, 신고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사유로 매우 저조한 11.5%로 나타났다. 신고자의 만족도를 보면 대기업의 신고 절차와 결과가 가장 높았는데, 이처럼 기업들의 신고 절차와 결과에 있어 기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인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우수 사례를 공유

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과 사후처리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90% 이상의 예비 실습생이 인권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경험하였지만,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이는 승선 실습에 대해 느끼는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만족도와 기대 효과가 낮았던 기존의 온라인 위주의 교육 방식을 오프라인 위주로 전환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된다.

따라서 승선 실습생의 인권·권리 보호를 위하여 침해받는 권익과 그 빈도를 파악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안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인권 교육을 포함한 각종 예방 교육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지만, 선내에서 실습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 중이며, 이에 대해 기존 교육의 질과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2025년 제15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부산대회

23분과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해양문화신진연구자

[특별분과] 지역 커뮤니케이션과 해양공간의 사회문화사

자본유입에 따른 주민들 사이의 이해충돌과  
의미경합  
: 신안군 선도를 중심으로

박상민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지도(智島)의 근대교육과 섬의 변화상

임영은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섬과 육지의 커뮤니케이션  
: 목포 항동시장과 건어물 거리 중심으로

김강민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근대 목포 해수욕장 형성 과정과 사회적 기능

조민혜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 자본유입에 따른 주민들 사이의 이해충돌과 의미경합 : 신안군 선도를 중심으로

박 상 민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 I. 머리말

본 연구는 도서지역 마을 지원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이해충돌과 의미경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 집단 간 단순한 이익관계 이상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 정체성의 갈등 및 협상 과정이 자본유입에 따른 주민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도서지역은 오랫동안 ‘낙후’와 ‘주변부’라는 국가·지방정부 담론 속에서 재현되어 왔다(Gupta & Ferguson 1992). 인구 감소, 산업 기반의 취약성,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접근성, 불완전한 통계 및 관리 체계는 도서 주민을 ‘발전의 외곽’에 위치시켰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경제·문화 수준의 향상과 연륙교 개통, 그리고 COVID-19 시기 비대면·자연 친화 관광지 선호가 맞물리며 도서 지역은 ‘고립된 생활공간’에서 ‘자본’과 ‘인프라’가 유입되는 ‘잠재적 투자처’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Appadurai(1996)가 말한 ‘글로벌 문화 경관(global cultural flows)’의 지역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관광, 자본, 인적 네트워크가 섬이라는 경계 공간을 통과하며 새로운 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과거 생활기반 확충 위주의 개발에서 지방자치제 이후 관주도형 관광사업, 그리고 최근 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의 전환은 개발 담론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자본 유입과 개발 사업은 단일한 ‘성공서사’로 수렴되지 않는다. 새로운 자본과 제도가 들어오면서 기존 주민들은 ‘섬의 미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마을·주민 간 이해관계가 분화되었다.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는 일부 집단에게는 기회로, 다른 집단에게는 배제와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관광지로서의 섬’과 ‘생활공간으로서의 섬’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가 경합하는 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경합은 행정과 주민의 대립에서 그치지 않았다. 사업 주도 마을과 소외된 마을 사이, 그리고 사업 추진 그룹과 비참여 주민 사이에서 권력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이는 자본유입이 물질적 변화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과 권위 체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곧 ‘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며, 각 집단은 자신이 바라는 섬의 미래상을 제도와 담론 속에 투영하려 한다.

본 연구는 신안군 ‘선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본유입이 마을 간 권력구조를 어떻게 형성·변형시키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그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협상·경합하는지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개발 담론에서 흔히 간과되는 ‘의미의 정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 II. 자본, 권력, 의미경합의 문화인류학적 해석

자본이 외부에서 유입되면 지역사회는 단순한 경제 변화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조 변화까지 겪게 된다. Harvey(2005)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이 새로운 축적 공간을 찾아 이동한다고 했고, Wolf(1982)는 이런 과정에서 기존 권력관계가 재편된다고 분석했다.

신안군 선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 이후 방문객 증가, 젊은 여행객 유입, 귀어·귀촌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부 자본과 사람이 들어오고, 마을의 경제와 생활환경이 유의미하게 변화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

Bourdieu(1986)의 ‘장(field)’과 자본 개념을 빌리면, 선도의 개발 장에서는 외부 자본이 경제 자본의 형태로 유입되었지만, 사회·문화·상징자본을 이미 보유한 일부 주민이 더 큰 혜택을 얻었다. 사업 과정에서 마을 리더나 사업 참여 그룹은 새로운 네트워크와 자원을 확보했지만, 일부 고령층이나 비참여 주민은 소외감을 느꼈다. 이는 사업 주도 집단과 주변부 집단의 구도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Appadurai(1996)가 말한 ‘글로벌 문화 경관’의 관점에서 보면 선도는 ‘고립된 생활공간’에서 ‘관광지·투자처’로 재이미지화되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전환이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섬’을 원하는 집단과 ‘생활공간으로서의 섬’을 중시하는 집단 간 의미경합을 불러왔다.

선도에서는 인력 부족, 초고령화, 주민참여 프로그램 부재, 행정 주도의 성과 중심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공동체 신뢰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Geertz(1973)의 ‘중층 기술(Thick description)’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주민들이 각자 섬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화·상징적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소비·재해석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하며, 선도의 개발 담론 역시 이러한 권력관계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 Ⅲ. ‘가고 싶은 섬’ 사업과 주민들 사이의 이해충돌과 의미경합

전라남도는 전국 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과 6,743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sup>1)</sup> 이를 기반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선도는 이 사업의 대상지 중 하나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도로 포장, 해안 경관 정비, 공용시설 확충 등 생활 인프라의 물리적 개선을 동반하였으며 이는 지역에 외부 자본과 자원이 유입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선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문화적 가치체계,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인식과 해석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업 이전 선도의 일상은 어업과 제한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계 기반 그리고 친족과 자연에 의해 유지되는 촘촘한 공동체 관계망에 의해 규정되었다. 마을의 경관과 주민들의 공간 인식은 갯벌과 선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부르디외가 말한 ‘체화된 문화자본’의 형태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에 깊이 내재해 있었다. 그러나 개발사업 이후 경관은 포장된 도로, 정비된 주택, 인공 구조물과 조경 시설 등 ‘시각적으로 소비 가능한 이미지’ 중심으로 재구성되었고 이는 기존의 생활사적 장소성의 일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예전에는 냄새와 소리로 마을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먼저예요.”

- A씨(여성, ○○마을)

경제자본의 유입은 사회자본의 재편을 촉발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물적 혜택이 특정 인물과 집단에 집중되면서 기존의 친족 중심 네트워크가 새로운 위계와 배제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사업 참여 여부와 방식에 따라 ‘중심부 집단’과 ‘주변부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를 형성했고 행정 및 외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 간의 자원 격차를 심화시켰다.

“회의에 불려도 이미 결정은 다 돼 있어요. 이장님이랑 가까운 사람만 사업에 끼고,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 B씨(남성, ○○마을)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은 경제적 이해충돌을 넘어 공간의 의미를 둘러싼 상징자본의 경합으로 확장되었다. 일부 주민은 선도의 미래상을 ‘관광지화’로 설정하며 외부 방문객 유치와 관광 인프라

1)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전라남도 전략 보도 인용

확충을 지지했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생활공간으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경관 개발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경관(scapes)’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 충돌과 유사하며 장소성의 재정의가 주민 간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 섬이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살기 좋은 동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외지 사람들 불러오고, 우리 사는 모습까지 바꾸려고 하니 불안하죠.”

- C씨(여성, ○○마을)

또한 자원 배분과 시설 설치 과정에서 마을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작은 조형물 하나를 두고도 갈등이 발생했다. 일부 주민은 다른 마을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표출했으며 이는 경제적 격차뿐 아니라 상징적 위계로도 작용했다.

“사업비가 어디로 가는지, 왜 우리 마을은 지원이 적은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마을은 저렇게 뭐가 많이 생기는데...(중략) 그런데 다른 마을에는 조형물도 세우고 길도 새로 포장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을은 왜 이런 게 없는지 의문이 들었죠.

- D씨(남성, ○○마을)

사업 이전의 선도에서 중요한 장소였던 갯벌과 선창은 오랜 세월 공동체 기억이 축적된 공간으로써 생활과 의례가 중첩되는 다기능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이후 이들 장소는 일부가 재단장되어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았으나 동시에 원래의 생활세계적 기능과 감각적 기억이 희석되었다.

“꽃과 시설물만 놓을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전해야 해요. 꽃만 심어서 여기에 누가 뭐 많이 오나요.”

- E씨(여성, ○○마을)

이와 같이 선도 개발사업은 외부 자본유입을 통해 경제적·물리적 환경을 개선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불균등한 재분배와 상징자본을 둘러싼 의미경합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갈등과 협력의 공존은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시험하는 동시에 섬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이는 자본유입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계망·정체성·장소성을 재편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경계를 형성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전라남도 신안군 선도를 대상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라는 외부 자본 유입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주민 간 이해충돌과 의미경합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선도에서 관찰된 갈등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원을 넘어 ‘관광지로서의 섬’과 ‘생활공간으로서의 섬’을 지향하는 집단 간의 문화적·상징적 경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은 자본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의 재편 속에서 기존 권력관계가 변화하고 자원과 기회가 불균등하게 배분되면서 심화되었다.

선도의 갈등 양상은 사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참여의 형식화, 중간지원조직의 부재, 세대·집단 간 소통 단절, 자원 배분의 편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마을·주민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공동체 결속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도서 개발 사업에서는 주민 의견이 기획과 실행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세대와 집단을 포괄하는 소통 채널이 마련되며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장기적 비전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천권·나혜영·정진원, 『도서지역 관광개발을 둘러싼 문제와 쟁점사항들』, 2012
-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선도 기본계획』, 2020
- 이승철, 『마을 기업가처럼 보기: 도시개발의 공동체적 전환과 공동체의 자본화』 한국문화인류학 53-1, 2020
- 이창호, 차이나타운의 재개발과 의미의 경합: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1), 209-248, 2008
- 전경수, 지역사회 갈등과 문화인류학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8(2), 307-329, 1995
- 최성환·송기태·박성현·이경아·김재은·이성운, 『수선화의 섬, 선도』, 2023
- 홍석준, 『도서·해양 문화』 연구와 인류학』 島嶼文化 0.33 : 141-168, 2009
- Arjun Appadurai, 『고삐 풀린 현대성』, 2004
- Clifford Geertz, 『문화의 해석』, 2009
- Gupta, A., & Ferguson, J.,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7(1), 6-23, 1992
- Pierre Bourdieu,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지도(智島)의 근대교육과 섬의 변화상

임 영 은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I. 머리말

현 신안군 지도읍에 속한 지도는 서남해를 대표하는 중심 섬이다. 과거에는 유배지로 사용되었으며, 지도진이 설치되었다. 섬이지만 육지와 인접하여 지적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으로 1896년 지도군이 설치되며 정치적·행정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동안 소작쟁의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항일민족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지역이다.

지도는 신안 여러 섬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근대 교육기관을 설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근대학교 학생들이 가운데 김상수와 나만성과 같은 많은 활동가를 배출했다. 향교와 근대교육이 유사시기에 설치되는 특이한 지역이다. 이른 시기에 근대교육기관이 설립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섬 지역 사회상을 근대교육과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경옥<sup>1)</sup>은 전라도 나주목 도초도의 공간변화 학교염전 운영을 함께 살폈다. 새로 간척한 염전 공간을 운영하여 나온 이익금을 학교자금으로 활용하여 중등교육기관 설립 주체가 마을 주민들임을 밝혔다. 최성환<sup>2)</sup>은 심진록에 담긴 향촌사회정보 가운데 섬 마을의 교육 환경 정보를 정리하였다. 오형묵 군수가 도서지역을 순행하며 방문지의 서재에 들려 학동들을 격려하는 등 군수로서 흥학정책을 펼친 모습과 섬 마을 곳곳에 서당을 통한 교육풍토와 환경의 존재를 확인하였

1) 김경옥, 「근현대 전라도 나주목 도초도의 공간변화와 ‘학교염전’의 설치」, 『한국학연구』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2) 최성환, 「1897년 지도군수(智島郡守) 오형묵(吳弘默)의 도서순행(島嶼巡行)과 『심진록(尋眞錄)』에 담긴 도서지역(島嶼地域) 향촌사회정보」, 『지역과 역사』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다. 탁현진<sup>3)</sup>은 2020년 발표한 「지도 소작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통해 지도가 소작쟁의가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임을 밝히고 근대학교 졸업생들이 민족운동을 전개한 성과를 살폈다. 그러나 앞선 연구에서는 지도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을 함께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지도의 인문지리적 특징과 근대교육으로 전환되는 섬 지역 변화상을 살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도의 지리적 특징과 전통교육 양상 분석이다. 둘째, 『지도군총쇄록』을 통해 지도 향교 건립과 지도 교육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다. 근대교육 시작 이전 시기에 전통교육기관 설립의 흐름과 갖는 한계를 볼 것이다. 셋째, 유배인의 기록물과 당시 근대 신문자료를 기반으로 근대 교육기관 설립과 섬 지역의 교육적 의미, 변화상을 살핀다. 지명학교를 통해 근대 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보고자 한다.

## II. 지도 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전통교육의 양상

지도는 무안반도 서쪽에 있는 섬이다. 지리적인 면에서 육지와 근접해 있고, 해로가 발달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편리한 지역이었다. 남쪽의 다도해와 내륙인 영광 무안 등과 바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고, 뱃길이 한양까지 연결되어 있었다.<sup>4)</sup> 지도가 학문적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지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도의 지명은 지혜智와 섬도島를 사용하며, 해석하면 ‘지혜의 섬’이라는 것이다. 지도는 육지와 가까웠기에 육지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었으며 특히 유배인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유배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학문적 소통하며 교육환경을 만들었다. 섬과 유배인은 지적교류를 통해 교육 기반을 확충하였다. 지도로 유배 온 대표적인 인물은 중암 김평묵(1881~1884)과 운양 김윤식(1901~1907)이 있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과 학문을 교류하였다. 김윤식은 마을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학교가 설립될 무렵 『續陰晴史』을 통해 지도 근대학교 모습을 담은 글을 작성하였다. 지도의 전통 교육기관은 당시 초대군수 오형묵이 남긴 『심진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도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재는 1908년 기준 40여개 정도이며, 각각의 서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3) 탁현진, 「지도 소작쟁의의 전개 과정과 특징」, 『도서문화(島嶼文化)』56,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20.

4) 최성환, 「『續陰晴史』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智島 유배생활과 島嶼地域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34,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216쪽.

5) 신안문화원, 『신안향토사료지 국역 심진록』, 2014, 24-25쪽.

〈1908년 지도군지에 수록된 서재 정보〉<sup>6)</sup>

- 열락재悅樂齋: 군의 북쪽 15리에 있고 적동笛洞의 김씨가 세웠고 강학했던 곳이다.
- 수월재水月齋: 군의 서쪽 5리의 감정동甘井洞에 있다. 김병기, 장준식, 김용병이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계를 만들고 재를 축조했다. 마을의 뛰어난 사람들과 문중의 자제들에게 학문을 권하여 힘썼다.
- 관란재觀爛齋: 군의 길목 10리의 구운봉九雲峯아래 태천台川에 있다. 조락원趙洛이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키며 경서를 익히는 곳이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기문記이 있다.
- 성일재誠一齋: 군의 남쪽 10리의 태천台川에 있다. 주홍진이 선영을 추모하고 후손을 교육해 나갔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기문記文이 있다.
- 해은정海隱亭: 어의도於義島에 있다. 진주 강씨가 선영을 추모하는 곳으로 지었다. 마을의 뛰어난 사람들이 강습하고 학문을 닦았다.

지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서재는 다수 존재하였다. 오흥묵은 도서순행을 통해 섬 곳곳에 위치한 서재와 학동들을 격려하며 흥학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 Ⅲ. 지도군의 설군과 향교 건립을 통한 교육

지도가 1896년 지도군 설군되어 一郡一校 원칙에 따라 향교를 건립하고자 하였다. 초대군수 오흥묵은 향교 건립이 군수로서 의무였기 때문에 향교 건립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특히 지역 흥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오흥묵은 향교 내 시설 중 하나인 양사재를 실질적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양사재 건립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 〈표 1〉은 양사재 건립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sup>7)</sup>

〈표 1〉 지도 양사재 건립과정

| 시기         | 내용              |
|------------|-----------------|
| 1896.09.21 | 양사재 전체 건립 일정 계획 |
| 1896.09.24 | 양사재 조성을 위한 벌목   |
| 1896.10.03 | 양사재 터 닦음        |
| 1896.10.07 | 양사재 기초 놓는 날     |

6) 위의 주와 같음

7) 『신안향토사료지 국역 심진록』(2014)과 『지도군총쇄록』(2008)을 기반으로 지도향교의 양사재 건립 과정을 정리한 자료이다.

| 시기         | 내용                  |
|------------|---------------------|
| 1896.12.19 | 양사재 건립 공사 준공        |
| 1987.02.05 | 양사재 토역 시작           |
| 1897.04.15 | 양사재에서 시회 개최         |
| 1897.05.10 | 양사재 편액 올림           |
| 1897.05.16 | 양사재 낙성식 거행 및 백일장 실시 |

양사재는 근대 문물인 학교가 유입되면서 그 활용이 낮아졌다. 교육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지도 교육은 점차 근대교육의 흐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기존의 전통교육과 새로운 근대교육이 대두되는 시점에 향교는 지역에 존재만 할 뿐, 더 이상 그 기능을 사용이 줄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 IV. 지명학교의 설립과 교육

1905년 지도에 최초로 건립된 근대식 교육기관은 ‘智明學校’이다. 지도로 유배를 온 유배인 김윤식이 기록한 『속음청사』와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지명학교의 설립 시기와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서당과 서재와 같은 전통교육에 익숙했기 때문에 초기 근대학교는 수요가 높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학동이 5~6명에 불과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sup>8)</sup> 이렇듯 마을 주민들은 학교에 가는 것을 피했지만, 그럼에도 채수강 군수는 근대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읍내에 학교 설치 의논과 교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1906년 『만세보』 신문자료에서 지명학교 운영 자금을 모금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sup>9)</sup> 당시 군수였던 채수강과 마을 사람들은 의연금을 모아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지명학교 운영에서 근대교육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근대교육 활동인 체육·음악 활동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교 운동회를 개최한 모습을 통해 교과과정에는 새롭게 도입된 근대교육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서당 교육의 형태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8) 김윤식, 『속음청사』, 1905.5.13.(초10일)

9) 만세보, 「智島郡智明學校捐助金이 如左하더라」, 1906.9.7.일자 기사.

10) 최성환, 「〈續陰晴史〉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智島 유배생활과 島嶼地域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34,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235쪽.

1911년 지명학교는 ‘智島公立普通學校’로 인가받았다.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고 지역 교육 체계가 정비되었다. 지명학교가 지도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된 이후 근대교육을 받은 청년 지식인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식민지배체제에서 항일운동을 펼치는 기개를 드러냈다. 근대학교 학생들은 1922년 비행교장을 규탄하는 동맹휴학과 1923년 메이데이 만세운동, 지도소작쟁의를 앞장서 전개하였다. 이는 근대적 교육이 학문적 지식 전달에서 끝나지 않고, 민족운동을 주도하는 배경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근대학교 학생과 졸업생들은 민족단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제의 민족차별적인 모순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모습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계몽운동의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지도는 신안 섬 지역 중 유일하게 향교와 학교가 현재까지 공존하고 있다. 인근 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지명학교 건립은 지도지역 근대교육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교육지표이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지도의 인문지리적 특징과 근대교육으로 전환되는 섬 지역 변화상을 살폈다. 지도의 지리적 특징과 지도 내 운영하였던 서재 운영현황, 향교 건립을 통해 섬의 전통교육을 볼 수 있었다. 서재 조직과 유림과 유배인 중심 후학 양성은 학문 전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97년 목포 개항이 이러한 전통교육 체제와 맞물리며, 섬 지역으로 점차 근대교육이 유입되었다. 지도 또한 근대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전환점이 되었다. 지도 군수와 유배인,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근대 교육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도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서재와 지도향교는 전통교육의 한 면을 보여주고 지명학교는 근대교육의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지도교육은 전통교육체제가 저물었다하여 단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지도는 근대교육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으며, 여러 섬 중 향교와 학교가 함께 남아 있는 모습을 자아냈다.

지도는 그중에서도 교육에 가장 밝았으며, 후학양성을 위한 서재를 운영하고, 향교를 건립하며 교육의 장을 넓혀 갔다. 지적전통과 근대교육이 함께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섬 교육의 중심지로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 후속 연구는 지명학교가 보통학교 인가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제도에 정착하고, 근대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배경을 알아볼 것이다. 아울러 지도공립보통학교의 운영양상과 학생들의 활동, 일제강점기 지도지역의 근대학교의 역할과 의미까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신문자료

『만세보』

## 단행본

김윤식, 『續陰晴史』, 1921.

신안문화원, 『신안향토사료지 국역 지도군총쇄록 섬에서 섬을 다스리다』, 2008.

신안문화원, 『신안향토사료지 국역 심진록』, 2014.

신안문화원, 『신안향토사료지 국역 지도군읍지 부록: 신안향교지』, 2023.

## 논문

김경옥, 「근현대 전라도 나주목 도초도의 공간변화와 ‘학교염전’의 설치」, 『한국학연구』56,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20.

탁현진, 「지도소작쟁의의 전개 과정과 특징」, 『도서문화(島嶼文化)』56,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20.

최성환, 「〈續陰晴史〉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智島 유배생활과 島嶼地域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34,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최성환, 「1897년 지도군수(智島郡守) 오형묵(吳弘默)의 도서순행(島嶼巡行)과 『심진록(尋眞錄)』에 담긴 도서지역(島嶼地域) 향촌사회정보」, 『지역과 역사』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 섬과 육지의 커뮤니케이션

## :목포 항동시장과 건어물 거리 중심으로

김 강 민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 I. 서론

본 연구는 항동 시장과 건어물 거리가 전성기를 누렸던 1970~80년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상인들과 고객들 간의 주요 거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자신의 출신 지역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형성한 거래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항동 시장이 자리한 항동은 목포 개항 이후 매립을 통해 조성된 지역으로, 이름 그대로 '항구의 동네'를 뜻한다. 이곳은 서해수산업연구소, 식당, 여객선 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과 주택지가 조화를 이루며 역사적 흔적과 현대적 생활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목포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항동 시장은 1956년 10월에 최초 개설하여 1972년 4월 현 항동 시장이 개설됐다.

항동시장이 자리 잡은 현 만호동은 해방 이후 항동시장 지척에 있던 한국은행(현 해운모텔 자리), 하나은행(현 하나 노인복지관), 제일은행(현 백세 재활요양원), 중소기업은행(현 목포 시청 일자리 통합센터), 수협, 농협 등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었다. 선창, 즉 항동 수강동 등을 포함한 현 만호동 일대가 목포 경제 중심이었음을 말해준다. 시장이 개설되기 1년 전 1955년 목포에는 19개 여객 선박 회사가 있었다. 그러한 여객선 사업들이 활발해지면서 목포항도 활성화됐다. 즉 목포 경제는 곧 선창 경제란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항동시장의 입지 여건을 보면, 목포 해상공관으로서 여객선 터미널, 선박 접안시설인 잔교, 영암 용당리와 목포항을 오가던 용당 도선장, 그리고 수많은 해양수산 관련 업체와 기관, 은행, 해산물 가게, 배에서 쓰는 물품을 취급하는 선구점, 살림살이 그릇을 파는 기물점, 여관, 음식점 등이 즐비했다. 목포 최고의 상권이었던 셈이다. 조선일보 1968년 2월 8일 신문에서는 항동 땅값은 목포에서 제일 높았고 평당 12만 원이라고 했다.



항동 시장은 목포와 연결된 신안 진도 해남 영암 등지의 섬사람들을 위한 장터였다. 섬사람들이이고 지고 온 것과 섬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팔던 곳이 바로 항동 시장 일대였다. 이렇게 목포의 해상 관문으로서 다도해를 오가는 수많은 배들과 인파가 북적거렸고 1956년 10월 항동 시장이 문을 연다.

항동시장 일대 해산물 거리는 이런 선창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 해산물 거리는 단순 소비시장이 아니다. 타지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상인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전남 일대 장날에 판매하는 건어물, 해산물 대부분이 이곳 항동 시장에서 공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을 보고 배 시간을 기다리며 보리밥 골목에서 허기를 달렸고, 기사 악화로 섬에 가지 못할 경우 가까운 관해 장과 다도여인숙 등지에서 숙박을 해결했다. 항동 시장은 보통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의 역할만이 아닌, 사람을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유행을 접하는 공간이다.

## II. 항동시장 상인과 건어물 상회

### 1) 항동시장 상인: 〈○○상회, A 씨(46년생)〉

항동 시장에서 ○○상회를 운영 중인 A 씨는 목포 출신으로, 30대에 가게를 시작해 약 45년간 운영 중이다. 본인이 어린 시절에는 면제품 제작에 종사했으나 이후 항동 시장으로 옮겨 가정용 식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게 운영 초기에는 손님이 많아 주변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항동 시장의 전성기에는 하루 세 차례, 오전 9시, 오후 2시, 오후 5시에 장이 열렸다. 신안, 진도, 해남, 완도 등지에서 온 어업 종사자들과 노점상들이 장을 찾아 활발히 상업활동을 펼쳤다. 당시를 회상하며 A 씨는 “문을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기다려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던 시절이었다. 그때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다”라고 말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지금처럼 정형화된 시장이 아니었으며, 길거리에 물건을 놓고 판매하는 노점상이 대부분이었다. 목포 내향이 확장되기 전까지 부둣가는 전부 상가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횃집이 많아 목포에서 회를 먹으려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으로 몰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시설이 철거된 상태다.

1990년대 이후 하당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생활권이 이동하면서 항동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 삼호 대교와 천사 대교가 개통되면서 육로 교통이 발달하고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매출 감소가 이어졌지만, 이는 지역 발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편, 건어물 상가는 여전히 활발한 유통 덕분에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다. 과거 해남 등지에서 들여온 건어물이 목포를 거쳐 서울과 전국 각지로 퍼졌으며, 한때 목포는 ‘건어물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으며, 현재도 건어물 상가는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 2) 건어물 상회: <△△상회, B 씨(42년생)>

△△상회를 운영했던 B 씨는 1942년 전라남도 심리 출신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4세에 목포로 이주해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학창 시절에는 유달중학교를 다녔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집에서 점원으로 일하거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 이후 40대 초반부터 50대까지는 성장 상회를 운영하며 자립의 기반을 다졌다.

상회를 운영할 당시 직접 소매를 하거나, 광주 양동시장 등 도심의 상회에 위탁 판매를 진행했다. 위탁 판매 시 5~10%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판매 후 남은 금액은 섬 주민들에게 정산했다. 도매의 경우 일본 바이어나 국내 가공 공장 등 대량 구매자들과 거래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다.

직접 판매나 위탁 판매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중개 수수료를 확보했으며, 섬에서 저렴하게 수집한 물품을 도시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섬 주민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거래 전에 선지급을 통해 물품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모든 과정은 상회와 섬 주민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주민들이 물품을 위탁하면 판매 후 대금을 신속히 정산했으며, 대여금의 상환 기간을 길게 설정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도 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백화새우, 톳, 가리비, 멸치, 김, 한천 및 기타 해조류 등이 있었다.

수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흑산도, 홍도, 비금도 등지에서 해산물을 수확하여 어선 및 여객선으로 목포항으로 운송된다. 그렇게 수확한 해산물은 목포와 주변 지역에 위치한 가공 고장에서 찌거나 말리는 등 1차 가공된다. 그 과정 속에서 일본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동 시설이 사용됐다. 수출품은 항구에서 선적하여 일본으로 운송된다. 주로 동경, 오사카 등 일본 주요 항구 도시로 도착한다. 이후 일본 내 시장 및 가공 공장으로 분배된다고 한다.

상회 운영이 종료된 주요 요인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상회의 중개 역할이 점차 줄어들었다. 둘째, 가공 공장의 성장으로 인해 물품이 상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상회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섬 주민들이 상회를 통한 물품 판매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영이 종료되었다.

## 3) 건어물 상회: <□□상사, C 씨(37년생)>

□□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C 씨(1937년생)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장사도 출신으로 젊은 시절, 약 18~19세 무렵에 서울 성북구로 올라가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이후 5.16 군사정

변을 계기로 군 복무를 마치고, 지인으로부터 의자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장은 1969년경 부도를 맞이하며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다.

공장 운영을 마친 후, C 씨는 친척들이 살고 있던 목포로 내려왔다. 목포에서의 첫 장사는 육촌 형님으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으며 시작되었다. 이후 곡물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당시 뱃사람들에게 곡물을 판매하며 부업으로 김도 취급했다고 한다. 김은 고향인 장사도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판매되었다.

한편, 해산물 조합과 관련해 C 씨는 1963년 수협(수산업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이에 맞서 1960년대 후반 항동 시장에 해산물 조합이 생겨났다고 회상했다. 당시 수협은 돈을 빌리려면 반드시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그러나 연대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컸다고 한다.

반면, 해산물 조합은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신용을 판단했으며, 구매자들 또한 외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거래하던 상인들과의 신용 관계 형성과 관련해, 신안 흑산도와 같은 섬에 거주하던 생산자들은 목포로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며 선대금을 갚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고 한다. 목포에 거주하던 사람들 역시 자녀를 서울로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목포 지역 주민과 섬 지역 주민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뢰와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C 씨는 처음 김만을 취급하다가 1990년대 지나면서 멸치도 취급했는데 조도에서 주로 멸치도 생산되었다고 한다. 김의 생산 시기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마루바(돌김)는 10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생산되며, 일반 김은 1월부터 5월까지 주로 생산된다. 일반 김은 주로 김밥을 싸는 용도로 사용되며, 마루바는 일반 김과 유사하지만 공장에서 맛김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 공장을 경영하려면 3년치 재고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다 수출했었으나 지금은 공장이 없다고 한다.

신안 상회의 경우 자신들은 객주(도매)를 하면서 소매도 같이 했는데 19년 정도 됐다고 한다. 소득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으나 김의 생산 방식과 유통 방식이 바뀌던 시기쯤으로 보인다고 했다.

상회마다 거래 지역이 전문적으로 나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C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상회들은 주로 조도, 완도, 흑산도를 대상으로 거래하며, 각 지역에 따라 전문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 III. 결론

항동시장과 건어물 상회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70~80년대 항동시장은 목포와 전남 지역 섬 주민들의 물류와 경제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했으며, 상인과 고객 간의 신뢰와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항동시장의 전성기 시절 활발했던 상업 활동은 교통, 통신, 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신도시 개발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쇠퇴했지만, 이는 지역 발전과 연결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건어물 상회 또한 섬 주민들과의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특산물을 유통하며 목포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장된 상업적 명성을 쌓았다. 하지만 중개 구조의 변화와 대규모 가공 공장의 등장으로 인해 상회 역할이 축소되며 점차 사라졌다.

본 연구는 1970년대~80년대 시기의 항동 시장과 섬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관한 연구이다. 다만 아직 조사 자료가 미흡한 상태이다. 향후 본 연구에 있어서 1970년대~80년대의 항동 시장 주변 변화와 함께 더불어 상인들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권있는사람들, 『목포 지역, 생활권 (창간 준비호)』, 권있는사람들, 2024.  
 목포문화원, 『목포의 땅이름』, 목포문화원, 2003, 495쪽  
 목포문화도시센터, 『파도 위의 시간들, 목포의 기록』, 2024

# 근대 목포 해수욕장 형성 과정과 사회적 기능

조민혜 |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I. 머리말

해수욕장은 오늘날 익숙한 여가 공간이지만,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점차 실체를 갖춘 근대적 공간이었다. 특히 해수욕장은 개항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항구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입·형성되어 ‘신문물’로 인식되었다.

해수욕장은 근대 도시공간에서의 여가문화 확산과 식민지 통치 정책의 일환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부산의 송도, 원산의 송도원과 명사십리, 인천의 월미도 등은 그 대표적 사례로, 이들 도시는 자연환경, 지리적 조건, 자본의 유입과 같은 요소가 결합되며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여름철 유원지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근대 해수욕장은 도시화·대중문화·여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식민지 사회의 구조와 통치 방식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부산, 원산, 인천 등과 같은 개항도시 중심으로 근대 해수욕장의 성격과 역할을 규명해 왔으나, 또 다른 개항도시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목포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개항한 도시로, 도시화 속도가 빨랐고 지역적 위상도 높았다. 그러나 해수욕장 형성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목포가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달도와 유달해수욕장을 조성해낸 과정은 목포 지역사뿐 아니라 식민지기 여가공간의 형성과 지역사회 반응을 살피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근대 목포의 해수욕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사회적 기능과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개항장 연구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함과 동시에, 식민지기 도시공간에서 여가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작동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개항 이후 국내 해수욕장의 도입과 확산 과정

### 1. 국내 ‘해수욕장’의 도입과 인식

해수욕장은 오늘날 평화롭고 긍정적인 이미지이지만, 도입 초기에는 계급적·성적 상징성이 두드러진 근대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19세기까지 해수욕은 주로 치료나 생업의 일환으로 여겨졌지만, 대한제국기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의 해수욕(海水浴) 문화를 경험하면서 여가 공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sup>1)</sup>

국내에는 1913년 부산 송도에 최초의 근대적 해수욕장이 조성되었으며,<sup>2)</sup> 이어 1918년 원산의 송도원 해수욕장과 1920년대 초 인천의 월미도 해수욕장이 설비되었다. 해수욕장은 해변에 남량대(納涼臺, 다이빙대)와 휴게소 등 근대적 시설을 도입하며 본격적인 피서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은 식민 자본의 투입으로 조성된 행락지(行樂地)로, 초기에는 일본인을 중심으로한 외국인의 전유물로 기능하였다. 이후 1920년대부터는 일제의 식민정책이 ‘문화(文化)’에 초점을 두면서 대중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해수욕장은 외형상 여름철 피서와 오락을 위한 근대적 여가 공간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계층과 노동자 계층 사이의 격차를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했다. 당시의 신문과 잡지에서는 해수욕장을 ‘부유층의 유희 공간’이자, 모던보이·모던걸<sup>3)</sup>의 첨단적 공간이며 성적 호기심과 퇴폐적 이미지가 교차하는 장소로 묘사하였다. 『개벽』, 『별건곤』 등에는 해수욕장을 찾는 부유층과 도시 노동자의 대조적인 여름 생활이 실렸으며, 해수욕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동시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동경도 엿볼 수 있는 사설을 찾아볼 수 있었다.<sup>4)</sup>

이렇듯 해수욕장에서 남녀가 신체를 드러내고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은 일종의 ‘새로운 문화’로

1) 김윤정, 「일제강점기 해수욕장 문화의 시작과 해변 풍경의 변천」, 『역사연구』 29, 역사학연구소, 2015, 11쪽.

2) 지난 2017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1906년 준공된 ‘묘도해수욕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은 인천의 묘도해수욕장이라는 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추후 검토나 연구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3) 근대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남녀를 통칭하는 말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산자(有産者)로서 남다른 옷차림을 하고 퇴폐와 향락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소비 공간이었던 카페나 바(Bar)에 자주 방문하는 남녀를 말한다. 이들은 첨단적(尖端)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모순과 퇴폐의 온상을 상징하는 존재로도 여겨졌다. (부산근대역사관, 『광고 그리고 일상 : 광고로 보는 근대의 삶과 문화』, 2004, 98쪽.)

4) 相瓊, 「貧者の 여름과 富者の 여름」, 『개벽』 제50호, 1924. 08. 01.: 「暑中雜詠」, 『개벽』 제72호, 1926. 08. 01.은 계급에 따라 다른 여름철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고, 李東園, 「여름의 歡樂境, 海水浴場의 에로그로」, 『별건곤』 제53호, 1932. 07. 01.은 당시 ‘신문물’이었던 ‘해수욕장’을 동경하는 듯한 서술을 하고 있다.

받아들여졌다.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한 상품 광고나 외설적인 남녀 교류 사진 판매 광고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5)</sup> 이러한 현상은 해수욕장이 근대적 소비문화와 성적 해방, 그리고 계급적 차별의 상징적 공간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 2. 개항도시의 근대 해수욕장

해수욕장 조성에는 자연환경, 인구와 경제력, 도시화가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었던 지역은 주로 개항도시였다. 특히 부산·원산·인천과 같은 주요 항구 도시에 해수욕장이 조성된 순서가 항구를 개항한 순서와 일치하는데, 이는 근대 해수욕장이 개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항도시들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수도인 경성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일본인 자본과 지방정부의 투자를 받아 해수욕장을 조성할 수 있었다.<sup>6)</sup>

부산의 송도해수욕장은 ‘동양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명성을 얻었고, 원산은 뛰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송도원 해수욕장과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형성되어 각기 다른 사회적 계층과 운영 주체를 반영하였다. 인천의 경우 철도 개통을 계기로 경성과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월미도와 송도 유원지가 성장하였다.

이렇듯 초기 해수욕장은 개항도시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성장하였다. 도심과 휴양지가 구분되지 않고 공존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과 근대 여가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당대 사람들은 이러한 해수욕장을 하나의 ‘신문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네 번째로 개항한 목포지역은 해수욕에 적합한 해변도 없었고, 수도와 가까운 위치도 아니어서 앞선 개항도시들보다 불리한 환경 조건 속에서 해수욕장의 형성을 경험하였다.

## Ⅲ. 목포지역의 대중문화 공간 형성과 해수욕장의 등장

### 1. 목포의 도시화와 문화생활

5) 波影, 「벌거숭이 男女寫眞, 記者競爭 一頁記事」, 『별건곤』 제10호, 1927. 12. 20.

6) 근대 해수욕장의 개항장 지역 사례를 살핀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엄복규, 「일제하 인천의 ‘행락지’로서 위상의 형성과 변화」, 『인천학연구』 1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1.; 김승, 「동양의 나폴리, 송도해수욕장의 형성과 변천 과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8,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3.; 김윤정, 「일제강점기 해수욕장 문화의 시작과 해변 풍경의 변천」, 『역사연구』 29, 역사학연구소, 2015.; 하정희·손환, 「일제강점기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24-2, 한국체육사학회, 2019.로 소개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인천·부산·원산의 근대 해수욕장을 다루고 있다.

목포는 1897년 개항 이후 경제성장과 일제의 수탈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적 성격의 도시로 발전했다. 도시 공간은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마을로 구분되었으며, 위생·상업·문화시설 등에서 현격한 차별이 존재했다. 조선인 마을은 도로·수도·전등·화장장 등 기본 인프라가 열악했던 반면, 일본인 마을에는 근대적인 인프라가 집중되었다. 이런 이중적 공간구조 속에서 극장과 연예장 같은 대중문화 시설은 양 집단을 잇는 ‘타협 공간’으로 기능했다.<sup>7)</sup> 1920~30년대에 대중문화 공간이 활발해지면서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여가문화 공간도 도시화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자리 잡았다.

대중문화와 여가문화는 생활의 일부이며, 마찬가지로 양 집단을 잇는 ‘타협 공간’이자 자본과 민족에 따른 계급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공간이었다. 이때 여가 문화의 대표적인 공간은 공원과 해수욕장이었고, 목포의 경우 송도공원이나 외달도해수욕장 및 유달해수욕장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도시화와 함께 등장하였다.

## 2. 목포 해수욕장 형성의 과정

목포는 바다를 접하고 있었으나 해수욕장 조성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 1910년대 후반~1920년대 중반까지는 항구 인근 앵정(현 금화동)·육정(현 서산동) 해안가에서 임시로 해수욕을 즐겼으나,<sup>8)</sup> 선창 근처라 비위생적이고 안전상 위험이 컸다. 이외에도 고하도 남쪽 해안에서 해수욕을 즐기거나, 1923년에 앵정 해안가를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고 설비를 갖췄지만, 근본적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부민들은 청정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1929년 목포 소재의 섬 외달도에 해수욕장이 설비되었다.<sup>9)</sup> 외달도는 수질이 좋고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 풍광이 뛰어나 다도해의 절승으로 평가되었다. 발동선을 이용한 왕복 교통, 식당·목욕탕 등 편의시설도 마련되었으나, 접근성 문제로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다. 당시의 신문이나 사진첩에는 외달도 해수욕장의 청정성과 풍광, 일본식



〈사진 1〉「외달도해수욕장(外達島海水浴場)」  
(『木浦寫眞帖』, 1932, 48쪽)

7)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대중문화를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9-1, 역사문화학회, 2006, 115쪽.

8) 김정섭 역, 『완역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802쪽.

9) 김정섭 역, 위의 주와 같음, 2011, 802쪽; 「海水浴場新設 전남 목포에」, 『동아일보』, 1929. 07. 22.

양산과 기모노를 입은 여성 등의 모습이 소개되었다(〈사진 1〉). 이듬해인 1930년에는 도심과 가까운 대반동에 유달해수욕장이 개장되었다.<sup>10)</sup> 목포부는 금 2천 1백 원을 소요하며 유달해수욕장 공사를 행했고,<sup>11)</sup> 동시에 도로 건설과 전기 가로등 설치 등 인프라 확충에 힘썼다.<sup>12)</sup>

이처럼 목포의 해수욕장은 초기에는 환경적 제약과 안전상의 문제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내 외달도와 유달해수욕장 등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내면서, 점차 지역 여름철 여가문화를 주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비교적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았던 유달해수욕장이 대중적 성격을 띠며 활성화되었다.

#### IV. 목포지역 해수욕장의 기능과 한계

유달해수욕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이 전개된 여가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여름철마다 단체 간친회·보건체조 강습·수영 대회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유달해수욕장은 지역 단체의 활동 무대이자 대중 홍보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목포 부녀생활구락부는 유달해수욕장에 대중 휴게소를 설치하고, 여성 대상의 무료 수영강습을 제공하며 회원 모집을 시도하였다.<sup>13)</sup> 해수욕장 인근에는 민간 상인이 운영하는 간이 식당 및 편의시설도 들어서 여름철 인파에 대응하였다.<sup>14)</sup> 더불어 목포미곡취인소의 간친회,<sup>15)</sup> 보건체조단의 강습회,<sup>16)</sup> 목



〈사진 2〉「유달해수욕장(儒達ヶ浦海水浴場)」  
(『木浦寫眞帖』, 1932, 48쪽)

10) 김정섭 역, 앞의 주와 같음, 2011, 803쪽.

11) 김정섭 역, 앞의 주와 같음, 2011, 217쪽.; '세출 임시부 기록'에 소화 5년(1930) '해수욕장비'

12) 「木浦海水浴場 儒達山下에 新設」, 『매일신보(每日申報)』, 1930. 06. 13.; 「全羅南道, 儒達ヶ浦不夜城と化す, 文字通り夏の別天地, 木浦の海水浴場」, 『조선신문(朝鮮新聞)』, 1933. 08. 05.

13) 「木浦婦女俱樂部 休憩所 設備코 海水浴客에 提供」, 『朝鮮中央日報』(여운형), 1934. 07. 10.

14) 「湖南鐵道沿線避暑地案内」, 『호남평론』 제3권 제7호, 1937. 7. 15.

15) 「木浦米取總會 原案대로 可決」, 『朝鮮日報』, 1933. 07. 27.

16) 「保健體操講習」, 『朝鮮日報』, 1933. 08. 04.

포소학교의 임해훈련<sup>17)</sup>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활용 사례는 해수욕장이 지역사회의 일상적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주기적인 해수욕장 관련 인프라 개선도 병행되었다. 먼저 1932년에는 이용객들의 쾌적한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달해수욕장을 대정비하여 모래사장을 확장하였고,<sup>18)</sup> 1935년에는 공중전화 설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며,<sup>19)</sup> 1940년에는 10인승 승합마차 도입 계획이 추진되었다.<sup>20)</sup> 이렇듯 유달해수욕장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며 지역의 대표적 명소가 되었다.

또한, 1930년 유달해수욕장은 광주(光州)로부터 ‘해수욕장의 중심지’라고 언급되며, 광주역(光州驛)의 주도로 광주-목포 간 열차 요금 할인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sup>21)</sup> 이는 당시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전국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며 추진한 여가-관광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정비되던 식민 지기의 철도망이 내국인의 국내여행 확산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sup>22)</sup>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목포 간의 운임 인하 조치는 유달해수욕장이 목포뿐만 아니라, 광주 등과 같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름철 주요 여가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유달해수욕장은 지역 간 여가문화의 확산을 이끄는 중심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수욕장에서의 일상적인 모습 이면에는 식민정책과 연계된 단체들의 활동도 함께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해수욕장의 이중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일본무덕회(大日本武徳會)는 유달해수욕장에서 수영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sup>23)</sup> 이 단체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이념을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했던 조직이다.<sup>24)</sup> 그 활동 자체가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매개로 기능하였다. 또한, 목포유영협회는 유달해수욕장에서 수영 대회를 개최하여 일본의 수영문화를 조선에 도입하고, 대회를 통해 ‘일본의 기개’를 과시하고자 하였다.<sup>25)</sup> 이는 식민지 체육 정책에서 일본

17) 「全羅南道, 木浦小學校臨海訓練, 十五日から」, 『朝鮮新聞』, 1933. 07. 13.

18) 『木浦寫眞帖』, 1932. 48쪽: 유달해수욕장 해설 내용 중.

19) 「海水浴場に公衆電話」, 『朝鮮時報』, 1935. 07. 16.

20) 「木浦馬車運轉」, 『朝鮮日報』, 1940. 6. 10.

21) 「光州木浦間 汽車二割引 海水浴客を爲하야」, 『매일신보』, 1930. 08. 02.

22) 한경수, 「한반도 관광산업의 태동-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관광학연구』10, 한국관광학회, 2011, 360쪽.

23) 「水泳講習會」, 『朝鮮日報』, 1940. 07. 23.

24) 이승수, 「일본 식민주의와 무도: 대일본무덕회 조선지방본부의 설립과 전개」, 『한국체육사학회지』 20-3, 한국체육사학회, 2015. 참조.

25) 「木浦の競泳大會」, 『京城日報』, 1933. 08. 26.: 해당 기사에서는 목포유영협회의 회원 수 증가와 열린 경영(競泳)대회를 통하여 “일본의 의기(意氣)”를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때 ‘의기(意氣)’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씩씩한 마음’을 의미한다.(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한국어-일본어학습사전)

식 스포츠가 우선시되던 당시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sup>26)</sup>

이처럼 유달해수욕장은 지역사회와 여가문화를 형성 및 확산하는 데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식민지 통치기관 및 친일 단체들의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즉 목포의 해수욕장은 근대적 여가문화의 확산, 계층·민족적 경계, 식민지 통치의 일상화 등 근대 도시의 복합적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목포를 비롯한 근대 해수욕장은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계급과 민족에 따라 문화생활이 구분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맥락에서 외달도해수욕장과 유달해수욕장은 이용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달해수욕장은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외달도해수욕장은 접근의 어려움과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으로 인해 이용 계층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외달도는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자본가 등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두 해수욕장의 성격 차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특수성,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계급·민족 간의 문화적 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개항도시를 중심으로 한 근대 해수욕장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목포 지역의 해수욕장 조성 과정을 통해 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여가문화의 형성을 위해 힘썼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 해수욕장이 여가문화의 중심지이자 식민지 통치와 계층·민족 간 경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공간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외달도해수욕장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워 일본인이나 자본가 등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두 해수욕장은 입지와 이용 계층에서 차이는 식민지기 도시 여가문화의 이중성과 사회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분석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목포지역의 근대 해수욕장 형성과 운영이 도시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해수욕장과 철도·관광정책의 연결성, 목포 해수욕장 내의 식민권력 침투 양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6) 무도(武道), 격검(擊劍), 유도, 대궁(大弓), 야구, 정구, 스모, 수영 등과 같은 종목은 1920~30년대 사이에 엘리트 체육 중심의 일본식 스포츠였다. 일제로 목포부의 일본인 측에서는 여러 운동계를 통일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종목들을 중점으로 조직을 구성하고는 하였다.(고석규, 앞의 논문, 2006, 101~104쪽, 참조.)

## 참고문헌

### 1. 자료

『경성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조선시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개벽』, 『별건곤』, 『삼천리』, 『호남평론』 등  
목포부, 『목포사진첩』, 1932.

### 2. 저서

김정섭 역, 『완역 목포부사』, 목포문화원, 2011.  
김해경, 『모던걸 모던보이의 근대공원 산책』, 정은문고, 2020.  
노형석·이종학,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 근대 한국을 거닐다』, 생각의 나무, 2003.  
목포백년회, 『목포개항백년사』, 1997.  
부산근대역사관, 『광고 그리고 일상 : 광고로 보는 근대의 삶과 문화』, 2004.  
송찬섭 외, 『근대적 일상과 여가의 탄생』, 지식의 날개, 2018.  
목포문화도시센터, 『파도 위의 시간들, 목포의 기록』, 2024.

### 3. 논문

강진웅, 「한국 여가의 사회사: 근대적 노동-여가의 균열과 재구성」, 『여가관광연구』 24, 경기대학교  
관광종합연구소, 2022.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대중문화를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9-1, 역사문화학회, 2006.  
김미진, 「프랑스 사회의 여가와 해변, 그리고 새로운 꿈」, 『석당논총』 53,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김 승, 「동양의 나폴리, 송도해수욕장의 형성과 변천 과정」, 『해향도시문화교섭학』 8,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3.  
김윤정, 「일제강점기 해수욕장 문화의 시작과 해변 풍경의 변천」, 『역사연구』 29, 역사학연구소, 2015.  
심승구, 「한국의 근대 스포츠와 여가의 탄생」, 『한국학논총』 34, 한국학연구소, 2010.  
염미경, 「개항장의 형성과 목포의 식민도시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재편」, 『호남학』 4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8.  
염복규, 「일제하 인천의 '행락지'로서 위상의 형성과 변화」, 『인천학연구』 1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1.  
위경혜, 「식민지 근대문화의 혼종성-1920년대 목포극장과 동춘서커스-」, 『한일민족문제연구』 25, 한일민족학회,  
2013.  
이승수, 「일본 식민주의와 무도 : 대일본무덕회 조선지방본부의 설립과 전개」, 『한국체육사학회지』 20-3,  
한국체육사학회, 2015.  
임선숙, 「근대 인쇄매체에 나타난 여름 여가 연구 -여가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39,  
동남어문학회, 2015.  
최규진, 「근대의 뒷, 일상의 함정」, 『역사연구』 25, 역사학연구소, 2013.

